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0호 2018.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논문

- 김지희 | 고구려 혼인 습속의 계층성(階層性)과 그 배경 6
- 이동훈 |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 52
- 엄태봉 |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
- 교섭 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116
- 차재복 | 중국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160
- 심혁주 | 대만의 티베트사(史) 연구 동향과 쟁점 196
- 김성수 | 유럽과 미국의 티베트학(Tibetology), 성과와 과제 228

서평

- 박한민 | ‘조일수호조규’ 체결과 성격의 재조명
- 한일관계연구소 편(2017),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묻다』,
청아출판사 278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291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Contents

Articles

Kim Jihee ■ Marital Stratification and Its Background in Goguryeo 6

Lee Donghoon ■ Trends of Baekje History in Chinese Academia 52

Um Taebong ■ A Study on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6th Korea-Japan Talks: Focusing o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Its Significance 116

Cha Jaebok ■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160

Sim Hyukjoo ■ Trends and Issues of Tibetan History in Taiwan 196

Kim Sungsoo ■ Academic History of Tibetology among th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Scholars 228

Book Review

Park Hanmin ■ Elaborate reconstitution and review of signing the Korea-Japan Treaty of Amity in 1876 278



논문

고구려 혼인 습속의 계층성(階層性)과 그 배경

김지희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박사과정

- I. 머리말
- II. 형사취수혼(兄死娶嫂婚)의 정치적 속성과 지배계층
- III. 서옥혼(婿屋婚)의 노동보상적 성격과 피지배계층
- IV. 고구려 혼인 습속의 계층적(階層的) 차이와 배경
- V. 맺음말



I. 머리말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동아시아 사회에서 ‘혼인(婚姻)’은 개인 간의 애정적 결합을 넘어서 개인이 속한 집단과 집단의 정치적·사회적 결합을 의미하였다. 『설문해자(說文解字)』에 따르면 ‘혼(婚)’은 ‘부가(婦家)’를 의미하며, ‘인(姻)’은 ‘서가(壻家)’를 의미한다.¹ 『이아(爾雅)』에서도 며느리의 부모, 사위의 부모는 서로를 ‘혼인’이라 한다고 하였다.² 즉 고대 동아시아에서 ‘혼인’은 남녀라는 개인 간의 결합을 초월하여 혈연(血緣)을 매개로하는 단위 집단이 결합하는 것을 의미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가(家)는 인적 구성원을 생산한다는 점에서 국가의 존속을 가능하게 하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었다. 또한가의 유지를 통한 사회질서의 안정은 곧 계급의 재생산이라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혼인은 국가 지배층의 지대한 관심사 중 하나였다. 혼인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친족집단이 어느 시기부터 사회 조직의 기초단위가 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지만, 동아시아에서 친족집단은 매우 이른 시기부터 그 중요성이 강조되는 사회 단위였다. 신분적 계선(界線)이 공고했던 고대사회에서 이러한 양상은 더욱 두드러졌는데, 특히 단일 국가 내의 최고 지배층이라고 할 수 있는 왕실의 경우, 혼인을 통해 최상층 집단을 결합·배제하는 계기를 만들기도 하였으며 이는 추후 정치향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관점에서 혼인이란 전 사회를 망라하는 다중적(多重的) 접점이라고

* 투고: 2018년 1월 22일, 심사 완료: 2018년 5월 16일, 게재 확정: 2018년 5월 18일

1 『說文解字』, “婚婦家也, 禮娶婦以昏時 婦人陰也 故曰婚, …… 姻壻家也, 女之所因 故曰姻.”

2 『爾雅』釋親, “婦之父母 壻之父母 相謂爲婚姻.”

할 수 있다.³ 혼인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하나의 개념으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일반적으로 관습이나 법에 따라서 승인되고, 그로 인한 결합의 당사자와 그 소생에게 일정한 권리·의무관계가 인정되는 1인 또는 수인(數人)의 남자와 1인 또는 수인의 여자관계라고 정의될 수 있다.⁴ 또한 혼인의 결과로 탄생한 새로운 친족집단(親族集團), 그리고 자녀의 출생은 사회를 유지시키는 기본 동력이었다는 점에서 혼인의 의미는 직접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따라서 혼인 습속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넓게는 국가의 성격, 사회 구조의 작동 원리와 함께 좁게는 혼인 의례(儀禮), 출계(出系), 상속(相續) 등등의 다양한 제반 사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혼인은 그 당사자가 속한 혈통의 동맹을 매개하고, 당사자와 소생 자녀들의 특정 출계로의 편입을 초래하며 더 나아가 사회적 지위를 결정해주기 때문이다. 특히 이런 양상은 고대사회로 갈수록 더욱 확연히 나타난다. 한편 혼인 규범은 가장 보수적인 관습인 동시에, 해당 사회의 변화·발전 추이에 따라 변질을 경험하기도 한다. 즉, 혼인과 그 결과인 친족집단은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의 관계를 통해 변화하는 일종의 유기체라고 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구려의 혼인 습속의 운영 방식의 차이와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지금까지 고구려의 혼인 습속에 대해서는 형사취수혼(兄死娶嫂婚)⁵과 서옥

3 이강래, 2011, 「한국 고대 혼인의 사회사적 함의」, 『호남문화연구』 제49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8~9쪽.

4 Edward Westermarck 著, 鄭東鎬·申榮鎬 譯, 2013, 『人類婚姻史』, 세창출판사, 21쪽.

5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169쪽. 본문에서 서술하겠지만, 娶嫂婚에서는 형제의 처뿐 아니라 後母도 취하였고, 兄弟輩에서 적당한 대상자가 없으면 그 아래 세대에서 伯母·叔母를 취하기도 한다. 그러나 취수혼은 발생론적 견지에서 서나 그 사례를 볼 때, 형제의 처를 취하는 것이 기본형이라고 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兄死娶嫂婚’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특기 사항은 부기한다.

혼(婿屋婚)⁶이 함께 거론되어 왔다. 특히 전자의 경우, 산상왕의 즉위와 맞물려 혼인 습속이라는 사회사적(社會史的) 주제를 넘어 정치사(政治史)의 연구대상이 되기도 하였는데, 최근에는 산상왕과 우씨(于氏)의 결합을 고구려의 정치적 구조에서 해석한 견해도 확인된다.⁷

우선 서옥혼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기왕의 논의들이 ‘서류부가(婿留婦家)’라는 특징적인 거주율(居住律, Rule of Residence)과 관련하여 모계(母系)·모권(母權) 등 출계 문제⁸에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⁹ 이와는 달리 형사취수혼의 경우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유교의 영향을 받아 이를 수혼(獸婚)으로 이해하고 비정상적인 예외로 간주하는 견해가 주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¹⁰ 그러나 형사취수혼과 서옥혼이 동시에 작동하였으며 당대의 선호혼(選好婚)이었다는 연구가 발표된 이후,¹¹ 대다수의 연구자가 이에 동의하

-
- 6 고구려의 婿屋婚에 대해서는 婿留婦家婚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兄死娶嫂’란 혼인의 양태를 나타내며, ‘婿屋’은 혼인의 양태가 아닌 부부의 거처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일선상에 놓기 어려운 표현이다. 그러나 ‘형사취수’ 및 ‘서옥’은 사서에서 확인되는 표현이며, 婿留婦家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고구려 혼인제도의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서옥’이라는 단어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서옥혼이라고 표기한다.
 - 7 엄광용, 2006, 「고구려 山上王의 ‘취수혼 사건」, 『史學志』 38, 단국대학교사학회; 윤상열, 2007, 「고구려 王后 于氏에 대하여」, 『역사와 실학』 32, 역사실학회; 최일레, 2015, 「산상왕의 혼인과 고구려의 정치: 나부세력의 동향을 중심으로」, 『歷史學研究』 58, 호남사학회.
 - 8 최재석,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89쪽. 出系는 母系(matrilineal)와 父系(patrilineal)뿐만 아니라 雙系(bilinear)와 二重出系(double descent), 選系(ambilineal) 등이 존재한다.
 - 9 김선주, 2002, 「高句麗 婿屋制의 婚姻 形態」, 『高句麗渤海研究』 13輯, 高句麗渤海學會, 62~65쪽.
 - 10 김두헌, 1936, 「朝鮮禮俗の研究」, 『靑丘學叢』 24, 靑丘學會; 장승두, 1938, 「朝鮮原始諸種族의 婚姻」, 『朝鮮』 280, 朝鮮總督府; 변태섭, 1958, 「韓國古代의 繼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 『歷史教育』 3, 역사교육연구회; 김두헌, 1969, 『韓國家族制度史』,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광규, 1977, 『韓國家族의 史的 研究』, 일지사, 261쪽.
 - 11 노태돈, 1983, 「高句麗 초기의 娶嫂婚에 관한 一考察」, 『金哲俊博士 華甲紀念

면서 현재는 다수의 연구자가 위의 전제를 바탕으로 하여 관련 논지를 진행하고 있으며, 혼인 습속 그 자체에 대한 논의는 소강상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다.

형사취수혼과 서옥혼이 고구려의 혼인 습속인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여지가 없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양자가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다. 고구려의 혼인 습속을 보여주는 문헌 자료는 매우 소략하며, 유일(唯二)하게 확인되는 형사취수혼과 서옥혼 각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양자의 혼인 습속이 가지는 운영 방식 및 실행 주체의 차이점과 그러한 차이가 나타나게 된 원인에 대한 고민은 적었으며, 습속의 실행 주체에 대한 구분 없이 양자 모두 고구려의 혼인 습속을 보여주는 자료로만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필자는 양자의 혼인 습속은 그 운영 방식에서 차이가 있었으며, 그 실행 주체 역시 차이를 보인 별개의 혼인 습속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양자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각각의 혼인 습속이 반영하는 고구려 사회의 모습을 살펴보고, 혼인 습속에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고구려 지배집단의 출자(出自) 문제, 특히 고구려 왕실인 계루부(桂婁部)의 내원 문제와 관련하여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형사취수혼의 운영 방식과 계층적 성격을 먼저 살펴보고 이후 서옥혼의 운영 방식과 계층적 성격을 살펴보아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혼인 습속이 달랐음을 논증하고자 한다. 고구려 사회 내의 정치·사회적 기반의 차이는 이들이 선택한 혼인 습속의 차이를 가져왔을 것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계층별 고구려 혼인 습속에 대한 이해는 고구려 사회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형사취수혼과 서옥혼이 고구려의 혼인 습속이었음에도 양자의 존속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던 원인을 해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II. 형사취수혼(兄死娶嫂婚)의 정치적 속성과 지배계층

고구려에서 형사취수혼이 시행되었다는 문헌 기록은 존재하지만 직접적인 사례는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¹² 그러나 고구려의 주변 민족에서는 형사취수의 습속이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흉노(匈奴), 오환(烏桓), 부여(扶餘) 등에서 확인되며, 후대로 가면 돌궐(突厥), 몽고(蒙古), 여진(女眞) 등에서도 이러한 습속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고구려의 주변 민족에서 확인되는 형사취수혼을 자세히 살펴보면 각각 혼인 가능한 배우자군(配偶者群)에 미묘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흉노나 오환 등의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형사취수혼은 부여와 고구려의 형사취수혼과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흉노의 경우 『한서(漢書)』 열전(列傳)의 기록에서 “부(父)가 사망하면 그 후모(後母)를 취하고, 형제(兄弟)가 사망하면 그 처(妻)를 취한다”¹³고 기록되어 있다. 즉, 형수(兄嫂)뿐만 아니라 생모(生母)를 제외한 후모 그리고 제수(弟嫂) 역시 잠재적 혼인 대상이었음이 확인된다. 여성이 그녀의 남편의 동생과 결혼하는 것은 ‘Junior Levirate’라고 하며, 여성이 남편의 형과 결혼하는 것은 ‘Senior Levirate’라고 한다.¹⁴ 취수혼에서 다수의 예가 형이 아우의 처를 취하

12 고구려에 형사취수혼이 존재했었다고 기록한 사료는 『梁書』 및 『南史』이며, 『三國史記』의 山上王과 于氏의 결합은 형사취수혼의 실례로 해석된다. 다만 『三國志』와 『後漢書』의 夫餘傳에 형사취수혼이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陳壽가 『三國志』를 저술할 때 通傳이라는 찬술원칙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은 뒤의 기사에서는 생략하거나 축약했을 가능성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에(전해중, 1980, 『東夷傳의 文獻의 研究』, 일조각, 53~55쪽 및 139~140쪽), 고구려에서도 부여와 동일하게 형사취수혼이 존재했었다고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 혹은 축약했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술하지 않았을 ‘사실의 부재 가능성’도 상존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다른 사서와의 교차검토를 통한 사료 비판이 필요하다.

13 『漢書』 列傳, 匈奴, “父死 妻其後母 兄弟死 盡取其妻妾之.”

14 J. P. Singh Rana, 1998, “Forms of Tribal Marriage,” *Marriage and Customs of Tribes of India*, M D publications PVT LTD: New Delhi, pp. 53~54.

는 것을 금지하는 ‘Junior Levirate’이며, 특히 북아시아 종족들의 경우는 대부분 그러하다고 한다.¹⁵ 그러나 흉노에서는 형수뿐만 아니라 제수도 혼인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Senior Levirate’와 ‘Junior Levirate’가 합쳐진 양상을 보이며, 이러한 점에서 오환·부여·고구려의 취수혼 습속과는 차이가 있다.

취수혼은 오환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인되는데, 오환의 경우에는 후모와 형수를 취한다는 기록은 확인되지만, 제수를 취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것이 흉노와의 차이점이다.¹⁶ 즉, 혼인 대상을 기준으로만 논의할 때 흉노의 경우 수계혼(收繼婚, Spousal Inheritance)과 형사취수혼·제사취수혼(弟死娶媠婚)이 모두 확인된다고 할 수 있으며, 오환의 경우 수계혼과 형사취수혼만이 확인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흉노나 오환 등의 민족에게서 나타나는 형사취수혼은 부여와 고구려의 그것과는 차이를 보인다. 우선 부여의 경우 『삼국지(三國志)』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는데, 이는 흉노의 풍습과 같다’¹⁷고 언급한 반면에 『후한서(後漢書)』에서는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는다’¹⁸라고 하여 부여의 풍습이 흉노와 동일하다는 부분이 사라졌다. 『삼국지』 부여전(夫餘傳)은 기타 동이제족(東夷諸族)의 여러 자료와 함께 240년대 이루어진 조위(曹魏)의 동침(東侵) 과정에서 일괄 채록된 자료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¹⁹ 『후한서』는 『삼국지』에 비해 약 100년 이상 늦게 편찬되었다. 『후한서』 동이전(東夷傳) 찬수의 기본 방침은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열전(烏丸鮮卑東夷列傳)에 의거

15 노태돈, 1999, 앞의 책, 193쪽. 돌궐의 경우 역시 순위 사람이 손아래 여자와 간음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있었다(『周書』卷50, 列傳 第42, 異域 下, 突厥, “父[兄]伯叔死者 子弟及姪等妻其後母世叔母及媠 唯尊者不得下淫.”).

16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列傳, 烏丸, “父兄死 妻後母執媠 若無執媠者 則己子以親之次妻伯叔焉 死則歸其故夫.”

17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列傳, 夫餘, “兄死妻媠 與匈奴同俗.”

18 『後漢書』東夷列傳, 夫餘, “兄死妻媠.”

19 윤용구, 2008, 「『삼국지』 부여전의 문헌적 검토」,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43쪽.

하여 그 기사를 부분적으로 개편하여 후한대(後漢代)의 동이와의 관계 기사를 보충하는 것이었으며, 『후한서』 동이전 기사는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열전에 비하여 내용적으로 풍부함을 특징으로 한다.²⁰ 아마도 『후한서』 동이전의 찬자는 부여에 형사취수혼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인 혼인 대상에서는 흉노와 차이가 있었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 아닐까 한다. 이에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열전의 기록에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는다(兄死妻嫂)’는 부분은 취하고 ‘흉노와 풍속이 같다(與匈奴同俗)’는 부분은 생략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약 단순히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였다면 오히려 혼인 풍속이 같다는 부분만을 남겨두는 것이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경우 『양서(梁書)』²¹와 『남사(南史)』에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처로 삼는다’²²는 기록이 확인된다. 이 기록을 따른다면 고구려의 혼인 습속은 자의(字意) 그대로 전형적인 형사취수혼이라고 할 수 있다. 북아시아의 다른 유목민족과 다르게 고구려에서 전형적인 형사취수혼이 나타난 이유에 대해서 여진족의 형사취수 습속을 예시로 설명한 견해가 있다. 여진의 경우 ‘형과 동생의 관계는 부자(父子)의 관계와 같아서 동생이 죽었을 때 제수를 형이 맞이하지 않았다’고 한다.²³ 여진족의 경우 고구려와 발해(渤海)의 오랜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20 이정자, 2008, 『고대 중국정사의 고구려 인식』, 서경문화사, 57쪽.

21 종래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梁書』의 편찬 시기가 『三國志』보다 늦기 때문에 『梁書』가 『三國志』 동이전을 그대로 전재하였다고 보았다. 이에 대해 여호규는 『梁書』 고구려전에서 『三國志』 고구려전에서 확인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이 보완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梁書』의 찬자가 『魏略』을 직접 참조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여호규, 2013, 『『삼국지』 「동이전」의 「부여전」과 「고구려전」의 비교 검토』,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160~164쪽;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53~60쪽). 이렇게 이해할 경우 陳壽는 『三國志』 부여전에서 형사취수를 언급하고 이와 동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고구려전에서는 생략했으며, 『梁書』의 찬자인 姚思廉은 『魏略』을 직접 참고하여 이 내용을 복원해내었을 가능성도 있다.

22 『梁書』東夷列傳, 高句麗, “兄死妻嫂.”; 『南史』東夷列傳, 高句麗, “兄死妻嫂.”

23 『慵齋叢話』卷10, “兄死則必娶兄妻 而弟妻則不得娶. 乃曰弟則猶吾子也 豈可娶子之妻. 兄則猶吾父也, 父之物 子何不繼受乎.”

이러한 인식의 연원을 소급해서 올라가면, 고구려 역시 이와 유사한 인식체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²⁴

국내 사서의 기록 중 형사취수혼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은 『삼국사기(三國史記)』에 확인되는 고국천왕(故國川王)의 왕후였던 우씨(于氏)와 왕제(王弟)였던 연우(延優, 山上王)의 결합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산상왕 즉위 조에서 사건의 시말(始末)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山上王의 이름은 延優[位宮이라고도 한다]이며 고국천왕의 동생이다. …… 고국천왕은 아들이 없으므로, 연우가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처음에 고국천왕이 돌아가셨을 때, 王后 于氏는 임금의 죽음을 비밀로 하여 밝히지 않고, 밤에 왕의 아우 發歧의 집에 가서 말하였다. “임금이 아들이 없으니 마땅히 그대가 뒤를 이어야 합니다.” 발기는 임금이 돌아가신 것을 알지 못하고 대답하였다. “하늘의 운명은 돌아가는 곳이 있으므로 가볍게 논의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부인으로서 밤에 행차하는 것이 어찌 예절에 맞는다 하겠습니까?”

왕후가 부끄러워하며 곧 연우의 집으로 갔다. 연우는 일어나 의관을 갖추고, 문에서 왕후를 맞아들여 자리에 앉히고 잔치를 베풀었다. 왕후가 말하였다. “대왕이 돌아가셨는데 아들이 없으니, 발기가 만동생으로서 마땅히 뒤를 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저에게 다른 마음이 있다고 생각했는지 사납고 거만하며 무례하여서 숙부님을 뵈러 온 것입니다.” 이에 연우는 더욱 예를 갖추어 직접 칼을 잡고 왕후에게 줄 고기를 베다가 잘못하여 손가락을 다쳤다. 왕후가 허리띠를 풀어 그의 다친 손가락을 감싸주었다. 왕후가 돌아가려 할 때 연우에게 말하였다. “밤이 깊어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길까 두려우니, 그대가 나를 궁까지 데려다 주세요.” 연우가 그 말에 따라 왕후의 손을 잡고 궁으로 들어갔다. 다음 날 날이 밝을 무렵, 왕후가 선왕의 명이라고 속이며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연우를 왕으로 삼았다.

24 박노석, 2010, 「고구려의 서옥제와 형사취수제」, 『건지인문학』 4권,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13~14쪽.

발기가 그것을 듣고 크게 노하여 병사로 왕궁을 포위하고 소리쳐 말하였다. “형이 죽으면 아우가 왕위를 잇는 것이 예다. 너는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찬탈하였으니 큰 죄악이다. 마땅히 빨리 나오지 않으면 너의 처자식들까지 죽이겠다.” 연우는 사흘 동안 문을 닫고 있었다. 나라 사람들도 발기를 따르는 자가 없었다. 발기는 어려움을 알고 처자들과 함께 요동으로 달아났다.

…… 가을 9월, 관리에게 명하여 발기의 상례를 받들어 왕의 예를 갖추어 裴嶺에 장사하게 하였다. 왕이 본래 우씨에 의하여 왕위에 올랐으므로, 다시 장가들지 않고 우씨를 왕후로 삼았다. (『三國史記』)²⁵

상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취수혼의 실례는 고국천왕의 왕후였던 우씨와 왕제였던 산상왕의 결합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취수혼은 단지 두 사람만의 결합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후에 산상왕으로 즉위하는 왕제 연우[伊夷模]와 그 형인 발기(發岐) 사이의 왕위 계승 분쟁으로 확대되었고, 발기와 소노가(消奴加)가 각기 3만여 구의 하호(下戶)를 이끌고 요동(遼東)의 공손강(公孫康)에게 투항함으로써 국내외적인 분쟁으로까지 확대·전개되었다.²⁶

산상왕의 즉위 과정을 둘러싸고 벌어졌던 이 사건은 전형적인 형사취수의

25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山上王 元年, “山上王 諱延優[一名位宮] 故國川王之弟也, …… 故國川王無子 故延優嗣立, 初 故國川王之薨也 王后于氏 秘不發喪 夜往王弟發岐宅 曰 王無後 子宜嗣之, 發岐不知王薨 對曰 天之曆數有所歸 不可輕議, 况婦人而夜行 豈禮云乎, 后慙 便往延優之宅, 優起衣冠 迎門入座宴飲, 王后曰 大王薨 無子 發岐年長當嗣 而謂妾有異心 暴慢無禮 是以見叔, 於是 延優加禮 親自操刀割肉 誤傷其指, 后解裙帶裹其傷指 將歸 謂延優曰 夜深恐有不虞 子其送我至宮, 延優從之, 王后執手入宮 至翌日質明 矯先王命 令群臣 立延優爲王, 發岐聞之大怒 以兵圍王宮 呼曰 兄死弟及 禮也, 汝越次篡奪 大罪也, 宜速出 不然則誅及妻孥, 延優閉門三日 國人又無從發岐者, 發岐知難 以妻子奔遼東, …… 秋九月 命有司 奉迎發岐之喪 以王禮葬於裴嶺, 王本因于氏得位 不復更娶 立于氏爲后.”

26 노태돈, 1999, 앞의 책, 171쪽.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를 살펴보면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난다. 우선 취수 혼의 결합 원칙에 관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국천왕의 사후 왕후였던 우씨는 우선 망부(亡夫)의 큰 동생이었던 발기에게 찾아갔으나 거절당하고, 그 다음 동생인 연우와 결합하여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서 ‘형이 죽으면 아우가 왕위를 잇는 것이 예다. 너는 차례를 뛰어넘어 왕위를 찬탈하였다’라는 발기의 표현은 망형(亡兄)의 형수를 취하는 데 일정한 순서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게 해준다. 물론 발기가 모반을 꾀한 가장 중대한 원인은 형사취수가 아니라 왕위의 찬탈에 있었다. 그러나 발기는 선왕(先王)의 사망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역모(逆謀) 행위와 직결될 수 있는 우씨의 제안을 바로 승낙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발기는 사건의 전말(顛末)을 알지 못한 채, 우씨의 제안을 거절한다. 그 결과 연우와 혼인으로 매개된 우씨, 즉 연우부 세력과의 결합이 연우의 왕위승계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위의 발기의 발언은 연우의 행동이 왕위계승 및 형사취수의 상례(常例)에도 어긋나는 행동이었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발기와 연우에게는 처자(妻子)가 없었을까. 사료를 살펴보면 양자 모두에게 처자가 있었음이 확인된다. 우선 발기의 경우 국인(國人)²⁷들이 자신을 따르지 않자 처자를 이끌고 요동으로 갔다는 기록에서 그에게 처자가 있었음을 확인된다. 기록상으로 연우에게도 처노(妻孥)가 있었음이 확인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주급처노(誅及妻孥)’를 대죄(大罪)라는 의미의 일반적 표현으로 이해하여

27 최의광, 2004, 「高句麗의 ‘國人’ 研究」, 『史叢』 58,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10, 16~26쪽. 글자 그대로 풀이해보면 ‘國人’이란 오늘날 ‘國民’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고대 사회에는 오늘날과 같은 국민국가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왕위를 추대할 수 있는 특정한 권리가 부여된 民이 존재했던 것은 더욱더 아니었다. 이들은 첫째 왕위 추대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었으며, 둘째 국왕의 신상에 대해서 혹은 국가의 중대사에 대하여 자신들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셋째 그러면서도 국민과 군신의 활동과는 차이점을 보인다. 이러한 국인의 활동 사항을 일괄해보면, 국민이란 국초에는 宮中에서 후대에는 그 규모를 확대하여 國都에서 활동하던 세력을 통칭하는 것으로, 君臣을 포함한 더 포괄적인 개념의 ‘지배층’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연우가 미혼(未婚)이었다는 견해와²⁸ 발기가 일으킨 반란 사건에 휘말려 연우의 처노가 희생되었을 것이라는 견해로 나뉜다.²⁹ 발기가 궁성을 포위하고 연우를 꾸짖을 때 '나오지 않으면 처자에게까지 죽음이 미칠 것이다'라고 협박한 부분을 보면 이때 이미 발기가 연우의 처자를 인질로 잡고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우씨와 연우의 결합이 정치적 결합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사료상 처노가 확인되므로 연우가 미혼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³⁰ 즉, 연우의 처노가 발기의 반란으로 희생된 것이 아니라면, 우씨와 새롭게 결합함으로써 원래 혼인했었던 처노를 자의였던 타의였던 희생시켰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발기와 연우 형제에게 우씨 이전에 혼인을 한 처자가 확인된다는 것은 지배층 내에서 취수혼이 제1의 혼인기제로 작동하고 있지 않았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그렇다면 연우와 결합하였던 우씨는 어떠한 인물인가. 고국천왕 12년 9월 왕후의 친척이었던 중외대부(中畏大夫) 패자(沛者) 어비류(於畀留)와 평자(評者) 좌가려(左可慮)가 왕후의 세력을 믿고 방만하게 행동하다가, 왕이 이를 듣고 노하여 죽이려 하니 사연나(四椽那)와 함께 반란을 일으켰다.³¹ 좌가려의 반란 사건은 고국천왕과 우씨, 양자의 세력 사이에 미묘한 갈등 관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좌가려의 반란 사건이 일어난 다음 해인 191년, 고국천왕은 을파소(乙

28 노태돈, 1999, 앞의 책, 177쪽 각주 12.

29 김미경, 2006, 「2世紀後半~3世紀初 高句麗 政治勢力의 動向과 對公孫氏 政策」, 『國史館論叢』 第108輯, 國史編纂委員會, 68쪽 각주 52; 윤상열, 2007, 「고구려 王后 于氏에 대하여」, 『역사와 실학』 32, 역사실학회, 234쪽.

30 『朝鮮王朝實錄』 中宗 1年 9月 9日 乙酉. 후대의 사례이지만 朝鮮 中宗의 경우 자신의 糟糠之妻였던 愼氏를 정치적 목적에서 廢妃시켰다. 사료에 따르면 중종은 이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中宗反正을 통해 새롭게 권력을 얻은 집단은 廢主였던 燕山君과 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愼守勤의 女를 왕비로 둘 수 없었던 것이다. 이후 反正功臣이었던 朴元宗의 外조카인 尹氏가 章敬王后로 추대되었다.

31 『三國史記』 高句麗本紀, 故國川王 十二年, “秋九月 京都雪六尺, 中畏大夫沛者於畀留·評者左可慮 皆以王后親戚 執國權柄 其子弟並恃勢驕侈 掠人子女 奪人田宅 國人怨憤, 王聞之 怒欲誅之 左可慮等與四椽那謀叛.”

巴素)를 등용하여 개혁 정치를 진행해나간다. 이에 대하여 ‘조신(朝臣)과 국척(國戚)은 을파소가 구신(舊臣)을 헐뜯는다고 생각하고 그를 미워하였다’고 하는데,³² 이때 국척은 혼인으로 연결된 인친(姻親), 즉 바로 왕후 우씨의 세력 연나부(椽那部)를 의미할 것이다. 이후 고구려 중앙 정계에서 연나부가 계속 확인됨을 볼 때, 연나부는 왕에 대항하여 반란 사건을 일으키고도 그 정치집단을 유지하였으며, 우씨 또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폐비(廢妃)되지 않았다.

또한 우씨는 산상왕이 즉위 이후 주통촌(酒桶村)에서 만난 처녀와 사통(私通)하여 그녀가 임신하자 병사들을 보내 제거하려고 시도하기도 하였다.

봄 3월에 왕후가 왕이 주통촌 여자와 상관한 것을 알고 이를 질투하여, 몰래 병사를 보내 죽이려고 하였다. 그 여자가 듣고 알게 되어 남자 옷을 입고 도망해 달아나니 추격하여 해치려고 하였다. 그 여자가 묻기를 “너희들이 지금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왕의 명령이나 왕후의 명령이나? 지금 나의 복중에 아들이 있는데 실로 왕이 남겨준 몸이다. 내 몸을 죽일 수 있으나 왕자도 죽일 수 있느냐?” 하였다. 병사들이 감히 해치지 못하고 와서 그 여자가 말한 것을 보고하였다.

왕후가 노하여 반드시 죽이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왕이 이 말을 듣고 다시 그 여자의 집에 가서 “네가 지금 임신하였는데 누구의 아들이냐?”고 물었다. 대답하기를 “첩은 평생 형제와도 동석하지 않았는데 하물며 감히 다른 성씨의 남자를 가까이 하였겠습니까? 지금 복중에 있는 아들은 실로 대왕이 남기신 몸입니다”라 하였다. 왕이 위로와 증여를 매우 후하게 하고 돌아와 왕후에게 말하니 마침내 감히 해치지 못하였다. (『三國史記』)³³

32 『三國史記』列傳, 乙巴素, “於是 朝臣國戚 謂巴素以新聞舊 疾之.”

33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山上王 十三年, “春三月 王后知王幸酒桶村女 妬之陰遣兵士殺之. 其女聞知 衣男服逃走 追及欲害之, 其女問曰 爾等今來殺我 王命乎 王后命乎. 今妾腹有子 實王之遺體也. 殺妾身可也 亦殺王子乎. 兵士不敢害 來以女所言告之王. 后怒 必欲殺之而未果. 王聞之 乃復幸女家問曰 汝今有娠 是誰之子. 對曰 妾平生不與兄弟同席 況敢近異姓男子乎. 今在腹之子 實大王之遺體也. 王慰籍贈與甚厚. 乃還告王后 竟不敢害.”

우씨의 입장에서 최선의 상황은 산상왕의 후사를 자신이 낳는 것이었고, 최악의 경우는 자신과 적대적인 집단에서 산상왕의 후사를 잇는 것이었다. 이에 우씨는 후에 소후(小后)가 되는 주통촌녀(酒桶村女)를³⁴ 죽임으로써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으나 실패했던 것이다. 그런데 왕후는 첫 번째 암살을 실패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주통촌녀가 왕의 용종(龍種)을 가졌다는 것을 들었다. 왕실에서 자손의 생산은 국가의 사직(社稷)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였다. 그럼에도 우씨는 재차 주통촌녀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것 같다. 산상왕이 ‘주통촌녀에게 위로와 증여를 하고 돌아와 왕후에게 말하니 마침내 해치지 못했다’고 했지만, 우씨는 이전의 암살 시도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았다.

우씨와 산상왕의 결합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 일개 가문과 가문의 결합을 뛰어 넘어 왕통(王統)과 연계되는 문제였다. 즉,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왕후 우씨는 산상왕이 즉위하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였는데, 그것은 왕후 우씨의 세력, 즉 연나부의 세력이 작용한 결과일 것이다. 산상왕의 뒤를 이은 동천왕의 어머니는 주통촌녀로서 연나부 출신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연나부는 국상(國相) 명림답부(明臨答夫)를 배출하는 등 그 세력을 여전히 이어나갔다.³⁵ 고구려 초기 사회가 제부(諸部)의 연합인 부체제(部體制)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면,³⁶ 연나부는 단순히 왕비를 배출한 가문이 아니라 이를 초월하여 고구려를 구성하고 있었던 중요한 정치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을파소의 개혁에 반대했던 국척(國戚), 즉 연나부의 모습을 볼 때 우씨와 발기의 결합이 무산된 데에는 양자의 정치적 성향의 차이도 있었을 것으로

34 『三國史記』高句麗本紀, 山上王 十三年, “秋九月 酒桶女生男, 王喜曰 此天賚予嗣胤也, 始自郊豕之事 得以幸其母 乃名其子曰郊儻 立其母爲小后.”

35 이기백, 1959, 「高句麗王妃族考」, 『震檀學報』 20, 震檀學會, 85쪽.

36 노태돈, 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연구-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추측해볼 수 있다.³⁷ 고국천왕에게는 왕위를 이을 자식이 없었고, 발기가 연우에 대항하며 ‘왕위를 잇는 예(禮)’에 대해서 언급한 것을 보면 발기와 고국천왕은 일찍부터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며 정치적 노선을 함께했을 가능성이 있다. 태자(太子)나 태제(太弟)의 공식적인 신분은 아니었지만, 발기는 고국천왕이 사망한 이후 자신에게 차기 왕위가 돌아올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었고, 고국천왕 역시 이를 고려하지 않았을 리가 없다. 따라서 발기는 어느 시점부터는 고국천왕과 함께 고구려 중앙 정계에서 개혁 정치를 수행했던 축이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구려 왕실에서 취수훈이 나타난 이유는, 이것이 당대의 선호훈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고국천왕의 왕후였던 우씨 집안의 세력을 무시할 수 없었던 결과라고 생각된다. 우씨는 고국천왕과 혼인함으로써 왕비족(王妃族)으로서 기존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장받았고, 고국천왕의 입장에서는 연나부를 포용함으로써 정치적 안정을 기대할 수 있었다. 그러나 왕비족인 연나부의 세력 증대는 동시에 왕실의 절대권에 위협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고국천왕은 어비류와 좌가려의 반란을 제압하고 을파소를 등용하는 등 일정 정도 연나부를 견제하려고 시도하였다. 그러나 어비류와 좌가려의 반란으로 대표되는 연나부의 반란 사건에도 우씨가 왕비의 지위를 유지한 것을 보면 이들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 사실은 연나부의 세력이 막강하였음을 보여주며 동시에 왕실 역시 왕비족으로서의 연나부 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고국천왕이 후사가 없이 사망하면서, 양자의 결합이 깨어질 위기에 놓였다. 연나부의 입장에서는 자신들과 인척(姻戚)으로 맺어지지 않은 발기의 즉위는 크

37 김미경, 2006, 앞의 논문, 64쪽. 김미경은 연나부가 요동 방면으로의 진출을 적극적으로 주도했으며, 대외적으로 강경책을 선택했다고 보았다. 연나부의 대외정책 방향을 유념하면 발기가 遼東의 公孫康에게 투항한 것은 자연스런 선택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우씨로 대표되는 연나부는 발기에게 회유의 의사를 보였으나 연나부와 정치 속성을 달리하는 발기는 이를 수락하지 않았고 그 결과 연우와 우씨의 결합이 성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나쁜 위험이었을 것이다.³⁸ 따라서 우씨의 방문으로 대표되는 연나부의 회유가 이루어졌으나 실패로 돌아갔고, 이에 따라 우씨는 연나부의 정치 성향과 배치되지 않았던 다른 왕제, 즉 연우와 혼인하여 양부(兩部)의 동맹을 유지시키고자 하였을 것이다.

혼인은 혼인의 당사자로 하여금 다른 가(家)와 결연(結緣)을 맺게 함으로써 그의 영향력을 증대시킨다.³⁹ 혼인은 개인과 개인의 결합을 넘어선 가문 간의 결합이며 이는 고대사회에서 사회적 세력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고대사회에서는 엄격한 계급내혼(階級內婚)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왕실에서는 귀족 내에서도 왕실과 혼인할 수 있었던 특정 세력 범위를 정하기도 하였다.⁴⁰ 이러한 상황에서 취수혼은 원래의 혼인으로 결성된 동맹 관계가 배우자가 사망함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을 보장해주는 역할을 하였다. 최초의 배우자를 제공한 집단이 그 개인이 사망하더라도 동맹 관계를 지속시키기 위해 대체 배우자를 제시한다는 것에서⁴¹ 취수혼적 결합의 내재적 목적을 찾을 수 있다.

우씨와 산상의 결합은 이러한 취수혼적 결합의 효용성을 보여준 일례라고

38 『三國志』魏書, 東夷傳, 高句麗, “拔奇怨爲兄而不得立 與涓奴加各將下戶三萬餘口詣康降 還住沸流水.” 『三國志』에서는 발기가 涓奴部[消奴部]의 下戶 3만을 이끌고 公孫康에게 투항한 기사가 확인된다. 이를 볼 때 발기의 정치적 동반자 집단 혹은 발기와 姻戚으로 묶인 집단은 消奴部일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왕실의 왕비측으로서 세력을 키워왔던 연나부의 입장에서 소노부와 결합된 발기의 즉위는 정치권력 유지에 중대한 위험이었을 것이다.

39 Edward Westermarck 著, 鄭東鎬·申榮鎬 譯, 2013, 앞의 책, 283쪽.

40 川勝義雄 著, 임대희 譯, 2004, 『중국의 역사-위진남북조』, 해안, 378~380쪽. 496년 北魏에서는 姓族詳定을 실시했다. 이는 귀족제적 계층조직을 국가가 정비한 것으로 가문 등급의 인정 작업을 통해 通婚, 인재등용, 관직 수여의 기준을 마련하였다. 漢族 중에서는 范陽 盧氏, 清河 崔氏, 滎陽 鄭氏, 太原 王氏의 4姓이 북위 황실과 혼인할 수 있는 제일급 귀족으로 인정되었으며, 胡族의 경우 穆氏, 陸氏, 賀氏, 劉氏, 樓氏, 于氏, 嵇氏, 尉氏의 8姓이 황실과 통혼할 수 있는 귀족으로 인정되었다.

41 Ernest L. Schusky & T. Patrick Culbert 著, 이문웅 譯, 1978, 『人類學概論』, 일지사, 245쪽.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당시의 국인(國人)들이 우씨와 산상왕의 결합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였을까. 발기가 연우와 우씨의 결합과 그 결과로 이루어진 왕위 계승에 대해 부당함을 말하였으나 국인들 중에서 발기를 따르는 사람은 없었다. 물론 국인들은 계루부와 연나부의 정치적 결합이라는 점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 정치세력의 총합체이자, 사회적 결집체의 핵심인 왕실에서 해당 사회의 기본 통념 및 도덕과 배치되는 혼인형태를 채택했고 이를 당시 정치집단이 용인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를 통해 보면 ‘형사취수’가 당대 고구려인들에게 비례(非禮)라고 여겨진 것 같지 않다는 인상을 주며, 국왕(國王)을 공립(共立)하거나 폐립(廢立)하기도 했던 국인들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의 결합이 비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인상을 받는다.

산상왕과 우씨의 결합에 대한 결과는 『삼국사기』 동천왕조(東川王條)에서 확인된다.

가을 9월에 태후 于氏가 죽었다. 태후가 죽음에 임하여 유언하기를 “내가 失行하였으니 장차 무슨 면목으로 지하에서 國壤[故國川王]을 보겠는가? 만일 여러 신하들이 차마 구렁텅이에 빠뜨리지 못하겠다고 여긴다면 나를 산상왕릉 옆에 장사지내주기 바라오”라 하였다. 마침내 그 말과 같이 장사지냈다.

무당이 말하기를 “국양왕이 저에게 내려와서 말씀하기를 ‘어제 우씨가 산상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분하고 화가 나는 것을 이길 수 없어 결국 함께 싸웠다. 돌아와 생각해보니 얼굴이 두꺼워도 차마 나라 사람들을 볼 수 없다. 네가 조정에 알려 물건으로 나를 가리게 하라’고 하셨습니다”라 하였다. 이에 능 앞에 소나무를 일곱 겹으로 심었다. (『三國史記』)⁴²

42 『三國史記』高句麗本紀, 東川王 八年, “秋九月 大后于氏薨. 大后臨終遺言曰 妾失行 將何面目 見國壤於地下. 若羣臣不忍擠於溝壑 則請葬我於山上王陵之側. 遂葬之 如其言. 巫者曰 國壤降於予日 昨見于氏歸于川上 不勝憤恚 遂與之戰. 退而思之 顏厚不忍見國人. 爾告於朝 遮我以物. 是用植松七重於陵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씨가 죽음에 임하여 ‘실행(失行)’을 운운(云云)했다는 점이 주목되어 왔다. 이때의 ‘실행’에 대해서 형사취수혼이 비례였기 때문에 이러한 표현이 나왔다는 이해도 가능하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시 국민들의 반응을 볼 때 이것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비례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세기라는 시점을 고려할 때 당시 선진이라고 여겨졌던 중국의 유교 윤리(倫理)가 고구려 사회에 일차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례의 방증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고구려 지배층 내에서 형사취수혼은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그래서 선택 가능한 하나의 혼인기제였지만, 동시에 중국의 유교 윤리가 수입되면서 이러한 혼인 형태를 꺼려가기 시작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삼국지』에서는 동생과 결혼한 형수가 사망하면 ‘본래 남편, 즉 사망한 남편에게로 돌아가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⁴³ 이에 대하여 무당의 말을 살펴보면 고국천왕의 분노는 ‘우씨가 산상왕에게 돌아가는 것을 봄’에서 비롯하였다. 즉, 고국천왕의 반응은 취수혼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녀가 고부(故夫)에게 귀속되지 않고 사후에 산상왕에게로 돌아간 것에 대한 분노로 해석된다. 일국의 왕으로서 처가 없게 되어 국민들이 보기에 창피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우씨의 장례(葬禮)가 취수혼의 관행을 파기한 것에 대해 짚고 넘어간 것이며, 조정 역시 그러한 면을 공감하였기에 무당의 말에 따라 고국천왕릉 앞에 7중으로 소나무를 심어 차폐(遮蔽)하였다는 것이다.⁴⁴ 한편 왕후 우씨가 전왕(前王)의 낫을 볼 수 없다고 한 것은 취수(娶嫂)를 했음에도 대를 이을 후사를 생산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이해한 견해도 있지만,⁴⁵ 취수혼이 행해진 후에 태어난 소생의 귀속에

43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列傳, 烏丸, “父兄死 妻後母執嫂 …… 死則歸其故夫.”

44 노태돈, 1999, 앞의 책, 178~180쪽.

45 박용옥, 2003, 「고구려의 혼인 풍속과 평강공주의 自媒혼인과 그 역사적 성격」, 『梨大史苑』 36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61~62쪽.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⁴⁶ 망형(亡兄)의 자녀들은 형의 자녀들로 인식되었겠지만, 동생이 형수와 결합한 상태에서 태어난 소생은 망부(亡夫)의 소생이 아니라 재혼한 동생의 소생으로 인정받았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후자의 견해는 지금으로서는 단정할 수 없다.

취수훈의 실례는 고구려 왕실에서만, 그것도 단 한 차례만 확인된다. 형사취수훈은 고구려 왕실에서 인정되었으며, 국민으로 대표되는 지배층들 역시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고구려의 선호혼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실례가 유일하다는 점은 물론이고 당시 우씨와 산상왕의 결합 자체는 인정되었지만, 그들의 결합은 왕위 계승과 관련된 정치집단 상호의 타협적 속성을 띠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더욱이 고구려 일반의 풍속을 보여주는 『삼국지』와 『후한서』에서는 서옥혼의 풍습만이 확인된다. 왕실을 포함한 지배층에서 일정 기간 처가(妻家)에 머무는 남귀여가(男歸女家)를 전제로 하는 서옥혼의 실행은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취수훈과 서옥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별개의 혼인 습속일 가능성이 있다. 즉, 고구려의 지배층은 형사취수훈을, 피지배층으로 대표되는 일반민들은 서옥혼을 주된 혼인 습속으로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 다음 장에서는 서옥혼의 운영 방식과 그 실행 주체를 살펴, 고구려 혼인 습속의 계층성에 대해 논증하도록 한다.

46 김수태, 2005, 「2세기말 3세기대 고구려의 왕실혼인-취수훈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제38권, 한국고대사학회, 94~96쪽. 김수태는 우씨의 취수훈이 고국천왕의 遺命을 따른 것이라고 이해했다. 취수훈은 아들 없이 남편이 죽으면 부인이 시동생과 결혼하여 뒤를 잇게 하는 것을 의미하며, 뒤를 잇는다는 관점에서는 동생에게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형을 여전히 강조하는 것이라는 관점이다. 따라서 고국천왕은 왕비 우씨를 동생과 혼인시켜 자신의 뒤를 이어 줄 아들을 얻도록 하고자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녀가 존재해도 취수훈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취수훈의 목적 중 하나가 亡兄의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또한 취수훈이 이루어진 후 태어난 자녀는 亡夫가 아니라 망부의 동생에게로 귀속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와 같은 견해를 그대로 취신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한다.

Ⅲ. 서옥혼(婿屋婚)의 노동보상적 성격과 피지배계층

상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의 혼인 습속에 대해서 알려주는 문헌 자료는 매우 소략하다. 혼인 습속과 관련된 직접적인 자료로는 『삼국지』, 『후한서』, 『수서(隋書)』, 『신당서(新唐書)』 등을 참고할 수 있다. 본 장에서 살펴보게 될 ‘서옥혼’은 일종의 서류부가혼(婿留婦家婚)·처방거주혼(妻方居住婚, uxorilocal marriage)으로, 고구려의 서옥혼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삼국지』와 『후한서』의 기록이 참고가 된다.

그 풍속은 혼인할 때 구두로 미리 정하고, 여자의 집에서 몸채 뒤편에 작은 별채를 짓는데, 그 집을 ‘婿屋’이라 부른다. 해가 질 무렵에 신랑이 신부의 집 문밖에 도착하여 자기의 이름을 밝히고 跪拜하면서, 신부와 더불어 잘 수 있도록 해달라고 청한다. 이렇게 두세 번 거듭하면 신부의 부모는 그때서야婿屋에 가서 자도록 허락하고, 錢帛은 곁에 쌓아둔다. 아들을 낳아서 長成하면 아내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간다. (『三國志』)⁴⁷

혼인에 있어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살다가 아들을 낳아 장성한 뒤에야 남자의 집으로 돌아온다. (『後漢書』)⁴⁸

사서를 일람하면 ‘서옥(婿屋)’이라 하는 것은 처가의 본채 뒤에 지은 작은 별채를 말하는 것으로, 남자가 혼인한 뒤 태어난 아이가 성장할 때까지 기거하는 공간을 의미한다. 서옥혼이라 함은 여기에서 그 명칭을 따온 것이다. 『삼국지』의 기록을 보면 ‘해가 저물 무렵’에 신랑이 처가에 가서 인사를 드리는 것을 확

47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列傳, 高句麗, “其俗作婚姻 言語已定 女家作小屋於大屋後 名婿屋 婿暮至女家戶外 自名跪拜 乞得就女宿 如是者再三 女父母乃聽使就小屋中宿 傍頓錢帛 至生子已長大 乃將婦歸家.”

48 『後漢書』東夷列傳, 高句驪, “其婚姻皆就婦家 生子長大 然後將還.”

인할 수 있는데, 혼인이 황혼 무렵에 진행되는 것에 대해 겁탈혼(劫奪婚, 掠奪婚)의 유제라고 추측하는 견해⁴⁹도 존재한다. 『삼국지』나 『후한서』의 기록만으로는 겁탈혼이 고구려에 존재했는가, 혹은 겁탈혼이 초기 혼인 방식의 하나였는가에 대해서 더 이상의 논의를 진행하기가 어렵지만, 사서에 나타난 모습으로는 고구려의 서옥혼은 기본적으로 서류부가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옥혼의 성격에 대한 기존의 연구사를 살펴보면, 기왕의 논의들이 ‘서류부가’라는 특징적인 거주율과 관련하여 모계·모권 등 출계 문제⁵⁰에 집중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와서 혼례를 치르고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처가에 만들어진 서옥에 거주한다는 점에 방점을 둔 견해가 있다. 이들은 남자가 여자 쪽에 가서 생활하므로 모처제(母處制, matrilocal residence)이며 이것은 고구려 사회가 모계 사회이거나 모권제적 잔재가 남아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라고 이해했다. 이들 견해에서는 서옥혼을 일종의 노역혼(勞役婚) 혹은 봉사혼(奉仕婚)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아이가 장성하면 남자가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남자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점에 비증을 주었던 학자들은 거주형태를 양처(兩處, bilocal residence)로 부처(父處, patrilocal residence)-모처(母處) 혹은 부처, 처처제(妻處制)로 보면서 부계제(父系制) 사회로 이해하였다.⁵¹ 거주율은 혼인으로 인해 새롭게 탄생한 부부가 남편과 부인의 친족 계통 중 어느 쪽으로 흡수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근거로 사용되어왔다. 그러나 거주율이 계통을 결정하는 유일한 동인(動因)은 아니며,⁵² 고구려 사회에서는 부처와 처처의 양

49 김원중, 2007, 『혼인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150~151쪽; 이인경, 2015, 「혼인과 관련된 漢字에 투사된 고대 중국의 혼인 풍속」, 『중국학연구』 제73집, 중국학연구회, 92~94쪽.

50 최재석, 1983, 앞의 책, 89쪽.

51 김선주, 2002, 「高句麗 婿屋制의 婚姻 形態」, 『高句麗渤海研究』 13輯, 高句麗渤海學會, 62~65쪽. 서옥혼과 출계 문제를 다룬 기존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위의 논문을 참고할 수 있다.

52 George Peter Murdock, 1949, “Composite forms of the family,” *Social Structure*, Collier-Macmillan Limited, pp. 37~38. Murdock은 상속

자가 모두 확인되므로, 이를 토대로 3세기 단계의 고구려 사회를 모계제 사회라고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히려 문헌 기록이 소급하는 시기부터 고구려는 부계제 사회였음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단서가 확인된다.

『삼국지』를 살펴보면 ‘방돈전백(傍頓錢帛)’이라 하여 ‘돈과 폐백을 (서옥) 곁에 쌓아두었다’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지불한 ‘혼납금(婚納金)’⁵³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혼납금과 취수혼이 일반적으로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자가 공존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현상적으로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된다는 것이다.⁵⁴ 일반적으로 취수혼은 형수가 다른 씨족(氏族)과 재혼함으로써 망부의 재산이 망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신부대(新婦代)는 그 대금을 만들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처다부제(一妻多夫制)의 한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서옥혼 관련 설명에서 확인되는 혼납금의 존재를 취수혼과 직접 연결시키기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삼국지』의 내용을 보면 이때의 전

(Inheritance), 거주율(Residence), 출계(Descent)가 반드시 서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고 그 방증사례들을 제시하였다.

- 53 문형진, 2005,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는 혼인의 의미」, 『세계의 혼인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21쪽. 혼납금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할 수 있다.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제공하는 ‘신부대금(bridal-price)’과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제공하는 ‘신부지참금(dowry)’이 그것이다. 본고에서 논의의 대상이 되는 ‘傍頓錢帛’에 대해서는 신부대금과 신부지참금이라는 의견이 대립하고 있으므로, 혼납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 54 노태돈, 1999, 앞의 책, 182~187쪽. 한편 이와 동일하게 ‘錢帛’을 신부대금으로 보는 견해는 다음과 같다. 김정배, 1979, 「魏志東夷傳에 나타난 古代人의 生活習俗」, 『大同文化研究』 1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154쪽; 고정자, 1986, 「三國時代의 婚姻制度에 관한 史的 考察」, 『基礎科學研究論文集』 3, 동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71쪽; 박정혜, 1997, 「高句麗 婚俗에 관한 小考」, 『人文科學研究』 16,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3쪽; 박용옥, 2003, 앞의 논문, 49~51쪽; 이강래, 2009, 「한국 고대 혼인에 보이는 財貨의 성격」, 『韓國史研究』 147, 한국사연구회, 15·31쪽.

백(錢帛)을 과연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지불한 혼납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긴다. 우선 『삼국지』의 서옥혼 관련 문단을 보면 크게 6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① 혼인의 구두 약속 ② 여가(女家)에서 서옥(婿屋)을 건설 ③ 신랑의 내방(來訪)과 동숙(同宿) 간청 ④ 신부 부모의 허락 ⑤ 혼납금 ⑥ 아이의 성장과 귀부가(歸夫家)가 그것이다. 이때의 ‘방돈전백’, 즉 혼납금을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제시한 것이라면 ③ 신랑의 내방과 동숙 간청 단계에서 거론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문장의 구성상 혼납금 관련 내용은 신부 부모의 허락 다음에 바로 서술되므로, 혼납금을 (서옥) 곁에 쌓아두는 주체는 신부의 부모가 되는 것이 타당하다. 고구려의 혼납금 습속에 대해서는 시간상의 차이가 있지만 『주서(周書)』, 『수서』와 『신당서』의 기록을 참고할 수 있다.

婚姻에는 대체로 재물이나 폐백이 없어, 만일 재물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계집종으로 팔아먹었다’고 하여 매우 부끄럽게 여긴다. (『周書』)⁵⁵

시집 장가드는 데도 남녀가 서로 사랑하면 바로 혼례를 치른다. 남자의 집에 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재물을 보내는 예는 없다. 만약 재물을 받는 자가 있으면 사람들이 모두 수치로 여긴다. (『隋書』)⁵⁶

혼인할 적에는 폐백을 쓰지 않으며, 받는 자가 있으면 수치로 여긴다. (『新唐書』)⁵⁷

『주서』, 『수서』, 『신당서』에서는 고구려에 혼납금을 주고받는 습속이 없었으며, 심지어 이를 매우 부끄럽게 여겼다는 기록이 확인된다. 특히 『수서』의 기

55 『周書』異域列傳, 高句麗, “婚娶之禮 畧無財幣 若受財者 謂之賣婢 俗甚恥之.”

56 『隋書』東夷列傳, 高句麗, “有婚嫁者 取男女相悅 然即爲之 男家送猪酒而已 無財聘校勘之禮. 或有受財者 人共恥之.”

57 『新唐書』東夷列傳, 高句麗, “婚娶不用幣 有受者恥之.”

록이 주목되는데, 여기에서는 ‘남자의 집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재물을 보내는 예(禮)는 없다’고 특기하여 신랑 측에서 신부 측에 혼납금을 보내는 습속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⁵⁸ 서류부가혼의 경우 대개 신랑이 신부의 집에서 노동하거나 봉사하는 경우가 다수 확인된다. 특히 실위(室韋)의 서류부가혼이 주목되는데,⁵⁹ 남성은 노동의 대가로서 처가 측에서 대가를 제공받는 것을 알 수 있다.⁶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옥혼에서 확인되는 혼납금은 사위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서 처가가 지불한 금액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혼인 제도에서도 호혜성(互惠性, reciprocity)의 원리를 상정할 수 있다면,⁶¹ 사위의 노동력 제공에 대해 처가에서 이에 해당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다. 물론 결과적으로 부부는 처가를 떠나 부가(夫家)에 머무르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신부가 가져가는 지참금은 혼인 이후 신부의 경제적 지위와 직결되며,⁶² 설

58 혼납금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고려 시대에도 이어진다. 『宣和奉使高麗圖經』 卷 22 雜俗1을 보면 “귀인이나 仕族에서 혼인할 때는 대략 聘幣을 쓰지만, 백성들은 단지 술이나 쌀로 인연을 맺을 뿐이다(貴人仕族 昏嫁 略用聘幣 至民庶 唯以酒米 通好而已)”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또한 『鷄林類事』에도 “나라 사람들이 혼인을 할 때 聘財를 쓰지 않으며, 사람을 시켜 말로 통하게 하고 쌀로써 (혼인을) 정한다(國人婚嫁無聘財令人通說以米食爲定)” 하여 일반인들의 혼인에서는 혼납금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59 『新唐書』 北狄列傳, 室韋, “其俗 富人以五色珠垂領 婚嫁則男先傭女家三歲 而後分以產 與婦共載 鼓舞而還. 夫死 不再嫁.”

60 김영심, 2003, 「혼인습속과 가족구성원리를 통해 본 한국 고대사회의 女性」, 『강좌 한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332~334쪽.

61 Marcel Mauss, 1990, *The Gift: The form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New York: W.W.Norton & Company, pp. 5~6. 경제적으로 유용한 것뿐만 아니라 예의(acts of politeness), 의식(rituals), 군사적 봉사, 여성, 어린이 등등도 교환의 대상이 된다. 급부와 반대급부는 선물이나 선사품이라는 다소 자발적인 형태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적 혹은 공적인 갈등을 유발하므로, 실제로 이는 엄격한 의무를 수반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을 ‘전체적인 급부체계(système de prestation totale)’라고 할 수 있다.

62 Jack Goody, 1973, “Bridewealth and Dowry in Africa and Eurasia,” *Bridewealth and Dow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1. 이러한 측면에서 Jack Goody는 지참금(dowry)을 처가에서 신부에게 제공하는 ‘生前相續(pre-

사 혼인이 이혼(離婚) 등으로 종료된다고 할지라도 지참금은 반환되는 것이 상례라는 점에서 처가 역시 손해를 입는 것이 아니었다. 신부가 가져가는 지참금이 끝까지 신부 측의 재산으로 남는 사례는 곳곳에서 확인된다.⁶³

결국 『삼국지』보다 후대의 기록이긴 하지만 중국 측 사서에서 고구려에는 신랑 측이 신부 측에 혼납금을 보내는 습속이 없었음을 명시하고 있고, 『삼국지』의 문장 구조상 전백(錢帛)을 쌓아둔 주체를 처가의 부모로 볼 수 있다면, 혼납금을 이유로 서옥혼과 취수혼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기는 어렵다.

물론 3세기 무렵 한국 고대사회의 혼속에서 혼납금의 존재는 부여에서도 확인되며, 부여와 그 풍속이 유사했던 고구려 역시 같은 양상을 띠었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⁶⁴ 그런데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열전 부여조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를 과연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지불한 것인가 하는 의문점이 생긴다.

형벌은 엄하고 각박하여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하고 그 집안사람은 적몰하여 奴婢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면 12배를 변상케 했다. 남녀 간에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모두 죽였다. 투기하는 것을 더욱 미워하여 죽이고 나서 그 시체를 나라의 南山 위에 버려서 썩게 한다. 여자의 집안에서 가져가려면 牛馬를 바쳐야 내어준다. (『三國志』)⁶⁵

mortem inheritance)이라고 정의하기도 했다.

63 Friedrich Engels 著, 佃田重夫 譯, 「ケルト人とドイツ人の氏族」, 『家族, 私有財産および國家の起源』, 青木書店, 175~177쪽; 이강언, 2002, 「로마법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고찰」, 『가톨릭사상』 27,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13~14쪽; Siwan Anderson, 2007, “The Economics of Dowry and Bridepri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p. 162; Edward Westermarck 著, 鄭東鎭·申榮鎭 譯, 2013, 앞의 책, 213~218쪽.

64 노태돈, 1983, 앞의 논문, 89~90쪽.

65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列傳, 夫餘, “用刑嚴急, 殺人者死, 沒其家人爲奴婢. 竊盜一責十二. 男女淫, 婦人妒, 皆殺之. 尤憎妒, 已殺, 尸之國南山上. 至腐爛, 女家欲得, 輸牛馬乃與之.”

우선 『삼국지』의 이 부분은 부여의 법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즉 부여의 형벌제도가 엄격하고 각박하며, 살인·도둑질·음사(淫事)·투기(妬忌)에 대해 엄격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즉, ‘부인이 투기하면 죽었다’는 것은 남편이 부인에게 내린 사적(私的) 형벌이 아니며, 국가의 공식적인 형벌 제도 안에 포함되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시신(尸身)에 대한 유기(遺棄) 역시 국가적 형벌이라고 보아야 한다. 만약 이것이 사적 형벌이며 시신을 가져가는 대가로서 여자의 집안에서 남자 측에 우마(牛馬)를 지불해야 했다면 시신을 남자 측이 거두어가는 것이 사리에 타당하다. 그러나 문장 내에서는 ‘시신을 국(國)의 남산(南山)에 버려두었다’고 하여 공지(公地)에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이때 시신을 거두어가는 대가로 여가(女家)에서 우마를 지불한다고 했을 때, 이것을 받는 주체는 남자 측이 아니라 풍기문란(風紀紊亂)의 대가로 국가가 수취한 것, 즉 시신 속환(贖還)에 대한 일종의 벌금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삼국지』와 『후한서』에서는 모두 혼인 이후 낳은 아이가 ‘장대(長大) 할 때까지⁶⁶ 서옥에 머물렀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때 ‘장대’가 구체적으로 몇 살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기록이 없지만, 사춘기를 지나지 않은 아이에게 장대라는 표현을 쓰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삼국과 주변 국가의 일반적인 사례를 볼 때 요역(徭役)에 동원되었던 나이는 대략 15~16세 정도라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이 곧 고구려인들이 성년으로 보았던 연령일 것이다. 따라서 거의 남자는 10년 가까이 서옥에서 머물렀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겠다.

취수혼의 목적 중 하나는 망부의 재산이 타 씨족으로 분할되는 것을 막기 위

66 한상호, 2001, 「高句麗의 結婚風俗에 관한 小考」, 『韓國宗教』第25輯,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76쪽. 이에 대해서는 남자 쪽에서 신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신체인가를 확인하고, 여자가 多産할 수 있는 능력이 입증된 이후에 아내로 인정한 것이라는 견해가 있다. 즉, 고대 사회의 높은 유아 사망률을 생각할 때, 신부가 유아기에 사망하지 않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어야 진정한 아내로 인식되었을 수 있다는 견해이다.

한 것이다. 만약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낳은 아이가 장성해서 성인으로 인정받은 후에야 혼인을 인정받을 수 있었다면, 이후 남편이 사망했다라도 그 재산은 처가 아닌 자녀에게로 상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계(父系)를 따르는 아들이 장성하여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았다면 굳이 취수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 재산의 대부분은 동일 씨족 내에 남아 있게 된다. 이를 혼납금을 지불하지 않은 신랑 측 입장에서 보면 아이가 장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남편이 사망했다라도 남편 측에서는 재산상의 면에서 손실을 볼 일이 없게 되며, 굳이 취수혼을 선택하지 않아도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한 아이가 장성했다면 부가(父家)의 재산은 아이에게 상속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전자와 후자의 경우 모두 남편 측의 재산이 망실될 일은 벌어지지 않는 것이다.

결국 기존 견해의 문제점은 취수혼과 서옥혼이 연동하여 작동하고 있었다는 판단의 결과라고 생각된다. 서옥혼과 취수혼, 양자가 분리되어서 각기 작동하고 있었다고 생각하면 논리적 모순은 사라진다. 이러한 입장에서 다음 장에서는 고구려에서 계층에 따라 혼인 습속이 달랐을 수 있다는 필자의 주장을 고구려 지배집단의 출자(出自) 문제, 특히 고구려 왕실인 계루부(桂婁部)와 관련하여 논증해보고자 한다.

IV. 고구려 혼인 습속의 계층적(階層的) 차이와 배경

상술한 바와 같이 형사취수혼은 북아시아 유목민족에게서 널리 확인된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형사취수혼은 『삼국사기』 고구려본기(高句麗本紀)에서만 그 단편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뿐, 여타 지역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삼한(三韓) 사회에서 취수혼에 관해서는 어떠한 전승도 확인되지 않으며, 신라(新羅)·백제(百濟) 사회에서도 취수혼에 관한 전승은 전혀 없다. 결국 현존하는 문헌을 통해 볼 때, 삼한과 이를 이은 신라·백제 사회에서의 취수혼에 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적어도 한반도 내에서 취수혼이 선호혼으로서는 행해지지 않았던 사

실을 말해준다고 이해된다.⁶⁷

취수혼은 고구려 왕실에서 인정되었으며, 국인(國人)으로 대표되는 지배층들 역시 이를 사회적으로 용인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고구려 일반의 풍속을 보여주는 『삼국지』와 『후한서』에서는 서옥혼의 풍습만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취수혼과 서옥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별개의 혼인 습속일 가능성이 있다. 즉, 고구려의 지배층은 형사취수혼을, 피지배층으로 대표되는 일반 민들은 서옥혼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현존하는 문헌 기록을 토대로 볼 때 형사취수혼은 고구려 그중에서도 왕실, 즉 최고 지배층에서 나타나는 혼인 습속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고구려 내에서 혼인 습속의 계층성이 있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하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고구려 왕실, 즉 계루부의 출자 문제와 연결하여 논증해보고자 한다.

東夷의 옛말에 따르면 [고구려는] 부여의 別種이라 하는데, 말이나 풍속 따위는 부여와 같은 점이 많았으나, 그들의 기질이나 의복은 다름이 있다. (『三國志』)⁶⁸

東夷들이 서로 傳하여 오기를 [高句驪는] 夫餘의 別種이라 하는데, 그러한 까닭으로 언어와 法則이 [부여와] 많이 같다. (『後漢書』)⁶⁹

『삼국지』와 『후한서』에는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別種)이었다고 하였다. ‘별종’이란 용어는 기준이 되는 족속과 어떤 종족상의 친연관계(親緣關係)가 있다

67 노태돈, 1999, 앞의 책, 217~218쪽.

68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列傳, 高句麗, “東夷舊語以爲夫餘別種 言語諸事 多與夫餘同 其性氣衣服有異.”

69 『後漢書』東夷列傳, 高句驪, “東夷相傳以爲夫餘別種 故言語法則多同.”

고 여겨진 집단을 지칭한 용어로서, 대체로 기준이 되는 본족(本族)에서 분리되어 새로 형성된 집단, 곧 지파(支派)·별파(別派) 또는 적계(嫡系)에 대한 방계(傍系)의 집단을 뜻한다.⁷⁰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이었다는 인식은 이후에도 계속 확인된다. 『구당서(舊唐書)』, 『신당서』에도 고구려가 부여의 별종이었다는 기사가 나오며,⁷¹ 당대(唐代) 이후에도 이러한 인식은 이어진다.

부여인들이 고구려 지역으로 이동하게 된 배경은 특정 시기, 특정 사건 때문만은 아니었다. 부여인들의 이주는 장기간에 걸쳐 수차례 이루어졌다고 여겨지는데, 본고와 관련하여 주목해볼 수 있는 사건은 한사군(漢四郡)의 설치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부여에 영향을 미쳤던 군현은 현도군(玄菟郡)과 요동군(遼東郡)으로, 부여는 처음 현도군에 속했다가 전한 말(前漢末) 공손탁(公孫度)이 성장하자 그 소속을 요동군으로 바꾸었다.⁷² 이후 현도군은 부여왕의 장례에 옥갑(玉匣)을 제공하는 등 부여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였으나,⁷³ 양자의 관계가 시종일관 평화로웠던 것은 아니었다. 『후한서』에는 현도군과 부여의 대규모 전쟁 기사가 확인되는데, 전쟁으로 인한 광범위한 유이민은 인근에 위치했던 고구려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크다.⁷⁴

아울러 고구려의 부여 출자 인식은 고구려 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광개토왕비(廣開土王碑)」의 고구려 건국설화나 「모두루묘지(牟頭婁墓誌)」의 기록에

70 노태돈, 1985, 「발해국의 주민구성과 발해인의 족원」,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274쪽; 노태돈, 2003,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 ‘高麗別種’과 ‘渤海族’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 『韓國史研究』 122, 韓國史硏究會, 292~293쪽.

71 『舊唐書』 東夷列傳, 高句麗, “高麗者 出自扶餘之別種也.”; 『新唐書』 東夷列傳, 高句麗, “高麗 本扶餘別種也.”

72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列傳, 夫餘, “夫餘本屬玄菟 漢末 公孫度雄張海東 威服外夷 夫餘王尉仇台更屬遼東.”

73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列傳, 夫餘, “漢時 夫餘王葬用玉匣 常豫以付玄菟郡 王死則迎取以葬.”

74 김기섭, 2008, 「부여족의 분산과 이동」,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74쪽.

서 시조 추모왕(鄒牟王)의 출자를 북부여(北扶餘)라고 명기하고 있음이⁷⁵ 확인된다.⁷⁶

옛날에 시조 鄒牟王이 나라를 세웠다. 北夫餘에서 태어났으며, 天帝의 아들이자 어머니는 河伯의 딸이었다. …… 길을 떠나 남쪽으로 가는데, 부여의 奄利大水を 거쳐 가게 되었다. (『廣開土王碑』)⁷⁷

河伯의 손자이며 日月의 아들인 鄒牟聖王이 북부여에서 나셨으니 …… . (『牟頭婁墓誌』)⁷⁸

위의 사례는 늦어도 5세기 초에는 고구려에서 건국 설화인 주몽설화가 성립되었고, 그 시조를 북부여로 인식했다는 것을 보여주며, 계루부 왕실이 여러 부

75 島田好, 1934, 「東夫餘の位置と高句麗の開國傳説」, 『靑丘學叢』 16, 靑丘學會, 91~94쪽. 주몽의 출신지에 대해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는 북부여와 동부여가 모두 확인된다. 이에 비해 당대 1차 사료인 「廣開土王碑」나 「牟頭婁墓誌」에는 북부여에서 내려온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그렇다면 『三國史記』나 『三國遺事』에서 확인되는 주몽의 동부여 출신설은 5세기 이후 첨가된 후대의 인식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76 최근에는 부여사 중심의 시각에서 「廣開土王碑」의 북부여를 부여 위쪽의 다른 나라로 보고 이때의 북부여는 『魏略』의 동명설화에 등장하는 遼離國(遼離國)을 가리킨다고 주장한 견해도 확인된다(송호정, 2015, 「부여의 기원」,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54~59쪽). 그러나 「廣開土王碑」나 「牟頭婁墓誌」의 방위 개념의 기준은 고구려이며, 주몽의 출자지인 북부여와 吉林 지역의 原扶餘(舊扶餘)를 동일한 실체로 보는 것이 통설이다(노태돈, 1989,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第4輯, 國史編纂委員會, 44~48쪽; 송기호,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22~25쪽; 윤상열, 2008, 「부여의 天下觀 小考」, 『사학연구』 90, 한국사학회, 7~8쪽).

77 노태돈, 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第 I 冊,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7쪽. “惟昔始祖鄒牟王之創基也 出自北夫餘 天帝之子 母河伯女郎 …… 巡幸南下路由夫餘奄利大水.”

78 노태돈, 1992, 「牟頭婁墓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第 I 冊,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93쪽. “河伯之孫 日月之子 鄒牟聖王 元出北夫餘 …… .”

여계 이주민 집단과 더불어 부여의 시조인 동명(東明)을 선조로 내세우며 출자와 권위를 분식하던 상황을 보여준다.⁷⁹ 「광개토왕비」의 성격에 대해서는 수묘비설(守墓碑說), 훈적비설(勳績碑說), 신도비설(神道碑說) 등등의 이견이 많지만, 건비(建碑)의 주체가 고구려 왕실이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광개토왕비」에 북부여 출자를 내세웠다는 것은 이것이 고구려 왕실의 공식적인 견해였음을 보여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에 따르면 고구려 건국설화는 주몽의 부여에서의 남하로 시작하여 주몽의 아들이었던 유리(琉璃)가 북부여에서 주몽을 찾아와 왕위를 이어받는 데에서 결말을 맺는다. 즉 설화의 시작은 주몽이었지만 그 완결은 유리의 즉위로 끝맺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들 부자(父子)가 북부여에서 왔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주몽의 남하, 그리고 유리의 남하는 부여에서 고구려로 몇 차례에 걸쳐 주민의 이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⁸⁰ 주민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는 부여의 중심지였던 길림성 일대에서 서남향으로 내려오는 경로가 학계의 통설로 이해되고 있다.⁸¹

압록강 중류의 초기 고구려 유물에서 확인되는 요동적(遼東的) 요소와 송화강(松花江) 중류 요소는 고고학적으로 고구려 초기의 문화가 길림성 일대 부여 후기 단계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계승했음을 보여준다. 구체적인 예로서 길림성 일대에서 유행한 서단산문화(西團山文化)의 토기와 압록강 유역 일대에서 특징적으로 사용된 공귀리형(公貴里型) 토기의 유사함이나, 길림 토성자(土城子) 유적의 출토 상황과 압록강 유역의 노남리(魯南里) 유적 및 환인 동강촌(東江村) 11호 무덤의 출토 상황은 매우 유사하여 부여 방면에서, 고구려로의 주민 이동을 상정할 수 있게 한다.⁸² 또한 고구려 산성(山城)의 기원에 관하여 ‘성책(城柵)

79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61·66쪽.

80 김기섭, 2008, 앞의 논문, 83쪽.

81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에맥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7호, 동북아역사재단, 207쪽.

82 송호정, 2007, 「高句麗 族原과 濊貊」, 『高句麗研究』 27輯, 고구려발해학회,

을 모두 등글게 만들어서 뇌옥(牢獄)과 유사하다.⁸³ 『삼국지』 부여전의 문헌 기록이 지적되기도 한다.⁸⁴

최근에는 고구려 초기 중심지였던 환인(桓仁) 지역에서 부여계 유물을 다수 부장한 망강루(望江樓) 고분군(古墳群)이 확인되기도 하였다. 망강루 적석총(積石塚)은 무덤의 위치나 묘광의 위치 등의 몇 가지 이질적인 요소들을 제외하면 기본적으로 고구려 초기 적석총의 묘제를 비교적 충실하게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준다.⁸⁵ 망강루 적석총에서 출토된 금제(金製) 이식(耳飾)이나 차관과 동형의 유물은 부여의 매장 유적이라고 추정되는 유수(楡樹) 노하심(老河深) 중층 분묘에서 출토된 바가 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고구려 초기 물질문화 속에 부여 문화 요소가 있었음을 실증하는 것이다. 또한 위신재(威信財)라고 할 수 있는 상위의 문물이 포함되어 있는데, 상위의 문물이 부여와 관련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고구려 지배층의 부여 출자를 뒷받침해주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⁸⁶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물질문화로 뒷받침되는 고구려 지배집단의 부여 출자는 왜 북아시아 유목민족의 취수혼 풍습이 고구려 왕실에서 재현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물론 고구려 지배층 전부가 부여 계통이라고 할 수는 없다.⁸⁷ 또한 부

116쪽.

83 『三國志』 魏書, 烏丸鮮卑東夷列傳, 夫餘, “作城柵皆員 有似牢獄.” 기록을 통해 보면 부여의 성들은 대부분 원형 혹은 타원형으로 기단부는 판축을 한 후 그 상부에 목책을 세웠을 가능성이 높는데, 현재까지 조사된 부여 성곽의 경우 그 형태가 불규칙 타원형이거나 장방형을 이루고 있어 문헌기록상의 ‘作城柵皆員’과 부합되고 있다(이종수, 2010, 「고고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대외교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33, 한국고대학회, 210쪽).

84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の歴史と遺跡』, 中央公論社, 402~403쪽.

85 여호규, 2011,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歷史文化研究』 제3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209~212쪽.

86 강현숙, 2014, 「환련 왕장리우(望江樓) 적석총으로 본 주몽설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 2), 사계절, 465~468쪽.

87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118쪽.
桂婁部 내부에도 졸본 부여계와 부여 流移民系 및 국내 지역 세력 등 몇 개의 정치 집단이 존재했으며, 沸流部에도 舊部長 세력과 新部長 세력 등 최소 네 개의 세력

여에서의 이주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피지배층에도 부여계 이주민은 유입되었을 것이다. 부여의 인구와 부여 이주민의 비율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고구려의 인구 구성에서 부여계의 비율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초기 고구려가 토착의 문화적 기반을 바탕으로 요동반도(遼東半島), 압록강(鴨綠江) 하류 유역과 ‘부여’라는 정치체로 대표되는 북부 길림지역에서 영향을 받고 있었으며,⁸⁸ 그러한 결과 고구려가 상이한 문화적 구성을 띠고 있었다는 지적은⁸⁹ 유의미하다. 즉, 고구려의 기원은 단선적(單線的)으로 파악할 수 없으며, 주민 구성 역시 다원성(多元性)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헌과 고고학적으로 확인되는 부여계의 고구려 유입은 고구려 주민 구성에 부여계를 포함시킬 수 있게 한다. 특히 고구려의 왕계를 배출한 계루부가 부여에서 비롯하였다는 것은 부여계 인물들이 고구려 중앙 정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리라는 바를 짐작케 한다. 또한 실제 형사취수제를 선택했던 연나부 역시 부여계였을 가능성이 있다.⁹⁰ 이들 부여계 출신들이 고구려의 정치 구조에서 상부를 차지하는 집단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취수훈 습속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국인들도 이를 인정하였던 것이다.⁹¹ 물론 산상왕과 우씨의 결합이 개인과 개인

이 있었고, 椽那部에도 역시 네 개의 정치 집단이 있었다. 이들 세 나부보다 규모나 세력 면에서 열세였던 貫那部나 桓那部에도 몇 개의 정치 집단이 결합되어 성립되었을 것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88 지병목, 2007, 「高句麗 起源의 考古學的 考察」, 『고구려발해연구』 27, 고구려발해학회, 155쪽.
- 89 李新全, 2005, 「五女山 山城과 주변의 고구려 초기 유적」,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의』, 고구려연구재단, 106쪽.
- 90 이기백, 1959, 앞의 논문, 84~87쪽; 이강래, 2009, 앞의 논문, 36쪽.
- 91 그렇다고 해서 취수훈이 지배층 내에서 가장 선호되는 혼인방식이었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우선 취수훈은 독점적이거나 우세한 결합을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선호혼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은 유의미하다(Claude Lévi-Strauss, 1969,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James Harle Bell, John Richard von Sturmer and Rodney Needham, Trans.], Beacon Press, pp. 120~121). II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연우와 발기에게 각각 처자가 있었다는 것은 취수훈이 최우선되는 혼인양식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고구려 왕실을 포함한 지배층의 경

의 결합을 초월한 양대 세력의 정치적 결합이라는 목적을 띠고 있었다는 점 역시 고려되었음이 틀림없다. 이에 비해 일반민들의 주된 혼속은 서옥혼이었으며, 따라서 『삼국지』와 『후한서』 등의 중국 측의 기록에는 서옥혼만이 고구려의 혼인 습속으로 기록되었을 것이다.

형사취수혼의 경우 친족집단의 집단성의 약화와 윤리관의 변화로 인해 시기적으로 3세기 단계에서 소멸하였다. 이는 고구려 내부적으로 촌락공동체적 요소와 친족원 간의 집단성이 약화된 결과이며, 외부적으로는 이미 소가족별로 부자상속제도(父子相續制度)와 그에 결부된 윤리관을 지니고 있던 한족(漢族)들의 대규모 내주(來住)와 중국과의 빈번한 접촉 등의 결과였다.⁹² 그러나 기층의 혼인 습속이었던 서옥혼은 고구려의 멸망과 유교 윤리의 수용이라는 사회적 상황 변화에도 불구하고 서류부가(婿留婦家)·남귀여가(男歸女家)라는 기본 원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였다. 고구려의 서옥혼을 그 원인으로 하고 있는 솔서혼(率婿婚)은 17세기 무렵까지 존속하였으며, 18세기부터 붕괴하기 시작하였지만 붕괴 이후에도 ‘수일간의 처가(妻家) 체류’, ‘수년간의 처가 왕복’을 그 유속(遺俗)으로 남겼다.⁹³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의 혼인 습속이었던 서옥혼과 형사취수혼은 양자가 다른 방식으로 각기 작동한 별개의 혼인 제도인 것이며, 그러한 차이의 주요 원인은 혼인 습속을 시행했던 당사자들의 계층성에 있다고 하겠다. 또한 여기에는 고구려계 원주민과 부여계 이주민이라는 종족적 특성의 차이도 작용했음을 이해해야 한다. 아울러 기층의 일반민이 고구려 사회 인구 구성의 주

우 혼납금이라는 경제적 제약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을 것이다. 즉 왕실에서 취수혼이 나타난 원인은 혼납금 때문이 아니며, 여기에는 양측이 혼인을 통해 姻戚이 됨으로써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했던 목적이 더 크게 작용했고, 이에 따라 취수혼은 여러 가지 선택 가능한 혼인 방식 중의 하나로 인정받았다고 이해된다.

92 노태돈, 1999, 앞의 책, 205~211쪽.

93 손진태, 1981, 「朝鮮 婚姻의 主要 形態인 率婿婚俗考」, 『孫晉泰先生全集』 第2, 태학사, 137쪽.

된 부분을 차지하였으리라는 점에서, 고구려의 선호혼은 형사취수혼이 아니라 오히려 서옥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V. 맺음말

개인은 태어나면서부터 필연적으로 하나 이상의 집단에 소속되게 된다.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상호 의존적이며 인위적인 조직이 바로 가족을 포함하는 친족집단이다. 가장 작은 사회 단위라 할 수 있는 가족의 생성동인은 혼인이며, 이러한 점에서 혼인은 여러 연구자들이 연구하여왔고, 현 시점에서도 유의미한 사회사적(社會史的) 연구 주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혼인은 친족집단을 만들고, 이러한 조직이 곧 국가의 구성단위가 된다는 점에서 혼인은 계층을 막론하고 중요한 문제였으며, 그 무게감은 고대사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고구려의 두 가지 혼인 습속인 형사취수혼(兄死娶嫂婚)과 서옥혼(壻屋婚)을 살펴보고, 양자의 차이를 계층성의 관점에서 이해해보고자 하였다.

형사취수혼은 북아시아 유목민족에게서 확인되는 혼인 습속으로, 이러한 방식의 혼인 습속은 고구려의 선호혼(選好婚)이었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통설적 견해로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확인되는 형사취수혼의 실례는 고국천왕(故國川王)의 왕후였던 우씨(于氏)와 후에 산상왕(山上王)으로 즉위하는 연우(延優)의 결합이 유일하다. 또한 이들의 결합에는 계루부(桂婁部)와 연나부(椽那部)의 인척관계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크게 작용했다고 할 수 있다. 취수혼은 혼인으로 결성된 동맹 관계가 배우자의 사망에도 불구하고 지속될 것을 보장해주는 동시에, 대체 배우자를 제시해줌으로써 양가(兩家)의 동맹과 이해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풍속이 부여와 유사했다는 기록을 고려할 때, 형사취수는 고구려 혼인 습속의 하나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사서에서 확인되는 양상은 고구려

의 대다수를 차지했을 기층의 혼인 습속이 형사취수혼이 아니었을 가능성을 제시해준다.

고구려의 혼인 습속을 알려주는 문헌 자료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의 문헌 자료인 『삼국지』와 『후한서』에서는 서옥혼을 확인할 수 있다. 서옥혼이란 일종의 서류부가혼(媾留婦家婚)으로서 남자가 여자의 집으로 와서 혼례를 치르고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처가(妻家)에 거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서옥 곁에 쌓아둔다는 ‘방돈전백(傍頓錢帛)’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지불한 혼납금(婚納金)으로 상정하여, 이를 부가(夫家)의 재산 망실을 방지하는 취수혼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사위가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처가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봉사혼(奉仕婚, 勞役婚)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주서』, 『수서』, 『신당서』의 ‘고구려에 혼납금을 주고받는 습속이 없었다’라는 기록과 부합된다. ‘방돈전백’이 신랑 측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신랑 측에서는 재산상의 망실이 없으므로 굳이 취수혼(娶媾婚)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또한 기록이 소급되는 시기부터 고구려는 부계제(父系制) 사회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아이가 장성하여 부가(夫家)에 돌아간 이후 신랑이 사망하더라도 그 재산은 처(妻)가 아니라 아이가 승계했을 것이다. 따라서 기존 논의에서 서옥혼과 취수혼을 연결해주는 매개였던 ‘방돈전백’이, 실제로는 신부 측이 신랑 측에 봉사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면, 이는 서옥혼과 취수혼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을 높여준다.

취수혼은 고구려 왕실에서 인정되었으며, 국인(國人)으로 표현되던 지배층들 역시 크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 이것은 우선적으로 이들의 결합이 정치적 목적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나 고구려 일반의 풍속을 보여주는 『삼국지』와 『후한서』에서는 서옥혼의 풍습만 확인된다. 이러한 점에서 형사취수혼과 서옥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별개의 혼인 습속일 가능성이 있다. 즉, 고구려의 지배층은 형사취수혼을, 피지배층으로 대표되는 일반민들은 서옥혼을 채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서

류부가(媿留婦家)를 기본 전제로 하는 서옥혼의 경우 현실적으로 지배층에서 실행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그 효용성도 적었으리라는 이유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결국 이러한 점에서 고구려의 혼인 습속에 계층성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물질문화로 뒷받침되는 고구려 지배집단의 부여 출자는 왜 북아시아 유목민족의 취수혼 풍습이 고구려 왕실에서 재현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고구려의 정치 구조에서 상부를 차지하는 부여계 집단이 생기면서 자연스레 취수혼 습속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국민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민들의 주된 혼속은 서옥혼이었으며, 따라서 『삼국지』와 『후한서』 등의 중국 측의 기록에는 서옥혼이 고구려의 혼인 습속으로 특기되었을 것이다.

고구려 지배층의 혼인 습속의 하나였던 형사취수혼은 3세기 단계에서 소멸하였지만, 기층의 혼인 습속이었던 서옥혼은 사회적 상황 변화에도 서류부가·남귀여가(男歸女家)라는 기본 원리를 오랜 기간 유지하였다. 결국 고구려의 혼인 습속이었던 서옥혼과 형사취수혼은 양자가 다른 방식으로 각기 작동한 별개의 혼인 제도인 것이며, 고구려의 혼인 습속이었음에도 양자의 성격과 그 존속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던 주요 배경은 혼인 습속을 시행했던 당사자들의 계층성에 있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1. 사료

『鷄林類事』, 『宣和奉使高麗圖經』, 『三國史記』, 『三國遺事』, 『慵齋叢話』, 『朝鮮王朝實錄』.

『舊唐書』, 『三國志』, 『說文解字』, 『隋書』, 『新唐書』, 『爾雅』, 『周書』, 『漢書』, 『後漢書』.

2. 연구 논저 (발행일 기준)

김두헌, 1969, 『韓國家族制度史』, 서울대학교출판부.

이광규, 1977, 『韓國家族의 史的研究』, 일지사.

전해중, 1980, 『東夷傳의 文獻的 研究』, 일조각.

최재석, 1983, 『韓國家族制度史研究』, 一志社.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도서출판 모시는 사람들.

김원중, 2007, 『혼인의 문화사』, 휴머니스트.

이정자, 2008, 『고대 중국정사의 고구려 인식』, 서경문화사.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川勝義雄 著, 임대희 譯, 2004, 『중국의 역사-위진남북조』, 혜안.

Ernest L. Schusky & T. Patrick Culbert 著, 이문웅 譯, 1978, 『人類學概論』, 일지사.

Edward Westermarck 著, 鄭東鎬·申榮鎬 譯, 2013, 『人類婚姻史』, 세창출판사.

東潮·田中俊明, 1995, 『高句麗의 歷史と 遺跡』, 中央公論社.

Lévi-Strauss, Claude, 1969, *The Elementary Structures of Kinship*(James Harle Bell, John Richard von Sturmer and Rodney Needham, Trans.), Beacon Press.

Mauss, Marcel, 1990, *The Gift: The form and reason for exchange in archaic societies*, New York: W.W.Norton & Company.

- 김두헌, 1936, 「朝鮮禮俗の研究」, 『靑丘學叢』 24, 靑丘學會.
- 변태섭, 1958, 「韓國古代의 繼世思想과 祖上崇拜信仰」, 『歷史教育』 3, 역사교육연구회.
- 이기백, 1959, 「高句麗王妃族考」, 『震檀學報』 20, 震檀學會.
- 노태돈, 1975, 「三國時代의 「部」에 關한 연구—成立과 構造를 中心으로—」, 『韓國史論』 2, 서울대학교.
- 김정배, 1979, 「魏志東夷傳에 나타난 古代人의 生活習俗」, 『大同文化研究』 13,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손진태, 1981, 「朝鮮 婚姻의 主要 形態인 率媾婚俗考」, 『孫晉泰先生全集』 第2, 태학사.
- 노태돈, 1983, 「高句麗 초기의 娶媾婚에 關한 一考察」, 『金哲俊博士 華甲紀念 史學論叢』, 知識産業社.
- 노태돈, 1985, 「발해국의 주민구성과 발해인의 족원」, 『한국 고대의 국가와 사회』, 일조각.
- 고정자, 1986, 「三國時代의 婚姻制度에 關한 史的 考察」, 『基礎科學研究論文集』 3, 동아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 노태돈, 1989, 「扶餘國의 境域과 그 變遷」, 『國史館論叢』 第4輯, 國史編纂委員會.
- 노태돈, 1992, 「廣開土王陵碑」,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第 I 冊,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노태돈, 1992, 「牟頭婁墓誌」,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第 I 冊,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 박정혜, 1997, 「高句麗 婚俗에 關한 小考」, 『人文科學研究』 16, 성신여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 한상호, 2001, 「高句麗의 結婚風俗에 關한 小考」, 『韓國宗教』 第25輯,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 김선주, 2002, 「高句麗 壻屋制의 婚姻 形態」, 『高句麗渤海研究』 13輯, 高句麗渤海學會.
- 이강언, 2002, 「로마법의 혼인과 이혼에 관한 고찰」, 『가톨릭사상』 27,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사상연구소.
- 김영심, 2003, 「혼인습속과 가족구성원리를 통해 본 한국 고대사회의 女性」, 『강좌 한

- 국고대사』 10,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 노태돈, 2003, 「발해국의 주민구성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高麗別種’과 ‘渤海族’을 둘러싼 논의를 중심으로-, 『韓國史研究』 122, 韓國史研究會.
- 박용욱, 2003, 「고구려의 혼인 풍속과 평강공주의 自媒혼인과 그 역사적 성격」, 『梨大史苑』 36권, 이화여자대학교 사학회.
- 최의광, 2004, 「高句麗의 ‘國人’ 연구」, 『史叢』 58,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 김수태, 2005, 「2세기말 3세기대 고구려의 왕실혼인-취수혼에 대한 재검토를 중심으로-, 『한국고대사연구』 제38권, 한국고대사학회.
- 문형진, 2005, 「문화적 특성이 드러나는 혼인의 의미」, 『세계의 혼인문화』, 한국외국어대학교 출판부.
- 송기호, 2005, 「扶餘史 연구의 쟁점과 자료 해석」, 『한국고대사연구』 37, 한국고대사학회.
- 李新全, 2005, 「五女山 山城과 주변의 고구려 초기 유적」, 『고구려 문화의 역사적 의미』, 고구려연구재단.
- 김미경, 2006, 「2世紀後半~3世紀初 高句麗 政治勢力의 動向과 對公孫氏政策」, 『國史館論叢』 第108輯, 國史編纂委員會.
- 엄광웅, 2006, 「고구려 山上王의 ‘취수혼 사건」, 『史學志』 38, 단국대학교사학회.
- 송호정, 2007, 「高句麗 族原과 濊貊」, 『高句麗研究』 27輯, 고구려발해학회.
- 윤상열, 2007, 「고구려 王后 于氏에 대하여」, 『역사와 실학』 32, 역사실학회.
- 지병목, 2007, 「高句麗 起源의 考古學的 考察」, 『고구려발해연구』 27, 고구려발해학회.
- 김기섭, 2008, 「부여족의 분산과 이동」,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윤상열, 2008, 「부여의 天下觀 小考」, 『사학연구』 90, 한국사학회.
- 윤용구, 2008, 「『삼국지』 부여전의 문헌적 검토」, 『부여사와 그 주변』, 동북아역사재단.
- 이강래, 2009, 「한국 고대 혼인에 보이는 財貨의 성격」, 『韓國史研究』 147, 한국사연구회.
- 박노석, 2010, 「고구려의 서옥제와 형사취수제」, 『건지인문학』 4권, 전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이중수, 2010, 「고고자료를 통해 본 부여의 대외교류 관계 검토」, 『先史와 古代』 33, 한국고대학회.

- 조영광, 2010, 「초기 고구려 종족 계통 고찰-예맥족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27호, 동북아역사재단.
- 여호규, 2011, 「高句麗 초기 積石墓의 기원과 築造集團의 계통」, 『歷史文化研究』 제39집,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 이강래, 2011, 「한국 고대 혼인의 사회사적 함의」, 『호남문화연구』 제49집,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 여호규, 2013, 『『삼국지』 「동이전」의 「부여전」과 「고구려전」의 비교 검토』, 『삼국지 동이전의 세계』,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강현숙, 2014, 「환련 왕장려우(望江樓) 적석총으로 본 주몽설화」, 『한국 고대사 연구의 자료와 해석』(노태돈 교수 정년기념논총 2), 사계절.
- 송호정, 2015, 「부여의 기원」, 『처음 읽는 부여사』, 사계절.
- 이인경, 2015, 「혼인과 관련된 漢字에 투사된 고대 중국의 혼인 풍속」, 『중국학연구』 제73집, 중국학연구회.
- 최일례, 2015, 「산상왕의 혼인과 고구려의 정치: 나부세력의 동향을 중심으로」, 『歷史學研究』 58, 호남사학회.
- 島田好, 1934, 「東夫餘の位置と高句麗の開國傳説」, 『青丘學叢』 16, 青丘學會.
- 장승두, 1938, 「朝鮮原始諸種族の婚姻」, 『朝鮮』 280, 朝鮮總督府.
- Friedrich Engels 著, 佃田重夫 譯, 1968, 「ケルト人とドイツ人の氏族」, 『家族, 私 有財産および国家の起源』, 青木書店.
- Murdock, George Peter, 1949, "Composite forms of the family," *Social Structure*, Collier-Macmillan Limited.
- Goody, Jack, 1973, "Bridewealth and Dowry in Africa and Eurasia," *Bridewealth and Dow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Rana, J. P. Singh, 1998, "Forms of Tribal Marriage," *Marriage and Customs of Tribes of India*, M D publications PVT LTD.
- Anderson, Siwan, 2007, "The Economics of Dowry and Brideprice,"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21, American Economic Association.

고구려 혼인 습속의 계층성(階層性)과 그 배경

김지희

본고에서는 고구려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혼인 습속인 형사취수혼(兄死娶嫂婚)과 서옥혼(婿屋婚)을 별개로 작동했던 혼인 방식으로 이해해야 함을 논증하고,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계층성의 측면에서 찾고자 하였다.

형사취수혼은 북아시아 유목민족에게서 발견되는 혼인 습속으로, 일반적으로 이러한 혼인 습속은 고구려의 선호혼(選好婚)이었다는 것이 통설적 견해로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에서 형사취수혼의 실례는 고국천왕의 왕후였던 우씨(于氏)와 후에 산상왕으로 즉위하는 연우(延優)의 결합이 유일하다. 고구려 왕실에서 취수혼이 나타난 이유는, 이것이 당대의 선호혼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계루부(桂婁部)와 연나부(椽那部)의 인척관계 유지라는 정치적 목적이 우선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삼국지』와 『후한서』에서는 서옥혼이라는 혼인 습속을 확인할 수 있다. 서옥 곁에 쌓아둔다는 ‘방돈전백(傍頓錢帛)’에 대하여 지금까지는 신랑 측이 신부 측에 지불한 혼납금(婚納金)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부가(夫家)의 재산 망실을 방지하는 취수혼과 연결시켜 이해하는 견해가 기존의 통설을 이루고 있었

다. 그러나 사위가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처가(妻家)에 머물렀다는 점에서 봉사혼(奉仕婚, 勞役婚)이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신부 측에서 신랑 측에 지불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방돈전백’이 신랑 측이 지불한 것이 아니라면 본인이 사망하더라도 신랑 측에서는 재산상의 망실이 없으므로 굳이 취수혼(娶嫂婚)을 선호할 이유가 없다. 서옥혼과 취수혼을 연결해주는 매개였던 ‘방돈전백’이 신부 측이 신랑 측에 봉사의 대가로 지불한 것이라면, 이는 서옥혼과 취수혼이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여준다. 결국 형사취수혼과 서옥혼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었던 별개의 혼인 습속일 가능성이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혼인 주체의 계층 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문헌 기록과 고고학적 물질문화로 뒷받침되는 고구려 지배집단의 부여 출자는 왜 북아시아 유목민족의 취수혼 풍습이 고구려 왕실에서 재현되었는지를 설명해준다. 부여계 출신 중 고구려의 정치 구조에서 상부를 차지하는 집단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취수혼 습속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 이에 국민들도 이를 자연스럽게 인식하였던 것이다. 이에 비해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일반민들의 주된 혼속은 서옥혼이었으며, 따라서 중국 측 사서에는 서옥혼이 고구려의 혼인 습속으로 특기되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의 혼인 습속이었던 서옥혼과 형사취수혼은 양자가 다른 방식으로 각기 작동한 별개의 혼인 제도인 것이며, 양자의 성격과 존속 기간에 큰 차이가 있었던 주요 배경은 혼인 습속을 시행했던 당사자들의 계층성의 차이에 있다고 하겠다.

주제어: 서옥, 형사취수, 서류부가, 혼납금, 혼인

ABSTRACT

Marital Stratification and Its Background in Goguryeo

Kim Jihee

This thesis examines two marital patterns in Goguryeo and argues that the social stratification was the main reason which caused such difference.

The levirate is a marriage custom commonly found in nomadic people in Northern Asia. It is a conventional view that the levirate was the most preferred marriage custom in Goguryeo. However, there is only one verifiable record of the levirate in Goguryeo; the marriage between queen Wu of King Gogukchen and Yeon-u who later became a king Sansang. The principal reason why the levirate took place in the royal family of Goguryeo is not because it was the preferred marriage custom of the time. Rather, it is more plausible to understand the case of queen Wu and Yeon-u as the result of the political coalition between Keru tribe (桂婁部) and Yeonna tribe (椽那部).

Meanwhile, the marriage custom called son-in-law chamber

marriage (婿屋婚) can be identified in Chinese historical records. It was a kind of marriage custom of the son-in-laws' habit of taking residences at their brides' houses. The '傍頓錢帛(the funds and silk were placed next to the bride's house)' was regarded as the price paid by the groom and commonly regarded as a safety valve to prevent the loss of property of bride's house. However, since the son-in-law stayed at the bride's house until their child reached adulthood, such kind of the marriage was most likely a labor service marriage. Thus, son-in-law chamber marriage and the levirate may be separate marriage customs operating in different ways, and such different customs may have been derived from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Goguryeo society.

The origin of Goguryeo ruling groups from Buyeo, supported by historical records and archaeological material cultures, explains why the levirate was performed Goguryeo royal court. Since the ruling class of the Goguryeo's political structure was dominated by a group of people from Buyeo, the ruling groups of Goguryeo naturally had an appreciation for the concept of the levirate. However, the majority of Goguryeo people were preferring the son-in-law chamber marriage. As a result, the Chinese records are only indicating the son-in-law marriage as the marriage custom practiced in Goguryeo.

In conclusion, son-in-law chamber marriage and the levirate were separate marriage customs that functioned in different ways. Although both were practiced in Goguryeo, there were major difference in the character and the duration of practice between two due to the social stratification of Goguryeo society.

Keywords: Son-in-law chamber marriage, the levirate, Bride wealth, Dowry, marriage custom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

이동훈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백제사 연구 논저의 통계적 분석
- III. 백제 역사 연구 논저 분석
- IV. 백제 문화 연구 논저 분석
- V. 맺음말



I. 머리말

1990년대 한중수교 이후 한국과 중국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 역사에 관한 중국 학계의 관심도 급격히 확대되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 동북공정이 진행되면서 한국 고대사, 그중에서도 특히 고구려사에서는 중국 학계의 연구가 집중적으로 진행되어 수많은 관련 논저들이 쏟아져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학계에서도 중국 학계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을 분석하는 작업이 몇 차례 진행된 바 있다. 백제사에 관해서는 백제가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특징을 보유하고 있었던 역동적인 국가였음에도, 한중 간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바가 적어 중국 학계의 연구 역시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최근 중국의 일각에서 백제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규정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고, 이에 따라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에 대해 분석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현재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에 대한 분석 작업은 1984년 대만 학자인 한복지(韓復智)가 처음으로 시도하였다. 해당 논문은 당시까지 중화민국에서 진행되었던 백제사 연구 동향을 분석했는데, 백제사 연구자가 극히 적었던 관계로 인해 논문의 상당 부분은 한중관계사를 중심으로 중국 학계의 한국 고대사 연구를 소개하는 내용이었으며, 실제로 백제사 연구 논저로 분류할 수 있는 논저는 5편에 불과하여 당시까지 중국 학계의 백제사에 대한 관심이 극히 적었다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냈다.¹ 이와 관련된 중국 대륙학계의

* 투고: 2018년 2월 9일, 심사 완료: 2018년 4월 30일, 게재 확정: 2018년 5월 25일

** 본 논문은 2017년 동북아역사재단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1 韓復智, 1984, 「百濟史研究의 回顧와 展望-中華民國을 中心으로」, 『백제연구』 15.

논문으로는 총 4편을 들 수 있는데, 모두 2007년 1월 동북공정이 끝난 후 발표되었다. 이 시기는 한중수교와 동북공정을 거치면서 급속히 증가한 중국 학계의 한국고대사 연구 성과가 집중적으로 발표되던 시기였던 것과 일치한다. 2007년 주유홍(周裕興)과 정리민(丁利民)이 공동으로 발표한 논문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부터 당시까지의 연구 성과와 동향을 정리했다. 1992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을 ‘개시기’, 그 이후를 ‘급속한 발전기’로 시기구분을 했는데, 중국 학자 논저 총 71편이 소개되었다.² 2013년 풍립군(馮立君)은 1985년 이후 당시까지 발표된 한국 학계와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 성과를 ‘대외관계사’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이 중 중국 학계에서 발표된 연구 성과로 인용된 논문은 총 73편에 달했다.³ 2014년 배근흥(拜根興)은 중국에서 출토된 백제인 묘지명을 중심으로 관련 논문 근 30편을 소개했다.⁴ 그리고 2016년 전영(全瑩)·양로(楊璐)는 1949년부터 최근까지 백제학과 관련된 연구 성과 99편을 분석했다.⁵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해당 논문들에는 중국 학계의 주요 논저들이 망라되어 있음에도 다수의 연구 성과가 누락되어 있어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하겠다. 특히 한국고대사에 관한 사관에서 한국 학계와는 이질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중국 학계의 관점이 은연중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고는 기존의 논문에서 분석한 자료에 관해서는 되도록 중복을 피했지만, 한국적 관점에서 새롭게 분석할 여지가 있는 논저는 중복을 무릅쓰고 재분석을 시도했다.

-
- 2 周裕興·丁利民, 2007, 「中國에서의 百濟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百濟研究』 45.
 - 3 馮立君, 2013, 「韓國與中國近30年百濟史研究述要」, 『朝鮮·韓國歷史研究』 15, 延邊大學出版社.
 - 4 拜根興, 2014, 「중국 학계 백제사 연구현황 및 과제-중국 출토 백제인 묘지명을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 5 全瑩·楊璐, 2016, 「中國의 百濟學 研究에 대한 略考」, 『百濟文化』 54.

II. 백제사 연구 논저의 통계적 분석

본고는 중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학술 검색 사이트인 CNKI(中國知網)와 NSSD(國家哲學社會科學學術期刊數據庫)를 중심으로 하여 2017년 11월까지 발표된 백제사 관련 논저를 검색하였다. 그 밖에 관련 논저의 분석을 통하여 백제사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려고 했다. 검색에서 누락된 간행물과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 등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했지만, 이것만으로도 중국의 백제사 연구 동향을 전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된다. 조사 결과 중국에서 발표된 논저 283편과 한국에서 발표된 논문 50편이 확인되었지만, 조사에서 누락된 논저들과 일본에서 발표된 논저까지 합친다면 400여 편 이상 될 것으로 추정된다. 본고에서 확인한 논저는 333편이지만, 중국 학계의 고질적인 중복 게재 사례를 제외하면 실제 논문의 수는 이보다 감소한다. 백제사 자체를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은 극히 적는데, 대부분은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과의 관계 속에서 백제사를 다루거나, 혹은 위진 남북조 시기 중국, 특히 남조정권과의 정치, 문화적 상호 관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작성된 논문들이다. 또한 고대 중일관계를 주제로 하는 논문 중에도 백제사가 직간접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은데, 양국 관계의 중간자로서 백제의 역할, 즉 일본의 고대문화 형성과 고대 국가 형성과정에서의 백제와 백제인의 역할에 주목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대부분 피상적으로 서술하는 정도에 불과하여 이러한 논문까지 모두 망라하여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에는 무리한 감이 없지 않았다. 자의적인 감이 없지는 않지만, 본고는 그중에서도 백제에 관한 기술이 상대적으로 많다고 판단된 논문을 선택하여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대 동아시아, 특히 고대 중국과 한국의 관계를 개괄적으로 설명하면서 문화적인 차원에서 다룬 논문이 100편 가까이 되었다. 관련 논문들의 주제는 신화, 불교, 도교, 유학, 교육, 한자, 문학, 법률, 음악, 악기, 도자기, 의학, 약학, 체육 등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는데, 그 중 불교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다. 한국사와 관련해서는 한국사의 전체적인 틀

속에서 백제사를 일부 언급하는 경우도 있지만, 고구려, 백제, 신라 등 삼국 역사의 한 부분으로서 연구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구려사와 관련해서는 광개토태왕비문의 대외정벌 관련 조항의 해석 문제 및 수당제국의 대고구려 전략과 관계되어 부차적으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중국이 고구려사 연구에 매진한 결과 파생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신라사와 관련해서는 나당동맹의 체결과 나당전쟁 발생의 각각의 배경으로서 백제 문제가 함께 다루어지는 정도이다.

중국의 백제사 연구는 전통적으로 남북조 수당시기 백제와의 관계, 불교를 대표로 하는 문화교류 등이 주요 의제지만, 최근에는 백제 유민 묘지명의 분석과 백제 멸망 후 중국으로 이주한 백제 유민의 동향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고 있다.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는 섬서사범대학(陝西師範大學)의 배근홍이 주도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서안과 낙양 지역의 박물관 관계자들도 참여하고 있어 연구자의 저변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이며, 관련 논문만 거의 40편에 달한다. 한편 고고학적으로는 무령왕릉을 비롯한 백제 유물 유적과 남조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들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목간 등 백제 문자자료에 관한 논문들도 등장하였다.

일본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도 적지 않은데, 무엇보다도 가장 비중 있는 것은 백강전투에 관한 것이다. 백강전투에 관한 연구는 약 20편 정도로서 단일사건으로서는 가장 많이 연구되는 항목이다. 백강전투를 다룬 논문들은 중일관계사 논문에서도 많이 보이지만, 백제와의 관련 속에서 다루는 논문들도 적지 않다. 그 밖에 백제의 악기, 복식, 성씨, 언어, 천문, 불교, 사원, 왕릉 등을 다룬 논문도 찾아볼 수 있다. 백제사 관련 논문은 초기에는 대외관계사가 중심이지만, 최근에는 백제사 자체에 관한 연구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백제 초기사(李磊)와 지방행정제도(戴衛紅)를 연구하는 논문이 등장하는 것은 중국 학계의 연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본고에서 분석 자료로 삼은 백제사 관련 논저 총 333편의 작성 시기를 시간적으로 살펴보면 1980~1989년 19편, 1990~1999년 75편, 2000~2009년

120편, 2010~2017년 11월 119편이 발표되어 연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동북공정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동북공정이 시행된 2002년 2월부터 2007년 1월까지 발표된 논문은 44편에 불과했지만, 동북공정이 종식된 2007년 2월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은 163편에 달했다. 동북공정 이후 백제사 관련 연구가 오히려 급증했다는 것이 수치상으로 확인된 것이다.

중국 학계의 백제사 관련 연구의 증가는 석·박사학위논문의 수량 분석을 통해서도 입증된다. 학위논문의 분석은 중국의 차세대 연구자들의 백제사 연구 동향을 가늠해볼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위논문의 수준 또한 중국의 어지간한 일반 논문보다 우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백제사를 직간접적으로 다룬 석·박사학위논문은 20세기까지는 전무했다. 석사학위의 경우 21세기 들어 거의 매년 관련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2000년, 2001년, 2002년, 2004년, 2006년에 각각 1편씩 논문이 발표된 것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는 그 숫자가 급증하고 있다. 2007년 3편, 2008년 4편, 2009년 1편, 2010년 1편, 2011년 4편, 2012년 3편, 2013년 2편, 2014년 2편, 2016년 4편 등으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매년 1~4편씩 석사논문이 발표되고 있어 백제사 연구자의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논문의 주제도 『백제와 중국의 관계(百濟與中國的關係)』(2001)에서 『백제의 웅진 사비 천도 및 그 영향을 논함(論百濟的熊津泗泚遷都及其影響)』(2016)으로 구체화되고 있어 질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박사학위의 경우 아직 백제사를 전문으로 하는 박사학위논문은 등장하지는 않았지만, 강청파(姜淸波)의 『당에 들어온 삼한인 연구(入唐三韓人研究)』(2005)에서는 백제 유민과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웅의민(熊義民)의 『4~7세기 동북아 정치관계사 연구(公元四至七世紀東北亞政治關係史研究)』(2002)와 김금자(金錦子)의 『5~7세기 한반도 삼국 분쟁과 동북아 정국(五至七世紀朝鮮半島三國分爭與東北亞政局)』(2007)에서 백제사를 일부 포함하여 다루고 있다. 또한 고고학적 측면에서 백제사를 부분적으로 다룬 박사학위논문으

로는 부영리(符永利)의 「남조 불교 조상의 고고학 연구(南朝佛教造像의 考古學 研究)」(2012), 이홍(李洪)의 「둔황문화의 한국 삼국시대 지역문화에 대한 영향(燉煌文化對韓國三國時期區域文化的影響)」(2013), 오진석(吳珍錫)의 「삼연문화 및 삼연문화와 고구려·한반도 남부 제국 문화 교류에 관한 고고학 연구(三燕文化及其與高句麗, 朝鮮半島南部諸國文化交流의 考古學 研究)」(2017)가 있다.

석·박사학위논문은 수여받은 곳을 살펴보면 연변대학(延邊大學)(13), 길림대학(吉林大學)(4), 섬서사범대학(陝西師範大學)(4), 남경사범대학(南京師範大學)(4), 남경대학(南京大學)(2), 동북사범대학(東北師範大學)(2), 기남대학(暨南大學)(2), 허북사범대학(河北師範大學)(1), 곡부사범대학(曲阜師範大學)(1), 중국미술학원(中國美術學院)(1)으로서 연변대학이 압도적이다.⁶ 이것으로 중국 학계

6 백제사 관련 석·박사학위논문은 다음과 같다. 于賡哲, 2000, 「貞觀十九年唐對高麗的戰爭及其影響」,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張日善, 2001, 「百濟與中國的關係」,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姜清波, 2002, 「仕唐三韓人事迹考述」,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喬鳳岐, 2004, 「隋唐兩朝東征高麗研究」, 河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崔山玉, 2006, 「試論六至七世紀中葉百濟與倭關係」,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丁利民, 2007, 「百濟武靈王陵中的南朝文化因素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馬偉, 2007, 「論七至八世紀日本天下觀」,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張暉, 2007, 「七世紀前期的東北亞政治關係與白江之戰」,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于暢, 2008, 「黑齒常之考論」,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金東永, 2008, 「漢唐時期朝鮮半島政權與中原王朝的朝貢冊封關係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李婷, 2008, 「流入日本的百濟, 高句麗遺民研究」,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李正樂, 2008, 「論唐與朝鮮半島三國之爭」,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于春英, 2009, 「百濟與南北朝朝貢關係研究」, 吉林大學碩士學位論文; 鄭大偉, 2010, 「百濟遺民問題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李賀, 2011, 「夫餘移民研究」,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杜金唐, 2011, 「白村江戰役與東亞格局的演變」,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陳軒, 2011, 「魏晉南北朝時期東亞國際關係的演變」, 復旦大學碩士學位論文; 陳允蘭, 2011, 「南京出土六朝瓦當紋樣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盛凱, 2012, 「論唐高宗時期的朝鮮半島政策及形成原因」,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周曉嬌, 2012, 「試論南朝佛教在百濟的傳播和影響」,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康靈娜, 2012, 「《三國史記》靺鞨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張開震, 2013, 「碧骨堤之興廢及其風俗文化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欒國琴, 2014, 「從百濟金銅香爐看南朝文化對百濟文化的影響」,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의 백제사 연구중심이 연변대학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중국 남조(南朝) 고고학 연구의 편년의 수립과 유물의 분류를 위해 백제의 유물과 비교 고찰하는 방법이 일반화되면서 남조 고고학 분야에서 백제사를 다룬 논문도 적지 않게 확인되고 있다. 해당 논문들은 주로 남경(南京)을 중심으로 발표되고 있는데, 남경사범대학이 해당 연구를 주도하고 있다.

Ⅲ. 백제 역사 연구 논저 분석

백제사와 관련된 내용은 우선 한중관계사를 전문적으로 다룬 책에서 일부 서술되었다. 중국 학계에서 한국학 연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양통방(楊通方)은 1996년 『중한고대관계사론(中韓古代關係史論)』을 저술했다. 본서는 중국 한당(漢唐)시기 중국과 백제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루었는데, 중국 정사 등 중국 사료를 중심으로 하여 백제의 기원부터 발전과 멸망까지의 역사를 서술했다. 그리고 문헌에 기록된 백제의 풍속, 불교, 불상과 마애불, 묘지, 음악 등을 근거로 하여 백제 문화와 중국의 관계에 대해 서술했다.⁷⁾

곧이어 1998년 장비비(張非非)와 왕소부(王小甫) 등 북경대학 역사학과 교

문; 李鵬程, 2014, 「唐代高麗土人研究」,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全香, 2016, 「論百濟의熊津, 泗泚遷都及其影響」,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陸超禕, 2016, 「初唐前期外交文書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宇三福, 2016, 「入唐百濟遺民活動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陳瑾瑜, 2016, 「南京近年來發現南朝佛教遺存研究三題」,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熊義民, 2002, 「公元四至七世紀東北亞政治關係史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姜清波, 2005,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金錦子, 2007, 「五至七世紀中葉朝鮮半島三國分爭與東北亞政局」, 延邊大學博士學位論文; 符永利, 2012, 「南朝佛教造像的考古學研究」, 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 李洪, 2013, 「燉煌文化對韓國三國時期區域文化的影響」, 中國美術學院博士學位論文; 吳珍錫, 2017, 「三燕文化及其與高句麗, 朝鮮半島南部諸國文化交流的考古學研究」, 吉林大學博士學位論文.

7) 楊通方, 1996, 『中韓古代關係史論』, 中國社會科學出版社.

수들이 저술한 『중한관계사(中韓關係史)·고대권(古代卷)』이 출간되었다. 본서는 고대 한중관계를 전문적으로 다루었는데, 남북조 수당시기 중국과 한반도 삼국의 정치적 군사적 관계와 문화 경제적 관계까지 폭넓게 서술했다. 백제에 관해서는 중국 정사 등 중국에서 저술된 자료에 기초했기 때문에 초기 백제의 기원과 함께 조공책봉을 비롯한 중국과의 관계에 집중되어 저술되었다. 한국사 연구의 대표적인 문헌이라고 할 수 있는 『삼국사기(三國史記)』는 중국 정사에 기록된 백제 왕호와 『삼국사기』에 기록된 백제 왕호를 비교하는데 참조되거나, 중국 사료에서 파악하기 힘들었던 초기 백제와 신라의 관계사 등에 일부 인용되었을 뿐이다. 백제와의 문화교류에 관해서는 불교, 유학, 사원건축, 불상과 마애불 등 백제 문화에 대한 설명과 함께 백제 문화에 끼친 중국의 영향을 서술했다. 아울러 백제가 일본 문화에 끼친 영향도 간단히 서술했다.⁸ 『중한관계사·고대권』은 2014년 제2판이 출간되었다. 본서는 1998년에 출간된 동명의 책을 증보한 것인데, 백제사와 관련해서는 중국과 일본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평가받는 백강(白江)전투에 대한 서술이 대대적으로 보강되었다. 원판에는 한 줄에 불과했던 내용이 2페이지로 증보되었고, 백제 멸망 후 백제 고지에 주둔하던 유인궤를 위시한 당군(唐軍)이 지배를 잘하여 백제인들이 생업에 안정적으로 종사했다는 내용도 특별히 보강되었다.⁹

2001년 양소전(楊昭全)·하동매(何彤梅)가 저술한 『중국-조선·한국관계사(中國-朝鮮·韓國關係史)』는 백제와 동진, 송·제·양·진 등 남조와 북위·북제 등 북조와의 관계에 대해 서술했다. 본서 역시 위에서 언급했던 다른 중한관계사와 마찬가지로 중국 사료에 근거하여 백제사를 서술했기 때문에, 그 성격상 조공책봉관계를 매개로 한 양자의 관계를 고찰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백제를 비롯한 삼국은 중국과 종변조공(宗藩朝貢) 관계를 유지했다고 서술했다. 저자는 특별히 동진과 백제의 조공관계의 건립이 중국과 한국의

8 張非非·王小甫, 1998, 『中韓關係史(古代卷)』, 社會科學文獻出版社.

9 王小甫等著, 2014, 『中韓關係史(古代卷, 第2版)』, 社會科學文獻出版社.

정통조공관계의 시작이라고 인식했는데, 이것은 기존의 동북공정식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는 중국 학자들이 한중 조공관계의 역사를 중국 선진시기까지 소급해 올려보는 것과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 본서는 그 밖에 몇 가지에서 저자 특유의 관점을 표출했는데, 북위와 백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488년 북위가 백제를 공격하였다가 패배함으로써 북위와 백제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었다고 서술한 것이 대표적이다.¹⁰ 그리고 수당과 백제 사이에 진행되었던 무역 왕래에서 구체적인 무역의 횟수와 교역품의 종류 등을 나열했다. 또한 양자 간의 무역은 조공(朝貢)과 회사(回謝) 형식의 공무역으로서 물물교역 형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

이와 같이 중한관계사의 일부로 서술된 백제와 중국의 관계는 주로 전통적인 중국 사료에 근거하여 서술되었기 때문에 조공책봉관계와 문화교류에 편중되어 서술되는 한계가 있었다. 다음은 백제 역사의 전개 과정에 따른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로 하자.

1. 백제의 기원과 말갈 관계 연구

백제기원설에는 고구려기원설, 부여기원설, 졸본부여기원설, 마한기원설 등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일찍이 왕중략(王仲瑩)은 백제의 부여기원설을 부정했다. 그는 백제는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마한전(馬韓傳)에 기록된 마한을 구성하는 부락 중 하나인 백제(伯濟)가 발전한 국가로서, 그 왕실에 부여 왕의 혈통이 있거나 혹은 부여왕자인 구태(仇台)가 남하하여 백제(伯濟)부락의 주장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구태가 부여족을 이끌고 남하하여 백제국(百濟國)을 건설했다는 기록은 신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았다.¹¹

강유공(姜維公)과 강유동(姜維東)은 백제의 고구려기원설은 『삼국사기』에

10 楊昭全·何彤梅, 2001, 『中國-朝鮮·韓國關係史』, 天津人民出版社.

11 王仲瑩, 1980, 『魏晉南北朝史』(下冊), 上海人民出版社, 699~700쪽.

만 보일 뿐이며, 중국 정사에는 부여기원설만 언급하고 있다면서 고구려기원설을 부인했다. 아울러 중국 정사에 중원왕조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여는 길림(吉林)에 위치한 부여가 아니라 환인(桓仁)에 위치한 졸본부여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백제는 졸본부여가 남천하여 새로 건립한 국가로서 그 시조는 졸본부여왕 위구태(尉仇台)라고 하였다. 서진 말 요동의 패권을 둘러싸고 모용씨와 고구려의 대립이 격화되자, 그 사이에 위치하고 있던 졸본부여가 대방군 지역으로 건너가 백제를 건국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북방에 남아 있던 일부 세력이 후에 요서를 경략한 세력이 되었다고 주장했다.¹² 묘위(苗威)는 백제의 시조 구태가 부여 왕 위구태라는 설을 부정하고, 백제는 부여 혈통의 고구려 왕자인 온조가 세운 국가라는 통설을 지지했다.¹³ 유자민(劉子敏)은 백제 민족과 국가는 백제는 마한 영역에서 성장한 민족으로 고구려나 부여와 하등의 관계가 없으며, 백제 왕실이 부여씨를 차용한 것은 그들의 지위가 고구려 왕과 동등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라고 했다.¹⁴ 조지빈(趙智濱)은 고구려기원설, 마한기원설, 졸본기원설 등을 부정하고 부여기원설을 주장했다. 다만 기존의 부여기원설과 완전히 다른 입론 방법을 구사했는데, 그에 따르면 백제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에 북부여 정권에서 분리되어 나왔으며, 옥저 고지에 위치해 있다가, 고구려에 격파당한 후 4세기 중반 동예 지역을 거쳐 한강 유역의 대방고지로 이주했다고 했다.¹⁵ 양군(楊軍)은 백제의 부여기원설을 지지했다. 다만 백제 왕실과 민족의 기원을 구분해서 고찰한 점이 기존의 주장과 다른 점인데, 백제 왕실과 통치계급은 부여에서 기원하였지만, 백제의 피통치계급은 진번(眞蕃)에서 기원했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처음 백제가 입국했던 지역인 대방고지(帶方故地)가 진번국

12 姜維公·姜維東, 2007, 「高句麗百濟起源新論」, 『東北亞研究論叢』 2007-1.

13 苗威, 2011, 『高句麗移民研究』, 吉林大學出版社.

14 劉子敏, 2012, 「百濟起源與夫餘, 高句麗無關」, 『朝鮮·韓國歷史研究』 12.

15 趙智濱, 2013, 「百濟起源及南遷帶方新考」, 『東北亞研究論叢』 2013-5.

(眞蕃國)의 고지(故地)이기 때문이다.¹⁶

백제는 국가형성 과정에서 낙랑과 말갈 등 주변 세력과 불가분한 관계를 맺었다. 백제의 국가형성은 이들 주변 세력과의 갈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한 전문 논고는 없으며, 말갈의 역사를 다룬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정도이다. 관련 연구는 『삼국사기』 말갈 관계 기사를 통해 백제와의 관계를 언급하고 있는데, 백제 초기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양군(楊軍)은 『삼국사기』 초기 말갈 기사를 잘못된 것으로 파악하는 일반적인 중국 학계의 인식과는 달리, 한나라부터 삼국시기까지 백제와 신라의 북쪽 경계에 등장하는 말갈을 예인(僣人)으로 파악하여 말갈 연구의 신기원을 열었다. 그는 고구려본기, 신라본기, 백제본기에 등장하는 말갈 관련 기사가 중간에 한 번씩 최소 52년에서 최대 102년까지 긴 공백기가 있다는 것에 주의하여 말갈 기사를 총 5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마다 침략의 대상이 되는 국가가 백제, 신라 등 차이가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말갈의 활동 배후에 중국 군현이나 고구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 온조왕기에 등장하는 말갈의 백제 침략 기사는 백제가 팽창하는 것을 발견한 낙랑군이 이이제이 정책을 채택하여 낙랑군 동부도위 치하의 예인을 이용하여 백제의 성장을 억압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백제본기 고이왕 25년(258)에 말갈이 백제에 양마 10필을 바친 것은 정시 6년(245) 이후 낙랑 대방이 예인에 대해 직접적인 통치를 시행하게 되자, 예인이 마음대로 부대를 출동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백제에 보인 반응으로 파악했다.¹⁷

이춘상(李春祥)은 『삼국사기』에 보이는 말갈과 발해 관련 자료를 분석했는데, 말갈과 백제 관계 사료를 논하는 과정에서 백제가 하남 위례성으로 천도한

16 楊軍, 2017, 「百濟起源略考」, 『東疆學刊』 2017-10.

17 楊軍, 2008, 「朝鮮史書《三國史記》所在“靺鞨”考」, 『中國邊疆史地研究』.

원인을 말갈과 낙랑의 거듭된 공격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했다.¹⁸ 강영나(康靈娜)는 백제본기에 보이는 말갈 기사 32조의 분석을 통해 백제의 북부와 동북부에 위치한 말갈의 위치를 고증하고, 초기 백제와 말갈의 전쟁기사를 분석하였다.¹⁹ 윤현철(尹鉉哲)은 말갈의 활동기간과 공백기간을 주목하여 말갈이 주로 활동한 시간과 공백기가 중국과 고구려 등의 역관계(力關係)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양군이 이미 시도한 바 있다. 그러나 그는 양군과 달리 258년 말갈이 백제에 양마 10필을 바친 기사는 246년 관구검이 고구려 환도성을 격파하고 동옥저 지역까지 세력을 확대한 결과 동옥저가 쇠퇴하면서 발생한 사건으로 파악했다. 아울러 『삼국사기』 말갈 기사의 검토를 통해 중국 양한시기 백제의 영역은 낙랑과 말갈 사이에 국한되어 있었다고 하였다.²⁰

2. 백제의 대외관계사 연구

1) 4~5세기 백제와 중국·일본 관계

4세기 백제는 삼국 중 가장 먼저 두각을 나타내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이 시기 백제와 중국의 관계는 크게 남조와의 관계와 북조와의 관계로 구분할 수 있다. 주일량(周一良)은 백제와 동진 남조의 밀접한 관계에 주목했는데, 백제는 북조와도 교류한 적이 있지만, 북조와 연합하여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한 군사적인 목적이 강했다고 했다. 특히 양나라와의 관계에 주목하여, 양나라는 백제에서 파견한 사신의 횡수가 송나라와 제나라에 비해 뒤쳐지지만, 중국에서 백제로 파견된 사람들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다른 왕조를 압도하

18 李春祥, 2011, 「《三國史記》靺鞨, 渤海史料相關問題研究」, 『通化師範學院學報』 2011-11.

19 康靈娜, 2012, 「《三國史記》靺鞨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0 尹鉉哲, 2014, 「《三國史記》載“靺鞨”之我見」,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4-3.

여 백제와 중국 문화교류에서 절정기를 맞이했다고 하였다. 나아가 백제의 요청에 응하여 양나라에서 백제로 파견되어 『예기(禮記)』를 강의했던 인물로써 육후(陸詡)에 대해 주목하고, 육후와 그 사우(師友)들의 행적과 학풍 등을 논의했다.²¹ 한국반(韓國磐)은 중국과 백제·신라의 교류에 대해 서술했다. 백제와의 교류에서는 백제가 중국에 파견한 사신 관련 문헌자료를 정리한 후 횡수에서 남조와 북조가 명확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정치, 경제, 지리적 요인을 통해서 분석하고, 양국의 교류가 백제의 역사에 미친 영향과 동아시아 문화권 형성에서의 백제의 역할 등을 강조했다.²²

장일선(張日善)은 백제의 역사를 서술함과 함께 백제와 중국의 관계를 조공관계와 경제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²³ 웅의민(熊義民)은 4세기부터 7세기까지 중국과 고구려, 백제, 신라, 왜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 정치관계사를 다루었다. 백제와 관련해서는 백제와 대방군의 관계, 고구려와 신라 및 왜의 관계, 요서 진출문제, 도성의 변천과 위치 비정, 남북조 수당제국과의 관계, 백제의 멸망과 백강전투 등 백제사 전반의 중요한 문제를 폭넓게 다루었다.²⁴ 김금자(金錦子)는 5세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 한반도 삼국의 분쟁과 동북아의 정세에 대해 서술했다. 나제동맹, 여제동맹, 나당동맹과 백제·고구려·왜로 이어지는 동맹의 결성과정과 이로 인한 동북아 지역의 정치 군사적 영향 등을 서술했지만, 논지의 전체적인 맥락은 한국 국사교과서의 일반적인 인식과 흡사하다.²⁵ 우춘영(于春英)은 백제와 남북조의 조공관계의 차이점에 대해 서술했는데, 백

21 周一良, 1994, 「百濟與南朝關係的幾點考察」, 『冰瑩彩絲集』, 成都出版社(『魏晉南北朝史論集』, 北京大學出版社, 1997에 재수록).

22 韓國磐, 1994, 「南北朝隋唐與百濟新羅的往來」, 『歷史研究』 1994-2.

23 張日善, 2001, 「百濟與中國的關係」,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4 熊義民, 2002, 「公元四至七世紀東北亞政治關係史研究」, 暨南大學博士學位論文.

25 金錦子, 2007, 「五至七世紀中葉朝鮮半島三國紛爭與東北亞政局」, 延邊大學博士學位論文.

제는 북조와는 정치 군사적 목적이, 남조와는 경제 문화적 목적이 강했다고 보았다.²⁶

전향(全香)은 대외관계사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중국의 일반적인 연구와는 달리 백제사 자체의 연구를 진행하여 주목된다. 그는 웅진과 사비 천도의 배경, 천도 후 지배층 내부의 세력 변화, 도성의 성격과 영향 등 백제사 중후기의 정치 문제를 다루었다.²⁷

2) 백제의 요서 경략과 북위의 백제 침공 기사 해석 문제

4세기 백제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송서(宋書)』와 『양서(梁書)』 등에 수록된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는 기사의 해석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하덕장(何德章)은 당시의 북중국의 형세와 고구려의 기세로 볼 때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면서, 백제가 요서에 입국했다는 기사는 백제가 부여에서 기원했다는 신화가 그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다. 그는 해군력이 약했던 북위가 백제를 침공하는 방법은 육로를 통해서만이 가능한데, 당시 고구려가 호락호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북위가 대규모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통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해당 기사는 북위 효문제의 낙양 천도 이후 북위의 공격에 열세에 있었던 남제 정권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작성된 백제의 날조라고 단정했다.²⁸ 그런데 김헌숙(金憲淑)은 해당 기사의 신뢰성을 긍정하였다. 그는 350년 모용준이 전연의 수도를 용성(龍城)에서 계(薊)로 옮긴 이후 요서군이 설치된 것으로 보았다. 나아가 백제인은 그 이전부터 이미 중국 대륙과 한반도를 왕래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 마한의 일부가 서천하여 요서 일대에서 집결

26 于春英, 2010, 「百濟與南北朝朝貢關係研究」, 『東北史地』 2010-6.

27 全香, 2016, 「論百濟의熊津,泗泚遷都及其影響」,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28 何德章, 1994, 「《南齊書·東南夷傳》記北魏攻百濟事糾謬」, 『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 1994-12.

하여 백제 세력을 이루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그리고 490년 북위가 공격한 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에 위치한 백제가 아니라 요서의 백제, 즉 백제군(百濟郡)의 경내라고 했다.²⁹ 이에 대해 유자민(劉子敏)은 김헌숙의 의견을 반박하고, 당시 북중국의 형세로 볼 때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백제군(百濟郡)’ 역시 요서에 있지 않으며, ‘진평군(晉平郡)’, ‘진평현(晉平縣)’이 요서에 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해당 기사의 ‘요서(遼西)’는 ‘요서’가 아니라 ‘패서(溍西)’이고, 현재의 ‘대동강’을 지칭한다고 했다. 해당 기사의 ‘요서’를 ‘패서’로 해석한 것은 일찍이 유영지(劉永智)가 제기한 바 있다.³⁰ 유자민은 해당 논문에서 ‘진평(晉平)은 진(晉)의 평양(平壤)’을 가리키며, ‘백제군(百濟郡)’은 ‘평양군(平壤郡)’과 동일한 지역으로서 모두 고구려의 후기 수도 평양성(平壤城)을 지칭한다고 주장했다.³¹ 그러나 뒤이어 이러한 기사가 사서에 수록된 이유를 새롭게 추정한 연구 성과가 등장했다. 웅의민(熊義民)에 따르면 당시 요서 지역에는 교치군인 낙랑군을 중심으로 백제인들이 집결하고 있었는데, 극성기에 있었던 백제가 이를 수수방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진은 요동과 요서를 점유하고 있던 전진-후연 세력에 타격을 가하기 위해서 백제왕에게 ‘진동장군영낙랑태수(鎭東將軍領樂浪太守)’라는 관직을 수여하여 백제의 북상을 유도했지만, 백제는 그럴 능력도 없었고, 동진을 위하여 모험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요서 지역의 백제군 진평군을 동진에 보고하는 식으로 사태를 매듭지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후대의 기록에 남았던 것이라고 했다. 다만 372년 동진과 통교할 때 마침 전진이 전연을 멸망시키던 기회를 틈타 동진에게 요동의 일부지역에 대한 백제의 영유권을 인정하도록 요

29 金憲淑, 2000, 「“百濟略有遼西”記事初探」,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0-9.

30 劉永智, 1983, 「百濟略有遼西辨」, 『學術研究叢刊』 1983-4(2001, 『中朝關係史研究』, 中州古籍出版社에 재수록).

31 劉子敏, 2001, 「駁“百濟略有遼西記事”初探」,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01-3.

구했고, 당시 백제인이 요서의 백제인들과 연결을 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편 백제가 졸본부여에서 출자했다고 주장하는 강유공과 강유동은 백제가 요서를 차지했다는 기사는 졸본부여의 후예인 여암(餘巖)이 전진(前秦)이 멸망하던 혼란기를 틈타서 일시적으로 요서를 점거했던 사건을 지칭한 것으로 이해했다.³²

광개토왕과 장수왕 대의 거듭된 공격으로 고구려와의 경쟁에서 밀린 백제는 472년 북위에 사신을 보내 고구려를 연합 공격할 것을 제안했다. 이것은 백제가 북위에 사신을 보낸 유일한 사례인데, 이와 관련하여 김금자는 백제가 국서를 보낸 배경과 북위가 이를 거절한 이유 등을 당시 북위가 처한 국내외 상황을 중심으로 자세히 분석했다.³³ 국서를 받은 북위도 이에 대한 답서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서는 한설송(韓雪松)이 북위의 외교문서를 분석한 「북위외교문서에 관한 시론적 탐구(北魏外交文書試探)」에서 일부 살펴보았다. 저자는 북위가 백제에 보낸 답서 「헌문제답백제국여왕조(憲文帝答百濟國王餘慶詔)」와 북위가 고구려에 보낸 조서 「효문제여고구려왕운조(孝文帝與高句麗王雲詔)」를 비교했다. 후자가 매우 호된 질타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에 비해 전자는 위엄은 있지만 완곡하고 공손함을 잃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러한 차이는 백제가 북위의 책봉을 받은 적이 없어 양국 사이에 종편관계가 수립되지 않았던 것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했다.³⁴

이후 백제는 북위와의 관계를 단절하고 남조 일변도의 외교정책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하여 한승(韓昇)은 백제와 고구려가 남조에서 받은 책봉호를 중심으로 남조의 인식 변화를 추적했는데, 남조는 송나라 이전까지는 한반도에서 고구려가 가장 중요한 국가로 인식되었지만, 남제부터는 백제를 가장 중요한 국가

32 姜維公·姜維東, 2007, 앞의 논문.

33 金錦子, 2006, 「論百濟與北魏的關係-以百濟的上表文爲中心」, 『東疆學刊』 2006-12.

34 韓雪松, 2013, 「北魏外交文書試探」, 『史學集刊』 2013-1.

로 인식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외교국면이 확립된 것은 5세기 말인데, 그것은 472년 백제가 북위와 관계를 맺으려다가 실패했던 사건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³⁵ 한승은 앞서 「소량과 동아시아의 세 가지 역사적 사실 고찰(蘇梁與東亞史事三考)」에서 양나라 때 백제가 이미 가장 중요한 국가가 되었다는 것을 밝힌 바 있는데,³⁶ 거기에서 나아가 백제의 북위 외교의 좌절을 그 계기로 이해했던 것이다.

백제의 북위 외교의 좌절은 백제의 대중국 외교뿐만 아니라 백제와 왜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다. 마위(馬偉)는 근초왕대에 가장 강력했던 백제는 진사왕 이후 고구려의 남하정책으로 어려움에 빠졌으며, 북위에 요청한 고구려 공격 요청이 좌절되자, 대화정권에 의부하여 생존의 기회를 얻을 수밖에 없었고, 이로부터 대화정권은 백제를 속국으로 간주하게 되었다고 보았다.³⁷ 이와 관련하여 진헌(陳軒)도 비슷한 견해를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백제는 남조와의 교류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문화가 가장 발달한 국가가 되었다고 했다. 그러나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 남조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지 못했고, 북연의 인구와 재부를 약탈한 후 국력이 증강한 고구려와의 대결에서 열세에 처하게 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왜에 신복하고, 왜의 역량을 빌려 고구려와 신라에 대항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후에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정벌하게 되자 왜는 당나라와 이익이 충돌하였고, 이것이 결국 백강전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는 것이다.³⁸

한편 『남제서(南齊書)』에는 490년 북위가 백제를 공격했다는 또 하나의 기사가 있는데, 해당 기사의 신빙성을 둘러싸고 몇 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한승은 『삼국사기』와 『남제서』 등에 기록된 ‘위벌백제(魏伐百濟)’ 기사를 분석한 후

35 韓昇, 1995, 「‘魏伐百濟’與南北朝時期東亞國際關係」, 『歷史研究』 1995-3.

36 韓昇, 2002, 「蘇梁與東亞史事三考」, 『上海社會科學院學術季刊』 2002-3.

37 馬偉, 2007, 「論七至八世紀日本天下觀」,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38 陳軒, 2011, 「魏晉南北朝時期東亞國際關係的演變」, 復旦大學碩士學位論文.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488년으로 추정했다. 아울러 당시 백제 공격에 동원된 군대의 규모는 수십만이 아니라 소규모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사건이 발생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추정했다. 남조와 통교하는 백제의 선박을 막기 위해 북위군이 추격하다가 백제의 경내까지 전투가 확대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승리한 백제가 승리를 과장했는데 그 사실이 그대로 사서에 기록된 것으로 해석했다.³⁹ 그러나 유자민은 이와는 달리 490년에 위나라가 백제를 공격했다는 기사는 고구려와 백제의 전쟁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⁴⁰ 최근 풍립군(馮立君)은 백제와 오호십육국시기의 북조 왕조와 물길 등과의 관계에 대해 서술했는데, 백제와 북방민족의 관계에 대해 언급한 논문은 이것이 거의 유일하다고 할 수 있다.⁴¹

3) 6~7세기 백제와 수당 관계

고구려는 수백 년간 분열된 중국을 통일했던 수당제국과 동북아 패권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강력히 대항했던 국가이다. 이에 따라 6세기 말부터 7세기 후반까지 한반도 역사와 관련된 중국 학계의 논고는 주로 고구려와 수당제국 사이에 발생했던 정치 군사적 관계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나당전쟁 이후 한반도를 통일한 위업을 달성한 신라에 대한 관심도 적지 않아 당과 신라 관계에 관한 논고도 적지 않다. 이와 달리 백제는 당의 고구려 정벌을 위한 첫 번째 단계로서, 또는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한 첫걸음으로 인식되어 부차적으로 취급될 뿐이다.

이 시기 백제에 관해 전문적으로 다룬 논문은 많지 않지만, 백제와 당 사이에 오갔던 외교문서에 대해 연구한 글이 우선 눈에 띈다. 육초위(陸初緯)는 당 왕조 초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고창, 설연타, 토욕훈, 돌궐 등 이민족 왕조와 당나라 사이에 오고 간 외교문서의 분석을 통해 당의 외교활동과 화이관 등 외

39 韓昇, 1995, 앞의 논문.

40 劉子敏, 2001, 앞의 논문.

41 馮立君, 2016, 「百濟與北族關係問題」, 『韓國研究論叢』 2016-2.

교사상 등을 살펴보았다. 백제와 관련된 외교문서로는 「증백제왕부여장광록대부인령적자의자습봉조(贈百濟王扶餘璋光祿大夫仍令嫡子義慈襲封詔)」(627), 「정관년중위무백제왕조(貞觀年中慰撫百濟王詔)」(645), 「여백제왕의자새서(與百濟王義慈璽書)」(651)가 있는데, 이들 외교문서의 내용과 작성배경 및 의의 등을 분석했다. 백제에 대한 당의 외교문서는 삼국 간의 화해와 상호공격의 중지를 권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백제가 걸으로는 명령을 받드는 척하면서 신라에 대한 침략을 그치지 않자 점차 조서의 내용도 이를 질책하고 경고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갔다고 했다.⁴² 장사제(張思齊)는 영휘(永徽) 2년 당태종이 의자왕에게 보낸 「여백제왕의자새서」가 갖는 의미에 대해 문서 자체의 문체적 특징과 함께 역사적 의미를 설명하였다. 해당 새서는 당 고종 시기 한반도 삼국에 대한 기본적 책략, 즉 신라 지원과 백제 억제라는 기본적인 책략을 서술한 것으로 실질적으로 백제의 멸망을 예고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한 새서가 나오게 된 배경을 신라의 대당외교와 관련지어 설명하였다. 신라는 백제를 우선 소멸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대당외교를 전개했고, 새서를 통해 당에서 이러한 방침을 확약받았다고 했다.⁴³

우갱철(于賡哲)은 정관(貞觀) 19년 당의 고구려 공격이 실패한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 인한 한반도 정책의 전환에 대해 서술했다. 당의 원정 실패는 요동직공책(遼東直攻策)에서 신라와 연합하는 남북협공책(南北挾攻策)으로 정책의 전환을 유도했고, 백제 평정은 이러한 변화된 정책을 수행하는 데 관건이 되는 사건으로 보았다.⁴⁴ 성개(盛凱)는 당 고종 시기의 한반도 정책을 시기에 따라 3단계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과 당의 내정이 외교정책에 미친 영향을 분석했다. 본문에 의하면 당 고종 초기에는 집권세력인 관隴집단(關隴集團)의 보수적

42 陸初緯, 2016, 『初唐前期外交文書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43 張思齊, 1996, 「論唐太宗唐高宗關於遼東的詩文」, 『吉首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6-12.

44 于賡哲, 2000, 「貞觀十九年唐對高麗的戰爭及其影響」,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성향으로 인하여 한반도 정책은 기본적으로 불간섭 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중기에는 보수파를 숙청하고 고종이 친정함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는 방향으로 대외정책이 전환되었으며, 이 결과 백제·고구려가 멸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후 측근무후의 집권 이후 대외정책에 대한 견해의 차이와 국내의 정세의 변화로 인하여 당이 한반도에서 퇴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였다.⁴⁵ 백제의 멸망을 당의 내부 정치적 상황의 변화와 결부시켜 살펴본 것은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하겠다.

축립업(祝立業)은 수당이 고구려를 침략한 것은 수당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 질서에 도전하는 고구려를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국제관계가 당-신라 동맹과 고구려-백제-왜 동맹의 대결로 전개되면서 전쟁이 장기화되었는데, 백제를 멸망시킴으로써 이러한 국면이 타개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백강전투는 동아시아 지역에 자국을 중심으로 하는 질서를 구축하려던 당과 왜의 전쟁으로 보았다.⁴⁶ 이춘향(李春香)은 백제와 수당의 정치관계를 중심으로 그 변화와 특징 등을 분석했다. 수당제국과 고구려의 전쟁 때에 전개했던 백제의 양단외교는 백제에 약간의 실리를 가져왔지만, 당의 불만을 초래하여 최종적으로 백제가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였다. 아울러 백제의 부흥운동과 백강전투 및 당의 백제고지 통치 정책 등에 대해서도 서술했다.⁴⁷

백제 멸망 전쟁과 관련해서 배근홍은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분석을 통해서 백제 멸망 당시의 백제의 국내 사정과 당의 군사작전 및 소정방(蘇定方), 유백영(劉伯英), 유인원(劉仁愿) 등 백제 원정에 참여한 당나라 장군 11명의 행적 등을 추적했다.⁴⁸ 아울러 이들 장수들이 백제 정벌에 혁혁한

45 盛凱, 2012, 「論唐高宗時期的朝鮮半島政策及形成原因-以內政治變遷爲中心」,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46 祝立業, 2014, 「略論唐麗戰爭與唐代東亞秩序構建」, 『社會科學戰線』.

47 李春香, 2010, 「試論百濟與隋唐的政治關係」,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48 拜根興, 2016, 「〈大唐平百濟國碑銘〉關聯問題新探」, 『陝西師範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16-4.

공을 세웠음에도 중국의 주요 문헌에 관련 기록이 누락된 것은 유인궈(劉仁軌)가 국사(國史)를 개수(改修)하는 과정에서 소정방(蘇定方)에 대한 기록을 대거 삭제했기 때문으로 보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별고에서 상세히 다룬 바 있다.⁴⁹ 웅의민은 660년 백제 멸망 작전과 663년 백강전투에 동원되었던 당 육군과 해군의 숫자, 선박의 규모와 장비, 무기체제, 항해기술과 작전술 등을 분석했다. 작전에 동원된 군대의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는데, 백제 멸망 작전에는 당 왕조 서북지역의 군사작전에 동원되었던 육군 10만 명과 수군 3만 등 총 13만 명이 동원되었으며, 백강전투에는 2만 3천8백 명의 당 수군과 4만 명의 일본 수군이 참여했다는 것이다.⁵⁰ 석효군(石曉軍)은 백강전투 당시 당과 일본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전투와 관련 있는 몇 가지 지명을 고증했다. 백강전투에는 당군 2만 명과 일본군 4만 명이 참여하여 당나라 군대가 숫자에서 열세에 있었지만, 멀리에서 오느라 지친 일본군을 상대로 편히 기다리면서 금강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싸울 수 있었던 전략적 위치를 확보했던 것이 승리할 수 있었던 원인 중 하나라고 하였다. 또한 『구당서』에 기록된 “자웅진강왕백강(自熊津江往白江)”에서 ‘웅진강(熊津江)’은 웅진 주변의 금강 중상류 지역을 지칭하고 ‘백강(白江)’은 금강 하류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으며, ‘주류성(周留城)’은 금강 하류의 북쪽에 위치한 한산(韓山)에 위치하는 것으로 보았다.⁵¹ 조지빈(趙智濱)은 당이 660년 백제 고지에 설치한 5도독부와 37주는 백제 말기의 1도 5방 37군으로 구획된 백제 행정구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이를 근거로 하여 웅진(熊津), 마한(馬韓), 동명(東明), 금련(金連), 덕안(德安) 5도독부와 37주 중 일부에 대한 위치 비정을 시도했다.⁵² 또한 별고를 통해

49 拜根興, 2005, 「也論蘇君墓當爲蘇定方墓」, 『考古與文物』 2005-5.

50 熊義敏, 2002, 「唐初海軍初探」, 『史學月刊』 2002-11.

51 石曉軍, 1983, 「唐日白江之戰的兵力及幾個地名考」, 『陝西師大學報(哲學社會科學版)』 1983-10.

52 趙智濱, 2012, 「唐朝在百濟故地初設行政建置考略」, 『中國歷史地理論叢』 27-1.

웅진도독부의 설치와 변천 및 폐지원인 및 연대에 대해서도 논했는데, 주의할만한 점은 5도독부의 하나로 출발했던 웅진도독부는 665년 기존의 웅진, 마한, 동명, 금련, 덕안 5도독부와 대방주(帶方州)를 병합하여 통일된 웅진도독부로 개편되었다고 본 것이다.⁵³ 강유동은 당대 백제고지(百濟故地)에 설치한 대방주의 성질에 대해 논했다. 그는 대방주는 기미부주가 아닌 고구려, 백제, 신라, 탐라, 왜 등 동이제국(東夷諸國)을 관리하기 위해 설치한 변군 성질의 지방행정기관으로 파악했다.⁵⁴ 한편 백제가 멸망하기 이전 백제의 지방행정조직에 대해서 대위홍(戴衛紅)은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백제 도시의 편제 단위인 ‘부항제(部巷制)’는 북방 소수민족이 부족을 관리하는 ‘부(部)’와 중국 왕조의 도시에서 상대적으로 폐쇄적 건축형식인 ‘항(巷)’이 결합된 것으로 파악했다. 또한 지방사회에서 도시구역이 아닌 곳에는 방군제(方郡制)를 실시하여 성(城)-촌(村) 구조로 민중을 편제했다고 보았다.⁵⁵

백제의 부흥운동과 관련해서는 백강전투(일본은 백촌강전투라고 부른다)에 관한 논문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⁵⁶ 백강전투가 지닌 역사적 의의, 특히 중국과 일본 사이에 발생한 최초의 전쟁이라는 점에서 신문이나 잡지 등에 이를 간략하게 서술하는 통속적 내용의 글도 다수 눈에 띈다.⁵⁷ 나아가 임진왜란과

-
- 53 趙智濱, 2010, 「關於唐代熊津都督府的幾個問題」, 『東北史地』 2010-6.
 - 54 姜維東, 2015, 「試論唐代帶方州的性質及其影響」,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5-5.
 - 55 戴衛紅, 2017, 「百濟地方行政體制初探: 以出土資料爲中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17-3.
 - 56 袁紹佳, 2014, 「試論白江口之戰後中日交流的第一次高潮」, 『臨滄師範高等專科學校學報』 2014-1; 梁安和, 2001, 「白江口戰役及其影響」, 『咸陽師範學院學報』 2001-8; 韓昇, 2005, 「白江口之戰前唐朝與新羅, 日本關係的演變」, 『中國史研究』 2005-2; 郭擘旻, 2010, 「風雲白江口」, 『艦載武器』 2010-6; 馬雲超, 2012, 「白江口之戰與戰後的唐日關係」, 『浙江外國語學院學報』 2012-3; 華建強, 2011, 「淺析白江之戰在7世紀中日交流史上的重要地位」, 『滄桑』 2011-8; 喬林生, 2005, 「唐朝新羅聯軍大勝 日本修改對華政策-白村江戰役打來日本遣唐史」, 『杉鄉文學』 2005-3.

칭일전쟁까지 연결하여 중국과 일본의 역대 전쟁의 승패 원인을 분석한 글도 있다.⁵⁸

백강전투에 대해 전문적으로 연구한 논문으로 대표적인 것은 한승(韓昇)의 글이다. 한승은 동아시아 국제질서를 재건하기 위하여 고구려를 신복하는 것을 관건으로 삼은 당을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은 이해관계에 따라 각각의 연맹을 구축하였는데, 당의 한반도 정책도 이러한 영향을 받게 되었고, 결국은 백제에 출병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발전했다고 했다. 백제 멸망 이후 한반도 남부를 통일하려는 신라의 전략과 한반도 남부에서 이익을 취하려 하는 일본의 정책은 당의 국제 전략과 모순을 일으켰으며, 백제의 요청으로 인한 일본의 한반도 출병으로 당과 일본 사이에 백강전투가 발생했는데, 백강전투는 동아시아세계를 건립하는 큰 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⁵⁹ 조박연(趙博淵)은 백강전투의 설명에 앞서 왜와 한반도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4세기 중반 일본은 임나일본부를 건설하고, 이후 백제를 조공국으로 삼았는데, 고구려에 패한 후 한반도에서 세력이 위축되었다. 수당제국의 중국 통일과 고구려에 대한 공격은 한반도에서의 왜의 이익에 도전하는 것이었다. 백제가 멸망한 후 부흥운동을 일으키자 왜가 개입하였지만, 백강전투에서 패한 후 당과 역량의 차이를 절감한 일본은 대륙정책을 전환하여 견당사를 파견했다는 것이다.⁶⁰

57 이와 관련된 글로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押沙龍, 2014, 「白江口 中日第一次交手」, 『國家人文歷史』 2014-9; 馬鈺, 1999, 「朝鮮白江口之戰朝-中日歷史上的首次軍事交鋒」, 『北京科技大學學報(社會科學版)』 1999-2; 樊文禮, 1994, 「白江鑿兵—中日第一戰」, 『軍事歷史』 1994-11; 馬雲超, 2013, 「中日歷史上的第一戰與東亞變局」, 『文史天地』 2013-7; 盛巽昌, 1991, 「中國歷史上最初的海戰—唐朝與日本的白江口之戰」, 『航海』 1991-6.

58 이와 관련된 글로는 다음 논문이 참조된다. 荊棘, 2017, 「地緣政治與國家命運—中日對決史」, 『齊魯週刊』 2017-7; 賈莉, 2011, 「從“白村江海戰”和“甲午戰爭”看中日不同的對外政策」, 『黑河學刊』 2011-10.

59 韓昇, 2005, 「白江之戰前唐朝與新羅, 日本關係的演變」, 『中國史研究』 2005-2.

60 趙博淵, 2005, 「歷史上的中日戰爭」, 『南風窓』 2005-9.

장둔(張暉)은 당나라의 건국 이후 동아시아의 모순이 격화되면서 나당동맹과 여제연맹이라는 양대군사집단이 형성되었는데, 여기에 일본이 직접 개입함으로써 동북아 분쟁이 확대되었으며, 결국 동북아세계대전인 백강의 전투가 폭발했다고 보았다. 백강전투 결과 일본은 한반도에 대한 야욕을 거두들이고 국내 개혁을 심화시켰으며, 백제는 이 전쟁으로 인해 철저히 멸망하여 신라가 한반도 남부를 통일하는데 장애가 제거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백제를 멸망시킨 당은 남북협격을 통해서 고구려를 멸망시키는데 성공하였고, 이로써 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의 구축이 실현되었다고 했다.⁶¹

박금당(朴金唐)은 수당제국의 적극적인 제국건설 시도가 동아시아세계의 정치적 군사적 긴장상태를 불러일으켰다고 했다. 당은 삼국에 대해 균형외교를 전개했지만, 신라의 요청에 응해 신라와 연합하여 백제와 고구려에 대항하는 일원적인 외교로 전환했다. 그 결과 백제를 멸망시켰는데, 백제부흥군의 준동과 왜의 개입으로 인해 백강전투가 발생했다고 보았다. 백제의 급속한 멸망으로 고구려와 왜는 여기에 개입할 여지가 없었다고 했다. 백제부흥군은 왜를 불러들여 백제복국을 기도했는데, 백강전투의 패배로 좌절되었다고 했다. 백강전투 결과 당은 동아시아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확립하였고, 신라는 한반도를 통일하였으며, 왜는 내정개혁을 진행함과 함께 당이 주도하는 동아시아 국제질서로 귀환했다고 했다.⁶²

최산옥(崔山玉)은 6세기부터 7세기 중반까지 백제와 왜는 전략적 동맹관계를 형성하여 백제를 일방적으로 지지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고 했다. 저자는 이 시기의 왜와 백제의 관계를 종주국과 속국이라는 불평등한 관계로 파악하는 학계의 의견에 반대하고, 상호 전략적으로 이용하는 관계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백제가 왜에 대해 저자세 외교를 취한 것은 삼국 간의 분쟁에서 왜국의 군사적

61 張暉, 2007, 「七世紀前期的東北亞政治關係與白江之戰」,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62 朴金唐, 2011, 「白村江戰役與東亞政局的演變」, 東北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지원을 받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왜가 백제 일변도의 정책을 취한 것은 한반도 가야 지역에 대한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였지만, 왜의 상층부를 구성하고 있던 백제계 이주민들의 역할도 중요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 시기의 양국 외교 관계의 특징은 백제의 선진문화의 수출과 왜의 군사적 지원으로 귀결된다고 했다.⁶³

이와 같이 백강전투에 대한 중국 학계의 견해는 동아시아 주도권 장악을 목표로 한 당과 일본의 패권전쟁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이런 논문들은 대부분 백제가 일본에 부용된 국가였다는 잘못된 역사 인식이 전제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역사전공자가 아닌 군사전문가 등 타 분야 전공자들이 쓴 논문들은 대체로 과거 일본 학계의 견해를 뒷받침하던 『일본서기』와 광개토왕릉의 비문 내용을 근거로 진무천황(神武天皇) 때부터 임나 혹은 한반도 남부가 일본의 영향권에 속했다는 인식을 답습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물론 역사전공자도 마찬가지다. 동북공정과 관련되어 있는 학자 중 한 명인 양군은 「임나고론(任那考論)」에서 4~5세기 왜와 한반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4세기 초에 왜가 한반도 남부에 진출하여 임나를 건설했으며 369년에 임나의 영역은 대체로 경남 대부분과 전남과 경북 일부까지 포괄했다. 고구려는 대방고지를 둘러싼 전쟁에서 백제에 패배한 이후 왜와 연합했지만, 일본 군대가 광개토왕에게 패하고 신라에서도 고구려에 격파당하면서, 이후 한반도의 주도권은 고구려에 의해 좌우되었다고 했다.⁶⁴

3. 백제 유민 연구

1990년대 이후 중국 서안과 낙양 등지에서 고구려·백제 유민 관련 묘지명이 대거 출토됨에 따라 유민과 관련하여 중국 학계의 논문이 속출하였다. 현재까지

63 崔山玉, 2006, 「試論六至七世紀中葉百濟與倭關係」,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64 楊軍, 2015, 「任那考論」, 『史學集刊』 2015-7.

발견된 백제 유민 관련 묘지명은 불교조상기(佛敎造像記)를 포함하여 부여융(扶餘隆), 부여씨(扶餘氏), 흑치상지(黑齒常之), 흑치준(黑齒俊), 물부순(勿部詢), 난원경(難元慶), 진법자(陳法子), 예식진(禰寔進), 예군(禰軍), 예소사(禰素士), 예인수(禰仁秀) 등 총 12개가 발견되었다. 중국의 백제 유민 묘지명에 대한 연구는 배근홍이 『당대 고구려·백제 이민 연구: 서안·낙양 출토 묘지명을 중심으로(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와 앞에서 소개한 바 있는 「중국학계 백제사 연구현황 및 과제」(『충청학과 충청문화』 19권)에서 이미 상세히 다루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세한 언급은 피하기로 한다.

현재 섬서사범대학 교수로 있는 배근홍은 중국의 고구려·백제 유민 연구를 주도하는 학자로서 관련 논문 10여 편을 발표한 바 있다. 그는 『당대 고구려·백제 이민 연구: 서안·낙양 출토 묘지명을 중심으로』에서 당나라 시기 중국으로 이주한 고구려·백제 유민을 전문적으로 다루었는데, 백제인 유민 묘지명 11개도 그 대상에 포함되었다. 배근홍은 본문에서 ‘유민(遺民)’이라는 용어 대신 ‘이민(移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이유부터 시작하여, 고구려·백제 유민의 탄생 배경, 유민의 입당 경로, 유민에 대한 당의 정책, 당에 남아 있는 유민의 유적 등을 심도 있게 분석했다.⁶⁵ 그러나 논문에 따라 ‘유민’ 또는 ‘이민’이라고 하여 백제 멸망 후에 당나라로 들어간 백제인에 대한 용어 사용에서 확실한 입장이 정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백제 유민 묘지명 가운데 민국 시기에 발견된 부여융과 흑치상지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이 진행되었다.⁶⁶ 이를 통해 흑치상지의 성씨와 가문, 생몰년도, 백제 멸망 당시와 중국에서의 행적에 대해 더욱 자세히 알게 되었다. 2000년대 이후에는 예식진, 예군, 예소사, 예인수 등 예씨 일족 묘지명이 대거 발견됨에

65 拜根興, 2012,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66 扶餘隆과 黑齒常之에 관한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은 拜根興, 2014, 「중국학계 백제사 연구현황 및 과제」, 『충청학과 충청문화』 19권, 42~47쪽 참조.

따라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다.⁶⁷ 예씨 일족 무덤의 발견으로 인하여 백제 멸망 당시와 그 이후의 예씨 일족의 행적, 성씨의 기원, 백제 멸망기의 지방제도, ‘일본’의 사용시기와 백제와의 관계 등 많은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예씨 일족의 기원에 대해 중국 학자들은 예씨 일족의 묘지명을 토대로 하여 그 조상이 초국(楚國) 낭야(琅琊)에 거주하다가 영가의 난이나 송나라 유유가 북벌할 때에 백제로 이주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하지만 예씨 일족은 중국에서 이주한 성씨가 아니라 백제 자체에서 발생한 성씨일 가능성이 높다.⁶⁸ 그 밖에 2007년 발견된 진법자묘지명은 백제 멸망기의 관제와 지방제도에 관해 새로운 자료를 담고 있어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배근홍은 진법자의 증조가 역임한 태학정(太學正)이라는 관직을 통해 백제의 교육기관으로서의 태학의 존재를 확인했을 뿐만 아니라, 진법자 일족의 조상이 학문적 소양을 가진 중원 출신일 가능성을 제시했다. 묘지에 기록된 지명 고증에 있어서는 마련대군(麻連大郡)을 제외하고는 마도군(馬徒郡), 기모군(既母郡), 품달군(稟達郡)을 각각 『삼국사기』 지리지에 등장하는 백제의 마돌현(馬突縣), 지모현(支牟縣), 풍달군(風達郡)으로 비정했다.⁶⁹

백제 유민 묘지명의 출토는 중국으로 이주한 백제 유민의 동향에 대한 연구를 촉진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강청파(姜淸波)의 『당에 들어온 삼한인 연구(入唐三韓人研究)』이다. 해당 저서는 저자의 섬서사범대학 석사학위논문 「당에서

-
- 67 董延壽·趙振華, 2007, 「洛陽, 魯山, 西安出土的唐代百濟人墓志探索」, 『東北史地』 2007-3; 拜根興, 2008, 「百濟移民《祚寔進墓志銘》關聯問題考釋」, 『東北史地』 2008-2; 王連龍, 2011, 「新出百濟人禰軍墓誌」, 『社會科學戰線』 2011-7; 王連龍, 2011, 「百濟人《禰軍墓誌》考論」, 『社會科學戰線』 2011-7; 張全民, 2012, 「新出唐百濟移民禰氏墓家族墓誌考略」, 『唐史論叢』 14; 拜根興, 2012, 「唐代 백제유민 禰氏家族 墓誌에 관한 고찰」, 『韓國古代史研究』 66; 拜根興, 2014, 「中國學界的百濟移民禰氏家族墓誌銘檢討」, 『한국사연구』 165.
- 68 李東勳, 2014, 「高句麗 百濟遺民 誌文構成과 撰書者」, 『韓國古代史研究』 76, 269~272쪽.
- 69 拜根興, 2014, 「入唐百濟移民陳法子墓誌關聯問題考釋」, 『史學集刊』 2014-5.

벼슬한 삼한인 사적 연구(仕唐三韓人事迹考述)」를 확대 발전시킨 것인데, 본서에서는 삼한인(三韓人)의 입당(入唐) 상황, 입당 삼한사자(三韓使者), 입당한 고구려·백제 왕실 및 권신(權臣)의 행적, 삼한 출신 번장(番將), 당대 궁중 정변에 개입한 삼한인, 삼한 출신의 상인, 노비, 승려 등에 대해 서술했다. 아울러 부여·용, 흑치상지, 사타상여(沙陀相如), 난원경 등 백제 왕실과 귀족 출신 인물들의 행적과 입당 백제인의 한화 등에 대해서도 서술했다.⁷⁰

백제 유민과 관련된 연구는 중국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데, 최근 10년 동안 중국에서 발표된 학위논문만 하더라도 「일본에 유입된 백제·고구려 유민 연구(流入日本の百濟, 高句麗遺民研究)」(2008), 「백제 유민 문제 분석(百濟遺民問題探析)」(2010), 「당대 고구려 사인 연구(唐代高麗土人研究)」(2014), 「당에 들어온 백제 유민의 활동 분석(入唐百濟遺民活動探析)」(2016) 등이 확인되었다. 이 중에서 「일본에 유입된 백제·고구려 유민 연구」는 고구려·백제 유민이 일본으로 이주한 이후 일본 사회에서의 거주지, 사성, 임관 등 여러 측면에서 타국 출신보다 우위에 있던 상황 등을 고찰했다.⁷¹ 「백제 유민 문제 분석」은 백제 유민의 탄생 배경, 유민의 향방, 당·고구려·신라·일본 등 주변국의 백제 유민 안치 방법, 당과 일본으로 유입된 백제 유민의 지위와 현지인과의 융합 상황, 유민에 대한 당의 인식, 백제 유민이 이주한 지역에서의 공헌과 현지인들의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했다.⁷² 「당대 고구려 사인 연구」는 당대 문헌 자료와 묘지명 자료에 나와 있는 문장을 분석하여 삼국 사인(土人)의 생애와 가족관계, 행적, 후대인 등을 분석했다. 백제 사인으로는 묘지명 주인공은 물론 백제 의자왕까지 분석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다.⁷³ 「당에 들어온 백제 유민의 활동 분석」은 백제 멸망 후 당에 유입된 백제 유민의 활동을 서술했는데,

70 姜清波, 2010,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71 李婷, 2008, 「流入日本の百濟, 高句麗遺民研究」, 陝西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72 鄭大偉, 2010, 「百濟遺民問題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73 李鵬程, 2014, 「唐代高麗土人研究」, 曲阜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백제 유민이 군사적인 재능은 출중했지만, 정치적인 능력은 부족하여 대부분 좋은 결과를 맞이하지 못했던 사실을 지적했다.⁷⁴ 배근홍은 당에 유입된 백제 유민이 당에서 어떤 생활을 했는지 그 궤적을 추적했다. 그는 현재 남아 있는 백제향(百濟鄉)과 백제보(百濟堡) 지역과 백제 유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부인하거나 확인하기 어렵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묘지명에 기록된 기록을 통해 볼 때, 백제 유민은 3대부터 당나라인과 통혼을 시작하여 중국 사회에 완전히 융합되었다고 했다.⁷⁵

한편 묘지명에 등장하지 않는 백제 성씨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강청파는 “복(福)”과 “부여(夫餘)”는 당나라 시기 중국에 존재하고 있던 백제 성씨라고 하면서, 중국의 백과사전에는 “복(福)”씨가 “축복순(祝福順)”씨를 줄인 것에서 유래했다고 설명하지만 역사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⁷⁶

IV. 백제 문화 연구 논저 분석

중국의 백제 고고학 연구는 무령왕릉에 대한 연구가 시초이다. 가매선(賈梅仙)은 1973년 발견된 백제 무령왕릉의 기본적인 사항을 중국에 처음으로 소개했다.⁷⁷ 양홍(楊泓)은 한중일 삼국의 고고자료를 통해서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미친 육조문화의 영향에 대해 서술했다. 그중 백제와 관련해서는 무령왕릉의 형태와 구조 및 무덤에서 발견된 지석, 매지권, 진묘수, 동경 등 각종 유물 등이 남조에 소재한 무덤과 유물 등과 매우 흡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⁷⁸ 왕중주(王仲殊)

74 寧三福, 2016, 「入唐百濟遺民活動探析」,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75 拜根興, 2009, 「入鄉隨俗: 墓誌所載入唐百濟遺民的生活軌迹—兼論百濟遺民軌迹」, 『陝西師範大學學報』 2009-7.

76 姜清波, 2012, 「唐代百濟姓氏“祝福順”與“扶餘”辨正」, 『東疆學刊』 2012-1.

77 賈梅仙, 1983, 「朝鮮半島武寧王陵簡介」, 『考古學參考資料』 1983-6.

78 楊泓, 1984, 「吳, 東晉, 南朝的文化及其對海東諸國的影響」, 『考古』 1984-6.

는 중국과 특히 남조와 고구려, 백제, 신라 및 왜의 관계를 논하고, 백제에 대해서는 남조와 가장 우호적인 관계를 맺었던 국가로 평가했다. 또한 무령왕릉의 형태와 구조 및 무덤에서 발견된 지석, 청자기, 동경 등 유물 등이 남조와 흡사하다는 점과 일본의 유물과의 밀접한 관련성에 대해서도 서술했다.⁷⁹ 왕지고(王志高)는 무령왕릉과 동진 남조 무덤의 차이점을 자세히 비교한 후, 무령왕릉이 위치한 송산리 고분의 장지선택, 매장방법, 무덤구조, 무덤 벽돌문양 등이 전형적인 건강(建康, 현재의 南京)양식에 속한다고 했다. 또한 무령왕릉은 남조 송나라의 중대형무덤과 매우 비슷하며, 남조 중후기의 중소형무덤과도 유사한 면이 있다고 했다.⁸⁰ 나아가 공주 송산리 6호분의 축조연대는 무령왕릉보다 약간 늦다고 보고 무령왕릉의 아들 성왕이 묘주일 것이라고 추정했다.⁸¹

주유흥(周裕興)은 2006년 이후 중국 남경 부근에서 발견된 남조 유적과 백제 무령왕릉을 비교 분석하는 논문을 다수 발표했다. 중국 남조 고고학을 연구하는 중국 학자 중에서 한국에서 논문을 가장 많이 발표한 학자라고 할 수 있다.⁸² 그에 따르면 무령왕릉은 무덤의 구조와 축조 등 건축적인 측면과 장의문화 등에서 남조 문화의 영향이 발견되며, 매지권, 묘지, 석수, 청자, 동경, 유리 동자상 등 부장품에서도 남조 문화적 요소가 발견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중국

79 王仲殊, 1989, 「東晉南北朝時代中國與海東諸國的關係」, 『考古』 1989-11.

80 王志高, 2005, 「百濟武寧王陵形制結構的考察」, 『東亞考古論壇』 創刊號.

81 王志高, 2008, 「韓國公州松山里6號墳幾個問題的探討」, 『東南文化』 2008-7.

82 周裕興이 한국에서 발표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周裕興, 2006, 「武寧王陵出土文物探析之一-以琉璃童子像爲例」, 『東亞考古論壇』, 충청문화재단연구원; 2006, 「武寧王陵出土文物探析之二-以三枚銅鏡爲例」, 『百濟文化海外調查報告書 V』, 서경문화사; 2007, 「武寧王陵出土文物探析之二-以炭木獸形佩飾及棺木爲例」, 『東亞考古論壇』 3; 2007, 「中國에서의 百濟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백제연구』 45; 2008, 「해상교류로 본 중국과 백제의 관계」, 『백제문화』 38; 2009,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무령왕릉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40; 2012, 「東晉高崧家族墓與百濟武寧王陵的比較研究」, 『백제문화』 46. 그리고 중국에서 발표한 관련 논문으로는 2006, 「百濟與六朝文化交流研究的斷想」, 『南京歷史文化新探』, 南京出版社; 2010, 「從海上交通看中國與百濟的關係」, 『東南文化』 2010-1 등이 있다.

남조 문화와 백제 문화의 교류에 대해서도 서술했는데 특히 구체적인 해상항로와 백제 조선술의 우수함에 대해 주의했다. 그에 따르면 남조시기에 중국과 백제는 산둥반도에서 강화만까지 직접 황해를 가로질러 가는 직항로를 이용했지만,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발해 연안을 따라 오기는 전통적인 해상항로도 이용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백제는 항해기술이 발전하여 중국 남조뿐만 아니라 인도까지도 항해할 수 있었다면서, 백제의 조선술은 신라와 일본 등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왕준(王俊)은 무령왕릉 묘지석을 중국 남조의 전장제도(典章制度)에서 규정한 묘지석의 규모와 비교하였다. 무령왕릉이 1품관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품질을 가진 남조의 다른 묘지석의 규모와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진다고 했다. 그러나 지문의 작성 방식은 원가 2년(425) 작성된 송결(宋乞)의 무덤과 매우 흡사하다고 했다. 그리고 묘지석의 규격과 묘지문의 작성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백제는 남조와의 교류가 후대로 갈수록 증가함에도, 남조에서 수여받는 관직이 왕조가 거듭될수록 점차 낮아지는 추세에 있다고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제는 묘지문 작성 방식에서만큼은 상대적으로 대우가 좋았던 동진과 송시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⁸³

무령왕릉의 진묘수(鎭墓獸)에 대해 전문적으로 고찰한 논문도 등장했다. 장성(張成)은 무령왕릉 진묘수는 남조시기 지하의 진묘수를 계승했는데, ‘사족보행형(四足步行形)’의 진묘수 계통에 속한다고 했다. 이러한 형태의 진묘수는 서북지역에서 기원하여 동한, 삼국, 서진, 동진, 남조 각 왕조를 거치면서 서북쪽에서 동남쪽으로 전파되어 발전하다가 멀리는 한반도까지 그 영향이 미쳤다고 했다.⁸⁴ 한편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양나라 시기의 철전(鐵錢)에 대해서 소뢰(邵磊)는 양나라와의 무역거래를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는 다른 의

83 王俊, 2008, 「百濟武寧王墓志與六朝墓志的比較研究」, 『南方文物』 2008-8.

84 張成, 2016, 「武寧王陵鎭墓獸譜系考」, 『大理大學學報』 2016-9.

견을 제시했다. 왜냐하면 당시 양나라에서는 철전과 동전이 시중에 동시에 유통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무령왕릉에서 철전만 출토되었다는 것은 정상적인 무역 거래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양무제가 백제 왕에게 상으로 하사하거나 증정한 결과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어쩌면 무역거래에서 철을 화폐로 삼았던 삼한의 풍속이 오랫동안 전해져서 양무제의 철전에 대해 백제가 호감을 가진 결과일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매우 흥미로운 분석이다.⁸⁵

정리민(丁利民)은 무령왕릉에서 출토된 유물을 청자기(靑瓷器)와 다리미 등 중국 남조에서 직접 수입한 유물과 남조에서 기술을 수입하여 제작한 것으로 보이는 청동거울과 무덤벽돌, 그리고 백제적 특징이 강한 연화문으로 장식된 세부적 양식 등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물들은 남조 문화가 백제에 전래되어 본토화(本土化)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무령왕릉의 능묘제도, 장지 선택과 전실의 구조 등은 모두 남조의 그림자가 짙게 반영되어 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남조 문화는 유학, 불교, 전장제도, 사회풍속 등이 백제에 전래되었지만, 주로 백제의 왕실과 귀족계급에 국한되었으며, 백제의 중하층계급은 여전히 백제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고 인식했다. 따라서 남조와 백제의 문화교류는 백제의 민족문화를 보충하는 일종의 ‘표층(表層)문화’, 즉 물질문화교류라고 단정했다.⁸⁶

그런데 1990년대 이후 남경에서 불교유적이 끊임없이 발굴됨에 따라 불교사원의 와당 등의 유물과 남조 불교사원의 배치 양식 등 유적의 내용과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남조 불교유적을 중국 북방, 백제, 일본의 불교유적과 비교하고, 아울러 불교문화의 전파를 밝히는 연구가 속출했다. 숙백(宿伯)은 중국의 초기 불교사원의 배치를 고증하고, 백제의 불교사원 건축이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⁸⁷ 이화동(李化東)은 백제 불교사원의 고고발굴상황을 소개

85 邵磊, 2009, 「百濟武寧王陵隨葬蕭梁鐵五銖錢考察」, 『中國錢幣』 2009-8.

86 丁利民, 2007, 「百濟武寧王陵中的南朝文化因素研究」, 南京大學碩士學位論文.

87 宿伯, 1997, 「東漢魏晉南北朝佛寺布局初探」, 『慶祝鄧慶銘教授九十華誕論文

했으며,⁸⁸ 양홍(楊泓)은 백제 정립사를 중심으로 백제 불교사원과 남조 불교사원의 밀접한 관계를 탐구하고, 백제 불교와 남조 불교의 상호관계를 논하였다.⁸⁹ 김신(金申)과 진화명(陳華明)은 백제의 불상자료를 수집하고, 남조 불교 미술이 백제에 미친 영향을 서술했다.⁹⁰

연화문와당(蓮花紋瓦當)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편년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백제의 와당에 주목한 연구도 나왔다. 진윤란(陳允蘭)은 남조에서 출토된 육조시기 와당의 문양과 삼국의 와당의 문양을 비교한 후 백제의 와당은 육조시기 중후기 중국의 와당의 품격과 기본적으로 일치한 것으로 보았다.⁹¹ 진근유(陳槿瑜)는 백제 정립사와 미륵사의 가람 배치, 백제에서 출토된 각종 불상과 연화문 와당 등이 남조의 불교 유물 유적과 매우 흡사하다면서 백제 문화에 대한 남조 문화의 영향을 확인했다.⁹² 난국금(樂國琴)은 백제 금동향로와 중국 고대 박산향로의 형태 및 남조 화상전(畫像磚) 도상(圖像)을 비교한 후 남조 문화의 요소와 백제 문화적 특징을 찾았다.⁹³ 부영리(符永利)는 백제에 현존하는 실물자료를 토대로 남조 불상과 비교한 후 백제 불상이 남조 불상과 완전히 흡사하다고 주장했다.⁹⁴ 한편 반창화(潘暢和)·이해도(李海燾)는 한반도 고대 삼국에서의 불교의 전파 경로에 대해 서술했다. 고구려는 372년 소수림왕시기에 불교가 공식

集』, 河北教育出版社.

88 李華東, 2011, 『朝鮮半島古代建築文化』, 東南大學出版社.

89 楊泓, 2002, 「百濟定林寺遺迹初論」, 『宿伯先生八秩華誕紀念文集』, 文物出版社; 楊泓, 2009, 「中國南朝對百濟佛教文化的影響」, 『中國文物報』 2009-2.

90 金申, 2004, 「中國與古代朝鮮半島的佛教美術」, 『佛教美術叢考』, 科學出版社; 陳華明, 2009, 『佛教美術全集 10-韓國佛教美術』, 文物出版社.

91 陳允蘭, 2011, 「南京出土六朝瓦當紋樣研究」,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92 陳槿瑜, 2016, 「南朝近年來發現南朝佛教遺存研究三題」, 南京師範大學碩士學位論文.

93 樂國琴, 2014, 「從百濟金銅香爐看南朝文化對百濟文化的影響」,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94 符永利, 2012, 『南朝佛教造像的考古學研究』, 南京大學博士學位論文.

적으로 수용하기 이전인 4세기 초에 이미 민간교류를 통해 중국에서 전래되었으며, 백제도 384년 침류왕 때에 전진에서 불교를 수입하기 이전에 이미 고구려에서 불교가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했다.⁹⁵ 「한중일 불교 초전기(初傳期) 비교(中朝日佛敎初傳期比較)」는 불교가 한중일 삼국에 전래되던 초기 각국의 특징에 대해 분석했는데, 백제 불교는 계율(戒律)과 의식(儀式)을 존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고구려는 토착신앙과 결합하여 잡신(雜神)적 성격을 띠었으며 삼론종(三論宗)이 유행했는데, 신라는 이와 달리 호국불교와 군사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돈황벽화를 연구하는 논문에서도 백제 관련 자료를 찾을 수 있다. 양삼(楊森)은 문헌자료와 각종 고고자료를 결합하여 고구려·신라·백제인의 복식의 차이점을 세분하고, 벽화에 등장하는 삼국 인물의 국적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언급하는 인물은 고구려와 신라인이 대부분인데, 돈황벽화 초당(初唐) 제335굴 벽화 ‘유마힐경변(維摩詰經變)’ 중에 우하측(右下側)에 위치한 인물은 백제인(百濟人)으로 특정했다.⁹⁶ 이홍(李洪)은 백제 미술과 돈황 막고굴(莫高窟) 미술의 비교를 통해서 회화와 마구 등 백제 미술의 특징을 분석했다. 회화에서 백제는 고구려와 신라의 화풍과 구별이 되는데, 중국 남조 양나라의 회화법과 서역의 회화법의 영향을 각각 받았다고 하였다. 그런데 마구(馬具)는 그와는 달리 고구려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다.⁹⁷ 한편 설홍염(薛紅艷)은 백제 문양전의 내용, 조각기법, 구도 등을 분석했다. 백제 문양전은 백제 고유의 토속신앙과 중국에서 전래된 유교의 ‘효덕(孝德)’, 불교의 ‘내세(來世)’, 도교의 ‘구선(求仙)’ 등 관념이 담겨 있다고 평가하고, 중국 한나라의 화상석전(畫像石磚)과 일

95 潘暢과 李海燾, 2009, 「佛敎在高句麗百濟和新羅的傳播足跡考」, 『延邊大學學報(社會科學報)』 2009-2.

96 楊森, 2011, 「燉煌壁畫中的高句麗,新羅,百濟人形像」, 『社會科學戰線』 2011-2.

97 李洪, 2013, 「燉煌文化對韓國三國時期區域文化的影響」, 中國美術學院博士學位論文.

정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⁹⁸ 장개진(張開震)은 벽골제 축조의 역사적 배경, 공법과 기능 그리고 역사적 변천을 정리하고, 벽골제와 관련 있는 풍속문화에 대해 연구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고대 삼국시대에 백제의 토목기술이 마한 등 주변국가보다 앞서 있었다고 결론을 이끌었다.⁹⁹

「중국 고대 강남과 한반도의 교류(中國古代江南與朝鮮半島的交流)」는 고구려·백제·신라와 육조 정권의 교류에 대해 각각 서술했다. 그중 백제와의 교류에서는 정치적으로는 조공책봉관계, 문화적으로는 강남의 월요청자(越窯靑瓷) 제작기술 도입, 무령왕릉 출토 유물, 송산리 고분의 연화문 전돌 문양, 불교사원에서 발견된 기와, 사택지적비(砂宅智積碑)에 나타난 사육변려체(四六駢麗體), 불상조각 등에 보이는 육조 문화와의 공통점과 유사성에 주목하여 육조 정권과 백제의 교류를 서술했다.¹⁰⁰

노해명(盧海鳴)은 중국 강남과 한반도 사이의 교류의 역사를 육조(六朝), 수당(隋唐), 오대송원(五代宋元), 명청(明清) 등 4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기별 특징을 서술했다. 육조시기에서는 강남과 고대 삼국 사이의 교류에 대해 설명했는데 대부분의 논고와 마찬가지로 백제와의 관련 서술이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한다. 본 글에서는 백제 무령왕릉과 송산리 고분 등에서 발견된 유물 양식이 중국 남조와 유사한 것은 백제가 남조에서 기술자와 공예기술을 도입한 사실을 증명한다고 하였다. 또한 중국 정사에 기록된 자료를 토대로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복식, 주거, 혼인, 장례, 제사 등 사회풍속에 대해서도 서술했는데, 삼국의 사회풍속이 중국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했다. 그중 백제와 관련된 서술을 언급하면, 복식(服飾)제도의 신분등급제와 복상(服喪)제도 등이 중국과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하였다. 또한 백제가 사중지월(四仲之月)에 천(天)과 오제신(五帝神)에게 제사를 지낸 것은 요동 지역에서 오제신(五帝神)을 받아들인 것이며, 황

98 薛紅艷, 2002, 「韓國百濟紋樣磚略考」, 『民族藝術』 2002-3.

99 張開震, 2013, 「碧骨堤的興廢及其風俗文化研究」, 延邊大學碩士學位論文.

100 盧海鳴, 1997, 「中國古代江南與朝鮮半島的交流」, 『南京社會科學』 1997-8.

제(黃帝)를 중심으로 하는 사방신(四方神) 계통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¹⁰¹

대위홍(戴衛紅)은 백제와 중국에서 출토된 ‘화식간(貨食簡)’의 비교 연구를 통해 백제와 동진남북조 사이의 밀접했던 문화적 관계에 대해 주목했다.¹⁰² 그리고 백제·신라에서 발견된 ‘양(椋)’자 목간이 중국에서 기원하여 한반도를 경유해서 일본으로 전래되었다고 주장하고, 목간을 통한 한중일 문화교류와 전파 경로를 확인했다.¹⁰³

옹민화(翁敏華)는 기악(伎樂)의 유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원래는 중국 남방 오(吳) 지역의 음악이었는데 백제인에 의해 일본으로 전래되었다고 보는 일본 학계의 통설을 부인했다. 그는 기악과 유사한 가면극으로 백제의 기악이 있었는데, ‘문강예곡(文康禮曲)’이라는 명칭으로 중국에 전래되었으며, 일명 ‘상운악(上云樂)’이라고도 했다는 것이다. 중국인이 여기에 가사를 붙여 중국화했는데, 다시 20년 후에 ‘伎樂’이라는 명칭으로 일본에 전래되었다는 것이다. 백제는 왕조 교체가 빈번하던 중국의 남북조시기에 새로운 왕조가 등장할 때마다 이를 축하하고, 신복을 표시하기 위해 자국의 기악을 공연하였고, 이리하여 총 5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기악이 유입되었다는 것이다. 일본에 기악이 유입된 시기는 고수 전쟁이 발생하던 무렵인데, 일본에 기악을 전했다고 전해지는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이때 일본으로 이주한 것은 바로 전쟁의 화를 피하기 위해서였을 것이라고 추정했다.¹⁰⁴ 한편 전불(錢箒)은 중국대백과사전에서 백제의 무용을 설명한 항목이 잘못되었다고 반박했다. 중국대백과사전은 백제에는 불교가면무가

101 盧海鳴, 2000, 「魏晉南北朝時期朝鮮的社會風俗」, 『東南大學學報(哲學社會科學版)』 2000-12.

102 戴衛紅, 2015, 「中韓出土貨食簡研究」, 『中華文史論叢』 2015-3.

103 戴衛紅, 2017, 「東亞簡牘文化的傳播-以韓國出土“椋”字木簡爲中心的探討」, 『文史哲』 2017-3.

104 翁敏華, 2001, 「伎樂 上云樂 舞回回-中日韓戲劇思想的一段因緣」, 『文藝研究』 2001-1.

유행했는데, 612년 중국에서 귀국한 미마지가 산대도감과 기악무를 창작했다고 서술했다. 이에 대해 전볼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백제에는 도감이라는 직책이 없었으므로 산대도감이라는 가면무극이 존재할 리 없다고 주장하고, 미마지가 중국에서 배워 온 음악은 오월(吳越)이 아니라 중국 남방의 형초(荊楚)일대에서 기원한 음악인데, 612년 귀국하고 나서 이를 기초로 하여 가면무극인 기악무를 가공했다는 것이다.¹⁰⁵

조설(趙雪)과 유연(柳燕)은 백제의 음악과 무용의 기원과 종류 및 백제 멸망 후 주변 국가에 전파된 양상에 대해 간단히 서술했다. 그는 백제 문화는 전체적으로 보면 부여 문화와 마한 문화가 결합된 문화지만, 마한이 백제에 멸망당한 이후에도 여러 부족으로 구성된 마한 문화가 소멸되지 않고 상호 융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매우 선명한 다원적 특징을 띠게 되었다고 하였다. 백제 악무는 일본에 오랜 세월을 걸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당나라에서는 정식 궁중 악무로서 대우받았다고 했다. 또한 멸망 이후에는 백제에 비해 문화적으로 낙후되었던 신라에 수용되어 신라 문화의 주류가 되었으며, 신라를 거쳐 일본에까지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¹⁰⁶

왕명성(王明星)은 일본이 대륙문화를 흡수하는 과정에서 한반도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면서, 한국의 고대문화가 일본 고대문화를 형성하는 중요한 연원이 되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삼국 중에서도 특히 백제의 역할을 강조했는데, 일본의 유학과 불교, 술과 단무지 등 음식문화 등이 모두 백제를 통해 전래되었다고 하였다.¹⁰⁷ 이 점에서 대부분의 중국의 일본 관련 논문들이 중국 대륙의 문화가 백제를 통해 일본에 그대로 전래되었다고 서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일본이 받아들인 유학이나 불교 등은 중국의 유학과 중국의 불교가 아니라 한반도에

105 錢萐, 2000, 「味摩之與山臺都監假面舞劇-爲《中國大百科全書·音樂舞蹈》“朝鮮古典舞蹈”條訂正」, 『上海藝術家』2000-10.

106 趙雪·柳燕, 2014, 「隋唐时期百济乐舞文化源考」, 『蘭臺世界』2014-12.

107 王明星, 1996, 「日本古代文化的朝鮮淵源」, 『日本問題研究』1996-8.

서 한반도의 특징에 맞게 변형된 한국의 유학과 한국의 불교였다는 사실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글과는 차별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는 나아가 『일본서기』의 웅신천황 시기(270~310)에 백제 왕인이 『논어』와 『천자문』을 일본에 전하면서 유학이 일본에 전해졌다고 기사에 대해 『천자문』이 중국 남조 양무제 연간(502~549) 시기에 작성되었던 사실을 고려하면 시기적으로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비판했다. 그렇지만 『일본서기』의 기록은 통상적으로 2갑자를 낮추어 보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그러한 비판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 일본 고대사와 관련된 중국 학계의 서술을 보면 대부분 『일본서기』의 기록을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드러나는데, 이 점은 중국 학계의 약점이라고 할 수 있다. 상락(常樂)은 동아시아에서 백제의 역사와 문화가 갖는 의의를 평가했다. 글은 백제의 역사 발전과 문화는 중원 대륙왕조의 영향을 깊이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일본 문화의 발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백제는 문화적으로 찬란하고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했지만, 일순간 통치자의 잘못된 정책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¹⁰⁸

V. 맺음말

최근 중국에서는 백제사까지 중국사에 귀속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든 것이 『백제역사편년(百濟歷史編年)』이다. 본서는 장춘사범대학(長春師範大學) 역사문화학원(歷史文化學院) 원장 겸 동북민족 역사와 문화 연구센터(東北民族歷史與文化研究中心) 주임을 맡고 있는 강유공(姜維公)이 주편하고, 백제사 전공자인 조지빈(趙智濱)이 편저한 책이다. 2016년 6월 과학출판사에서 출간되었다. 강유공은 『삼국사기』와 『고려기』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문헌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한편, 고조선·고구려·백제·발해

108 常樂, 「略論百濟歷史與文化的借鑒意義」, 『綏化學院學報』1996-2.

등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논문 수십 편을 발표한 연구자로 정평이 나 있다. 조지빈은 「당대 웅진도독부 관련 몇 가지 문제(關於唐代熊津都督府的幾個問題)」(2010), 「웅진도독부 함락의 시말-나당전쟁 발발을 함께 논하며(熊津都督府陷落始末-兼論唐羅戰爭的爆發)」(2010), 「당조가 백제고지에 처음 설치한 행정구역에 관한 연구(唐朝在百濟故地初設行政建置考略)」(2012), 「용삭 3년 백제 멸망 전쟁 분석(龍朔三年百濟亡國之戰考述)」(2016), 「『삼국사기』 지리지 중 백제·고구려 군현 명칭의 신뢰성에 관한 시론(試論《三國史記·地理志》中百濟和高句麗郡縣名的可信性)」(2016) 등을 발표한 학자로서 중국에서는 보기 드문 백제사 전공자이다.

강유공은 『백제역사편년』의 서(序)를 통하여 일제 강점기 때 행해진 일본 학자들의 한국사 연구를 비판하였는데, 특히 『삼국사기』의 역사적 지위를 높이고 중국 정사의 가치를 폄훼한 점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중국은 2002년에 동북공정을 시행한 것을 계기로 하여 동북역사문헌에 대해 전면적이고 체계적인 정리 작업을 벌였는데, 그 결과 『삼국사기』는 믿을 만한 역사서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이를 기초로 한 연구결과는 성립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하여 백제 역사를 새롭게 편년했다고 소개하였다.

조지빈은 『백제역사편년』의 전언(前言)과 전언 다음에 배치한 「백제 기원문제 탐구(百濟起源問題探討)」라는 글에서 백제는 3세기 말에서 4세기 초 사이에 부여 정권에서 분열되어 나왔다고 주장하였다. 백제는 초기에 옥저 지역에 위치하였다가 얼마 후에 고구려에 격파당하여 4세기 중엽 동예 지역을 따라 남쪽으로 이동하여, 오늘날 한반도 중부 한강 유역에 위치해 있었던 대방고지로 남하하였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중국 학자들이 그동안 백제 연구를 한국사 범주로 간주했다고 비판하면서, 백제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킬 것을 주장하였다. 즉 백제의 초기 역사는 (부여사가 중국사에 귀속되므로) 중국사에 속하고, 백제가 4세기 중엽에 한강 유역에 남천했을 때 한강 유역은 당시까지 중원왕조 소유였기 때문에 이때의 역사도 중국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또한 백제가 멸망한

이후 백제고지에 웅진도독부를 세웠으며, 672년 웅진도독부가 신라에 점령된 이후에는 백제인들이 대거 중국 내지로 이주하였기 때문에 백제 역사는 중국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 백제 역사는 어느 정도 중국사에 속한다는 것이다. 물론 저자는 백제사가 한국사에 속한다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부언하였지만, 역사의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러한 방법은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서는 2013년 이미 발표된 논문에 약간의 수정을 가한 것인데, 예를 들어 원래의 글에서는 백제의 북부여 출자설을 주장했는데, 수정본에서는 북부여를 일률적으로 부여로 고쳐 썼다.

본고는 백제사를 중국사에 귀속시키려고 하는 이와 같은 부류의 의견이 어느 정도 중국 학계에 존재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기존에 발표된 중국 학계의 논문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되었다. 그 결과 백제사 연구에 대한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을 대략적이거나 파악할 수 있었다. 백제사에 관한 중국 학계의 일반적 인식은 백제는 정치적으로 중국과 조공책봉관계를 맺었던 국가이며, 중국과의 교류를 통해 자국의 문화를 발전시키고, 이를 일본에 전해주는 역할을 수행했던 국가였다. 중국의 이러한 백제사 서술 경향은 중화주의적 사관에 입각하여 기술된 중국 측 사료를 백제사 서술의 기본 자료로 삼았던 것에서 기인한 것이었다.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 수준은 백제 유민 묘지명 관련 연구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한국과 일본 등 외국의 연구 성과와 동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그다지 높지 못하다. 그렇지만 연구 성과가 축적되면서 연구 역량이 점차 강화되고 있어 중국 학계의 연구 동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중국발표 논문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贾莉	2011	从“白村江海战”和“甲午战争”看中日不同的对外政策	黑河学刊	2011-1	
賈梅仙	1983	朝鮮半島武寧王陵簡介	考古學參考資料	1983-6	
贾欢欢	2016	浅谈日本黑齿习俗的起源	青年文学家	2016-2	
簡巧珍	1989	南朝鮮音樂小史	中國音樂	1989-3	
葛继勇	2011	东亚视野中的朝鲜木简	唐都學刊	2011-5	
姜維公· 姜維東	2007	高句麗百濟起源新論	東北亞研究論叢	2007-1	
姜维东	2006	唐朝对东北亚诸政权的文化输出研究	社会科学战线	2006-7	
姜维东	2015	试论唐代带方州的性质及其影响	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5-5	
姜清波	2002	仕唐三韩人事迹考述	陕西师范大学 硕士	2002-4	석사
姜清波	2005	入唐三韩人研究	暨南大学 博士	2005-4	박사
姜清波	2012	百济国末代王室及后裔在唐朝的汉化过程考述	暨南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12-11	
姜清波	2012	唐代百济姓氏“福富顺”与“扶余”辨正	东疆学刊	2012-1	
康灵娜	2013	《三国史记》靺鞨探析	延边大学 硕士	2013-5	석사
介永强	1995	唐代的外商	晉陽學刊	1995-1	
耿铁华	2011	好太王碑辛卯年条与相关问题	社会科学战线	2011-11	
耿铁华	2015	好太王碑与东北亚古代国家关系	东北史地	2015-7	
高履泰	2009	中国建筑文化对韩国古建筑的影响	古建园林技术	2009-9	
高伟	2015	江苏连云港封土石室墓调查简报	东南文化	2015-10	
乔凤岐	2004	隋唐两朝东征高丽研究	河北师范大学 硕士	2004-5	석사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郭晔旻	2010	风云白江口	舰载武器	2010-6	
邱添生	1969	唐代起用外族人研究	大陸雜誌	38-4	
金锦子	2006	论百济与北魏的关系—以百济的上表文为中心	东疆学刊	2006-12	
金锦子	2008	论七世纪中后期唐朝与新罗关系演变及对东北亚政局的影响	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8-6	
金锦子	2007	五至七世纪中叶朝鲜半岛三国纷争与东北亚政局	延边大学 博士	2007-10	박사
金东永	2008	汉唐时期朝鲜半岛政权与中原王朝的朝贡册封关系研究	吉林大学 硕士	2008-4	석사
金宪淑	2000	“百济略有辽西”记事初探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0-9	
羅繼祖	1995	辰國三韓考	北方文物	1995-1	
卢海鸣	1997	中国古代江南与朝鲜半岛的交流	南京社会科学	1997-8	
卢海鸣	2000	魏晉南北朝時期朝鮮的社會風俗	東南大學學報 (哲學社會科學版)	2000-12	
卢海鸣	2000	六朝政权与朝鲜半岛国家之间的交流	金陵职业大学学报	2000-6	
宁三福	2016	入唐百济遗民活动探析	延边大学 硕士	2016-5	석사
唐烈	2013	略论百济外交政策对朝鲜半岛局势的影响—以420年至475年为例	峰学院学报(汉文哲学社会科学版)	2013-7	
戴衛紅	2015	中、韓出土“貸食”簡研究	中华文史论丛	2015-3	
戴卫红	2017	东亚简牍文化的传播—以韩国出土“椋”字木简为中心的探讨	文史哲	2017-3	
戴卫红	2017	百济地方行政体制初探：以出土资料为中心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7-2	
都興智	2001	唐政權與朝鮮半島的關係述論	史學集刊	2001-3	
董健	2013	崔致远对三韩、新罗及渤海的历史认识	东北史地	2013-3	
董延寿	2007	洛阳、鲁山、西安出土的唐代百济人墓志探索	东北史地	2007-3	
杜石然	1990	歷史上的中藥在國外	自然科學史研究	1990-1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杜金唐	2011	白村江战役与东亚格局的演变	东北师范大学 硕士	2011-6	석사
栾国琴	2014	从百济金铜香炉看南朝文化对百济文化的影响	延边大学 硕士	2014-5	
栾国琴	2013	试析百济金铜大香炉中的中国文化因素	哈尔滨师范大学 (社会科学学报)	2013-5	
连晔		宋摹梁元帝《职贡图》与中古域外“冠服”	装饰	2008-12	
马钰	1999	朝鲜白江口之战—中日历史上的首次军事交锋	北京科技大学学报 (社会科学版)	1999-2	
马云超	2012	白江口之战与战后的唐日关系	浙江外国语学院学报	2012-3	
马云超	2013	中日历史上的第一战与东亚变局	文史天地	2013-7	
马云超	2016	日本天皇曾向唐朝皇帝称臣—隐藏在百济人墓志中的历史真相	文史天地	2016-3	
馬馳	1998	論仕唐蕃人之漢化	唐史論叢	7	
马伟	2007	论七至八世纪日本天下观	陕西师范大学 硕士	2007-5	석사
蒙曼	2007	唐朝军事系统中的朝鲜半岛徙民	中央民族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07-3	
文锋	2001	史书里中日第一战	海洋世界	2001-12	
苗威	2004	乐浪郡与“三韩”	东北史地	2004-6	
苗威	2006	關於‘古之辰國’的再探討	东北史地	2006-1	
苗威	2013	百濟前期疆域述考	朝鮮韓國歷史研究	14	
朴永光	2001	中韓舞蹈文化交流史概觀	文藝理論與批評	2001-3	
朴真奭	1978	公元一世纪—七世纪中朝两国人民的文化交流	延边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1978-4	
朴真奭	1991	关于四五世纪东亚东部“国家关系的结构分析”之再分析	延边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1991-4	
潘吉星	1995	论日本造纸与印刷之始	传统文化与现代化	1995-6	
潘颖	2012	论大化改新之前日本与朝鲜半岛的关系	鸡西大学学报	2012-6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潘物和	2009	佛教在高句丽、百济和新罗的传播足迹考	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9-2	
樊文礼	1994	白江鏖兵—中日第一战	军事历史	1994-11	
范毓周	1994	六朝时期中国与百济的友好往来与文化交流	江苏社会科学	1994-10	
拜根兴	2004	论唐代刘仁愿在百济留守军的地位及与刘仁轨之间的矛盾	三门峡职业技术学院学报	2004-3	
拜根兴	2005	也论苏君墓当为苏定方墓	考古与文物	2005-5	
拜根兴	2006	高句丽、百济遗民关联问题研究的现状与展望	中国历史地理论丛	2006-4	
拜根兴	2008	百济移民《称寔进墓志铭》关联问题考释	东北史地	2008-2	
拜根兴	2009	入乡随俗：墓志所载入唐百济遗民的生活轨迹—兼论百济遗民遗迹	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09-7	
拜根兴	2012	唐代百济移民称氏家族墓志相关问题研究	当代韩国	2012-6	
拜根兴	2014	入唐百济移民陈法子墓志关联问题考释	史学集刊	2014-5	
拜根兴	2016	《大唐平百济国碑铭》关联问题新探	陕西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16-7	
拜根兴	2017	朝鲜半岛现存金石碑志研究的现状和展望—以7至10世纪为中心	社会科学战线	2017-2	
傅朗云	1996	《好太王碑》所载相关问题的思考	社会科学战线	1996-4	
符永利	2012	南朝佛教造像的考古学研究	南京大学 博士	2012-5	박사
史未央	2005	高句麗與百濟新羅的爭霸	東北史地	2005-3	
史义银	1995	六朝时期及之前的韩国与中韩关系	盐城师专学报 (哲学社会科学版)	1995-7	
史长乐	2007	金富轼的三国鼎峙说	东北史地	2007-11	
常乐	2016	略论百济历史与文化的借鉴意义	绥化学院学报	2016-2	
赵健民	1984	试论古代中日之间的三次战争	天津社会科学	1984-8	
徐作生	2000	古百济国400艘倭船遗踪查勘录	海交史研究	2000-12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石晓军	1983	唐日白江之战的兵力及几个地名考	陕西师大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83-10	
薛瑞泽	2005	南北朝时期与朝鲜半岛诸国的交往	吉林师范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005-10	
薛红艳	2002	韩国百济纹样砖略考	民族艺术	2002-3	
盛凯	2012	论唐高宗时期的朝鲜半岛政策及形成原因	延边大学 硕士	2012-6	석사
盛巽昌	1991	中国历史上最早的海战—唐朝与日本的白江口之战	航海	1991-6	
邵磊	2009	百济武宁王陵随葬萧梁铁五铢钱考察	中国钱币	2009-8	
束有春	1996	唐代黑齿常之字号及生卒年新考	江海学刊	1996-12	
孫玉良	1983	唐朝在東北民族地區設置的府州	學術研究叢刊	1983-4	
束有春	1996	唐代百济黑齿常之、黑齿俊父子墓志文解读	东南文化	1996-12	
孙炜冉	2012	唐代百济蕃将沙吒相如考疑	通化师范学院学报	2012-7	
宋成有	2011	百濟與中國文化交流的特點及其影響	北京大學 韓國學 論文集	16	
宋铁勇	2016	百济经济述略	长春师范大学学报	2016-9	
沈英淑	2001	高句丽迁都平壤问题研究	延边大学 硕士	2001-5	석사
沈哲	2016	福姓	环球人文地理	2016-11	
沈晓琳	2004	魏晋南北朝时期书法在日、朝的传播	书法世界	2004-6	
押沙龙	2014	白江口 中日第一次交手	国家人文历史	2014-9	
梁安和	2001	白江口战役及其影响	咸阳师范学院学报	2001-8	
楊軍	2001	從夫餘南下看百濟國族源	北方民族	2001-2	
杨军	2008	朝鲜史书《三国史记》所载“鞞鞞”考	中国边疆史地研究	2008-12	
杨军	2009	儒学在朝鲜半岛的早期传播	贵州社会科学	2009-4	
杨军	2015	任那考论	史学集刊	2015-7	
杨军	2011	略论朝鲜古史谱系的演变	黑龙江社会科学	2011-4	
楊軍	2017	百濟起源略考	東疆學刊	2017-10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杨璐 全莹	2017	试论佛教传入与百济传统舞乐之间的冲击和同化	大连大学学报	2017-5	
杨世新	2010	略论隋唐朝与朝鲜三国的文化交流	大家	2010-4	
杨森	2011	敦煌壁画中的高句丽、新罗、百济人形象	社会科学战线	2011-2	
楊通方	1992	漢唐時期中國與百濟的關係	韓國學論文集	1	
杨龙	2009	论跆拳道起源与发展	内江科技	2009-7	
杨泓	1984	吴、东晋、南朝的文化及其对海东的影响	考古	1984-6	
楊泓	2009	中國南朝對百濟佛教文化的影響	中國文物報	2009-2	
吴焯	2006	从相邻国的政治关系看佛教在朝鲜半岛的初传	中国史研究	2006-2	
吴珍锡	2017	三燕文化及其与高句丽、朝鲜半岛南部诸国文化交流的考古学研究	吉林大学 博士	2017-6	박사
翁敏华	2001	伎乐 上云乐 舞回回—中日韩戏剧史上的一段因缘	文艺研究	2001-1	
阮荣春	1990	早期佛教造像的南传系统	东南文化	1990-5	
阮荣春	1990	早期佛教造像的南传系统(续)	东南文化	1990-6	
王健群	1983	好太王碑六年丙申、八年戊戌条考释	学习与探索	1983-8	
王德恒	2011	改变东北亚丝路格局的白江口之战	知识就是力量	2011-9	
王连龙	2011	新出百济人祔军墓志	社会科学战线	2011-7	
王连龙	2011	百济人《祔军墓志》考论	社会科学战线	2011-7	
王立达	1957	新罗、高句丽、百济“三国并立”时期内朝鲜经济、文化的发展及其在沟通中日文化上所起的作用	史学月刊	1957-7	
王明星	1996	日本古代文化的朝鲜渊源	日本问题研究	1996-8	
王明星	1999	朝鲜古代文化对日本的影响	延边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1999-11	
王明星	2000	朝鲜古代文化之东传(上)	通化师范学院学报	2000-2	
王明星	2000	朝鲜古代文化之东传(下)	通化师范学院学报	2000-6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王明月	2013	高句麗好太王經略研究	东北师范大学 硕士	2013-5	석사
王飞峰	2017	百济、新罗、加耶地区出土玻璃器及其与丝绸之路的相关研究	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7-3	
王彬	2016	新见隋唐与朝鲜半岛国家有关的墓志简述	咸阳师范学院学报	2016-9	
王小盾	2005	朝鮮半島의 古代音樂和音樂文獻	中國武漢音樂學院 學報	2005-2	
王珊	2009	中国古代造纸术在“东亚文化圈”的传播与发展	华东纸业	2009-12	
王巍	1997	从出土马具看三至六世纪东亚诸国的交流	考古	1997-12	
王仲殊	1989	东晋南北朝时代中国与海东诸国的关系	考古	1989-11	
王仲殊	1990	关于好太王碑文辛卯年条的释读	考古	1990-11	
王仲殊	2003	中国古代宫内正殿太极殿的建置及其与东亚诸国的关系	考古	2003-11	
王仲殊	1991	再论好太王碑文辛卯年条的释读	再论好太王碑文辛卯年条的释读	1991-12	
王俊	2008	百济武宁王墓志与六朝墓志的比较研究	南方文物	2008-3	
王臻	2005	高句麗同新羅百濟的戰和關係	東北史地	2005-1	
王志高	2010	南京红土桥出土的南朝泥塑像及相关问题研讨	东南文化	2010-6	
王志高	2008	韓國公州松山里6號墳幾個問題的探討	东南文化	2008-7	
于赓哲	2000	贞观十九年唐对高丽的战争及其影响	陕西师范大学 硕士	2000-4	
于畅	2008	黑齿常之考论	延边大学 硕士	2008-5	석사
于春英	2009	百济与南北朝朝贡关系研究	吉林大学 硕士	2009-4	석사
于春英	2010	百济与南北朝朝贡关系研究	東北史地	2010-6	
羽离子	1992	汉文化东渐的初途—汉字、汉籍、造纸术假道朝鲜传入日本	图书馆	1992-7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袁绍佳	2014	试论白江口之战后中日交流的第一次高潮	临沧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2014-1	
熊义民	2002	公元四至七世纪东北亚政治关系史研究	暨南大学 博士	2002-4	박사
熊义民	2002	唐初海军初探	史学月刊	2002-11	
刘炬	2015	关于长寿王南征百济的几个问题	东北史地	2015-9	
刘炬	2016	广开土王南征百济问题新探	东北史地	2016-7	
刘明科 田仁孝	1995	关于唐鄜州刺史元师坟墓志铭中几个问题的考述	考古与文物	1995-1	
刘金祥	2008	南京出土六朝瓦当刍议	四川文物	2008-10	
劉永智	1983	百济略有遼西辨	學術研究叢刊	1983-4	
刘子敏	2001	驳《百济略有辽西》记事初探》	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1-3	
劉子敏	2012	百濟起源與夫餘, 高句麗無關	朝鮮·韓國歷史 研究	12	
刘子敏	2003	关于古“辰国”与“三韩”的探讨	社会科学战线	2003-5	
刘婷	2009	隋与朝鲜半岛交往问题探讨	山西师大学报 (社会科学版)	2009-2	
刘进宝	1995	试论唐太宗、唐高宗对高丽的战争	中国边疆史地研究	1995-9	
刘洪峰	2014	《三国史记》夫余史料解析	佳木斯大学社会科学学报	2014-8	
尹铎哲	2014	《三国史记》载“靺鞨”之我见	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14-3	
陆超祜	2016	初唐前期外交文书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	2016-2	석사
李刚	2010	国运：中日千年博弈启示	中国报道	2010-2	
李金超	2011	试论涘水之战对5世纪初朝鲜半岛政局的影响	黑龙江史志	2011-2	
李磊	2014	百济的天下意识与东晋南朝的天下秩序	华东师范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014-3	
李磊	2017	4世纪中后期百济政权的建构与早期百济史的编纂	史林	2017-6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李磊	2017	汉城百济覆灭考论—兼论刘宋衰亡的东亚影响	社会科学	2017-6	
李勃	2003	“黑齿”考略	中南民族大学学报 (人文社会科学版)	2003-12	
李英祥 尹春明	1999	唐玄武門之變真相初探	河北師範大學學報 (社會科學版)	1999-1	
李云泉	2002	漢唐中外朝貢制度述論	東方論壇	2002-6	
李鹏程	2014	唐代高丽士人研究	曲阜师范大学 硕士	2014-4	석사
李成德	1987	试析百济国家的社会性质	史学月刊	1987-3	
李殿仁	2015	富国强军是维护国家安全的根本遵循—唐清两代王朝对日作战的现实镜鉴	国家治理	2015-7	
李正乐	2008	论唐与朝鲜半岛三国之争	吉林大学 硕士	2008-3	석사
李婷	2008	流入日本的百济、高句丽遗民研究	陕西师范大学 硕士	2008-5	석사
李之龙	1996	唐代黑齒常之墓誌文考釋	東南文化	1996-3	
李之龙	1999	跋唐扶余隆墓志文	华夏考古	1999-6	
李春香	2010	试论百济与隋唐的政治关系	延边大学 硕士	2010-	석사
李春祥	2011	《三国史记》靺鞨、渤海史料相关问题研究	通化师范学院学报	2011-11	
李贺	2011	夫余移民研究	东北师范大学 硕士	2011-5	석사
李梅花	2000	东亚文化圈形成浅析	延边大学学报(社 会科学版)	2000-9	
李慧	2011	试论东北亚文化圈中的百济文化	青春岁月	2011-3	
李洪	2013	敦煌文化对韩国三国时期区域文化的影响	中国美术学院 博士	2013-5	박사
林大雄	1999	中国正史中的中朝音乐文化交流史料研究	中国音乐学	1999-1	
林贤九	1996	儒学在朝鲜的传播和影响	延边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1996-2	
张军	1998	辰国小考	北方文物	1998-5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张开震	2013	碧骨堤之兴废及其风俗文化研究	延边大学 硕士	2013-5	석사
张金俊	2015	《三国史记》所记载的新罗、高句丽、百济服饰研究	齐齐哈尔师范高等专科学校学报	2015-3	
张暎	2007	七世纪前期的东北亚政治关系与白江之战	延边大学 硕士	2007-6	석사
张暎	2008	唐朝与高句丽、百济关系的恶化及其原因	北方文物	2008-5	
張碧波	2005	從百濟高句麗滅亡到百濟建國—公元663-713年間東北亞政治格局走向的歷史解讀	東北史地	2005-1	
张士东	2013	高句丽、百济、新罗三国语言异同的判定	湖南农机	2013-1	
张思齐	1996	论唐太宗唐高宗关于辽东的诗文	吉首大学学报(社会科学版)	1996-12	
張榮勞	2005	唐代史書對百濟的記載與認識	唐史論叢 8	2005-	
張永媚	2006	南朝建康城的石闕	江蘇地方志	2006-4	
张成	2016	武宁王陵镇墓兽谱系考	大理大学学报	2016-9	
張溫 汪幼軍	2008	唐〈故虢王妃扶餘氏墓誌〉考	碑林集刊 13	2008-	
张日善	2001	百济与中国的关系	延边大学 硕士	2001-	석사
張傳璽	1995	〈百濟國斯麻王買地卷〉釋例	韓國學論文集 4	1995-	
張全民	2012	新出唐百濟移民祿氏家族墓誌考略	唐史論叢 14	2012-	
张倩	2000	三到六世纪高句丽外交策略的变化	厦门大学 硕士	2000-12	석사
张春梅	2012	论从汉四郡到统一新罗时期的中韩法制关系	华南农业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2-4	
张晓东	2011	唐太宗与高句丽之战跨海战略—兼论海上力量与高句丽之战成败	史林	2011-8	
张晓东	2015	隋唐东北亚的地缘环境与政治博弈—以隋唐东征军事活动为中心的考察	军事历史研究	2015-5	
全昌淑	2000	古代朝日关系研究动态—关于“任那日本府说”的研究状况	延边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00-12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全昌淑	2001	“任那日本府”真相一驳日本新历史教科书“任那据点说”	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2001-12	
全香	2016	论百济的熊津、泗泚迁都及其影响	延边大学 硕士	2016-5	석사
钱菲	2000	味摩之与山台都假面舞剧—为《中国大百科全书·音乐舞蹈》“朝鲜古典舞蹈”条订正	上海艺术家	2000-10	
丁光勋	1996	魏晋南北朝时期朝鲜的社会风俗	历史教学问题	1996-12	
丁利民	2007	百济武宁王陵中的南朝文化因素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	2007-6	
郑大伟	2010	百济遗民问题探析	延边大学 硕士	2010-5	석사
郑彭年	1990	中国古代科学文化的东渐	科学	1990-10	
郑春颖	2013	高句丽、新罗、百济与日本出土的鉴金铜柱	东北史地	2013-9	
曹汛	2006	中国南朝寺塔样式之通过百济传入日本, 百济定林寺塔与日本法隆寺塔	建筑师	2006-2	
赵博渊	2005	历史上的中日战争	南风窗	2005-9	
趙俊杰	2008	再論百濟武寧王陵形制與構造的若干問題	邊疆考古研究	2008-7	
赵智滨	2010	熊津都督府陷落始末—兼论唐罗战争的爆发	中国边疆史地研究	2010-6	
赵智滨	2010	关于唐代熊津都督府的几个问题	东北史地	2010-11	
赵智滨	2012	唐朝在百济故地初设行政建置考略	中国历史地理论丛	2012-1	
趙智濱	2013	百濟起源及南遷帶方新考	東北亞研究論叢	2013-5	
赵智滨	2016	试论《三国史记·地理志》中百济和高句丽郡县名的可信性	博物馆研究	2016-6	
赵智滨	2016	龙朔三年百济亡国之战考述	学问	2016-9	
赵雪	2014	隋唐时期百济乐舞文化源考	兰台世界	2014-12	
赵红梅	2001	夫余、马韩、耶马台三国“下户”之比较	东疆学刊	2001-3	
周晓娇	2012	试论南朝佛教在百济的传播和影响	延邊大學 碩士	2012-5	석사
周裕兴	2010	从海上交通看中国与百济的关系	东南文化	2010-1	
曾宪姝	1996	高句丽好太王时期的扩张活动	通化师院学报	1996-2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陈光崇	1995	论隋唐之际经略辽海地区的战争	益阳师专学报	1995-1	
陈瑾瑜	2016	南京近年来发现南朝佛教遗存研究三题	南京师范大学 硕士	2016-4	석사
陳永	2015	百濟音樂舞蹈的源流, 研究現況及當代研究的加能性取向	星海音乐学院学报	2015-1	
陈睿	2011	黑齿常之评述	中央民族大学学报	2011-5	
陈允兰	2011	南京出土六朝瓦当纹样研究	南京师范大学 硕士	2011-4	석사
陳璋	2017	陈法子墓志所见入唐百济遗民事迹研究	北方文物	2017-2	
陈俊达	2014	关于《日本上古史研究—日鲜关系与日本书纪》中存在的两个问题	大庆师范学院学报	2014-8	
陈轩	2011	魏晋南北朝时期东亚国际关系的演变	复旦大学 硕士	2011-5	석사
蔡正德	1999	《百济新集方》年代考	延边大学医学学报	1999-8	
崔山玉	2006	试论六至七世纪中叶百济与倭关系	延边大学 硕士	2006-	석사
崔梦梦	2015	海上文化线路“登州海道”研究	中国海洋大学	2015-5	석사
祝立业	2004	简论唐丽战争中的唐罗同盟与丽济同盟问题	东北史地	2004-4	
祝立业	2014	略论唐丽战争与唐代东亚秩序构建	社会科学战线	2014-5	
蒲笑薇	2013	儒学在朝鲜三国的传播和发展	东方论坛	2013-10	
馮立君	2016	百濟與北族關係問題	韓國研究論叢	2016-2	
馮立君	2013	韓國與中國近30年百濟史研究述要	朝鮮·韓國歷史研究	15	
何群雄	2000	百济和南朝—汉字文化东渡小史之二	语文建设	2000-9	
何德章	1994	《南齐书·东南夷传》记北魏攻百济事纠谬	魏晋南北朝隋唐史资料	1994-12	
韓今玉	1993	韓國學者關於百濟初期史可信性的研究	世界史研究動態	1993-5	
韩国磐	1994	南北朝隋唐与百济新罗的往来	历史研究	1994-4	
韩昇	1995	唐平百濟前後的東亞國際形勢	唐研究	1	
韩昇	1995	“魏伐百济”与南北朝时期东亚国际关系	历史研究	1995-3	

저자	출간 년도	논문제목	간행물	권호	학위 논문
韩昇	2002	萧梁与东亚史事三考	上海社会科学院学 术季刊	2002-8	
韩昇	2005	白江之战前唐朝与新罗、日本关系的 演变	中国史研究	2005-2	
韩昇	1999	南北朝隋唐时代东亚的“佛教外交”	佛学研究	1999-6	
韓雪松	2013	北魏外交文書試探	史學集刊	2013-1	
许能洙	1998	中、朝、日佛教初传期比较	延边大学学报 (社会科学版)	1998-1	
项晓静	2008	刘仁轨朝鲜半岛事迹考述	安康学院学报	2008-12	
荆棘	2017	地缘政治与国家命运—中日对决史	齐鲁周刊	2017-7	
华建强	2011	浅析白江之战在7世纪中日交流史上的 重要地位	沧桑	2011-8	

중국발표 단행본

저자	출간 년도	논문	단행본	출판사
姜維公	2016		『百濟歷史編年』	科學出版社
姜清波	2010	入唐三韩人研究	『入唐三韩人研究』	暨南大学出版社
耿铁华	1994		『好太王碑新考』	吉林人民出版社
高明士	1983	從天下秩序看古代的中韓 關係	『中韓關係史論文集』	台湾韩国研究 学会
高明士	2009	天下秩序與東亞世界	『天下秩序與文化圈的探索 —以東亞古代的政治與教育 爲中心』	上海古籍出版社
金锦子	2007	五世紀中後期東亞國際局勢 與百濟, 高句麗的外交競爭	『中朝韓日關係史論叢(3)』	延邊大學出版社
金申	2009	中國與古代朝鮮半島的佛教 美術	『佛教美術叢考』	科學出版社
金春元	1995		『早期東北亞文化圈中的朝鮮』	延邊大學出版社

저자	출간 년도	논문	단행본	출판사
馬馳	1997	黑齒常之事迹考辨	『武則天與假節』論文集』	天津歷史教學社
朴真奭	2000		『高句麗好太王碑研究』	延邊大學出版社
拜根兴	2003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拜根兴	2012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徐秉琨	1996		『鮮卑, 三國 古墳中國朝鮮日本古代的文化交流』	遼寧古籍出版社
宿伯	1997	東漢魏晉南北朝佛寺布局初探	『慶祝鄧慶銘教授九十華誕論文集』	河北教育出版社
楊昭全 何彤梅	2001		『中國－朝鮮韓國關係史』	天津人民出版社
楊泓	2002	百濟定林寺遺迹初論	『宿伯先生八秩華誕紀念文集』	文物出版社
王巍	1999		『東亞地區古代鐵器及冶鐵術的傳播與交流』	中國社會科學出版社
李宗勳	2012	百濟族源與麗濟交融過程之考察	『朴文一教授80周年壽辰紀念史學論集』	香港亞洲出版社
李宗勳	1998	隋唐時期中朝日關係和東亞漢字文化圈的形成	『唐新羅日本政治制度比較研究』	延邊大學出版社
李惠國	1999		『唐代韓國人文社會科學』	商務印書館
李華東	2011		『朝鮮半島古代建築文化』	東南大學出版社
周裕兴	2006	百濟與六朝文化交流研究的斷想	『南京歷史文化新探』	南京出版社
周一良	1997	百濟與南朝關係的幾點考察	『魏晉南北朝史論集』	北京大學出版社
陳尙勝	1997	分裂時代的外交競爭－魏晉南北朝中韓關係述評	『中韓關係史論』	齊魯書社
陳長安	2002	唐代洛陽的百濟人	『洛陽出土墓誌研究文集』	朝華出版社
陳華明	2009		『佛教美術全集 10－韓國佛教美術』	文物出版社
韩昇	1995		『日本古代的大陸移民研究』	臺灣文津出版社

저자	출간 년도	논문	단행본	출판사
韩昇	2008	百濟與南朝的文化交流及其在東亞的意義	『東亞漢文化圈與中國關係』	中國社會科學出版社
韩昇	2009		『東亞世界形成史論』	復旦大學出版社

한국발표 논문

저자	출간 연대	논문	논문출처	권호	비고
姜孟山	1997	웅진시기 백제와 중국과의 관계	백제문화	26	
高明士	1982	백제 학교교육의 발전	백제연구	13	
高明士	1999	수당 사신의 부왜 및 그 예의 문제	백제연구	30	
高偉	2013	연운항시(連雲港市) 봉토석실(封土石室)의 조사(調査) 보고(報告)	백제연구	57	
羅冬陽	2004	4-6世紀百濟與大陸各國的往來	마한백제문화	16	
戴衛紅	2014	중,한 “대식간(貸食簡)” 연구	대동문화연구	88	
馬馳	1997	『구당서(舊唐書)』 「흑치상지전(黑齒常之傳)」의 보궐(補闕)과 고변(考辨)	백제연구총서	5	
馬馳 姜清波	2000	沙陀忠義의 族出與事迹考	春史卞麟錫教授 停年紀念論叢		大山印書社
馬馳	2000	〈難元慶墓誌〉 簡釋	春史卞麟錫教授 停年紀念論叢		大山印書社
拜根興	2000	소정방사적고의시논고(蘇定方事迹考疑試論稿)	중국사연구	9	
拜根興	2000	《함자도홀관시장군정사초당지명(含資道愼管柴將軍精舍草堂之銘)》 고석	복현사립	23	
拜根興	2002	유인원사적고술시논고-이여신라관계 위중심-	중국사연구	18	
拜根興	2008	백제(百濟), 당(唐), 왜(倭)의 국제관계(國際關係); 백제(百濟)와 당(唐) 관계에 관한 두 문제 -웅진 도독 왕문도의 사망과 예식진묘지명에 관하여-	백제연구	47	

저자	출간 연대	논문	논문출처	권호	비고
拜根興	2008	『대당평백제국비명(大唐平百濟國碑銘)』 문제에 대한 고찰	충북사학	20	
拜根興	2010	당(唐) 이타인(李他仁) 묘지(墓誌)에 대한 몇 가지 고찰	충북사학	24	
拜根興, 조우연	2012	唐代 백제유민 翻氏家族 墓誌에 관한 고찰	한국고대사 연구	66	
拜根興	2014	中國學界의 百濟移民 翻氏家族 墓誌銘 檢討	한국사연구	165	
拜根興	2014	중국 학계 백제사 연구현황 및 과제 - 중국 출토 백제인 묘지명을 중심으로	충청학과 충청문화	19	
拜根興	2016	고대 동아시아사상의 백제와 중국: 한국에서 새롭게 출토된 두 건의 백제 사료 연구 - 〈사리봉안기〉와 “行貞觀十九年(행정관십구년)” 가죽 漆甲의 명문을 중심으로 -	백제문화	54	
拜根興	2017	석각묘지명(石刻墓誌銘) 사료에 반영되어 있는 7세기 중엽의 당(唐)과 백제(百濟) - 신발견 당(唐) 군인[군장(軍將)] 묘지명을 중심으로	백제학보	19	
孫光圻	2013	백제(百濟)의 중국(中國) 사행(使行路)로; 한당시기(漢唐時期) 중국(中國)과 한반도(韓半島)의 해상항로(海上航路)	백제연구	57	
宋成有	2011	簡論百濟冠帶文化	중국인문과학	49	
孫紅	2004	고구려와 동북아시아의 여러 나라와 민족간의 관계	동북아역사 논총	1	
楊白衣	1984	미륵신앙 재중국적 유전	마한백제문화	7	
楊白衣	1985	중 한 미륵신앙적 비교(中韓彌勒信仰的比較)	마한백제문화	8	
王民信	1987	백제시조 「구태(仇台)」 고(考)	백제연구	17	
王志高	2005	百濟武寧王陵形制結構的考察	東亞考古論壇	1	
汪中	1982	백제문화 - 특히 변문에 대하여 -	백제연구	13	
張榮芳	1990	당대 사서(史書)의 백제에 대한 기록과 인식	백제연구	21	

저자	출간 연대	논문	논문출처	권호	비고
全瑩 · 欒國琴	2016	남조(南朝) 화상전(畫像磚) 향로(香爐)와 백제(百濟) 금동향로(金銅香爐) 비교(比較)	백제연구	64	
全瑩 · 楊璐	2016	中國의 百濟學 研究에 대한 略考	백제문화	54	
齊東方	2001	百濟武寧王陵與南朝梁墓	무령왕릉발굴 30주년국제학술대회자료집		
周一良	1993	백제와 중국 남조와의 관계에 대한 몇 가지 고찰	백제연구총서	3	
周裕興	2006	武寧王陵出土文物探析之一 以琉璃童子像爲例	東亞考古論壇	2	충청문화재연구원
周裕興	2006	武寧王陵出土文物探析之二 以三枚銅鏡爲例	百濟文化海外調查報告書 V		서경문화사
周裕興	2007	武寧王陵出土文物探析之二 以炭木獸形佩飾及棺木爲例	東亞考古論壇	3	
周裕興	2007	中國에서의 百濟學 研究의 回顧와 展望	백제연구	45	
周裕興	2008	해상교류로 본 중국과 백제의 관계	백제문화	38	
周裕興	2009	백제문화와 중국의 남조문화-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40	
周裕興	2012	東晉高崧家族墓與百濟武寧王陵의 比較研究	백제문화	46	
陳捷先	1985	약논백제문화적역사사의의(略論百濟文化的歷史意義)	마한백제문화	8	
韓國磐	1994	남북조수당지역백제적왕래(南北朝隋唐之與百濟的往來)	백제연구	24	
賀云翱	2010	중국남조도성(中國南朝都城)과 백제(百濟)	마한백제문화	19	
韓復智	1984	백제사연구의 회고(回顧)와 전망-중화민국을 중심으로-	백제연구	15	
韓昇	1994	四至六世紀百濟在東亞國際關係中的地位和作用	제7회백제연구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저자	출간 연대	논문	논문출처	권호	비고
韓昇	1996	남북조여백제정치 문화관계적연변	백제연구	26	
韓昇	2003	당조대백제적전쟁(唐朝對百濟的戰爭): 배경여성질(背景與性質)	백제문화	32	
韓昇	2006	宋齊之際東亞情勢與封號變化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학술대회		
黃寬重	1996	백제대중국문화적수용적초보관찰(百濟 對中國文化的受容的初步觀察)	백제연구	26	

중국 학계의 백제사 연구 동향

이동훈

백제사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국에서 발표된 중국 학자의 논저(論著) 300여 편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 중국의 백제사 연구는 전통적으로 위진남북조수당(魏晉南北朝隋唐)시기 조공책봉(朝貢冊封)을 매개로 한 중국에 존재했던 왕조들과 백제의 정치적 관계, 불교와 음악 등을 대표로 하는 문화교류 등이 주요 의제였다. 근래에는 백제 유민(百濟遺民) 묘지명(墓誌銘)의 분석과 백제 멸망 후 중국으로 이주한 백제 유민의 동향에 대한 연구도 급증하고 있다. 한편 고고학적으로는 백제 무령왕릉(武寧王陵)을 비롯한 유물 유적과 중국 남조(南朝)에서 발견된 유물 유적의 상관관계를 밝힌 논문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백제 지역에서 출토된 목간 등 백제 문자자료에 관한 논문들도 등장했다. 일본과의 관계를 다룬 논문도 적지 않은데, 단일 사건으로는 중국과 일본의 최초의 전쟁이라고 평가받는 백강(白江)전투에 관한 논문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백제사 관련 논문은 초기에는 대외관계사(對外關係史)가 중심이었지만, 최근에는 백제사 자체에 관한 연구로 구체화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백제 초기사와 지방행정제도를 연구하는 논문이 등장하는 것은 중국 학계의 연구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논문의 양이 급증했

음에도 질적으로는 아직 만족할 만한 수준에 도달한 논문이 극히 적은 것이 한계이다.

주제어: 백제사, 중국 학계, 연구 동향, 분석

ABSTRACT

Trends of Baekje History in Chinese Academia

Lee Donghoon

This paper analyzed 300 research papers from the field of Chinese studies which were related to Baekje history and published in both China and Korea.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hinese studies on the history of Baekje were primarily concerned with the political relations of Baekje and traditional Chinese dynasties, including Wei (魏), Jin (晉), the Nanbei Chao period (南北朝), Sui (隋), and Tang (唐), based upon the tributary-appointment relationship. Another major topic of research was cultural exchange in relation to Buddhism and music. Recently, papers on Baekje refugees (百濟遺民) increased, including analyses of their tomb epitaphs (墓誌銘) and the trends of their movement to China after the destruction of Baekje. Regarding archeological studies, many papers revealed the correlation between relics from the Tomb of King Muryeong (武寧王陵) and those from the Chinese NanChao period (南朝) period. In addition, there were recent

publications on Baekje philology, featuring wood strips discovered in Baekje area. Not a few papers studied Baekje-Japan relations, primarily regarding the Battle of Baekgang (白江), which is referred to as the first international battle between China and Japan. Another characteristic discovered from this analysis was the shift of the central topics from foreign [international] relations to domestic issues in Baekje history. The emergence of papers on early Baekje history and its provincial administration system testifies to the advancement of this topic in the field of Chinese studies. In general, there was rapid development in the quantity of articles, yet the number of quality research publications was still limited.

Keywords: Baekje history, Chinese studies, research trends, analysis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

– 교섭 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¹

엄태봉 |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한국 측의 방침과 문화재소위원회에서의 논의
- III. 특별위원회 개최를 둘러싼 논의와 일본 측의 방침
- IV. 예비회담에서의 논의
- V. 재개 제6차 한일회담에서의 논의
- VI. 맺음말



I. 머리말

본고는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중, 제6차 회담에서의 논의가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 고찰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제6차 회담의 교섭 과정과 한일 양국의 방침 등을 검토한다.

제6차 회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청구권 문제였다. 박정희 정권이 가장 중요시했던 청구권 문제가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큰 틀의 합의가 성립되었고, 이를 통해 한일회담 타결의 분위기가 고조되었기 때문이다.² 그렇다면 문화재 반환 문제를 비롯한 청구권 문제 이외의 의제들은 제6차 회담에서 어떻게 논의되었는가?³ 청구권 문제와 같이 큰 틀의 합의가 이루어졌는가? 한일 양국은 어떠한 방침을 가지고 교섭에 임했으며, 어떠한 교섭이 이루어졌는가?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연구는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된 이후 질

* 투고: 2018년 2월 9일, 심사 완료: 2018년 5월 9일, 게재 확정: 2018년 5월 25일

- 1 본고는 필자의 박사논문인 「日韓文化財問題の構造と限界-1951~1965年」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다. 아울러 심사과정에서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
- 2 청구권 문제는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로 합의되었다. 제6차 회담의 청구권 문제를 비롯한 청구권 교섭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들 수 있다.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오오타 오사무, 2008, 『한일교섭: 청구권문제 연구』, 선인; 吉澤文寿, 2005,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장박진, 2009,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 유의상, 2017, 『대일 외교의 명분과 실리 - 대일청구권 교섭과정의 복원』, 역사공간.
- 3 청구권 문제 이외의 의제 중, 제6차 회담에서 그 교섭 과정이 검토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을 들 수가 있다. 이성, 2013, 「한일회담에서의 재일조선인의 법적지위 교섭(1951-1965년)」,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논문; チョ・ユンス, 2007, 「韓日漁業交渉の国際政治-海洋秩序の脱植民地化と『国益』の調整」, 東北大学大学院法学研究科博士学位論文; 현대송, 2016, 「한일회담에서의 선박 문제」, 『한국정치학회보』 제50집 제1호.

적, 양적으로 축적되어 왔다.⁴ 이 중 제6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중점적으로 검토한 연구는 없으나, 전체적인 교섭 과정 속에서 제6차 회담을 검토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를 들 수가 있다.

첫째, 다카사키 소지⁵는 문화재 반환 교섭 과정을 전기(1952~1958)와 후기(1958~1965)로 구분하여 검토하였다. 한일회담 관련 외교문서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를 처음으로 검토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하지만 1차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교섭 과정도 간략하게 검토되어 있을 뿐이다.

둘째, 국성하⁶의 연구는 2005년에 공개된 한국의 외교문서를 바탕으로 수행된 첫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국성하는 문화재 반환 문제를 제1차 회담부터 제3차 회담, 제4차 회담부터 제6차 회담, 제7차 회담의 세 시기로 나누고 각 시기의 특징을 논하였다. 그러나 일본외교문서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6차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는 없으나 글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이 시기는 일본 측의 문화재 반환 문제의 원칙이 반복적으로 제시되고, 문화재 목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것 정도로 요약할 수 있다.

셋째, 박훈⁷은 문화재 반환 교섭 시기를 전문가회의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

4 이와 관련된 대표적인 연구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류미나, 2009,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역사연구』 제30집; 류미나, 2010, 「일본의 문화재 ‘반환’으로 본 식민지 지배의 ‘잔상’, 그리고 ‘청산’의 허상-1958년 일본의 제1차 문화재 반환까지의 교섭과정을 사례로-」, 『일본역사연구』 제32집; 長澤裕子, 2011, 「日韓會談と韓国文化財の返還問題再考-請求權問題からの分離と『文化財協定』」, 『歴史としての日韓外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法政大学出版社; 류미나, 2014, 「문화재 반환과 둘러싼 한일회담의 한계-일본의 한국 문화재 반환 절차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40집; 엄태봉, 2017,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공간』 제21권.

5 高崎宗司, 1986, 「日韓會談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渉につい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第23号.

6 국성하, 2005,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

7 박훈, 2010,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고, 문화재 품목의 논의를 중심으로 제6차 회담을 검토하면서, 전문가회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한일 양국의 입장이 명확하게 개선되는 등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논하였다. 그러나 문화재 목록 논의에만 집중하고, 한일 양국의 방침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며, 한국외교문서만을 사용하였다.

넷째, 조운수⁸는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 작성을 중심으로 제6차 회담을 검토하면서, 이 시기가 문화재 반환 문제가 가장 많이 논의된 기간이었다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의 논의에 집중하여, 한국 측의 방침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이러한 선행연구는 주로 문화재 목록을 둘러싼 교섭 과정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한일 양국의 방침 등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특히 한국 측이 제안한 특별위원회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 본문에서 검토하듯이 특별위원회는 제6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한국 측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했던 핵심적인 방침 중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6차 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둘러싼 한일 양국의 방침과 교섭 과정을 검토하고, 이 시기의 논의가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고찰하기로 한다.

8 조운수, 2016, 「한일회담과 문화재 반환 교섭-일본 정부의 반환 문화재 목록 작성 과정을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No. 51.

II. 한국 측의 방침과 문화재소위원회에서의 논의

1.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방침

장면 정권은 1961년 5월 16일에 발생한 군사 쿠데타로 인해 물러나게 되고, 그에 따라 제5차 회담도 막을 내리게 되었다.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사 정권은 한일회담의 재개와 국교정상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본 정부도 마에다 도시카즈[前田利一] 북동아시아과장의 한국 출장 보고 등을 통해 한일회담 재개에 대한 움직임을 보였다. 이러한 움직임 속에서 한일 양국은 10월 10일에 한일 회담을 재개하기로 하고, 제5차 회담과 동일한 의제들을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국 정부는 제6차 회담(1961.10.20~1964.4.5)이 시작되기 전, 각 의제와 회담 진행에 관한 방침들을 작성하였다. 이 방침은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⁹을 목표로 했던 한국 정부의 인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대표적인 것이 1961년 7월 12일에 작성된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인데, 제1안부터 제3안까지 각 의제들에 대한 자세한 방침이 세워져 있었다. 이 중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방침은 <표 1>과 같았다.

이 방침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반환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의 범위가 다르다는 것이다. 각 안의 첫 항은 그 내용이 같으나, 제1안에는 모든 문화재가, 제2안에는 제1안보다 적은 문화재가, 제3안에는 제2안보다 적은 문화재가 상정되어 있었다. 제1안과 제2안의 문화재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제1안은 조사된 모든 문화재가 해당되기 때문에 그 수는 상당할 것으로 추측되며, 제2안은 제1안보다는 적으나, 제3안보다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측된다.

9 정권의 기반이 취약함에도 박정희 정권이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추진했던 이유는, 정권 기반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권의 최대목표인 경제재건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본의 자금과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원덕, 1996, 앞의 글, 132쪽.

〈표 1〉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 중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방침¹⁰

안	방침 내용
제1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05년 이래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반출해 간 문화재는 한국에게 반환한다. 2. 양국은 즉시 전문가를 임명하여 반환되어야 할 문화재의 구체적인 목록을 작성하게 한다. 3. 전문가를 임명 후 3개월 이내에 반환문화재목록을 작성하며, 목록작성 후 1개월 이내에 반환을 완료한다. 4. 반환의 방식은 「반환」으로 한다.
제2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05년 이래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반출해 간 문화재 중 아래의 문화재는 한국에 반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 국유물 2) 일본 사유문화재 중 일본의 국보 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문화재 2. 제1안과 동일 3. 제1안과 동일 4. 반환의 방법은 「인도」로 한다. 5. 반환되지 않은 문화재는 「한국 문화재」로서 특별 진열하여 한일 양국의 전문가가 동등하게 활용한다.
제3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1905년 이래 일본이 한국으로부터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반출해 간 문화재 중 아래의 문화재는 한국에 반환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일본 국유문화재 중, 한국이 꼭 필요한 문화재 약 1,000점(양국 전문가가 결정) 2) 일본 사유문화재 중 일본의 국보 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된 문화재 80점 2, 3, 4, 5 제2안과 동일

반환 방법은 제1안의 반환, 제2안과 제3안의 인도로 상정되어 있었다. 즉, 한국 정부는 이 시점에서 반환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문화재 목록 작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임명하여 3개월 이내에 그것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전문가를 임명한다는 것이 전문가를 문화재소위원회, 혹은 전문가회의에 참가시킨다는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문화재 목록 작성부터 실질적으로 그 논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처럼 한국 정부는 제1안의

10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년. 전2권. (V.1 7-8월)』, 프레임 번호: 76~79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함. 이하에서는 한일회담 관련 한국외교문서에 대해 문서철 제목, 프레임 번호의 형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대량의 문화재부터 제3안의 약 1,080점의 문화재를 반환의 대상으로 하고, 반환 방법도 반환과 인도를 모두 염두에 두고 있었다.

다음으로 제6차 회담이 열리기 직전인 10월 17일에 작성된 ‘제6차 한일회담의 진행 방법’에도 각 의제들에 관한 진행 방법이 있었는데, 문화재 반환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의의 대상이 될 ‘문화재 반환의 7항목’(이하 7항목)과 회의 진행 방법 등이 기술되어 있었다.¹¹ 회의 진행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이 일본 측의 전문가를 참석시킬 것을 강조하고 있다.

본 위원회에 일본 문부성 관계관을 정식 대표로서 참석시킬 것을 일본 측에 요구하고, 만일 일본 측이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에서와 같은 전문가회의를 개최하도록 하되, 동 전문가회의를 위원회에서 공식회의로 확인하도록 한다. 단, 일본 측이 위의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도 응하지 않을 시에는 전 회담에서와 같은 성격의 전문가회의를 개최하여 이를 앞으로 계속해 나감으로서 기정사실화하도록 한다.

이 외에 일본에 있는 한국 관련 문화재를 계속해서 조사할 것과 문화재의 반환범위, 반환방법 등은 정치회담에서 토의하기로 하고, 일본 측 전문가들에게 한국 측의 반환요청이 정당하다는 것을 납득시키는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이 방침을 ‘한일회담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과 함께 본다면, 한국 정부는 전문가들 간의 논의에 권한을 부여하고, 반환의 대상이 되는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려고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11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보고, 1961-62.2』, 프레임 번호: 114~115. ‘7항목’은 제5차 회담의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1960. 11. 11)에서 한국 측이 제시한 것으로 ① 일본정부에서 중요문화재 또는 중요미술품으로 지정한 문화재, ② 조선총독부 또는 조선고적연구소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③ 총독 또는 통감에 의하여 반출된 문화재, ④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및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⑤ 고려시대 분묘 기타 유적에서 출토된 문화재, ⑥ 서화, 전적 및 지도원판, ⑦ 개인 소유 문화재가 그 내용이었다.

이상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한국 정부는 제1안, 즉 문화재소위원회에 전문가를 참가시키거나, 권한이 있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결정한 제1안의 문화재를 반환받는 것에서, 제1안과 비교하면 문화재의 수도 반환 방법도 다른, 즉 단순한 전문가회의를 통해 검토한 제3안의 문화재를 인도받는 것까지 다양한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 이와 같은 방침은 제6차 회담 개최 이후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교섭의 토대가 된다.

2.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에서의 논의

제6차 회담이 개최 이후,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가 열리게 된다.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1961.10.31)에서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를 정치·경제 문제와 관련시키지 말고 적극적으로 추진·해결해야 하며, 되도록 전문가들도 문화재소위원회에 참가시킬 것을 제안하였다.¹²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문부성과 논의한 후 다음 회의 때 답변을 하겠다고 말하였다.¹³

제2회 문화재소위원회(1961.11.7)에서 일본 측은 한국 측이 제안한 전문가회의의 개최를 문부성에게 연락하였고, 그들도 이를 수락했다고 전하였다. 한국 측은 일본 측의 전문가가 정식대표로서 문화재소위원회에 참가하는 것은 어렵겠는가라고 물었고, 일본 측은 “회담과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고 참가할 의사는 없고, 회담과는 별도로 지난번과 같이 전문 지식을 교환하는 것이라면 응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답하였다.¹⁴ 이에 대해 한국 측은 불만을 나타내면서 외무성을 통해 전문가들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국 측은 전문가들의 논의를 통해 돌려받을 문화재들을 공식적으로 확정해가고 싶었지만, 일본 측 전문가들의

12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소위원회, 1962-64』, 프레임 번호: 7.

13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會第1回會合」, 北東アジア課, 1961年10月31日, 文書番号: 267. 이하에서는 한일회담 관련 일본외교문서에 대해 문서제목, 작성자, 작성일자, 문서번호의 형식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14 한국외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11.

불참으로 인해 그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전문가회의의 공적 효력을 요구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7항목’ 중 제1항목, 제2항목, 제3항목에 대한 논의와 전문가회의의 공적 효력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전문가회의가 공적인 효력을 지니는가에 대해 물으면서 제5차 회담 당시의 전문가회의는 일본 측 전문가의 불참이 많아 회의 개최 자체가 곤란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문부성은 반환의 의무가 있으므로 문화재를 돌려달라고 말하는 것을 싫어하며, 사실 확인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참고하여 의견이 일치된다면 문화재소위원회에서 토의하도록 하자고 답하였다.¹⁵ 즉, 전문가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은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며, 이는 한국 측이 요구했던 전문가회의의 공적 효력에 동의하지 않은 것이었다.

제3회 문화재소위원회(1961.11.15)에서는 제4항목과 제5항목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회의가 진행되는 한편,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였다. 이홍직 수석위원은 제4차 한일회담에서 이 문제에 대한 일본 측의 소극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판한 것이나 반환을 강하게 주장한 한국 측의 태도는 일본 측에게 무리한 요구로 받아들여졌지만, 그것은 전문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한편, 앞으로는 전문가가 문화재소위원회에 참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논의하게 되었으므로, 앞으로 한국 측은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였다.¹⁶ 즉, 한국 측은 전문가의 문화재소위원회 참가를 강조함으로써 일본 측 전문가의 문화재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참가를 암암리에 요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제4회 문화재소위원회(1961.12.5)에서는 제6항목과 제7항목, 그리고 체신관계 문화재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한편, 한국 측이 요구했던 전문가회의도 여섯 차례에 걸쳐 열렸으며, ‘7항

15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18 및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2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1年11月17日, 文書番号: 267.

16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3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1年11月17日, 文書番号: 267.

목'에 관한 반출 경위와 현소재지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한국 측은 제 1회 전문가회의(1961.11.17)에서도 전문가회의의 성격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문화재 반환에 관한 논의는 하지 않고, 오직 문화재 반출 경위 등의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전문적인 내용만을 논의하는 것이며, 전문가의 발언에는 구속력이 없고,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전문가회의의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비로소 일본 측의 견해로 구속력을 갖게 된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전문적인 논의만을 하는 것에는 동의하는 한편, 전문가회의가 문화재소위원회와는 별개로 진행되지만, 전문가회의의 결과가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재확인된다는 의미에서 전문가회의는 사실상 문화재소위원회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¹⁷ 이후 제2회 전문가회의(1961.11.21)와 제3회 전문가회의(1961.11.28)에서는 몇 가지 문화재에 관한 사실 관계 논의가 이루어졌고, 제4회 전문가회의(1961.12.5)에서는 한국 측이 여러 문화재의 반출경위와 현소재지 파악에 관한 조사를 일본 측에 의뢰하였다.

일본 측은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에서 '7항목'에 관한 한국 측의 설명을 들은 후, 제5회 문화재소위원회(1961.12.18)에서 이에 관한 입장을 밝혔다. 일본 측은 한국 측의 '7항목'에 관한 설명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문화재를 출토국에게 반환한다는 국제법의 원칙이나 관례도 없기 때문에 문화재를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하면서, 문부성의 반대가 있지만 문화협력의 차원에서 문화재를 기증하겠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반론했지만, 일본 측은 위와 같은 태도를 견지하였다.¹⁸

제6회 전문가회의(1961.12.21)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그리고 전문가회의의 앞으로의 진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일본 측은 전문가회의의 진행에 대해 자신들이 한국 측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

17 한국의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93~94.

18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5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1年12月18日, 文書番号: 267.

할 수 있을 때쯤 전문가회의를 다시 여는 것이 어떤가라고 물었고, 한국 측은 이를 반대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내용적으로 깊이 들어갔다고 볼 수는 없는 일이니 앞으로는 좀 더 성의를 갖고 본질적인 논의를 진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답변하였다.¹⁹

한국 측은 일본 측 전문가의 문화재소위원회 참가, 전문가회의의 공적 효력 요구 등의 정부 방침을 바탕으로 회의에 임했으나 문화재소위원회에 일본 측 전문가가 참가하지 않았고, 전문가회의에 참가한 일본 측 전문가들의 태도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또한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에서 ‘7항목’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하였으나, 제5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일본 측에서 우리가 만족할 만한 회답이나 조사가 반드시 되었다고 볼 수 없는 유감도 품고” 있었다는 발언²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측은 충분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Ⅲ. 특별위원회 개최를 둘러싼 논의와 일본 측의 방침

1. 한국 측의 특별위원회 설치에 대한 방침

주일한국대표부는 1961년 10월부터 3개월간 이루어진 각 의제의 진행 상황을 바탕으로 1962년 1월 25일에 이에 관한 방침을 작성하여, 정부에게 검토를 요청하였고²¹ 정부는 며칠 뒤 이를 승인하였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방침은 먼저 수석위원들 간의 비공식회의를 개최하고, 제5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에 관

19 한국외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117.

20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52.

21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보고, 1961-62.2』, 프레임 번호: 190~192.

한 기본방침에 대해 답변할 것과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계획되어 있었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특별위원회의 설치이다. 그 이유는 한일회담의 조기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었던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확고한 해결 의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별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²²

2. 쌍방 간에 상반된 주장이 평행선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만 상호 성의와 체면을 지킴으로써 실질적인 토의에 있어서 타협선을 발견토록 노력할 것을 제의하겠음.
3. 이를 위해 2월 초부터 품목 선정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주 1회 내지 2회씩 회담할 것.
4. 이 특별위원회에는 종래 비공식 전문가회담에 출석한 전문가 2인 이외에 인원을 증가함과 더불어 책임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러한 회담에는 일본 측에서는 외무성의 대표도 옵저버로서 참석토록 할 것을 제의하겠음.
5. 이와 같은 제의가 일본 측에 용납되지 않을 경우에는 종래의 비공식 전문가회담을 계속하여 개최할 것을 요구할 것이며, 여기에서 더욱 사실 확인을 행하여 아측의 청구 방향으로 유도할 것임.
6. 아측은 7개 항목에 따라서 품목 선정안을 작성하여 일본 측에 제시하고, 측향 선정하여 3월 중순까지 이를 논의하고 4월 중순까지 품목 선정을 완료함으로써 협정 초안을 마련토록 할 위계임.

한국 측이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한 이유는, 권한이 부여된 전문가들이 참가하여 실질적인 토의, 즉 문화재 목록에 대한 토의를 통해 이를 작성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한국 측은 공적 효력이 있는 문화재소위원회에 전문가를 참가시킨다거나 전문가회의에 공적 효력을 부여할 것을 일본 측에게 요구하였다. 그러나 일본 측 전문가들은 문화재소위원회에 참가하지 않았고,

22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191~192.

전문가회의에도 공적 효력이 부여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측은 반환·기증 문제에 대해 “상반된 주장이 평행선을 지날 수밖에 없겠지만” 문화재소위원회와 전문가회의의 성격을 모두 갖는 특별위원회를 열고, 여기에서 문화재 목록에 대한 논의를 하고 이를 결정하려고 했던 것이다.

2. 일본 측의 해결 방침 제시와 특별위원회 설치의 합의

한국 측은 상기 방침을 바탕으로 1962년 2월 1일, 일본 측과 문화재소위원회 대표 간의 비공식회의를 가졌다. 이 회의에서 일본 측의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해결 방침이 제시되었고, 특별위원회 설치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²³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견해를 재차 설명하였다. 한국 측이 권리·의무의 관계에서 문화재 반환을 계속 요구한다면, 일본 측은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것, 국제선례가 없다는 것으로 문화재의 반환 의무가 없다고 반론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고 말하였다.²⁴

일본 측은 일한국교정상화 시, 양국의 학술·문화협력의 일환으로써, 권리·의무의 관계에서 벗어나, 국유의 한국 문화재 중 적당한 것을 한국 측에게 넘기기로 하며, 또한 민간에게도 권하여 이것이 한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기로 한다. 이것이 가장 타당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 측이 이 기본적인 해결 방침을 양해해 준다면, 이것을 문부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에게 전달하고, 금후 본 문제에 대해 그들의 협력을 얻는 것이 용이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23 「日韓會談文化財小委員會主査非公式會談記錄」, 北東アジア課, 1962年2月1日, 文書番号: 576.

24 위와 같음.

즉, 일본 측은 권리·의무의 문제로는 문화재 반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문화협력을 통해 문화재를 한국 측에게 넘기기로 하고, 문화재 반환 문제를 탐탁하지 않게 여기고 있는 문부성을 설득해간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일본 측이 개인 소유의 문화재에 관해서도 “한국 땅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다. 제4차 한일회담에서 열린 유태하 주일공사와 야마다 히사나리[山田久就] 외무사무차관 간의 비공식회의(1958.12.19)에서, 야마다 외무사무차관은 개인이 소유한 문화재의 소재를 모두 파악할 수 없다는 것, 대장성이 그 문화재를 사들이기 위한 예산을 책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개인 소유 문화재의 반환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였다.²⁵ 또한 제5차 한일회담에서 열린 유태하 주일공사와 사와다 렌조[沢田廉三] 수석대표 간의 비공식회의(1960.11.14)에서, 일본 측은 한국 측에게 문화재 반환 문제의 3원칙을 제시하면서 “사유문화재는 인도할 수 없다”고 언급하였다.²⁶ 이처럼 이전 한일회담과 비교해볼 때 일본 측의 개인 소유 문화재에 관한 원칙은 제6차 한일회담 시기 때 유연화되었다.

한국 측은 이에 대해 문화재 반환 문제가 다른 의제들에 비해 그 진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후 일본 측의 태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다면, 일본 측의 문화재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는 어떠한 약속도 하지 않고 지연시켜 놓으면 된다는 것이며, 그 때문에 소위원회에서도 전문가들을 출석시키지 않고 전문가회합도 소위원회와 분리해서 한다는 이례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은가라고 의심하고 싶은 상황이었다”고 비판하고, 먼저 한국 측이 받아야 할 것을 받은 후에 그다음으로 장래의 문화, 학술상의 협력을 해야 하며, 일본 측에게 문화재 목록을 받고 전문가회의에서 그것을 더욱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

25 『제4차 한일회담(1958.4.15-60.4.19)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교섭, 1958』, 프레임 번호: 102~104.

26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의 보고, 1960.11-61.5』, 프레임 번호: 13~14.

하였다.²⁷

한편 한국 측은 일본 측이 설명한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 방침에 대해, 과거에 이미 반환·기증에 관한 문제는 논의가 된 것이며 “return, donation 또는 turn over라는 말이 나왔던 것으로서 실상 이러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줄로 믿는다’”고 답하고, 다른 위원회와 보조를 맞추기 위해 앞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도 타결을 위한 구체적인 전망을 세우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²⁸ 이와 같은 한국 측의 발언에 대해 일본외교문서에는 “문화재 문제 해결방법에 관한 기본적 양해에 이의는 없으며, 그 양해가 성립되었다고 생각해도 문제없지만, 현 단계에서 한국 측이 이를 양해했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는 없고, 어디까지나 암묵적인 양해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해석이 적혀 있다.²⁹ “반환·기증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에 대해 일본 측은 “기본적인 양해에 이의는 없으며”, “어디까지나 암묵적인 양해”로 해석하였다. 아무튼 한국 측은 반환·기증의 문제에 대해 이 시점에서 반환을 고집하지 않는다는, 즉 인도도 괜찮다는 입장을 비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한국 측이 일본 측의 해결방침을 양해한다면 한국 측의 주장과 같이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해결전망을 세워보겠다고 말하였다.³⁰ 한국 측은 반환·기증의 문제에 대해 “당분간 이것을 보류하고, 어쨌든 한국 측에서 받고 싶은 목록을 준비하고 있으므로 그것을 제시”하여, 전문가들의 “검토를 시작하고 그러한 검토의 기한을 정하는 것이 어떤가”라고 제안하였다.³¹ 일본 측도 이에 동의하고, 다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그것을 논의하겠다고 답하였다.³²

27 일본외교문서, 앞의 문서, 文書番号: 576.

28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소위원회, 1962-64』, 프레임 번호: 54.

29 일본외교문서, 앞의 문서, 文書番号: 576.

30 한국외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54.

31 일본외교문서, 앞의 문서, 文書番号: 576.

32 한국외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54.

한편 한일 양국은 특별위원회의 설치에 대해 합의하였다. 특별위원회란 주일한국대표부가 한국 정부에게 보낸 방침에서 그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문화재 반환 문제에서 공식적인 회의이자 권한이 있는 문화재소위원회와 권한이 없는 전문가회의를 합친 회의라고 말할 수가 있다. 즉, 문화재소위원회의 권한을 가지고 전문가들 간에 논의된 내용을 공식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특별위원회인 것이다. 일본 측은 전문가들에게 정식대표, 혹은 위원으로 특별위원회에 참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한국 측은 문화재 목록의 작성 완료 기간을 3월 말 내지 4월 말로 할 것을 제안하였고 일본 측도 이에 동의하였다.³³

주일한국대표부는 비공식회의가 끝난 후, “이세키[伊関佑二郎]씨는 펍 협조적이었으며, 문부성 측은 자기가 설득을 하겠다”고 정부에게 보고하였다.³⁴ 이것은 외무성이 문부성을 설득하여 특별위원회에 참가시키려고 한다는 의미로, 주일한국대표부는 이 시점에서 특별위원회의 개최가 낙관적이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3. 일본 외무성의 해결 방침 검토

외무성은 비공식회의 이후, ‘문화재 문제 해결방침에 관한 건(토의용 자료)’³⁵을 작성하였다. 이 문서에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한일 양국의 기본적인 입장, 문부성에 대한 견해, 문화재를 넘길 때의 법률해석문제, 문화재 품목,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해결방식이 검토되어 있으며, 당시 이 문제에 대한 외무성의 견해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먼저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해결방식은 다음과 같다.

33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55.

34 위와 같음.

35 「文化財問題の解決方針に関する件(討議用資料)」, 北東アジア課, 1962年 2月14日, 文書番号: 576.

〈표 2〉 일본 외무성의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3개 안³⁶

방식	내용
제1안 단독의 의정서 또는 교환공문	일본국정부는, 일한국교정상화를 경축하는 일본국민의 기분을 표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많은 문화재가 조선동란의 결과 없어져버린 사실, 또한 한국출토 문화재의 상당수가 현재 일본 국내에 보관되어 있어, 그것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국정부 및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별첨 목록에 기재된 한국출토 문화재를 가급적 빨리 한국정부에게 인도한다.
제2안 문화협정을 체결하고 그 일환으로 인도	일본국정부는, 한편으로는 조인된 일한문화협정의 정신에 비추어, 또 한편으로는 한국에 있었던 많은 문화재가 조선동란의 결과 없어져버린 사실, 또한 한국출토 문화재의 상당수가 현재 일본 국내에 보관되어 있어, 그것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국정부 및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별첨 목록에 기재된 한국출토 문화재를 가급적 빨리 한국정부에게 인도한다.
제3안 일한문화협력에 관한 의정서	<p>〈제1조〉 일한 양국정부는, 양국 간의 역사적, 문화적으로 극히 깊은 관계를 상기하고, 장래에 이 관계를 한층 긴밀하게 하기 위해, 국교정상화 후, 되도록 빨리 문화협정을 체결하기로 한다.</p> <p>〈제2조〉 일본국정부는, 장래 체결되어야 할 일한문화협정의 토대를 쌓는 것 및 한국에서의 학술, 문화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그리고 많은 문화재가 조선동란의 결과 없어져버린 사실, 또한 한국출토 문화재의 상당수가 현재 일본 국내에 보관되어 있어, 그것들이 한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한국정부 및 국민이 열망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별첨 목록에 기재된 한국출토 문화재를 가급적 빨리 한국정부에게 인도한다.</p> <p>〈제3조〉 일한 양국정부는, 금후 일본국에서 한국으로 인도될 한국출토 문화재를 포함하여, 한일 양국의 국내에 보관되어 있는 문화재에 관해 학술, 문화 연구의 목적을 위해 상대국 정부 및 국민에 대해 가능한 한 편의를 상호 제공하기로 한다.</p>

36 〈표 2〉의 세 가지 방안이 적혀 있는 문서는 상기 「文化財問題の解決方針に関する件 (討議用資料)」의 다음에 나오는 문서이다. 하지만 이 문서는 첫 페이지가 불개시되어 있기 때문에 문서의 제목과 작성일 등을 파악할 수가 없다. 편의상 문서 제목을 「文化財問題の解決方針に関する件 (補足資料)」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표 2〉는 동 문서를 바탕으로 필자가 작성하였다.

제1안은 일본 국민의 기분을 표명하고, 한국전쟁으로 인해 한국의 문화재가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여 문화재를 인도하기 때문에, 일본 측이 일방적으로 부담을 갖는 것처럼 되어 있다. 따라서 한국 측이 제1안을 비교적 받아들이기 쉽겠지만, 일본 국내에서는 한국 측 요구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안이었다. 제2안은 제1안과 비교해볼 때 첫 부분만 다르고, 그 이외는 제1안과 같은 내용이다. 제2안은 문화협정이라는 표현을 삽입하는 것으로 한국 측 요구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한국 측이 강하게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안이었다. 한국 측은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를 제기해왔기 때문에, 그러한 성격을 퇴색시키는 문화협정을 수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다. 제3안은 제1안과 제2안을 제2조로 하고, 제1조와 제3조를 통해 문화협정의 측면을 부각시킨 안이었다. 특히 제3조를 통해 문화협정이 일본 측의 일방적인 부담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문화협정 체결 시 예상되는 국내의 비난을 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아무튼 3개의 안에는 과거 청산을 위해 문화재 반환 문제를 제기한 한국 측의 견해는 반영되지 않았으며, 문화협정을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하여, 국내의 비난을 피하려고 하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한편 외무성은 한국 측이 반환 방법에 대해 크게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정하고, 그 경우 한국 측에게 건낼 수 있는 문화재의 품목을 정리하였다. 그 품목으로 ① 도교박물관 소장 경상남도 양산군 양산면 북정리 출토품 489점, ② 도교박물관 소장 고려자기 약간 및 국유의 지정문화재, ④ 체신 관계 문화재, ⑤ 마이크로필름으로 수록한 주요한 고서적이었다.³⁷ 외무성은 문화재 품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문화재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문부성과 그 외의 관계기관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일단 외무성의 판단으로 건낼 수 있을 만한 문화재들을 정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37 위와 같음. 문화재 품목 3번은 먹칠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이처럼 외무성은 제6차 한일회담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작성하였다. 그 형식은 의정서, 교환공문, 문화협정 등이었으나 그 내용에는 문화협력으로써 기증한다는 일본 측의 입장이 반영되어 있었던 반면에 과거 청산이라는 한국 측의 입장은 반영되지 않았다.

4. 특별위원회 개최를 둘러싼 대립

제6회 문화재소위원회(1962.2.16)에서는 특별위원회 개최와 관련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한국 측은 종래의 전문가회의로는 더 이상의 진전이 없으므로, 일본 측이 권한이 있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문화재보호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원만하게 일이 진행될 것 같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설명한 뒤에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은 정식적인 것이 아닌, 참고로 받아들일 경우 이를 검토해볼 것, 그리고 특별위원회 참가에 대해서는 문화재보호위원회를 설득하고 있지만, 그들의 주장도 있기 때문에, 먼저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을 검토한 후에 결정을 하겠다는 문화재보호위원회의 견해를 전하였다. 그러나 한국 측은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기 전에 먼저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으며, 그 후에 목록을 건네고, 그것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³⁸

특별위원회를 둘러싼 대립은 해소되지 않았으나, 회의 막바지에 이르러 한국 측은 “우리 측에서 먼저 목록을 수교하면 다음 회의부터는 귀측의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할 수 있는가. 목록은 언제든지 낼 수 있으니, 일본 측 전문가가 회의에 나왔으면 한다”라며 일본 측 의견을 받아들여려고 하였다. 일본 측은 될 수 있는 한 전문가가 출석하도록 노력은 하겠으나 그것이 언제부터 가능할지 보

38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6回會合」, 北東アジア課, 1962年2月16日, 文書番号: 267.

장할 수는 없다고 답하였다.³⁹ 결국 특별위원회 및 다음 문화재소위원회 개최에 관한 합의 없이 제6회 문화재소위원회는 종료되었다.

한편 이홍직 수석위원은 특별위원회 개최를 비롯한 문화재 반환 교섭을 위해 2월 22일과 2월 23일에 이세키 유지로 아시아국장을 찾아가 문화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 그리고 한국 측이 문화재 목록을 제출할 용의가 있다는 것을 전하였고, 이세키 아시아국장도 이에 동의하였다.⁴⁰ 문화재 목록을 먼저 제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었던 한국 측은 기존의 방침을 변경해서라도 특별위원회를 개최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일본 측의 연락이 좀처럼 오지 않았다. 이홍직 수석위원은 2월 26일, 모리타 요시오[森田芳夫] 북동아시아과 사무관을 찾아가 문부성이 문화재의 반환을 계속 반대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전문가회의에서 보인 소극적인 태도, 특별위원회 개최에 대한 애매한 태도 등 문부성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정치회담이 3월 10일에 열릴 예정인데, 문화재 반환 문제도 어느 정도 진행해둘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주 중으로 문화재소위원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하는 한편, 문화재소위원회가 개최되면 한국 측이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고 자신이 그것을 설명하겠다고 언급하였다.⁴¹

이후 한국 측의 요청대로 2월 28일, 제7회 문화재소위원회가 개최되었다. 먼저, 일본 측은 제6회 문화재소위원회에서 언급된 한국 측의 견해를 문부성에게 전달했지만, 그들이 확실한 대답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하였다. 한국 측은 모리타 사무관에게 전한 것처럼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목록’을 제시하고, 각 항목들을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동 목록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일본 측은 이 목록을 참고자료로써 받고, 문부성에게 이에 대한 검토를 부탁할 것이며, 다음 회의부

39 한국외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71.

40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 보고, 1961-62,2』, 프레임 번호: 429.

41 題目なし, 外務省, 1962年2月26日, 文書番号: 269.

터 되도록 문부성의 전문가가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하였다.⁴²

한편 3월 2일, 한국 측은 특별위원회 개최 등 문화재 반환 문제의 원활한 교섭을 위해 일본 측을 만찬회에 초대하였다. 그러나 문부성은 한국 측의 문화재 목록을 검토한 후 만찬회에 참가할 생각이 없다면서 그 초대를 거절하였다. 주일한국대표부는 문부성이 만찬회 초대를 거절한 것을 들어 특별위원회 개최가 어렵다고 정부에게 보고하였다.⁴³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국 측은 일본 측 의견을 재차 묻기 위해 이세키 아시아국장과의 비공식회의를 꾀하였다. 일본 측이 특별위원회에 전문가를 지명했다는 통지는 있었으나 정식으로 소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 측은 먼저 이세키 아시아국장의 알선을 통해 일본 측 전문가와 직접 만나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세키 아시아국장은 “다른 위원회에서는 전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현 단계에서, 비록 비공식적이라고 하더라도 문화재 문제만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비공식회의를 거절하였다.⁴⁴ 그 후 이홍직 수석위원은 일본 측 전문가와 직접 만나라는 정부의 지시를 받고 그들과 만나, 한국 측 문화재 목록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기로 하였다.⁴⁵ 이홍직 수석위원은 4월 3일에 전문가회의의 참가로 안면이 있는 문화재보호위원회의의 마쓰시타 다카야키[松下隆章] 미술공예과장과 사이토 다다시[齊藤忠] 문화재조사관을 만났으나 그 성과는 없었다.⁴⁶ 결과적으로 특별위원회 개최는 실현되지 않았으나 특별위

42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7回會合」, 北東アジア課, 1962年2月16日, 文書番号: 267.

43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소위원회, 1962-64』, 프레임 번호: 75.

44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76.

45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56.

46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76. 이 내용은 일본외교문서에서는 확인되지 않으나, 한국외교문서에는 이홍직 수석위원이 4월 3일에 마쓰시타 미술공예과장과 사이토 문화재조사관과 “만찬을 하기로 했다”는 기록이 있다. 한일 양국 외교문서에서 세 사람이 어떠한 논의를 했는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특별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고 추측된다.

원회는 제6차 회담 당시, 인도 제안과 함께 문화재 반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고 했던 한국 측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중요한 사항이었다.

IV. 예비회담에서의 논의⁴⁷

1. 제2차 정치회담에서의 논의: 한국 측의 인도 제안

한국 정부는 기대하고 있던 제1차 정치회담⁴⁸이 실패하자,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을 제2차 정치회담에 참가시키기로 하였다. 이 회담에서 청구권 문제가 큰 틀에서 합의되었고, 이는 이후 한일회담의 진행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요인이 되었다.⁴⁹

한국 정부는 제2차 정치회담을 앞두고 각 의제에 관한 입장과 방침을 정리하였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해서는 “이것도 청구권 문제 중 현물반환요구에 속하는 것으로 1957년 12월 31일에 일본 측도 원칙적으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이 보인다”라는 입장이었다.⁵⁰ 이상에서 보듯이, 한국 정부는 제4차

47 예비회담은 제2차 정치회담의 전단계로 개최되어, 1962년 8월 21일에 제1회 본회의가 시작된 이래, 1964년 2월 6일까지 65번의 본회의가 이뤄졌다. 한일 양국은 각 의제들의 합의·불합의 사항을 정리·확인한 후 예비회담에서 그 작업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비공식적으로 정치적인 절충을 하여, 불합의 사항을 최소화하는 것이 예비회담의 목적이었다.

48 한국 측은 제6차 한일회담에서 실무자 회의를 통한 논의가 지지부진해지자 고위 당국자 간의 정치회담을 열어 각 의제들을 해결하려고 하였다. 그 일환으로 1962년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최덕신 외무장관과 고사가 젠타로[小坂善太郎] 외상 간의 제1차 정치회담이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원덕, 1996, 앞의 책, 152~159쪽 및 장박진, 2009, 앞의 책, 419~426쪽을 참조.

49 제2차 정치회담, 즉, 김종필-오히라 회담에서의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합의는 이원덕, 1996, 앞의 책, 169~178쪽; 장박진, 2009, 앞의 책, 439~449쪽; 吉澤文寿, 2005, 앞의 책, 172~177쪽을 참조.

50 『김종필 특사의 일본방문, 1962.10-11』, 프레임 번호: 15.

회담 때 이루어진 106점의 문화재 인도의 근거였던 Oral Statement, 즉 구두 전달사항을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해결방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⁵¹ 그것은 1961년 7월 12일에 작성된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해결방침 제2안과 제3안에도 “반환의 방법은 인도로 한다”라는 내용과 같은 것이다. 구두전달사항을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을 피하려 했던 한국 정부는 “문화재는 1957년 12월 31일의 Oral Statement를 해결하도록 한다”는 훈령을 지시하였다.⁵²

제2차 정치회담은 두 차례 개최되었는데, 문화재 반환 문제는 두 번째(11, 12) 회담에서 논의되었다. 오히라 마사요시[大平正芳] 외무대신은 일본이 문화재를 반환할 의무는 없으나, 권리·의무를 떠나 문화교류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국유문화재를 증여할 용의가 있다는 견해를 설명하였다.⁵³ 이에 대해 김종필 중앙정보부장은 1957년 12월 31일의 Oral Statement의 선례에 따라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제안하였다.⁵⁴

한국 측이 Oral Statement에 따른 해결, 즉 인도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것은 제6차 회담 시기 중 제2차 정치회담에서가 처음이었다. 이는 앞선 2월 1일의 비공식회의보다 무게감이 더 나가는 것이며, 한국 측의 이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더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 본회의에서의 논의: 일본 측의 의정서 요강안 제시와 한국 측의 인도 제안

예비회담 제20회 본회의(1962.12.21)에서 한국 측은 ‘한일회담의 중요 제 문제

51 구두전달사항은 한일회담 중단기 시기에 논의·합의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제4차 한일회담(1958. 4. 15)이 개최된 다음 날에 106점의 문화재가 한국 측으로 인도되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엄태봉, 2017, 앞의 글 참조.

52 한국외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20.

53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165.

54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178.

에 관한 한국 측의 기본적 생각'이라는 문서를 일본 측에게 제시하였다. 이세키 전 아시아국장이 12월 10일 방한했을 당시 한국 측에게 '일한회담 중요 제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기본적 생각'을 제시했는데, 이는 제2차 정치회담을 통해 청구권 문제 해결의 전망이 선 시점에서 일본 측이 양보할 수 있는 부분은 양보하면서, 각 의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한국 측이 제시한 문서는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해결방법은 “이전부터 밝힌 대로 문화재를 반환하는 국제법상의 의무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한국 측의 기본도 이해할 수 있으므로, 권리·의무라는 관계를 벗어나, 양국 간의 문화확술상의 협력 촉진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국유문화재를 증여하는 것으로 본 문제의 해결을 피하고 싶다”는 것이었다.⁵⁵ 이것은 제6차 회담에서 일본 측이 반복해서 설명한 견해와 같은 것이었다.

한국 측이 제시한 문서는, 어느 때보다도 한일회담 타결의 분위기가 높아졌기 때문에 한국 측이 양보할 수 있는 점은 최대한으로 양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일회담을 최종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여기에서 각 의제에 관한 한국 측의 견해가 제시되어 있었는데,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해서는 “명목에 있어서는 ‘반환’과 ‘기증’으로 재차 대립하고 있고, 이 문제는 1957년 12월 31일자의 ‘오랄 스테이트먼트’의 표현, 즉 ‘Turn over’의 명목으로 국가와 공공기관 및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중요한 문화재를 반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다.⁵⁶ 한국 측은 제2차 정치회담에 이어 문화재를 인도로써 돌려받는 것을 재차 제안하였던 것이었다.

일본 측은 예비회담 제2회 본회의(1962.12.26)에서 한국 측의 상기 문서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는데, 일본 측이 청구권 문제에 관한 한국 측의 견해를 거

55 「日韓會談重要資料(3)」, 北東アジア課, 1963年10月1日, 文書番号: 527.

56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 (V.2 4-21차 1962.9.3-12.26)』, 프레임 번호: 408.

의 받아들였기 때문에 한국 측도 어업 문제에 관해서 일본 측에게 양보할 것, 각 의제를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다.⁵⁷ 이후 일본 측은 사전에 준비해 온 ‘1963년 12월 25일의 일한 예비교섭 제21회 회합에서의 일본 측의 발언 요지’를 바탕으로 문화재 반환 문제를 비롯한 각 의제들을 설명하였다.

일본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기본적인 입장을 재차 설명한 뒤에 그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형식으로 ‘일본정부와 대한민국정부 간의 문화상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을 한국 측에게 제시하고,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⁵⁸

일본국정부와 대한민국정부 간의 문화상 협력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

(전문)

일본국정부 및 대한민국정부는, 일한 간의 문화에 관한 전통적인 깊은 관계에 비추어, 상호 간의 문화교류 및 우호관계를 금후 한층 발전시키는 것을 희망하며, 다음과 같이 협정하였다.

(제1)

일본국정부 및 대한민국정부는, 양 국민 간의 문화교류를 긴밀히 하기 위해 협정을 체결할 목적을 가지고 교섭을 속히 개시할 것에 동의한다.

(제2)

일본국정부는 대한민국정부에게 있어 학술, 문화 발전 및 연구에 기여하기 위해 대한민국정부가 그 역사적 문화재에 대해 갖는 깊은 관심을 고려하여, 이 의정

57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428.

58 「日韓予備交渉第21回会議記録」, 北東アジア課, 1962年12月26日, 文書番号: 651.

서의 효력 발생 후, 가능한 한 빨리 부속서에 제시된 일본국정부 소유의 문화재를 대한민국정부에게 기증하기로 한다.

(제3)

일본국정부 및 대한민국정부는, 자국의 미술관, 박물관, 도서관 그 외 자료편집 시설이 보유한 문화재를 상대국 국민에게 연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되도록 편의를 제공하기로 한다.

이 안은 1962년 2월 14일의 사전회의에서 논의된 제3안과 비슷한 것이었다. 구성을 살펴보면 전문으로 시작하는 이 안은 제1조, 제2조, 제3조로 구성되어 있는 제3안과 조금 다르지만, 그 취지는 문화협력에 관한 것으로, 전체적인 내용은 제3안과 대체로 동일하다. 표현에서는 큰 차이가 있는데, 제3안이 인도로 되어 있는 반면에 이 안은 기증으로 되어 있다. 한편 일본 측은 이 요강안 이외에 구체적인 품목에 관해서는 한국 측의 희망하는 문화재도 참고하여 결정하고 싶다고 언급하고, 그를 위해 관계자들 간의 회의를 속히 재개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하였다.⁵⁹

한국 측은 예비교섭 제23회 본회의(1963.1.23)에서 ‘한일 예비교섭 제23회 회의에서의 한국 측 발언요지’를 일본 측에게 제출하였다. 이 문서는 예비교섭 제21회 본회의의 일본 측 문서에 대한 한국 측의 답변이었다. 이 중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⁶⁰

1. 국교정상화 이후에 양국 간의 문화 협력을 촉진하고자 하는 정신에는 원칙적으로 찬성이나, 이 문제는 한일 간의 현안 문제의 하나로서의 문화재 문제를 해결

59 일본외교문서, 앞의 문서, 文書番号: 651.

60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V.3 22-32차, 1963.1.11-3.28)』, 프레임 번호: 30.

하는 데 있어서 연결시킬 성질의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2. 문화재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는 지난번의 한국 측 문서에 제의한 바와 같이 “turn over”란 표현으로 국가, 공공기관 및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중요 문화재를 반환하는 것이 양측의 입장을 동시에 살리는 해결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3. 품목의 결정을 위하여 양측 관계자 회담을 속히 재개하는 데에 대하여는 동의한다.

한국 측은 한일회담 의제의 하나로써 문화재 반환 문제를 일본 측에게 제기하고 불법·부당한 수단을 통해 일본으로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을 일본 측에게 계속해서 요구해왔는데, 그것이 한국 측이 생각하고 있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성질이었다. 한국 측은 문화재 반환 문제의 의미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반환이라는 표현에 대해 비공식회의(1962.2.1)에서는 이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을 언급하고 제2차 정치회담과 예비회담 제20회 본회의(1962.12.21)에서는 공식적으로 인도를 제안하였지만, 한국 측은 인도라는 명목으로 문화재를 돌려받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제시한 “문화협력의 일환으로 문화재를 기증한다”라는 취지의 의정서는 당연히 받아들일 수 없었다. 즉, 한국 측은 반환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과거 청산의 일환으로 인도라는 명목으로 문화재를 반환 받는다는 문화재 반환 문제의 성질을 사라지게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다.

예비교섭 제25회 본회의(1963.2.1)에서 한국 측은 예비교섭을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회담으로 변경할 것, 본회담이 열리기 전까지 각 의제에 관한 위원회를 개최하여 예비교섭을 계속할 것을 제안하였다.⁶¹ 일본 측은 이에 대해 재일 한국인의 법적지위문제와 어업문제는 곧바로 재개해도 괜찮지만, 문화재 반환 문제, 선박 문제, 청구권 문제는 먼저 예비교섭에서 원칙을 결정한 뒤에 각각의

61 한국외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96.

관계회의를 여는 것이 적당하다고 반론하였다.⁶²

한편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일본 측이 “문화협력의 일환으로 할지 반환으로 할지, 국유에 한정할지 사유도 포함할지라는 원칙문제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으며, 이 점을 해결하지 않고 전문가회합을 열어도 논의가 곧 막힐 것이다”⁶³고 말한 반면, 한국 측은 “중전에 한국 측이 목록을 제시한 적이 있으므로, 그 목록 중 일측이 내놓을 수 있는 문화재의 목록을 만들어 제시해주면 좋겠다. 이리하여, 양측 전문가가 쌍방의 목록을 토대로 토의를 해나가는 중에 합의점을 발견하게 될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였다.⁶⁴

일본 측은 반환·기증의 문제를 여전히 의식하고 있었다. 한국 측이 제시한 “인도라는 명목으로 반환한다”에 아직 동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국 측은 제1차 한일회담부터 제3차 한일회담까지는 반환을, 회담 중단기에는 인도를, 제4차 한일회담에서 제6차 한일회담의 제2차 정치회담 전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반환을 주장하였지만, 제2차 정치회담부터는 일본 측에게 인도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제안하고, 반환이라는 표현을 고집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예비교섭 제21회 본회의에서 일본 측이 제시한 의정서에는 기증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일본 측은 인도라는 표현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일본 측에는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반환·기증 문제를 제기하였던 것이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한국 측은 반환·기증 문제보다는 문화재 반환 문제 관련 회의를 열어 문화재 목록을 결정하려고 하였다. 결국 예비교섭 제25회 본회의에서 재일한국인의 법적지위 문제, 어업 문제, 청구권 문제 관계회의의 개최는 합의되었으나, 문화재 반환 문제와 선박 문제 관계회의의 개최는 합의되지 않았다.

62 「日韓予備交渉第25回会合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年2月1日, 文書番号: 651.

63 위와 같음.

64 한국외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99~100.

주일한국대표부는 본회의가 끝난 후 정부에 회의 내용을 보고하였고, 정부는 다음 회의에 관한 훈령을 보냈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서는 “문화재 관계회합의 회의 일정을 정하여 조속히 토의를 개시할 것을 일측에 요구할 것이며, 토의를 국유분에만 한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시기 바란다. 단, 귀하의 판단으로 토의 순서를 국유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국유분부터 토의토록 하되, 이 결정을 문화재관계회합에서 내리도록 하시기 바란다”라는 지시가 내려졌다.⁶⁵

주일한국대표부는 이와 같은 훈령을 바탕으로 예비교섭 제26회 본회의(1963.2.7)에서 문화재 반환 문제를 비롯한 청구권 문제, 선박 문제 관계회의를 신속하게 개최할 것을 일본 측에게 제안하였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해서는 국유 문화재만을 할지, 사유 문화재도 대상으로 할지에 관한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나, 먼저 관계회의를 개최하여 국유 문화재부터 토의를 시작하고 그다음에 사유 문화재를 토의하는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였다. 일본 측은 “문부성을 설득시켜 내주부터 문부성 관계자도 참석한 전문가회의를 열고, 우선 국유물부터 시작하여 구체적인 토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고 답하였다.⁶⁶

3. 문화재관계회의에서의 논의

1) 문화재관계회의의 성격

일본 측의 주장대로 한일 양국은 예비교섭을 계속하는 한편 각 의제에 관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문화재 반환 문제는 ‘문화재관계회의’에서 논의되었다.

일본 측에서는 문화재보호위원회 5명, 도쿄국립박물관 1명 등 총 6명의 전문가가 제1회 문화재관계회의(1963.2.13)에 참가하였다. 이것은 외무성의 4명

65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112.

66 한국외교문서, 위의 문서, 프레임 번호: 124.

보다 많은 인원으로 종래의 문화재소위원회에 일본 전문가들이 불참한 것이나 전문가회의에 2명의 전문가가 참가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전문가가 회의에 참가한 것이다.

일본 측은 권리·의무가 아닌 문화협력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국유문화재를 기증하겠다는 종래의 견해를 재차 설명하고, 한국 측이 이 문제에 대해 탄력적인 자세를 보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하였다.⁶⁷ 한국 측은 이에 대해 정당한 권리를 바탕으로 문화재를 요구하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말하는 한편, “전에는 문화재소위원회에는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았고 전문가회의를 따로 병행해서 했는데 앞으로도 오늘 회의와 같이 귀측의 전문가들이 계속 참석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문화재소위원회나 특별위원회 참가에 반대하였던 일본 측의 전문가가 문화재관계회의에 다수 참가한 것은 한국 측에게는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한국 측은 문화재관계회의가 그동안 요구해왔던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공식회의가 되는 것을 기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 측은 일본 측 전문가의 지속적인 참가를 물었던 것이다.⁶⁸

이후 문화재관계회의의 성격을 둘러싼 논의가 이루어졌는데, 외무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 도교국립박물관의 전문가가 문화재관계회의에 참가는 하였지만, 그것은 한국 측이 이전부터 요구해온 공식회의가 아닌, 문화재 목록을 검토하기 위한 전문가회의의 성격을 갖는 회의였다. 일본 측이 “이 회의의 성격을 information 교환의 모임으로 하고 싶다”⁶⁹고 말한 것은 ‘일한예비교섭 문화재관계회합의 진행방법에 대해서 (시안)’라는 방침에서 나온 것이다. 여기에는 “일본 측은 (필자 주: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목록)을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서 수령했던 것이며, 문화재 소유의 권리 관계는 이로 인해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는다.

67 「日韓予備交渉文化財關係第1回會合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年2月13日, 文書番号: 1165.

68 『제6차 한일회담(1961.10.20-1964.4월) 제2차 정치회담 예비질증: 문화재관계회의. 동경, 1963』, 프레임 번호: 10.

69 일본외교문서, 앞의 문서, 文書番号: 1165.

또한 이 목록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 나누는 것은 단순한 정보교환에 지나지 않고, 일본 측으로서 그 증여를 약속하는 성질의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문화재관계회의의 성격을 밝히고 있다.⁷⁰ 즉, 일본 측은 문화재관계회의에 전문가가 참가했지만, 합의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이 주어진 회의가 아닌, 종래의 전문가회의와 같은 성격으로 이 회의를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입장은 특별위원회를 비롯하여, 전문가들이 참가한 회의에 권한이 주어질 것을 요구했던 한국 측의 입장과는 차이가 있었던 것이다.⁷¹

2) 일본 측의 문화재 목록 작성에 관한 논의

일본 측에서는 문화재관계회의를 진행하면서,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한 방침을 정하기 위해 외무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 간의 사전회의가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문화재 목록 작성에 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1963년 2월 11일의 사전회의에서 외무성은 문화재 반환 문제의 진행에 맞춰 증여할 문화재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였고, 문화재보호위원회는 “지금은 뭐라고 말할 수 없지만, 상식적으로 말해서 증여한다고 말하면서 무엇을 증여할지를 말하지 않을 수는 없으므로 어느 정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답하였다.⁷²

제1회 문화재관계회의(1963.2.13)가 끝난 직후 이루어진 사전회의에서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문부성의 태세가 아직 정리되지 않았지만, 문화재를 어느 정도 증여하는지도 결국은 청구권 문제와 같이 높은 정치적 레벨에서의 결정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문화재 목록의

70 「日韓予備交渉文化財關係会合の進め方について(試案)」, 北東アジア課, 1963년 2월 9일, 文書番号: 579.

71 이후 문화재관계회의는 제6회 회의(4월 3일)까지 이루어졌고, 한국 측이 제시한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목록’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72 「文化財關係についての文部省側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년 2월 12일, 文書番号: 580.

작성에 대해 “국유, 사유를 불문하고 1905년 이후 일본에 도래한 문화재는 모두 반환하라는 강경한 태도를 취한 한국 측이 국유의 문화재를 어느 정도 기증한다는 일본 측의 입장에 크게 다가왔고, 또한 구체적인 반환청구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이 이상 한국 측의 새로운 움직임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 것이다. 이번에는 일본 측에서 증여할 문화재 목록안을 작성하여 한국 측에게 제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⁷³

2월 21일에 열린 사전회의에서 문화재보호위원회는 자체 내부회의를 열었으며, 2월 25일과 2월 26일에 도쿄국립박물관 측과 전문가 모임을 갖고 동 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한국 문화재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그리고 문화재보호위원회 내부에는 일반적으로 한국 측에게 문화재를 기증하는 것을 반대하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전하는 한편, 자신들의 관할이 아닌 궁내청, 도쿄대학, 교토대학, 도쿄예술대학, 야마구치현립여자단기대학에 대한 전문가 파견 등 외무성에게 협력하는 자세를 보였다.⁷⁴

문화재보호위원회는 2월 22일의 사전회의에서, 한국 측이 모두가 아닌 일부 품목으로 만족한다는 전제하에 경상남북도 소재 분묘 및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 고려시대 분묘 및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것들을 제시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현 단계에서는 일본 측이 적극적으로 증여 얘기를 진척시키는 것은 피하고, 한국 측의 얘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요구가 유연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⁷⁵

3월 12일의 사전회의에서 외무성은 각 의제들이 정치적 레벨의 결정에 맡겨질 단계에 이르고 있다고 말하는 한편, 다른 의제들에 대해 일본 측의 숫자를 제

73 「文化財關係についての文部省側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년 2월13일, 文書番号: 580.

74 「文化財關係についての文部省側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년 2월21일, 文書番号: 580.

75 「文化財關係についての文部省側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년 2월22일, 文書番号: 580.

시하였지만, 문화재에 대해서는 아직 아무것도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교섭의 타결에 임박했을 때 문화재 반환 문제로 인해 그것이 지체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국 측에게 제시하는 것은 별개로 하더라도 1개월 안에 제1차 목록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보호위원회도 한국 측에게 언제 제시할 것인지는 별개로 하더라도 구체적인 안을 작성할 필요는 있다고 언급하였다.⁷⁶

제5회 문화재관계회의(1963.3.25) 직후에 열린 사전회의에서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방침이 논의되었다. 외무성은 한국 측의 요구에 따라 문화재 목록을 제출하는 것은 불리하며, 회담 타결이 가까워지면 이 문제를 급히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때 한국 측의 양보를 얻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한편 문화재보호위원회는 문화재 반환 교섭의 시간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라는 외무성의 질문에 대해 고서적에 관한 논의를 2회나 3회 여는 것이 적당할 것 같다고 답하였다.⁷⁷

이상의 검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 측에게 문화재를 기증하는 것조차도 반대했던 문화재보호위원회는 한일회담의 각 의제가 진행됨에 따라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에 협력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었다. 특히 문화재 목록 작성에서도 궁내청의 서적을 조사하기 위한 전문가 파견 등을 제시하는 등 위원회 내부의 반대가 아직 남아 있음에도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외무성의 의정과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문화재 목록 작성을 통해 일본 측도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있었던 것이다.

76 「文部省, 東京博物館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년3월12일, 文書番号: 580.

77 「文化財關係日本側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년3월25일, 文書番号: 580.

V. 재개 제6차 한일회담에서의 논의

1. 문화재보호위원회의 문화재 목록 작성안

외무성과 문화재보호위원회, 도쿄국립박물관 측은 제6차 회담 재개를 앞둔 1964년 2월 6일에 사전회의를 열고 문화재 목록 작성에 관한 논의를 나누었다.

외무성은 최종안에 가까운 안을 준비하고 한국 측이 더 많은 문화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약간의 국유문화재만을 추가할 것이며, 그 이상의 경우에는 한국 측이 희망하고 있는 개인 소유 문화재 중 우수한 것 두세 개의 증여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하였다. 이에 대해 문화재보호위원회는 학문적, 예술적 가치가 있고 한국에 비슷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 남겨두는 A안, 경우에 따라 한국에게 넘겨도 되는 것인 B안, 한국에게 넘겨도 되는 C안 등 이미 문화재 목록에 관한 복안을 세 개로 나누어 작성하였다고 설명하였다. 외무성은 이 설명에 대해 C안의 가치가 없는 것만을 주려고 한다면 한국 측을 납득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C안에 훌륭한 것이 많이 있을수록 한국 측이 불만을 표하더라도 자신감을 가지고 설득시킬 수 있다고 말하였다.⁷⁸

이후 증여가 가능한 고서적에는 궁내청에 소장된 소네 아라스케[曾禰荒助]의 한국 전적 및 통감부 저서, 아마구치현립여자단기대학에 소장된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内正毅]의 서적이 있으며, 동양 문고의 서적 중 한국 측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약간을 선택하여 포토 카피해서 증여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78 A안, B안, C안 중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C안인데, ① 조선총독부에 의해 반출된 경주황오리 제16호분 출토품, ② 총독 및 통감 등에 의해 반출된 이토 히로부미의 고려자기 103점 중 85점, ③ 일본 국유의 것 중 경상남북도 소재의 분묘 및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280점 중 약 160점, ④ 고려시대 분묘 및 그 외 유적에서 출토된 184점 중 약 80점, ⑤ 개인소유의 것 중 석조미술품(석조다라보살상, 사자상)이 그 내용이다. 「文化財小委員会日本側関係者打合せ」, 北東アジア課, 1964년 2월 6일, 文書番号: 580.

논의되었다.⁷⁹ 이처럼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재 목록 작성이 일본 측에서 시작되고 있었다.

2. 문화재소위원회의 재개

제2차 정치회담을 통해 청구권 문제가 큰 틀의 합의에 이르렀고, 한일 양국은 예비회담에서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려 한일회담 타결의 분위기가 높아졌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한일 양국은 1964년 3월 12일부터 제6차 회담을 재개하기로 합의하고, 4월 말에 조약 초안의 작성, 5월 초순의 조인 등으로 일정을 세웠다.

재개 제6차 회담의 제1회 문화재소위원회(1964.3.21)에서 한일 양국은 이 회의를 종래와 같은 문화재소위원회로 하면서 예비회담에서 논의된 내용을 계속해서 검토하기로 하였다. 한국 측은 ‘반환청구 한국문화재 목록’과 관련한 일본 측의 목록 제출을 요구하는 한편, 일본 측 전문가의 회의 참가를 물었다. 일본 측은 문화재보호위원회의 사무국장이 참가하기로 되었는데, 이는 큰 진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답하였다.⁸⁰

이어서 일본 측은 제46회 중의원 본회의에서 오히라 외무대신이 보고한 ‘일한회담에 관한 보고’ 중 문화협력의 일환으로 어느 정도의 문화재를 건네겠다는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내용을 읽으면서, 일본 측의 기본적인 입장을 재차 설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한국 측의 견해를 물었다. 한국 측은 다음과 같이 답하였다.

결국은 일본 측이 말하는 것처럼 국교정상화와 더불어 문화협정 체결이라는 형태로 될 것이지만,⁸¹ 문화교류문제보다도 문화재 반환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79 위와 같음.

80 「再会第6次日韓會談文化財小委員會第1回會合」, 北東アジア課, 1963年3月21日, 文書番号: 450.

것이며, 문화재 반환 문제의 진행 여하에 따라 한일 양국 간의 전반적 문화 협력문제가 논의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먼저 일측이 문화재 품목 목록을 제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⁸²

일본 측은 각 의제들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특히 어업 문제의 진전이 없는 한 문화재 목록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예비교섭 제21회 본회의(1962. 12. 25)에서 제시한 의정서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다. 한국 측은 반환·기증 문제나 문화협정을 통한 해결방법 등을 논의하기 전에 먼저 일본 측이 문화재 목록을 제시하고, 그것을 논의한 후 품목을 결정하기를 주장하였으나, 일본 측은 먼저 문화협정을 통한 해결방법을 논의한 후에, 혹은 두 가지를 동시에 논의할 것을 주장하였다.⁸³ 한일 양국은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고, 회의는 종료되었다. 한편 1964년 3월부터 시작된 한일회담 반대 데모와 반정부 데모로 인해 한국의 국내 정세가 불안해졌고, 결국 제6차 회담은 중단되었다.

VI. 맺음말

본고에서는 이상과 같이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한 교섭 과정과 한일 양국의 방침 등을 중심으로 제6차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문제를 검토해보았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특별위원회를 둘러싼 논의 과정도 검토하였다. 이하에서는 본론을 요약 정리하면서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제6차 회담의 논의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를 논하기로 한다.

81 위와 같음.

82 『속개 제6차 한·일본회담(1964.3.12-4월) 문화재소위원회 회의, 제1차, 1964』, 프레임 번호: 9.

83 한국의교문서, 앞의 문서, 프레임 번호: 9~11.

한국 측은 제6차 회담이 시작되기 전 한일회담의 조기 타결을 위한 방침들을 마련하였다. 문화재 반환 문제에 관해서는 전문가의 문화재소위원회 참가 및 권한이 부여된 전문가회의를 통해 수많은 문화재를 반환받는 안에서부터, 사실 관계만을 논의하는 전문가회의를 통해 약 1,080여 점의 문화재를 인도받는 안까지 여러 방침을 정해두었다. 특히 이전 회담에서 크게 대립하고 있던 반환·기증 문제에 대해 인도라는 방식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방침은 제6차 회담에서 적용되었다. 한국 측은 문화재소위원회, 전문가회의 등의 교섭에서 일본 측 전문가를 문화재소위원회에 참가시킬 것, 전문가회의에 공적인 효력을 부여할 것을 계속 주장하였다. 한국 측은 위와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였다. 특별위원회는 좀 더 많은 전문가들이 참가하는 권한이 부여된 회의, 즉 공적 효력을 가진 회의로써 주 1회에서 2회 위원회를 열고, 3개월 안에 문화재 품목 작성을 완료하는 것이었다. 특별위원회는 설치까지는 합의되었으나, 문부성의 반대로 인해 결국 개최는 실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특별위원회는 인도 제안과 함께 한국 측의 문화재 반환 문제 해결의 핵심적인 내용이었고, 이를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를 조기에 해결하려고 했던 한국 측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한국 측은 1962년 2월 1일의 비공식회의에서 회담 중단기의 구두전달사항을 언급하며 반환·기증 문제는 그렇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비공식적이었지만 인도도 괜찮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후 한국 측은 제2차 정치회담에서 처음으로 이 문제를 인도로 해결할 것을 공식적으로 제안하였고, 일본 측이 기증을 주장하였지만, 예비회담 본회의에서도 몇 차례에 걸쳐 인도를 제안하였다. 제6차 회담 기간 중 일본 측은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제7차 회담에서 반환·기증 문제가 인도로 합의된 것을 볼 때 이 시기의 한국 측의 지속적인 인도 주장은 그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한국 측은 전문가들의 논의에 권한을 부여하고,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바탕으로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제안하는 한편, 이전 회담에서 침묵하게 대립했던 반환·기증 문제에 대해 인도를 지속적으로 제

안함으로써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해결을 피하였다.

일본 측은 제6차 회담 이전부터 견지해온 권리·의무가 아닌 문화협력의 관점에서 문화재를 기증하겠다는 기본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의정서나 문화협정을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일본 측은 이러한 해결방식을 정리하여 ‘일본정부와 대한민국정부 간의 문화상의 협력에 관한 의정서 요강(안)’을 작성하였고, 예비회담 제21회 본회의에서 이를 제시하였다. 한국 측이 이 요강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제7차 회담에서 체결된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의 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일본 측은 문화재 목록을 제시하라는 한국 측의 주장을 거부하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문화재 목록 작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였다. 회담 타결의 기운이 높아지자 문화재의 기증에 반대해왔던 문부성도 자발적인 기증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으로 바뀌고, 문화재 목록 작성에 대해 협력하기 시작한다. 즉, 일본 측은 한국 측에 제시하게 될 문화재 목록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문화협력을 통한 기증을 그 취지로 한 의정서를 통해 문화재 반환 문제의 해결을 피하였다. 한국 측의 태도보다는 덜 적극적이었지만, 이전 회담 시기의 일본 측의 태도와 비교하면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제6차 회담 당시 문화재 반환 문제에 대해 내부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을 구체화하였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지만 확고한 타결 의지를 보이면서 논의를 이어갔다. 이 시기의 논의는 제7차 회담 개최 이후 인도라는 표현의 합의와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문화재 인도 품목 작성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 『제4차 한일회담(1958.4.15-60.4.19) 문화재소위원회 회의록 및 문화재 반환교섭, 1958』.
- 『제5차 한·일회담 예비회담 문화재소위원회 및 전문가회의 보고, 1960.11-61.5』.
- 『제6차 한·일회담 예비교섭, 1961년. 전2권. (V.1 7-8월)』.
- 『제6차 한일회담 본회의 회의록 및 종합보고, 1961-62.2』.
-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소위원회, 1962-64』.
- 『김중필 특사의 일본방문, 1962.10-11』.
-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 (V.2 4-21차 1962.9.3-12.26)』.
- 『제6차 한일회담.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본회의, 1-65차 1962.8.21-64.2.6 전5권(V.3 22-32차 1963.1.11-3.28)』.
- 『제6차 한일회담(1961.10.20-1964.4월) 제2차 정치회담 예비절충: 문화재관계회의. 동경, 1963』.
- 『속개 제6차 한·일본회담(1964.3.12-4월) 문화재소위원회 회의, 제1차, 1964』.
-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1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1年10月31日, 文書番号: 267.
-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2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1年11月17日, 文書番号: 267.
-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3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1年11月17日, 文書番号: 267.
-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5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1年12月18日, 文書番号: 267.
- 「日韓會談文化財小委員会主査非公式會談記録」, 北東アジア課, 1962年2月1日, 文書番号: 576.
- 「文化財問題の解決方針に関する件 (討議用資料)」, 北東アジア課, 1962年2月14日, 文書番号: 576.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6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2年2月16日, 文書番号: 267.

題目なし, 外務省, 1962年2月26日, 文書番号: 269.

「第6次日韓全面會談における文化財小委員会第7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2年2月16日, 文書番号: 267.

「日韓會談文化財小委員会に関する件」, 北東アジア課, 1962年2月12日, 文書番号: 574.

「日韓會談重要資料 (3)」, 北東アジア課, 1963年10月1日, 文書番号: 527.

「日韓予備交渉第25回会合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年2月1日, 文書番号: 651.

「日韓予備交渉文化財關係第1回会合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年2月13日, 文書番号: 1165.

「日韓予備交渉文化財關係会合の進め方について(試案)」, 北東アジア課, 1963年2月9日, 文書番号: 579.

「文化財關係についての文部省側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年2月12日, 文書番号: 580.

「文化財關係についての文部省側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年2月13日, 文書番号: 580.

「文化財關係についての文部省側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年2月22日, 文書番号: 580.

「文部省, 東京博物館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年3月12日, 文書番号: 580.

「文化財關係日本側との打合わせ記録」, 北東アジア課, 1963年3月25日, 文書番号: 580.

「文化財小委員会日本側關係者打合会」, 北東アジア課, 1964年2月6日, 文書番号: 580.

「再会第6次日韓會談文化財小委員会第1回会合」, 北東アジア課, 1963年3月21日, 文書番号: 450.

이원덕, 1996,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장박진, 2009, 『식민지 관계 청산은 왜 이루어질 수 없었는가』, 논형.

국성하, 2005,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협상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25집.

- 류미나, 2009, 「한일회담 외교문서로 본 문화재 반환 교섭」, 『일본역사연구』 제30집.
- 류미나, 2010, 「일본의 문화재 ‘반환’으로 본 식민지 지배의 ‘잔상’, 그리고 ‘청산’의 허상-1958년 일본의 제1차 문화재 반환까지의 교섭과정을 사례로-」, 『일본역사연구』 제32집.
- 류미나, 2014, 「문화재 반환과 둘러싼 한일회담의 한계-일본의 한국 문화재 반환 절차를 중심으로」, 『일본역사연구』 제40집.
- 박훈, 2010,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의 전개과정과 쟁점」, 『외교문서 공개와 한일회담의 재조명 2-의제로 본 한일회담』, 선인.
- 엄태봉, 2017, 「한일회담 중단기의 문화재 문제에 관한 연구」, 『일본공간』 제21권.
- 吉澤文寿, 2005, 『戦後日韓関係-国交正常化交渉をめぐって』, クレイン.
- 高崎宗司, 1986, 「日韓会談における文化財返還交渉について」, 『朝鮮史研究会論文集』第23号.
- 長澤裕子, 2011, 「日韓会談と韓国文化財の返還問題再考-請求権問題からの分離と『文化財協定』」, 『歴史としての日韓国交正常化Ⅱ-脱植民地化編』, 法政大学出版社.

제6차 한일회담 시기의 문화재 반환 교섭 연구 - 교섭 과정과 그 의미를 중심으로

엄태봉

본고는 한일회담의 문화재 반환 교섭 중, 제6차 회담에서의 논의 과정을 검토하고, 그것이 문화재 반환 교섭에서 지니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고찰한 연구이다.

한국 측은 전문가들에게도 공식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그들의 논의를 중심으로 문화재 목록을 작성하려고 시도하였다. 또한 특별위원회의 개최를 제안하는 한편 이전 회담에서 크게 대립했던 반환·기증 문제에 대해서도 기존의 입장인 반환에서 인도로 그 입장을 바꾸고, 이를 일본 측에게 지속적으로 제안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다. 일본 측은 내부적으로는 문화재 목록을 검토하는 한편 문화협력을 통해 문화재를 기증한다는 취지의 의정서를 한국 측에게 제안하면서 이 문제의 해결을 꾀하였다.

이 시기 한일 양국은 이전 회담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화재 반환 문제 논의에 임하였으나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논의는 제7차 회담 시기의 인도라는 표현의 합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문화재 인도 품목 작성의 밑바탕이 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주제어: 제6차 한일회담, 문화재 반환 교섭, 특별위원회, 인도, 의정서, 문화재 목록

ABSTRACT

A Study on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during the 6th Korea-Japan Talks: Focusing on the Negotiation Process and Its Significance

Um Taebong

This study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discussion of the 6th Korea-Japan Talks in negotiations regarding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the Korea-Japan Talks.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amined the policy on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and the negotiation process between Korea and Japan.

The Korean government gave formal authority to experts and attempted to make a list of cultural properties based on their discussions. In addition, while proposing the holding of a special committee, the Korean side changed its position on the “return-donation” issue from “return” to “turn over,” which had been discussed in the previous meeting and continued proposing it to Japan in order to soften their chance. While reviewing the list of cultural properties internally, the Japanese side tried to resolve this issue by proposing

protocol which stipulated that cultural properties would be donated under the meaning of cultural cooperation.

Although Korea and Japan both discussed the issue of the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more actively during this period, they failed to reach an agreement. However, it is argued that the discussion during this period was fairly meaningful because it was the basis of the agreement on expressing “turn over,” the draft of the “Agreement on Cultural Properties and Cultural Cooperation,” and the list of cultural properties for delivery at the 7th Korea-Japan talks.

Keywords: 6th Korea-Japan talks, negotiation for return of cultural properties in Korea-Japan talks, special committee, turn over, protocol, list of cultural properties

중국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차재복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I. 머리말
- II.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 배경과 국제사회의 여론
- III.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
- IV. '일대일로'의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 V. 맺음말



I. 머리말

시진핑 주석은 2012년 11월 제18대 공산당대회에서 총서기에 당선된 뒤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는 것이야말로 근대 이래 최고의 꿈이며, 그 꿈은 중화인민공화국 100주년의 해인 2049년에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¹ 이후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할 수 있다고 한다. 시진핑은 2013년 9월과 10월 각각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와 동남아시아(인도네시아)에서 ‘일대일로(一帶一路)’² 구상을 제안했다. 이른바 ‘일대’는 중국 서부의 시안(西安)을 기점으로 중앙아시아를 거쳐 유럽까지 철도를 연결하는 ‘실크로드 경제벨트’를 의미하고, ‘일로’는 중국 저장성(浙江省)과 푸젠성(福建省) 등 연해지역을 기점으로 남중국해→말라카해협³→벵골만·인도양→아라비아해→중동·아프리카 그리고 최종적으로 유럽까지 연결하는 ‘21세기 해상 실크로드’를 말한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부터 ‘일대일로’ 홈페이지(www.yidaiyilu.gov.cn)를 개

* 투고: 2017년 10월 9일, 심사 완료: 2017년 11월 15일, 재심사 완료: 2018년 5월 8일, 게재 확정: 2018년 5월 25일

- 1 习近平, 2014, 『习近平谈治国理政』, 外文出版社, 35~36쪽.
- 2 ‘실크로드 경제벨트(一帶)’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一路)’의 약칭이다. 영문으로는 “the Silk Road Economic Belt and the 21st-Century Maritime Silk Road”로 표기하고, 간칭으로 “One Belt and One Road”, 최근에는 One을 빼고서 “B&R”로 표기하고 있다. One을 뺀 이유는 ‘일대일로’의 넓은 외연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이며 최근에는 6랑6로다국다항(六廊六路多國多港)으로 부르기도 한다.
- 3 말라카해협(Strait of Malacca)은 석유 해상 수송로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사이에 위치한 해협으로서, 인도양과 남중국해 및 태평양으로 연결되는 해로이다. 이 해협은 페르시아만에서 한국, 중국, 일본 및 태평양 지역 등의 아시아로 가는 가장 짧은 바닷길이다.

설하여 운영하고 있고, 중국사회과학원⁴을 비롯한 싱크탱크와 대학들은 ‘일대일로’ 연구소를 만들어 관련 정책, 논리, 법제, 제도 등을 개발하여 다량의 연구 결과를 쏟아내고 있다. 2017년 8월 2일 기준, 중국의 학술논문 검색 엔진 CNKI에서 ‘일대일로’를 키워드로 검색하면 무려 3,403편의 논문이 검색된다. 이는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일대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중 ‘일대일로+외교’를 검색어로 하면 18편, ‘일대일로+전략’을 검색어로 하면 169편, ‘일대일로+동아시아’를 검색어로 하면 52편의 논문이 검색되어 연구논문에서도 ‘전략’에 비중을 두고 있다.

중국현대국제관계연구원의 『“一帶一路”讀本』(2015)은 ‘일대일로’의 구상, 정책, 현황, 항목, 연구의 5편으로 분류하여 알기 쉽게 ‘일대일로’를 해설한 입문서이다. 이 책의 강조점은 ‘일대일로’ 구상 논리는 개방, 포용, 상호이익[互利], 윈윈[共贏]을 추구하는 것이지, 개도국에 대한 ‘윈조’ 정책이 아니며 ‘중국판 마셜플랜(Marshall Plan)은 더더욱 아니라는 점이다. 진링[金玲]도 ‘일대일로’를 마셜플랜에 비유되는 것을 강하게 부정하며, ‘일대일로’와 마셜플랜은 비교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⁵

왕이웨이[王义桅]는 『“一帶一路”：机遇与挑战』(2015)에서, 중국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할 것인가라고 질문하면서 ‘일대일로’가 답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면서 중화문명은 역사적으로 내륙에 국한되었고 해양은 방어막으로만 삼았는데, ‘일대일로’ 전략 구상에 따라 중국이 육·

4 중국사회과학원은 2017년 4월 ‘일대일로 건설과 유라시아지역 연동발전’의 국제연수반을 창설하면서 ‘실크로드 연구원(絲綢之路研究院)’을 설립하여 중국개발성금융촉진위원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陈元(전국정협부주석, 중국개발성금융촉진회 회장)과 王伟光(중국사회과학원장)을 명예원장으로, 蔡昉(중국사회과학원 부원장)을 이사장으로, 李吉平(국가개발은행 전 부행장, 중국개발성금융촉진회집행 부회장)이 원장을 맡고 있다. 참조: http://www.chinadaily.com.cn/interface/toutiaonew/53002523/2017-04-18/cd_28978945.html(검색일: 2017. 4. 24).

5 金玲, 2015, 「“一帶一路”：中国的马歇尔计划?」, 『国际问题研究』第1期, 91~92쪽.

해(陸海)문명의 협조 발전으로 진정한 육·해 겸비의 문명형 국가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중국사회과학원의 슈에리(薛力)는 중국의 대외전략 차원에서 접근하여 『“一帶一路”與“亞歐世紀”的到來』(2016)와 『“一帶一路”：中外學者的剖析』(2017)을 펴냈다. 슈에리에 따르면, ‘일대일로’ 구상 이후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는 ‘주변중시’로 전환하였다고 한다.

이에 반해 한국의 ‘일대일로’ 연구는 경제와 무역 분야에서는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21세기 중국의 그랜드 전략 차원으로 접근한 논문은 흔치 않다. 다만 ‘일대일로’를 중국의 외교전략 차원으로 접근한 글로 이동률의 「시진핑 정부 ‘해양국가’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2017), 이호철의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2017), 원동욱의 「중국의 지정학과 주변외교: ‘일대일로’를 중심으로」(2016), 그리고 김홍규의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한계점과 전망」(2016) 등을 들 수 있다.

이동률에 따르면, 중국의 해양강국 전략은 결과적으로 ASEAN 국가들과의 해양영유권 분쟁을 격화시켰고, 미국에는 오히려 ‘항행의 자유(Freedom of navigation)’ 원칙이라는 국제규범을 초래하여 (미일동맹의) 견제에 직면해 있다. 그래서 중국은 이들 도전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본과 제도혁신(AIIB,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설립)을 핵심으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각 영역의 발전을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으로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그리고 이호철, 원동욱, 김홍규는 ‘일대일로’는 중국 경제의 수요창출 전략이지만, 미국의 ‘아태재균형정책’에 지정학적으로 대응하는 것에서 공통된 인식을 보였다. 이호철은 미국의 재균형 전략은 지리적 관점에서 결정된 철저한 지정학적 전략으로 중국 포위로 귀결되고 있다는 논리이고, 이에 대해 김홍규는 중국이 미국의 군사외교적인 우월성에 직접 응전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경쟁력 있는 재정능력을 중심으로 인프라투자 확대와 인문교류 등을 통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였다는 논리를 전개했다. 원동욱은 미국 요인보다는 중국의 ‘주변외교’에 관점을 두고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의 평

화부상노선 견지, 주변외교의 격상, 역내 경제통합과 안보협력을 주도할 것이라며 ‘주변중시’ 논리로 전개했다. 이들과는 달리 이정태는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적 의도와 실제 분석」(2017)에서 시진핑 정부가 투키디데스의 함정과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이를 극복하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을 계획했다는 국내적 논리를 폈다.

후안강[胡鞍鋼]에 따르면, 중국은 ‘일대일로’를 “당 중앙이 결정한 중국의 대전략”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시진핑과 리커창 두 지도자가 20여 개국을 방문하고 거의 모든 대규모 프로젝트들을 시찰하는 등 많은 조사와 연구 끝에 나온 구상이라고 한다. 중국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 내부구도와 세계구도 간 동서향의 상호작용을 이루고, 연해지역과 유라시아 대륙교를 ‘T자형’으로 이으며, 이러한 프레임을 주변국가로 확장하여 경제지리적 시각을 형성하려는 대내적·대외적 총괄계획을 마련한 것이라고 한다.⁶

장원링[張蘊嶺]도 마찬가지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양 실크로드는 각자의 중심이 다르지만 두 개의 틀은 서로 보완적인 것으로 ‘일대일로’를 “하나의 전체적인 대전략”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해상 실크로드 용어에 21세기를 붙이는 이유에 대해, 과거에 패권을 목표로 한 (서구의) 해양세력론과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개방적이고 서로 공유하는 해양 신질서를 만들고, 발전을 중시하며, 협력하고 공영함으로써 해양 통로 건설과 발전을 긴밀하게 결합시키려는 것이라고 한다.⁷

중국 학자들의 ‘일대일로’에 대한 이상주의적 논리에 대하여, 전인갑은 중국이 발신하는 ‘신형대국론’과 시진핑의 언설을 통해 볼 때 중국의 ‘제국화’가 본격화되고 있음을 지적한다. “즉 중국이 아직은 지구적 차원에서 제국적 기획을 시도하거나 그럴 만한 능력을 확보한 것은 아니지만 아시아에서 지역제국으로서

6 胡鞍鋼, 2016, 「‘일대일로’와 경제지리」,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다산출판사, 46쪽.

7 張蘊嶺, 2016, 「‘일대일로’의 개념과 함의」, 성균중국연구소 편,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다산출판사, 26~27쪽.

의 위상은 확고하다. 또한 우리(한국)를 포함한 중국의 이웃국가들은 ‘(지역)제국’ 중국이 만들어낸 회오리 속으로 급속히 휘말려 들고 있다며 중국의 제국적 속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⁸

문제는 중국이 ‘일대일로’ 대전략의 실천 과정에서 주변국들과 적지 않은 역사, 영토, 국경, 민족주의 등 난제를 어떻게 헤쳐 나갈 것인가이다. 이 문제는 바로 중국의 ‘일대일로’가 한반도에 주는 함의와 연계된다. 앞서 언급한 한국 학계의 ‘일대일로’ 접근 논리의 대부분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대응 전략 논리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으로선 중국의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긴요하다. ‘일대일로’는 표면적으로는 중국이 그 연선국가에게 인프라건설 지원과 거대한 중국 시장을 열어주는 일종의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고, 실제로는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지정학적 가치가 있는 주요 거점 국가들을 중화(中華) 중심으로 묶어가는 ‘중국의 세계화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은 ‘일대일로’에 대한 중국의 전략적 의의를 파악하고, 그동안 중국의 관(官)과 민(民)이 추진한 정책과 성과를 분석하여 한반도에 주는 함의를 논하고자 한다.

II. 중국의 ‘일대일로’ 제안 배경과 국제사회의 여론

중국은 육상으로는 14개국과⁹ 총 2만 2천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해상으로는 10여 개국(대만 포함)과 1만 8천km에 이르는 해안선을 접하며, 6,500여 개

8 전인갑, 2016, 『현대중국의 제국몽』, 학교방, 49~54쪽.

9 중국은 북한, 러시아, 몽골,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 네팔, 부탄,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등 14개국과 육상으로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 중 국경 분쟁 지역만 합쳐도 한반도 면적(22만 3,348km²)을 뛰어넘는 23만 4,159km²에 달한다.

의 섬을 보유하는 해양국가로서의 지형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지형적 특성으로 중국을 ‘대륙해양복합형’ 국가라 할 수 있다.¹⁰ ‘일대일로’는 중국의 지형적 특성을 살려 고대 실크로드를 복원하겠다는 전략적 구상이다.

근대시기 중국의 주요 사건으로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을 꼽을 수 있고, 이 두 전쟁을 통해 전통시대 중화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는 해체되었다. 1648년 유럽에서는 최초의 근대적 국제관계인 베스트팔렌체제가 구축되었다. 그 후 유럽은 국가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동시에 대외확장에 나섰다. 19세기 중엽부터 세계적으로 식민제국체제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동양에서는 일본이 19세기 중반 이후 기세등등한 구미 열강과 쇠락하는 동아시아를 바라보면서 최종적으로 ‘탈아입구(脫亞入歐)’론을 내세워 구미와 함께 이웃 국가를 침략·수탈하는 길을 선택했다. “아편전쟁이 외부로부터 동북아 전통 지역질서에 충격을 가했다면, 동북아 내부로부터 화이질서를 무너뜨린 상징적인 사건은 1874년 타이완 침략이었고 1894년 청일전쟁은 기본적으로 화이질서에 대한 최후의 일격이었다.”¹¹

중국이 실크로드를 복원하여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실현하겠다는 ‘중국몽’은 아편전쟁을 계기로 서구 열강이 중국을 점령하고, 청일전쟁 패전으로 일본에게서 ‘21개조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반식민지 치욕의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 연슈에통[閻學通] 또한 “아편전쟁 이래 중국 인민의 최대 이익은 민족부흥을 실현하는 것과 잃어버렸던 세계대국 지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2003년 이래 후진타오와 원자바오 지도자가 사용한 “중국굴기(中國崛起)”는 바로 “중화민족의 부흥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표현”이었다고 한다.¹²

중국의 국가(國歌) 의용군행진곡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에서 패배한 역사적

10 이동률, 2017, 「시진핑 정부 ‘해양국가’ 구상의 지경제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제57집 2호, 370쪽.

11 楊伯江, 2015, 「동북아지역은 역사와의 공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차재복 외,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동북아역사재단, 134쪽.

12 閻學通·孫學峰, 2005, 『中國崛起及其戰略』, 北京大學出版社, 4~6쪽.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담고 있다. 21세기의 중국은 지난 세기 서구 강대국들의 부침의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겠다며 전 국민을 상대로 역사적 학습을 진행해왔다. 2003년 중국의 CCTV가 12부작¹³ 역사다큐멘터리 「대국굴기(大國崛起, The Rise of the Great Nations)」를 제작하여 반복적으로 방영해왔던 것이 대표적 역사적 학습이었다. 「대국굴기」는 3년의 제작 기간을 거쳐 2006년 11월 13일에서 11월 24일까지 중국의 CCTV-2 채널을 통해 중국 전역에 전파되었다. 그 주요내용은 스페인·포르투갈·네덜란드·영국·프랑스·독일·일본·러시아·미국 등 9개 나라의 전성기와 흥망성쇠 과정을 다루었고, 중국은 서구 열강들의 흥망성쇠 과정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앞으로 ‘중국굴기’를 철저히 준비해 나가자는 것이었다.

중국 정부는 2015년 3월 28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외교부, 상무부가 연합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 및 행동」에서, ‘일대일로’의 건설은 연선국가의 경제번영과 지역경제협력 촉진에 유리하고, 서로 다른 문명교류를 강화하고, 세계평화 발전을 촉진하는 대사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리고 중국은 ‘일대일로’는 지난 세기 서구 열강들이 추구했던 패권적 질서와는 다르다고 한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은 우호적과 비우호적으로 나누어지고 있다.

-
- 13 1.1 해양시대(海洋時代)- 포르투갈과 스페인, 해양의 시대를 열다
 1.2 소국대업(小國大業)-유럽의 작은 나라 네덜란드, 세계를 움직이다
 1.3 주향현대(走向現代)-영국, 현대화의 선봉에 서다 (1부)
 1.4 공업선성(工業先聲)-영국, 세계 최초의 공업화 대국 (2부)
 1.5 격정세월(激情歲月)-프랑스, 혼돈 속에서 일어서다
 1.6 제국춘추(帝國春秋)-독일, 유럽제국을 이루다
 1.7 백년유신(百年維新)-일본, 아시아 강국으로 향한 백년간의 유신
 1.8 심도도강(尋道圖強)-러시아, 강대국을 향한 피의 항해 (1부)
 1.9 풍운신도(風雲新途)-소련, 풍운 속의 새로운 길 (2부)
 1.10 신국신몽(新國新夢)-미국, 새로운 나라의 새로운 꿈 (1부)
 1.11 위국신정(危局新政)-미국, 세계 제1강국을 이룬 새로운 도전 (2부)
 1.12 대도행사(大道行思)-21세기 대국의 길

첫째, 제3세계 연대정신에 근거한 ‘남-남 원조’의 관점에서 우호적이다. 타이완의 지식인에 따르면, “마오쩌둥이 제기한 동방체계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중간지대라는 사유가 나온다. 여기에 아시아 공동체에 관한 사상적 자원이 존재한다. 이는 과거로부터 사상자원을 가져오는 작업을 오늘의 현실 속에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사고하게 한다. 시진위가 타이완 지식인의 위상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기획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일대일로’가 미국·일본의 지정학적 경제포위에 대한 저항에서 출발했다 하더라도, 남-남 원조의 관점에서 지지·격려해야 한다.”¹⁴ 이러한 논리는 ‘일대일로’를 또 다른 식민주의로 간주하기보다는 중국공산당이 한때 지녔던 제3세계와의 연대정신에 근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국의 경제잡지 『Forbes』에 실린 칼럼에 따르면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공동경제개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집단안보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견해가 있다. ‘일대일로’는 2014년 5월 상하이에서 개최된 아시아교류와 신뢰구축 회의(CICA)에서 공동경제개발에 기반을 둔 새로운 집단안보 개념으로서 언급한 ‘운명공동체’와 전적으로 맥을 같이한다. ‘일대일로’는 국제경제 통합, 국가 간 경제적 상호작용을 촉진시키고, 국가 간의 전쟁, (중국어) 미국과의 갈등으로 발생하는 위험성을 줄이는 상호의존 기제라고 생각한다.”¹⁵

반대로, 부정적 여론으로는 첫째, 과거 ‘동인도회사’와 같은 유사성을 지적하며 중국의 과도한 대외팽창을 경계하고 있다. Brahma 교수는 (‘일대일로’+ AIIB에 대하여) 중국이 정부 대 정부 협력을 고수하는 현 상황에서, 돈을 빌려주는 측과 빌리는 측 양측에 리스크가 계속 커지고 투명성이 부족하며, 사회적 혹

14 백원담·천광성, 2016, 「중국과 비(非)중국: 타이완과 홍콩 다시보기」, 『항해문화』 가을 통권 92호, 51쪽.

15 Wade Shepard, 2017, “Is China’s ‘New Silk Road’ Really A Recipe For Peace?”, <https://www.forbes.com/sites/wadeshepard/2017/03/19/is-chinas-new-silk-road-really-a-recipe-for-peace/#20f242ee4afc> (검색일: 2017. 3. 22).

은 환경적 측면의 지속 가능성도 포괄하지도 않고 있다며, 점진적으로는 다른 나라를 희생하여 중국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일대일로’는 과거 대영제국의 ‘동인도회사’와 같은 식민주의 시기의 새로운 장을 여는 것과 유사하다며, 그럼에도 중국이 만약 제국을 만든다면 중국은 이미 역사학자 폴 케네디가 말한 유명한 “제국의 과도팽창”에 들어간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부정적이다.¹⁶

둘째는 중국의 공세적 영토 분쟁에 빗대어 ‘중화주의 회귀’를 경계하고 있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017년 2월 도쿄에서 가진 아베 총리와와의 회담에서 “(중국의 남중국해 움직임에 대해) 지금의 중국은 명(明)왕조의 책봉체제를 부활시키려고 하는 것 같다. 주변을 전부 자신의 세력권으로 만들 계획일지도 모른다.”¹⁷ 그리고 그는 3월 미국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국방위원회에서도 중국이 주변국들을 마치 과거 중국의 역대 황실의 조공국(tribute-nation) 다루듯 하고 있다며 시진핑의 대외정책을 ‘조공외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같은 맥락에서 한국 학계에도 중화주의에 입각한 중국의 부상을 염려하며,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뿌리는 “수천 년 동안 주변국의 조공을 받으며 절대적인 지위를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하는 데 있다”고 한다.¹⁸

전통시대 중화 중심의 국제질서에서 조공이 교역과 외교의 일환이었던 만큼 ‘일대일로’ 구상의 뿌리라고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중국이 말하는 ‘일대일로’의 본질은 미·중 간 국제정치·경제의 갈등 구도에서 나온 중국의 전략 구상이기에 무엇보다 중국의 전략적 의의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16 Brahma Chellaney, 2017, “China’s Imperial Overreach”,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one-belt-one-road-china-imperialism-by-brahma-chellaney-2017-05> (검색일: 2017. 5. 26).

17 “米国防長官、対中国「もう寛容ではない」”, 『日本経済新聞』, <http://www.nikkei.com/article/DGXKZO12659850Y7A200C1EA1000/> (검색일: 2017. 3. 24).

18 김옥준, 2015,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정치·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제18집 1호, 292쪽.

Ⅲ.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

1. 지경학적 의의

지금 중국의 대전략은 “4+3” 혹은 “4+4”로 전개되고 있다고 한다. 즉 4개의 지역과 3개 내지 4개의 전략을 두고 하는 말이다. 4개의 지역이란 중국을 동부, 중부, 서부, 동북 지역으로 나눈 것을 말하고, 3개 내지 4개의 전략은 당 중앙이 제시한 3대 지역발전 전략으로 ‘일대일로’, 장강(長江) 경제벨트, 징진지[京津冀]경제협력발전전략 그리고 해양강국전략을 포함하여 4대 전략이라고 한다. 해양강국전략의 경우는 ‘11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1. 5)’과 ‘12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12. 5)’에서 계획된 것이며, ‘13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13~2020)’을 통해 더욱 심층적으로 계획될 것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일대일로’는 앞으로 세계의 경제지리와 중국의 경제지리를 재구축하고 궁극적으로 경제통합을 실현할 것이라고 한다.¹⁹

덩샤오핑의 개혁·개방 정책 이래 중국의 두 자릿수 경제성장률은 2010년(10.3%)에 끝나고, 그 후 2011년 9.2%, 2012년 8.1%, 2013년 7.6%, 2014년 7.4%, 2015년 6.9%, 2016년 6.7%, 2017년 6.9%로 중국이 중요시해왔던 8% 유지(保八)를 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시진핑은 중국 경제가 개혁·개방 이후 계속된 고속성장을 끝내고 이미 신창타이[新常態, New Normal]로 진입했다는 논리를 제시했다. 신창타이란 중국이 경제발전의 속도보다는 지속가능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이고,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체제로의 변화에 적응하겠다는 의미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경제가 ‘후진국 → 고속성장 → 생산설비증가 → 과잉생산 → 내수위축 → 성장률 약화’의 구조적 후유증을 겪는 일종의 ‘중진국 함정(Middle income trap)’에서 탈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

중국은 2000년대 이후 중국 동부 연해지역 중심의 대외개방 전략이 점차

19 성균중국연구소 편, 2016, 『일대일로와 다이제스트』, 다산출판사, 35~45쪽.

한계에 봉착하고, 지역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新)성장 동력의 발굴’과 ‘중서부지역 낙후문제 해소’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기 위한 정책이 필요했다. 게다가 2008년 금융위기 대응으로 실시한 경기부양책인 약 4조 위안의 재정지출의 여파로 설비의 공급과잉 상태에 있는 철강, 시멘트와 같은 인프라 관련 산업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신(新)시장”의 개발이 급선무였다.²⁰ 중국 사회과학원의 『경제청서(여름호): 중국 경제성장 보고(2014-2015)』에 따르면, 제13차 5개년 경제개발계획 기간의 경제성장률은 6% 내외로 예측하며 향후 경기둔화에 대응할 것을 건의해왔다.²¹

중국 경제가 고속에서 중속성장 시대로 진입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나온 ‘일대일로’는 처음에는 중국의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유라시아 대륙과 인도양으로 경제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신시장을 개발해 나가겠다는 구상이었다. 그 후 2015년 중국 정부가 연합 발표한 「실크로드 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의 비전 및 행동」 문건이 나오면서부터 ‘일대일로’는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 그리고 2017년 5월 북경에서 개최된 ‘일대일로 국제협력 정상포럼’에는 29개국의 정상 및 100여 국가와 국제기구의 고위급이 참석하여 국제사회의 큰 관심을 끌었다. 그 후 ‘일대일로’는 단순 물류 교역의 신시장 의미를 초월하여 시장과 생산네트워크의 연결과 통합으로 발전하고, 교통과 통신, 산업기반 시설 구축 뿐만 아니라 ‘6대 경제회랑’²² 형성을 위한 제도와 기구의 정비까지 포함하는 중

20 로빈슨·그레이머, “ロンドン直通の「一帯一路」鉄道で中国が得るもの”, http://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17/01/post-6662_1.php (검색일: 2017. 1. 20).

21 『人民网』, “社科院: 今年GDP增速或至6.9%”, <http://finance.people.com.cn/n/2015/0922/c1004-27616233.html> (검색일: 2015. 9. 25).

22 중국이 ‘일대일로’에서 말하는 ‘경제회랑(经济走廊, Economic Corridor)’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과 중국을 철도·도로·송유관 등으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을 말한다. 중국은 ① 중국~파키스탄, ② 방글라데시~중국~인도~미얀마, ③ 중국~몽골~러시아, ④ 유럽~아시아, ⑤ 중국~중앙아시아~서아시아, ⑥ 중국~중남반도(인도차이나반도) 지역을 잇는 6개의 경제회랑 건설을 추진 중이다. 중국의 6대 경제회랑 건설 계획은 주요 경제권의 인프라 통합, 인적 네트워크의 교류, 체제와 기제

국의 대외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일대일로’에 비우호적인 국가들은 ‘일대일로’를 ‘중국판 마셜플랜’, ‘신식민지 전략’, ‘영국의 동인도회사’ 등으로 비유하고 있다.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인구는 44억 명으로 전 세계인구의 63%에 달하고 경제규모는 21조 달러로 세계 경제규모의 29%를 차지한다. 중국은 과거 미국과 유럽이 패권적 국제질서를 추구한 것과는 다르게 ‘일대일로’ 전략 구상으로 호혜와 평등 원칙, 이익공동체 이념으로 공동평화발전의 새로운 세계질서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중국은 ‘일대일로’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해 AIIB를 출범시켰고, ‘일대일로’ 사업만을 위한 4,000억 달러의 실크로드 기금(Silk Road Fund)도 조성했다.

중국의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장옌성[張燕生] 비서장은 ‘일대일로’는 새로운 35년(2014~2049)의 기본적 대외노선이라고 한다. “지난 1978년부터 2014년까지의 35년이 제1막으로서 중국이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도광양희의 시대’²³ 라면 2014년부터 2049년까지 향후 35년은 제2막으로서 ‘일대일로’를 향한 팍스차이나의 대국굴기 시대로 기록될 것이라고 한다.”²⁴

‘일대일로’의 경제적 의의는 첫째, 신흥시장 진출을 통해 경제성장의 동력을 확보하여 과잉생산과 과잉산업 문제를 해소하고, 둘째, 세계의 공장과 시장으로 부상하면서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된 데 따른 필요한 자원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셋째, 지역 불균형 발전과 도농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장[新疆] 등 소수민족의 독립운동까지 약화시키려는 것이고, 넷째,

의 연동을 기본 원칙으로 추진되고 있다.

23 일반적으로 개혁개방 이후 중국의 대외 전략을 논할 시, 개혁개방 이후를 도광양희, 1997년 홍콩 반환 이후를 유소작위, 그리고 지금을 분발유위의 전략 이념으로 정리할 수 있다.

24 최정식, 2015. 6. 17, “중국판 대국굴기 일대일로”, 『상하이저널』, <http://www.shanghai.org/shanghai/mobile/news.php?mode=view&num=44264> (검색일: 2017. 7. 10).

경제영토를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등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통합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²⁵ 즉 중국은 ‘일대일로’ 연선국가들을 상대로 “중국 중심의 메가 경제권”²⁶을 형성하여 인민폐의 국제화를 실현하겠다는 의도로 보아도 무방하다.

후안강은 더 나아가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의 세계화 전략이 실현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그 이유로 첫째, 중국의 경제지리 재구축이 심화되고 통합되어 발전의 균등화를 실현하게 될 것이고, 둘째, ‘일대일로’ 경제지리가 재구축되고 상호연결, 상호소통이 이루어져 유라시아 대륙의 통합과 공동발전이 가능하고, 셋째, 세계 경제지리가 재구축되어 글로벌 인프라의 현대화가 이루어져 세계경제를 성장시킴으로써 세계화가 실현되며, 남북문제(North-South problems)²⁷의 대균등화가 촉진될 것이라고 한다.²⁸

2. 지정학적 의미

중국공산당 정치의 특수성에 비추어 중국 외교부장의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발언 순서와 내용은 중국이 당면한 외교현안의 우선순위와 같다. 2017년 3월 8일 왕이 외교부장의 외신 기자회견에서의 답변 순서는 ‘일대일로’, 미·중 관계, 그리고 시진핑 집권 1기 외교결산 순이었다. 중국 외교의 최우선 순위는 ‘일대일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시진핑이 직접 주재한 ‘주변외교공작좌담회(2013. 10)’와 ‘중앙외사공작회의(2014. 11)’에서 밝힌 ‘주변우호협력지대’를 확

25 이강국, 2016, 『중국의 新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 BookStar, 2쪽.

26 Jean-Marc F. Blanchard, 2017, “Probing China’s Twenty-First-Century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MSRI): An Examination of MSRI Narratives,” *Geopolitics*, pp. 251~253.

27 한반도의 남한과 북한의 문제가 아니고, 세계적 차원에서 주로 북반구에 위치한 선진공업국과 적도 및 남반구에 위치한 저개발국가 사이의 발전과 소득격차에서 생기는 국제정치·경제의 구조적 문제.

28 성균중국연구소 편, 2016, 앞의 책, 44~49쪽.

대하는 것이다.

‘주변우호협력지대’ 확대란, 미국과 일본이 각각 ‘아시아 재균형 전략’과 ‘가치관 외교’를 내세우고 미·일 동맹이 아시아판 나토(NATO)를 설립하여 중국을 겨냥하는 포위망을 구축하려는 데 대해, 중국은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상호이익을 증대하여 미·일 동맹의 포위망을 벗어나겠다는 전략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동아시아와는 유교사상, 남아시아와는 불교문화, 중앙아시아와는 실크로드, 동남아시아와는 끊을 수 없는 혈연의 정으로 묶여 있다”는 논리를 제시한 바 있다.²⁹

지난해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대회는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 사상’을 당장(黨章)에 삽입했다. 이 사상은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실천이론으로 ‘시진핑 신시대’ 중국 외교의 핵심을 중화민족의 부흥이라는 목표 실현을 위해 ‘일대일로’와 주변외교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라고 한다. 19차 당대회 이전 6월 『党建研究』에 게재된 중국 상무부장 쑹산[鐘山]의 글에서도 ‘시진핑 신시대’ 중국 외교의 핵심과 주변외교 이념을 강조하고 있다. “18대 공산당대회 이래, 중국 경제사회의 발전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새로운 개방형 경제에 이르렀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사상의 지도를 요한다. 시진핑 지도자가 시세(時勢)를 잘 살피 국내와 국제 양쪽 정세를 총괄하여 새로운 시대 전면적인 대외 개방 ‘대전략’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세계를 향해 나가려 한다. 호혜공영을 견지하며 정확한 의리관(義利觀)의 경제외교사상을 수립하여 ‘일대일로’의 대사업을 주창하였다. 아프리카 대륙을 향한 진(眞)·실(實)·친(親)·성(誠)의 정책 이념의 견지와 ‘주변’을 향한 친(親)·성(誠)·혜(惠)·용(容)의 주변외교 이념을 견지하는 것이 ……우리당 치국이정(治國理政)의 신이념이고 신사상이고 신전략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³⁰

29 『人民日報』, 2014. 8. 21.

30 중화인민공화국상무부 홈페이지, “钟山部长《党建研究》刊文：实现我国开放事业新发展新提高新突破”,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706/20170602595587.shtml> (검색일: 2017. 6. 30).

시진핑 스스로도 ‘일대일로’ 제안 이래 지난 3년간 아시아, 유라시아, 아프리카, 유럽까지 ‘일대일로’ 연선의 주요 국가를 방문하는 등 ‘주변 중시’의 다각

【표 1】 2014~2016년 시진핑의 다각적인 정상외교와 ‘일대일로’

-
- △ 2014, 5: 제4차 아시아교류 및 신뢰구축회의(CICA) 정상회의 (상하이)
 - 시진핑의 아시아 新안보관: “아시아의 안보문제는 아시아인이 처리해야 한다”
 -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브릭스(BRICS)개발은행, 실크로드기금 설치 추진
 - 푸틴과의 정상회담에서 ‘중·러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를 한층 더 강화
 - △ 2014, 7: 한국 단독방문 (한·중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 △ 2014, 8: 몽골 단독방문 (중·몽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 △ 2014, 9: 타지키스탄, 몰디브, 스리랑카, 인도 등 중앙·남아시아 4개국 순방
 - 시진핑은 인도 일간지 『힌두』에 “아시아 변영의 세기를 향하여” 글 기고
(중·인 전면적 전략협력 동반자 관계 격상)
 - △ 2014, 11: 북경 APEC 정상회의의 계기, 중·일 정상회담 개최
 - 중·일 ‘관계 개선 4개항 합의문’ 작성하여, 중·일 ‘전략적 호혜관계(2008)’로 복귀 희망
 - △ 2014, 11: 시진핑 체제 출범 후 첫 ‘중앙외사공작회의’ 개최
-
- △ 2015, 4: 파키스탄 방문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반동회의’에 참석
 - △ 2015, 5: 카자흐스탄 방문과 러시아에서 개최된 제2차대전승리70주년 기념식 참석, 벨루시아 방문
 - △ 2015, 7: 제7차 BRICS 회의와 15차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로 러시아 방문
 - △ 2015, 9: 미국 방문하여 오바마 대통령과 정상회담 개최 및 유엔설립 70주년 정상회의에 참석
 - △ 2015, 10: 영국 방문과 중·영 정상회담 개최하여 인문교류 강화 등 새로운 중·영 관계 구축
 - △ 2015, 11: 베트남 방문과 중·베 정상회담 개최, 싱가포르 방문과 중·싱 정상회담 개최, 터키에서 개최된 G20 정상회의(11, 14~16) 참석, 필리핀에서 개최된 APEC 회의(11, 17~19) 참석, 파리에서 개최된 기후변화대행회의(11, 29~30) 참석
 - △ 2015, 12: 아프리카의 잠비아 방문과 중·잠 정상회담 개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개최된 중국-아프리카 포럼에 참석(12, 2~5)
-
- △ 2016, 1: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3국 순방, 중국-아랍연맹 ‘일대일로’ 공동건설 추진
 - △ 2016, 3~4월: 체코 방문과 핵안전정상회의 참석
 - 중-체 연합성명과 ‘일대일로’ 건설 양해각서 체결, 핵안전운영공동체설립 건의
 - △ 2016, 6: 세르비아, 폴란드, 우즈베키스탄 3국 방문과 SCO 정상회의 참석
 - 중국과 3국 관계 모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SCO 정상회의에서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SCO 가입 양해각서 체결
 - △ 2016, 10: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인도 방문과 제8차 BRICS 정상회의(인도) 참석
 - 캄보디아의 ‘4각전략’과 중국의 ‘일대일로’ 접목
 - 중-방 ‘일대일로’ 건설 및 방-중-인-미얀마 경제회랑 건설
 - △ 2016, 11: 에콰도르, 칠레, 페루 방문과 APEC 정상회의(페루) 참석
 - 중국과 3국 관계 모두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서 전면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
-

적인 정상외교를 펼쳤다. <표 1>은 시진핑이 국내외서 펼친 다각적인 ‘주변 중시’의 정상외교와 ‘일대일로’의 관련성을 정리한 것이다.

시진핑은 2014년에만 ‘일대일로’ 연선의 18개 나라를 방문했다. 그리고 2015년도에는 8회 출국하여 아시아, 유럽, 미국,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 연선의 10개국을 방문하고 9차례 국제회의에 참석하며 총 42일간 정상외교를 펼쳤다. 그중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순방 기간에는 각국과의 ‘일대일로’ 연계 프로젝트를 논의했으며 파키스탄에서는 실크로드 기금의 첫 번째 해외투자 프로젝트를 체결하기도 했다. 또한 2015년 시진핑은 다각적인 정상외교 활동 결과, 중국의 전승절 70주년 천안문 열병식(9. 3)에는 ‘일대일로’와 연관된 39개국의 국가원수와 관련 국제기구 수장 등이 참석하는 성과를 올렸다.

2016년의 경우, 시진핑은 5차례 출국하여 12개 국가를 방문했는데 이 중 4차례가 아랍·동유럽·동남아 등 ‘일대일로’ 연선과 일치하는 동선이였다.³¹ 그는 1월에 중동의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란 3국을 순방했다. 아랍 국가들은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처이면서 7번째 교역 상대이고, ‘일대일로’의 핵심 경유지이기도 하다. 시진핑은 미국의 경제제재가 풀린 이란 시장을 선점하고 유럽과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일대일로’ 추진에도 적극적이었다. 그는 10월에는 캄보디아와 브릭스(BRICS) 회의 참석차 인도를 방문하고, 방글라데시까지 순방하며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그중 캄보디아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중국과 필리핀의 갈등 시 중국 측 입장을 지지하는 나라 가운데 하나다. 중국 지도부의 다각적인 정상외교의 결과, 2016년 1월 AIIIB³² 공식 출범 시에 57개국 참여를 이끌어내었고, 2017년 5월 기준으로 회

31 『人民日報』, <http://world.people.com.cn/GB/8212/191616/409147/index.html> (검색일: 2017. 1. 2).

32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은 미국과 일본 중심의 아시아개발은행(ADB)과 세계은행(WB) 등에 대항해 중국 주도로 설립하여 2016년 1월 57개국 회원으로 공식 출범. 2017년 5월 기준, 회원국은 한국을 포함해 아시아 역내 회원과 유럽·아프리카·남미 등 비역내 회원 등 77개국(참고로 ADB 회원국은 64개국). 자본금은 1,000억 달러로 시작하여 총 13개 프로젝트에 21억 7,500만 달러의 자금지원을

원국은 77개국으로 증가하여 ‘일대일로’의 추동력을 확보하였다.

슈에리(薛力)에 따르면, “1990년 이래 중국은 비동맹정책을 기조로 하여 동 반자관계 외교를 추진했다. ‘도광양회’ 시기에는 총체적으로 주변국과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다. 지금의 단계에서 중국이 해결해야 할 문제는 미국을 넘어 어떻게 하여 세계 제1의 경제체가 되는 것인가이다. 중국은 2030년 전에 미국을 능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진핑 정부는 이에 대한 처방으로 내외(内外)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전략을 내놓았다.” 그리고 “‘일대일로’ 전략을 잘 실현하기 위해서는 점(点), 선(線), 면(面)의 전략을 잘 구사해야 한다. 즉 ‘점’으로는 미국을 주시하고, ‘선’으로는 몇 개의 해상실크로드를 건설하고, ‘면’으로는 유라시아 대륙을 향하여 전개한다.”³³ 이처럼 ‘일대일로’를 계기로 시진핑 시기 중국 외교의 우선순위는 이전 정부의 ‘강대국 외교’에서 지금의 ‘주변 중시 외교’로 바뀌어가고 그에 따른 전략과 이념도 바뀌고 있다.

미국이 아태지역에서 아시아재균형전략에서 ‘신실크로드 계획’³⁴에 이르기

승인, AIIB 금융지원을 기다리는 프로젝트도 13건. 투자 프로젝트는 주로 에너지 시설 사업, 도시개발, 운송시설개발, 도시재건 등 형태로 다양하다. 국가별로는 인도네시아 관련 프로젝트 사업이 3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이 각각 2건의 사업에 대해 금융지원을 받고 있다. * 한국은 AIIB 내에서 지분투자 규모로 볼 때 중국, 인도에 이어 아시아 회원국 중에서는 3번째(4.07%)로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전체 회원국 중에는 5위에 해당한다. 2017년 4월에는 우리기업이 수주한 조지아(그루지아) 넨스크라 수력발전사업이 처음으로 AIIB 금융지원을 받기도 했다(지원규모는 8,700만 달러로 크지 않았지만 우리기업 입장에서는 AIIB 지원의 물꼬를 텃다는 점에서 유의미). AIIB 최고리스크책임(CRO) 부총재에 선출됐던 흥기택 전 산업은행 회장이 2016년 6월 휴직으로 기구 내 한국 위상은 하락하였지만, 중국을 제외한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2017년 AIIB 연차총회 유치(2017. 5. 16~18, 제주). 참고: ‘AIIB 제주총회’ 뉴스1(2017. 6. 16).

- 33 薛力, 2016, 『“一带一路”与“欧亚世纪”的到来』, 中国社会科学出版社, 113쪽.
- 34 2011년 7월 20일 뉴델리에서 거행된 제2차 미국-인도 전략대화에서 미국의 전 국무장관 힐러리는 ‘신실크로드 계획’을 제안했다. 이 계획은 미군 철수 이후를 대비해 아프가니스탄을 중앙아시아와 남아시아를 잇는 허브로 삼아 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심지어 서아시아를 교통과 경제적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이다. 또한 이로써

까지,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에서 환대서양동반자협정(TTIP)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그물망의 네트워크 권력을 재배치하려는 전략적 의도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다. 중국 역시 이러한 미국의 견제와 봉쇄를 뚫기 위해 ‘일대일로’ 전략과 AIIB 및 BRICS 개발은행 설립을 제안하였고, 대외 권력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해 외부에 대한 자신의 전략적 영향력 범위를 확장하고자 한다.³⁵ 즉 중국의 ‘일대일로’는 지정학적으로 미·일 동맹의 중국 포위망 회피 전략이고, 지경학적으로는 중국 서북 낙후 지역 개발과 함께 중국 경제지리를 재구축하고,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을 통해 세계경제지리를 재구축하겠다는 것이다.

3. ‘일대일로’의 성과와 한계

중국은 이미 육상에서 철의 실코로드를 저장성에서 출발하여 유럽까지 운영하고 있고, 해상에서는 인도양과 지중해로 중국의 원유 등의 해양 수송로인 ‘진주목걸이’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의 주요 항만시설 등은 이미 중국의 군사기지로 안착되고 있다.

2017년 1월에 개통한 중국 저장성 이우시[義烏市]에서 영국 런던까지의 철도화물 노선은 중국의 지정학적 야망을 그대로 보여주었다. 중국은 중앙아시아, 중동, 유럽 지역과 철의 실코로드를 연결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대경제권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리고 7월에는 이우시에서 체코의 수도 프라하까지 달리는 화물열차가 개통되었다. 이 열차는 프라하-폴란드-벨루시아-러시아-카자흐스탄-신장자치구(아라산코우, 阿拉山口)를 경유하여 중국 저장성으로 들어오는 노선인데, 운행시간은 16일로 해상의 경우에 비해 훨씬

“에너지 남하(能源南下)”, “제품 북상(商品北上)”을 통한 역내 경제통합을 추진하려는 것이며, 동시에 중국의 서진전략을 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된다. 참조: 涂波·원동욱, 2017,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과 남아시아 권력구도의 변화 전망: 네트워크 권력이론에 기초한 분석」, 『현대중국연구』 제18집 4호, 42쪽.

35 涂波·원동욱, 2017, 위의 글, 53쪽.

짧다.³⁶

해상에서는 중국이 ‘차항출해(借港出海)’ 방식으로 세계적 지정학적 요충지의 항만 개발과 운영권을 확보하고 이를 선으로 연결하여 ‘진주목걸이’를 형성하고 있다. ‘진주목걸이’는 <그림 1>의 지부티-파키스탄-몰디브-스리랑카-방글라데시-미얀마-캄보디아-말레이시아를 경유하여 남중국해를 거쳐 중국의 연해지역으로 연결된다. ‘진주목걸이’ 전략의 거점 항구들은 미얀마 차우퉁(Kyaukpou), 방글라데시 치타공(Chittagong), 스리랑카 콜롬보(Colombo)와 함반토타(Hambantota), 파키스탄 과다르(Gwadar), 지부티 오보크(Obock), 수단 포트수단(Port Sudan), 탄자니아 바가모요(Bagamoyo), 남아프리카공화국 리처드베이(Richards Bay) 등이다.³⁷ 중국은 이미 2012년에는 스리랑카의 함반토타항, 2013년에는 파키스탄의 과다르항, 방글라데시의 치타공항, 그리고 미얀마의 시트웨(Sittwe)항에 대한 건설 개발권과 운영권을 확보했다.



36 『人民日報』, <http://pic.people.com.cn/n1/2017/0720/c1016-29416435.html> (검색일: 2017. 7. 20).

37 이장훈, 2017. 1. 25, 「날개 단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주간동아』 1073호, 96~97쪽.



그리고 <그림 2>의 특징은 중국이 생각하는 세계적 주요 거점 항구들은 처음에는 상업적 차원에서 운영권을 계약하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중국의 해외 군사기지로 전이(轉移)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은 미얀마,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 인도양 국가에서 중국 민간회사들을 통해 상업항들을 확보하고 이를 연결해 자신들의 해로 안보를 지키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이런 상업항 확보는 비용이 많이 들고, 유사시의 군사작전에 활용하기에는 제한이 많았다. 그래서 근래 중국은 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소규모 군사력을 주둔시키거나, 민간 활용도 가능한 시설을 확보하는 쪽으로 전환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군사과학아카데미가 2013년에 출간한 전략보고서는 해외에 보급 거점과 제한적인 군사력 주둔을 설치하고, 관련 지역에 정치적,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뒤 중국은 아프리카 지부티에서 첫 해외 해군 전초기지를 만들었다.³⁸

38 “지부티에서 현실화되는 중국 최초 해외 군사기지”,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china/757666.html#csidx7aa2ec37b018576be1ec132eaae5e7e> (검색일: 2017. 5. 20).

중국 언론에 따르면, 선진룡[沈金龍] 중국 해군사령관은 11일 광둥성[廣東省] 잔장[湛江]의 한 군사 항구에서 지부터 기지 창설을 선포하고, 기지 초대 사령관으로 임명된 량양[梁陽] 전 해군 대변인에게 군기를 수여했다. 출정식을 끝낸 병력들은 1만 9,000t 규모 종합상륙함 징강산[井岡山]호와 반잠수선 동하이다오[東海島]호에 올라 지부터로 향했다.³⁹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구상은 공간적으로는 대륙과 해양을 망라하고 있으며 세계를 중국의 전략 공간으로 보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 국가들은 중국의 과도한 팽창에 대해 과거 조공·책봉과 화이(華夷)사상을 근간으로 한 전통시대 중화 중심의 세계질서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고 있다. 정용니엔[鄭永年]에 따르면, (동)아시아는 역사적으로 ‘중화 세계질서’와 ‘민족국가체제’의 두 형태의 국제질서를 경험했다고 한다. 시진핑 집권 이래 지금의 중국은 ‘중국특색’을 더 강조하며 중화민족의 부흥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중국이 생각하는 새로운 세계질서는 무엇인가?

무엇보다 중국은 조공체제와 화이사상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 중화 세계질서로는 회귀하지 못할 것이라고 한다. 이유는 주권 국가가 현대의 보편적 가치로 수용되고 있기 때문에 만일 중국이 과거의 조공질서를 추구한다면 이는 전 세계적인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 그렇다고 중국이 서구 주도의 현 국제질서를 그대로 수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이 바라는 건 이미 규범이 존재하는 현대 국제질서를 따르면서 여기에 중국 ‘특색’을 정교하게 더한, 즉 ‘중국 특색의 현대 국제질서’ 수립이라고 한다. 즉 중국이 꿈꾸는 세계질서는 주권 국가로 구성되지만 강대국과 약소국 간의 영향력 차이가 존재하는 일종의 “등급질서”라고 한다. 이 등급질서는 세계적으로는 몇몇 강대국이 이끌어가는 다극체제이되 적어도 동아시아 역내에서만은 중국이 주도적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다.⁴⁰

39 『环球网』,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7-07/10966469.html> (검색일: 2017. 7. 13).

40 이정남, 2017. 7. 19, “중국이 꿈꾸는 동아시아…서열 존재하는 형제관계 추구”, 『중앙일보』.

‘중국 특색의 현대 국제질서’ 논리를 오늘날 중국과 주변국 관계의 현실에 비추어보면 다음과 같은 논리가 성립된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과 관련하여 동의하는 주변국에게는 경제적 혜택을 주기 위해 중국 시장을 열어주고, 중국의 핵심이익에 반하는 행동을 하거나 말을 듣지 않는 나라에게는 중국 시장을 무기로 오히려 ‘경제보복’ 카드를 사용하고 있다.

〈표 2〉는 중국의 ‘핵심이익’ 수호와 그에 대한 ‘경제보복’ 조치 사례이다.

21세기 중국과 (동)아시아는 중국의 핵심이익 논리와 (동)아시아 일부 국가들과의 역사·영토·안보 갈등의 복합적 요인으로, 중국이 ‘일대일로’에서 강조하는 공동발전의 윈-윈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중국은 동중국해에서 일본과의 영토 갈등, 남중국해에서 동남아 일부 국가와의 영토 갈등 및 미국과의 안보 갈등, 한반도에서 역사 갈등과 사드 갈등, 그리고 인도와는 국경

〈표 2〉 중국의 ‘핵심이익’과 ‘경제보복’ 조치 사례

- △ 2003년 태평양의 섬나라 키리바시가 대만을 승인하고 외교 관계 수립하자,
 - 중국은 가차없이 모든 원조를 중단하고 키리바시에 세웠던 위성주적기 폭파.
 - 아프리카의 라이베리아나 감비아, 동남아의 동티모르도 대표적 사례 (대만과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는 22개국뿐임). * 단, 라이베리아는 다시 중국과 수교 재개한 후 경제적 이익 쟁김.
- △ 2007년 독일 메르켈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나자, 중-독 재무장관 회담(베이징) 파기.
- △ 2008년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이 달라이라마를 만나자, 고위층 방문 중단, 에어버스 150대 구매 지연, 프랑스계 할인매장 카르푸 불매운동과 매장 습격이 일어남.
- △ 2010년 ‘9.7 센카쿠사건(일본 순시선이 센카쿠 인근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한 사건)이 일어나자, 중국은 대일 회토류 수출 중단 선언(이후, 일본이 중국을 WTO에 제소하여 일본이 승리).
- △ 2010년 중국 내 반체제 인사인 류사오보[劉曉波]에게 노벨 평화상이 수여되자,
 - 중국은 (류에게 상을 준 것은 중국 체제 흔들기로 규정) 노르웨이산 연어 수입 금지.
- △ 2012년 영국의 캐머런 총리가 달라이라마를 만나자, 중국은 영중 정상일정 취소하는 등 영중 관계 냉각.
 - 1년 반 뒤 캐머런이 사상 최대 경제 사절단을 이끌고 중국 방문하자 중국은 (‘일대일로’를 염두에 두고서) 영국에 막대한 규모의 경제협력 약속.
- △ 2013년 필리핀이 남중국해 영유권 제소하자, 필리핀산 바나나·망고 수입 금지.
- △ 2016년 몽골이 달라이라마를 초청하자,
 - 중국은 ‘일대일로’ 프로젝트의 핵심이던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 계획을 중단하고 국경을 지나는 차량에 통관세 부과.

출처: 『중앙일보』, “달라이라마 만났다고...중국 보복외교”(2016. 12. 19) 참조하여 재정의.

분쟁 중에 있다. 현재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 구상이 (동)아시아 역외 국가들로부터는 대체로 큰 호응을 받고 있지만,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주변 국가들로부터는 그렇지 못하다. 문제는 중국이 중국의 ‘핵심이익’ 논리와 (동)아시아 도처에 진행 중인 갈등과 분쟁 요인들을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이다.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의 목표 달성을 위해 ‘일대일로’를 세계화 전략으로 구상하고 있는 만큼, 또 ‘일대일로’의 국지적 성공이 아니라 세계적 성공을 원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국은 자신만의 기준인 ‘핵심이익’의 논리를 주변국이 “수용”할 정도로 정교하게 하여 (동)아시아 도처의 갈등 요인을 선결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 연선의 요충지인 (동)아시아 역내 거점 국가들로부터 계속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IV. ‘일대일로’의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시진핑은 ‘중국의 꿈’ 즉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추진함에서는 “반드시 중국의 길[中國道路]을 걸어야 하고, 중국의 정신[中國精神]을 선양해야 하며, 중국의 힘[中國力量]을 결집해서 실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⁴¹ 즉 글로벌 표준이 아닌 중국적 표준에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중 전면적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는 2015년 9월 중국의 전승절 기념 천안문 행사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석하면서 최고조에 이르렀다. 하지만 그 후의 한중 관계는 ‘사드’ 이전과 이후로 분명하게 분리되었다. ‘사드’ 이후의 한중 관계에 대해 이희옥은 미래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성장통”⁴²으로 진단한다. 필자도 이에 동의하지만, 문제는 ‘중국적 표준’을 강조하는 시진핑의 한반도

41 전인갑, 2017. 3. 15, “사드 배치는 시진핑의 ‘중국의 꿈’ 께는 시발점인가”, 『중앙일보』.

42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2017, 『한중수교 25년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7쪽.

인식도 ‘중국적 표준’과 같은 맥락에 있다는 점이다. 2010년 당시 부주석이었던 시진핑은 한국전쟁[抗美援朝] 참전 60주년 좌담회에서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과 관련해 평화를 지키고 침략에 맞선 ‘정의로운 전쟁’이었다는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그리고 지난해 4월 트럼프와의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한국은 중국의 일부였다”는 역사인식도 드러낸 바 있다. 금년 3월 양회에서 중국 주석의 임기 관련 헌법 수정안이 통과되어 시진핑은 향후 오랜 기간 국가 최고지도자의 지위에 머무를 수 있게 됐다.

중국의 정치사회와 정치제도는 집단지도부 체제에서 ‘1인 체제’로 변화하고 중국표준이 더 부각되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중국의 협조와 함께 북한문제(핵과 미사일)를 해결하고 외교지평을 유라시아로 확대하는 ‘신북방외교’를 전개해야 한다. 이에 대한 실현 가능한 전략의 일환으로 한국은 한중 관계의 갈등 요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에 한반도(북한)를 연계시키는 전략을 고려할 수 있다.

중국 학계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주변외교에서 중요 국가 순위를 러시아, 카자흐스탄, 파키스탄, 동남아시아(ASEAN), 한국, 일본 순으로 나열하고 있다. 중국은 ‘일대일로’ 건설에서 동북아지역의 몽골과 북한에 대해서는 협력의 공간이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로 (한국이) ‘일대일로’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 중국의 동아시아 지역정책에서 중점 협력 대상국으로 간주하고 있다.⁴³ 또한 “한국이 ‘일대일로’의 연선국가는 아니지만 중국의 ‘일대일로’와 한국의 ‘유라시아이니셔티브’가 나아가려는 방향은 일치하고 지역 범위도 겹치며, 양국의 유라시아 전략을 접목하기에 유리한 기초를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⁴⁴ 중국 학계의 분석이 이러하다면,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를 어떻게 한반도에 연결시키며, 한국의 유라시아 진출을

43 薛力, 2016, 앞의 책, 239쪽.

44 朴英愛·张国林, 2016, 「中国“一带一路”与韩国“欧亚倡议”的战略对接探析」, 『东北亚论坛』2016年 第一期, 108쪽.

어떻게 구상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첫째, 중국 동북지역과 한반도의 연계성에 대해 연구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국내 많은 연구자들이 ‘일대일로’는 서진(西進)이어서 그 동쪽은 배제되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중국은 2003년 ‘동북진흥계획(振興東北規劃)’, 2009년 ‘랴오닝연해 경제벨트(遼寧沿海經濟帶)발전계획’, ‘창지투[長吉圖]개발 프로젝트’,⁴⁵ 그리고 ‘중국 동북지역과 러시아 극동 및 동시베리아 지역협력 계획 강요(2009~2018)’ 등을 시행해왔다. 그리고 중앙정부는 2007년 ‘동북진흥 3년 평가보고(東北振興三年評價報告)’를 바탕으로 중국 동북지역을 태평양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북한과 러시아 극동의 항만시설에 대한 장기 사용계약을 체결해왔다. 중국 동북지역 접경지역에서 중국이 주도하는 일련의 초국경 연계 지역개발 프로젝트가 북한, 러시아, 몽골 등 주변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 등과의 경쟁관계를 염두에 둔 장기적 국가전략으로 시행되고 있다.⁴⁶ 따라서 한중

45 국가급 개발계획으로, 길림성의 창춘시-지린시-연변자치주의 투먼시를 연계하고 중국적으로는 북한의 나진항과 선봉항을 연결하여 중국이 동북아 물류의 허브를 구축하겠다는 프로젝트.

46 김수한, 2012, “중국동북진흥전략의 진화”, 한중 Zine INChinaBrief, vol. 221, 인천발전연구원. 참고로, 김수한은 ‘동북진흥계획’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적 상세히 서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3년 후진타오 집권부터 낙후된 동북3성 진흥전략(振興東北規劃)을 수립하여, 10월에는 ‘동북지구 등老공업 기지 진흥전략 실시’에 관한 몇 가지 의견(关于实施东北地区等老工业基地振兴战略的若干意见)을 하달한 바 있다. 당시의 동북진흥전략은 전통적인 국유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완결 짓는 동시에 향후 경쟁력을 지닌 산업구조로의 전환을 목적으로 출발하여, 국유기업 개혁과 GDP 성장 등 일부분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동북지역을 상대적으로 폐쇄적인 내부순환경제에서 동북아 개방형으로 전환하는 목표에는 이르지 못하였다. 그래서 2007년 5월 중국은 ‘동북진흥 3년 평가보고(東北振興三年評價報告)’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대외연계 비전을 구체화했다. 8월에 발표된 국무원 동북진흥영도소조가 발표한 ‘동북지구진흥계획(東北地區振興規劃)’의 8조 2항에 따르면, (동북지역의) 발전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대외개방을 확대해야 하며 그 구체적 대상으로 러시아, 몽골, 북한을 적시하고 있다. 중국은 이들 국경접경 국가와 초국경 연계 협력을 위한 프로젝트를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동북진흥전략으로 진화하고 있다. 동북진흥전략 진화의 일환으로 랴오닝연해 경제벨트(遼寧沿海經濟帶) 발전계획을 비롯한 지역발전 계획이 국가급 계획으로 격상되어 승인되었다.

양국은 한반도와 접경을 이루는 중국 동북지역에서 ‘일대일로’의 접점을 찾을 수 있다.

둘째, 중국이 주도하는 ‘일대일로’의 6대 경제회랑 중 ‘중-몽-러 경제회랑’과 연계하는 방법이다. 6대 경제회랑 중 한반도와 맞닿은 유일한 ‘일대일로’의 동진(東進) 노선은 중국~몽골~러시아 경제회랑이다. <그림 3>에서 보듯이 한반도와 연결되는 노선으로 ‘두만강 교통회랑’(2번 노선)이 있다. 몽골에서 중국의 창춘과 훈춘을 거쳐 두만강을 따라 동해로 빠지는 노선이다. 이 노선은 한국이 오랫동안 공을 들여온 두만강개발계획(GTI)과 연동되고 장차 육로로 대륙과



이어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한다.

최필수에 따르면, 중·몽·러 경제회랑의 1~3번 노선 중 한국이 원하는 루트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은 어렵지만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한다. 몽골 인구 300만, 극동러시아 640만보다는 북한 2,500만, 남한 5,000만이 훨씬 큰 시장이고 산업 배후이기 때문이다. 몽골이나 극동러시아의 수요만 보면 대규모 인프라 투자의 효용이 크지 않다. 풍부한 수요와 산업배후를 지닌 한반도가 유라시아 물류 네트워크 동맥에 피를 공급해 투자의 효용을 몇 배로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⁴⁷ 결국 관건은 북한과의 관계이나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지금의 한반도 상황을 고려하면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중국이 현재 운행 중인 육상 실크로드의 연선을 한반도의 철도와 연결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AIB 연차총회(제주) 축사에서 남과 북이 철도로 연결될 때 ‘일대일로’의 완전한 완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남북 철도 연결’을 ‘일대일로’ 구상에 접목시켰다. 한반도 종단철도(TKR)는 남북 간의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수송비용 절감과 수송시간 단축 등으로 동북아 경제협력 확대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반도 종단철도는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몽골횡단철도(TMGR), 만주횡단철도(TMR)와 연결되어 유럽과 동북아시아 시장을 육상으로 연결하는 실천적 연구가 필요하다.

V. 맺음말

2013년 시진핑 주석의 ‘일대일로’ 제안 이래 제19차 당대회(党大會)와 제13차 전인대(全人大)를 거치면서 ‘일대일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수정헌법과 당장(党章)에 삽입되었다. 중국은 지금 당·정부·싱크탱크가 혼연일체가 되

47 최필수, 2017. 9. 19, “중국의 ‘일대일로’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인가”, 『중앙일보』.

어 ‘일대일로’에 대한 대단한 응집력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지난해 5월 중국사회과학원이 주관한 ‘일대일로’ 학술회의 그리고 금년 5월 중국 상하이사회과학원이 UN 기구까지 초청하여 주관한 ‘일대일로’ 학술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바 있다. 두 차례 학술회의에서 필자가 느낀 점은 중국 학자들의 발언에는 ‘일대일로’에 대한 지정학적 논리 접근으로 듣기에 좋은 발언은 많으나, 지정학적 요인과 동아시아 역내 갈등 요인 등 듣기에 거북한 발언은 거의 없었다. ‘일대일로’는 지정학적으로 미·일 동맹의 중국 포위망 회피 전략이고, 지정학적으로는 중국 서북 낙후 지역 개발과 함께 중국 경제지리를 재구축하고, 개도국에 대한 인프라 건설을 통해 세계경제지리를 재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노태우 정부의 ‘북방정책’ 이래 김영삼 대통령과 김일성의 정상 회담 불발,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동북아균형자론’, 이명박 정부의 ‘비핵 개방 3000 구상’,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유라시아이니셔티브’ 등 역대 정부의 북방전략과 유라시아 전략이 ‘북한문제’에 가로막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 중국이 제안한 ‘일대일로’ 구상은 21세기 중국의 유라시아 전략 구상으로 한반도와 연계되면 한국은 유라시아에서 전략적 요충지가 된다. 그러나 한국 내에서는 ‘일대일로’가 중국의 서부 내륙과 연해 기점의 서진(西進), 남진(南進) 전략이어서 한국과는 관련이 없다는 논리가 지배적이다.

필자는 한국 내 ‘일대일로’의 기존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국의 ‘일대일로’ 노선이 서진, 남진이어서 한반도와는 무관하다는 지리적 논리에는 동의하기 어렵다. 그 대신 중국 동북지역에서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일련의 동북진흥정책의 진화와 ‘중·몽·러’ 경제회랑의 실제적 경제성, 그리고 2018 평창올림픽 이후 ‘한반도 탈냉전기’ 평화체제 구축의 실현 가능성(특히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나온 남북한 철도 연결)에 비추어, ‘일대일로’와 한반도는 직접적으로 연계될 것이다. 향후과제는 한반도와 중국의 윈윈을 위해 중국의 과도한 팽창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 대한 선제적 연구와 연선국가와의 역사, 영토, 안보 갈등에 대한 국제적인 공동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성균중국연구소 엮음, 2017, 『한중수교 25년사』,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 양승윤 외, 2003, 『바다의 실크로드』, 청아출판사.
- 외교통상부, 2012, 『중국개황』, 외교통상부.
- 이강국, 2016, 『중국의 新실크로드 전략: 일대일로』, BookStar.
- 이승주 편, 2016, 『일대일로: 중국과 아시아』, 명인문화사.
- 이희옥·서정경 편, 2016, 『일대일로 다이제스트』, 다산출판사.
- 이희옥·차재복 외, 2012, 『1992~2012 한중관계 어디까지 왔나: 성과와 전망』, 동북아 역사재단.
- 차재복 외, 2015,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동북아역사재단.
- 권선홍, 2017, 「전통시대 유교문명권의 책봉·조공 제도 부정론에 대한 재검토」, 『국제정치논총』.
- 김수한, 2012, 「중국동북진흥전략의 진화」, 한중 Zine INChinaBrief vol. 221.
- 김옥준, 2015,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과 정치·경제적 함의: 실크로드 경제벨트 구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연구』.
- 김홍규, 2016, 「중국 일대일로 전략과 동북아 국제관계 변화: 한계점과 전망」, 『중 소 연구』.
- 涂波·원동욱, 2017, 「중국-파키스탄 경제회랑과 남아시아 권력구도의 변화 전망: 네트워크 권력이론에 기초한 분석」, 『현대중국연구』.
- 백원담·천광성, 2016, 「중국과 비(非)중국: 타이완과 홍콩 다시보기」, 『황해문화』.
- 楊伯江, 2015, 「동북아지역은 역사와의 공생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한중일 3국 관계: 새로운 협력을 향하여』.
- 원동욱, 2016, 「중국의 지정학과 주변외교: ‘일대일로’를 중심으로」, 『현대중국연구』.
- 이동률, 2017, 「시진핑 정부 ‘해양국가’ 구상의 지정학적 접근과 지정학적 딜레마」, 『국제정치논총』.
- 이정태, 2017, 「중국 일대일로 전략의 정치적 의도와 실제 분석」, 『대한정치학회보』.
- 이호철, 2017, 「중국의 부상과 지정학의 귀환」, 『한국과 국제정치』.

- 薛力, 2016, 『“一带一路”与“欧亚世纪”的到来』,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薛力, 2017, 『“一带一路”: 中外学者的剖析』, 中国社会科学出版社.
- 宋海啸, 2016, 『中国外交决策模式』, 时事出版社.
- 习近平, 2014, 『习近平谈治国理政』, 外文出版社.
- 阎学通 等, 1998, 『中国崛起: 国际环境评估』, 天津人民出版社.
- 阎学通·孙学峰, 2005, 『中国崛起及其战略』, 北京大学出版社.
- 王义桅, 2015, 『“一带一路”: 机遇与挑战』, 人民出版社.
- 王义桅, 2016, 『世界是通的‘一带一路’的逻辑』, 商务印书馆.
- 刘鸣 主编, 2016, 『中国周边地缘环境新趋势: 理论分析与战略应对』,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张声振·郭洪茂, 2006, 『中日关系史 第一卷』, 社会科学文献出版社, 社会科学文献出版社.
- 郑永年, 2016, 『中国崛起: 重估亚洲价值观』, 东方出版社.
- 郑永年, 2016, 『中国改革路线图 东方出版社』, 东方出版社.
- 中国现代国际关系研究院, 2015, 『“一带一路”读本』, 时事出版社.
- 胡德坤, 2010, 『反法西斯战争时期的中国与世界研究』, 武汉大学出版社.
- 金玲, 2015, 「“一带一路”: 中國的馬歇爾計劃?」, 『國際問題研究』第1期.
- 朴英爱·张国林, 2016, 「中国“一带一路”与韩国“欧亚倡议”的战略对接探析」, 『东北亚论坛』第一期.
- 余建華, 2015, 「万隆會議, 中國亞非外交与万隆精神的当代弘揚」, 『國際關係研究』.
- 袁新濤, 2014, 「“一带一路”建設的國家戰略分析」, 『理論月刊』第11期.
- 中國現代國際關係研究院世界政治所課題組, 2017, 「中國特色大國外交穩中有進」, 『現代國際關係』.
- 馮仲·平黃靜, 2016, 「中歐“一带一路”合作的動力, 現狀与前景」, 『現代國際關係』.
- Blanchard, Jean-Marc F., 2017, “Probing China’s Twenty-First-Century Maritime Silk Road Initiative (MSRI): An Examination of MSRI Narratives, *Geopolitics*.”

언론·인터넷 자료

- 이장훈, 2017. 1. 25, 「날개 단 중국의 진주목걸이 전략」, 『주간동아』 1073호.

- 『人民日報』, 2014, 7. 20.
- 『人民日報』, 2014, 8. 21.
- 이동률, 2017. 8. 22, “한·중 관계 25년의 성과와 교훈”, 『중앙일보』.
- 이정남, 2017. 7. 19, “중국이 꿈꾸는 동아시아…서열 존재하는 형제관계 추구”, 『중앙일보』.
- 전인갑, 2017. 3. 15, “사드 배치는 시진핑의 ‘중국의 꿈’ 깨는 시발점인가”, 『중앙일보』.
- 최필수, 2019. 9. 19, “중국의 ‘일대일로’는 우리에게 그림의 떡인가”, 『중앙일보』.
- “리셋 코리아 통상정책 발상 전환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2017. 6. 12.
- “지부티에서 현실화되는 중국 최초 해외 군사기지”, 『한겨레신문』, 2016. 8. 21.
- 「推動共建絲綢之路經濟帶和21世紀海上絲綢之路的願景與行動」, <https://www.yidaiyilu.gov.cn/yw/qwfb/604.htm> (검색일: 2017. 6. 1).
- Wade Shepard, “Is China’s ‘New Silk Road’ Really A Recipe For Peace?”, <https://www.forbes.com/sites/wadeshepard/2017/03/19/is-chinas-new-silk-road-really-a-recipe-for-peace/#20f242ee4afc> (검색일: 2017. 3. 22).
- Brahma Chellaney, “China’s Imperial Overreach”, <https://www.project-syndicate.org/commentary/one-belt-one-road-china-imperialism-by-brahma-chellaney-2017-05> (검색일: 2017. 5. 26).
- <http://www.nikkei.com/article/DGXKZO12659850Y7A200C1EA1000/>(검색일: 2017. 3. 24).
- “社科院：今年GDP增速或6.9% 增長目標恐難實現”, <http://www.headnews.cn/2015/0922/422632.shtml> (검색일: 2015. 9. 25).
- “ロビー・グレイマー, “ロンドン直通の「一帯一路」鉄道で中國が得るもの”, http://www.newsweekjapan.jp/stories/world/2017/01/post-6662_1.php(검색일: 2017. 1. 20).
- 최정식, “중국판 대국굴기 일대일로”, 상하이저널(2015. 6. 17), <http://www.shanghaiabang.com/shanghai/mobile/news.php?mode=view&num=44264> (검색일: 2017. 7. 10).
- “鐘山部長《党建研究》刊文：實現我國開放事業新發展新提高新突破”, <http://www.mofcom.gov.cn/article/ae/ai/201706/20170602595587.shtml>(검색일: 2017. 6. 30).

- <http://world.people.com.cn/GB/8212/191616/409147/index.html> (검색일: 2017. 1. 2).
- <http://world.huanqiu.com/exclusive/2017-07/10966469.html> (검색일: 2017. 7. 13).

중국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와 한반도에 대한 시사점

차재복

시진핑 주석은 제18차 공산당대회에서 집권한 이래 계속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 중국의 꿈이라고 외치고 있다. 시진핑의 ‘중화민족의 부흥’은 아편전쟁과 청일전쟁 등 서구 열강의 전통시대 중화질서의 파괴를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21세기에도 (동)아시아의 주도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치열하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아·태지역에서 아시아재균형전략,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현대서양동반자협정(TTIP)의 네트워크 전략으로 중국의 팽창을 견제하고, 중국은 고대 육·해상 실크로드를 복원하는 ‘일대일로’ 전략으로 미·일 동맹의 견제를 회피하고, 나아가 인류운명공동체를 건립하겠다고 한다. 중국의 ‘일대일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경제적 이익 증대와 함께 중국의 역사·영토·경제·안보 팽창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도 병존하고 있다. 이 글은 시진핑 집권 이래 중국이 ‘일대일로’를 제안한 역사적 배경, 국제사회의 여론을 짚어보고, ‘일대일로’의 전략적 의의를 분석하여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을 고찰한다.

주제어: 전통시대 중화질서, 시진핑, 중화민족의 부흥, 일대일로, 주변외교, 한반도

ABSTRACT

The Strategic Significance of China's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Cha Jaebok

Since coming to power at the Communist Party of China's 18th National Congress, Xi Jinping has been proclaiming that China's dream lies in the "great revitalization of the Chinese people." This dream dear to China may historically remind some of how the Sinocentric world order became dissolved by Western powers through the Opium Wars and the First Sino-Japanese War. And even in the twenty-first century, China continues to fiercely compete with the United States for hegemony in Asia. The United States is trying, with Japan, to keep China in check through strategies to rebalance Asia and create its own networks such as the Trans-Pacific Partnership (TPP) or the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TTIP). To avoid the check imposed by the United States-Japan alliance, China has launched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to restore ancient land and sea routes along the Silk

Road and eventually build a “community of common destiny.” Like two sides of the same coin, the Chinese initiative simultaneously triggers expectations for East Asian countries to enjoy increased economic benefits and geopolitical concerns over China gaining greater clout in historical, territorial, economic, and security affairs. This paper reviews the historical background behind the One Belt, One Road initiative as well as international society’s opinion of this initiative and then analyzes the initiative’s strategic significance in order to consider the implications it may have for the Korean peninsula.

Keywords: Traditional Sinocentric world order; Xi Jinping; Revitalization of the Chinese people; One Belt, One Road; Diplomacy with neighboring countries; Korean peninsula

대만의 티베트사(史)

연구 동향과 쟁점

심혁주 |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HK연구교수

- I. 머리말
- II. 대만의 티베트 연구 배경과 현황
- III. 주요 연구기관과 성과 분석
- IV. 흐름과 변화
- V. 맺음말



I. 머리말

오늘날 티베트[西藏] 연구가 가장 왕성한 나라는 중국, 일본, 대만 그리고 미국과 유럽의 몇 나라를 들 수 있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은 티베트 관련 연구자와 기관 및 관련 학술지 발간의 정도와 정기적인 국내외 학술세미나의 양적·질적 수준으로 가늠한 것이다. 국내에서도 개인적 혹은 학제적 공동연구를 통하여 티베트에 대한 학술적 성과가 다방면에서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아시아에서 중국과 일본 그리고 대만이 추구하는 티베트 연구는 배경과 목적 면에서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가령 중국의 티베트사(史) 연구는 ‘서남공정’을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가 역사편입을 노골적으로 진행해오고 있는 반면 대만은 연구자의 개인성향과 학술적 가치관에 따라 연구결과가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유는 간단하다. 대만은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의 전폭적인 재정지원과 자유스러운 학술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이후 전반적인 대만의 티베트 연구상황과 변천동향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대만의 티베트사 연구의 발전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한다. 두 번째, 따라서 위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대만의 주요 티베트 연구기관과 연구자들, 그리고 그 학자들의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그 동향과 궤적을 추적할 것이다. 세 번째, 대만의 티베트 연구동향은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대만 학자들의 연구방법과 경향 그리고 변천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특징과 변천의 흐름이 있다면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분석할 것이다. 네 번째,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 중의 하나는 중앙 대지방, 한족 대 소수민족, 소유와 배분의 학술적 사유를 가지는 구조 속에서 로컬

* 투고: 2018년 2월 10일, 심사 완료: 2018년 5월 7일, 게재 확정: 2018년 5월 25일

* 이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과제(NAHF-2014-PS-04)로 수행되었음.

리티(locality)에 관한 이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같은 티베트 연구를 진행해도 중국 정부는 연구자에 비해 기득권자의 입장인 반면 대만은 이와 같은 학술적 구조에서 벗어난 중앙 대 지방의 관계가 아니란 점이다. 즉 대만은 국가 내지 중앙의 입장에서 티베트를 바라보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인데, 그런 학술적 풍토는 우리에게 어떤 학문적 방향의 시사점을 제시해줄 수 있을까. 만약 가능하다면 국내 학계의 소수민족 혹은 변방의 학술문제를 좀 더 구체적인 학문연구의 독립적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II. 대만의 티베트 연구 배경과 현황

본문에서 다루고자 하는 학술기관과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대만국립정치대학교(臺灣國立政治大學校)의 민족학과와 민족연구소(民族研究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유는 그곳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고 근현대 티베트 관련 연구와 연구자들의 중심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주장 중의 하나는 민족연구소가 발행했던 『서장연구논문집(西藏研究論文集)』과 『서장연구회신(西藏研究會訊)』 그리고 현재 정기적으로 발행되고 있는 『민족학보(民族學報)』 등은 근현대 대만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인정받는 티베트 관련 학술지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 외에도 대만중앙연구원(臺灣中央研究院)의 언어역사연구소(言語歷史研究所), 대만대학교(臺灣大學校)의 인류학연구소(人類學研究所), 문화대학교(文化大學校)의 화교와 민족연구소(華僑與民族研究), 중화불학연구소(中華佛學研究所), 불광대학문화연구소(佛光大學文化研究所) 등이 대만에서 티베트 연구에 일조를 하고 있어 참조하였다. 또한 대만 정부 행정원 산하의 몽장학술연구중심(蒙藏學術研究中心)은 티베트 관련 저술과 문화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고 관련 학술지 『몽장현황(蒙藏現況)』을 매월 발행하여 대만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기관에서 발행한 티베트

관련 학술서와 프로젝트도 참조하였다.

1950년(民國 39) 중화민국(中華民國) 정부가 대륙에서 건너온 이후, 초창기 정치와 치안의 안정화의 화두 속에서 대만의 모든 학술연구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었다. 오히려 당시는 민심과 경제를 위해 정부가 무역교류와 내수에 치중하는 시기였다. 그러다가 1955년(民國 44) 대만국립정치대학교의 부활 이후 본격적으로 학과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때 정치대학교에는 대만에서 처음으로 변정(邊政)학과를 만들었는데 주요 영역으로 몽고, 티베트, 위구르 분야를 개설하여 학생들을 가르치고 법학사(法學士) 학위를 수여했다. 이러한 흐름은 1968년(民國 57)까지 계속되었는데, 관련 자료 수집의 한계와 전문성 있는 지도교수의 부재로 연구환경은 열악한 편이었다. 1968년 변정학과는 민족사회학과(民族社會學科)로 개명하고 같은 해에 변정연구소(邊政研究所)라는 전문적인 학술연구기관을 창립하였다. 이 지점에서 티베트는 서장(西藏)이라는 명칭으로 주요 연구대상 중의 하나로 개설되었다.

대만의 티베트사 연구수준과 발전은 초기 중국과 일본의 저명한 학자들의 발언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의 티베트 학자 야마구치 츠이호[山口瑞鳳, 1926~]는 1984년 대만에서 개최한 ‘국제변강학술회의(國際邊疆學術會議)’ 참석하여 대만 학자들의 연구방법과 티베트 문헌 독해능력 등에 아쉬움을 피력했다. 또한 1989년에는 중국의 대표적 티베트 학자인 왕야오[王堯]는 대만에서 주최한 국제학술토론회에서 「장학연구대만(藏學研究台灣)」을 발표하였는데 대만은 당시 중국대륙과의 정치적 관계로 인한 현지답사의 제한으로 티베트의 역사와 민속, 인류학, 고고학 방면의 연구는 발전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평했다.¹ 여기에는 대륙에서 대만으로 이주해온 티베트 전문가가 거의 없던 것도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면서 대만의 티베트 연구는 수준 이하라고 폄하했다. 일본의 만족(滿族) 학자 나스루[那思陸] 또한 대

1 王堯, 1989, 「藏學研究台灣」, 『西藏研究』 제2기, 總第31기, 台北: 國立政治大學校, 119~128쪽.

만의 변강 연구수준은 “문을 닫아걸고 수레를 만드는[閉門造車]” 수준이라고 평가했다.² 심지어 당시 국립정치대학 변정연구소 소장을 맡고 있던 임은현(林恩顯) 교수조차도 「근 30년간 중국대륙 학자의 서장연구분석(近三十年來中國大陸學者的西藏研究分析)」³에서 대만의 연구자 수준을 평가절하했다.

여기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보면, 1989년 이전까지 대만의 중국변강 연구 그중에서도 티베트 연구수준은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어려운 수준으로 짐작된다.

1. 대만국립정치대학교 민족학과와 민족연구소

앞서 언급한 국립정치대학교의 민족학과와 민족연구소, 중앙연구원의 언어역사연구소, 대만대학교의 인류학연구소, 문화대학의 화교와 민족연구소, 몽장위원회 외에 대만에서 티베트에 관한 학술과 프로젝트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연구기관은 국립정치대학교의 동아시아연구소(東亞研究所), 중산인문사회과학연구소(中山人文社會科學研究所, 현재는 國家發展研究所로 명칭 바뀜), 대만대학교의 국가발전연구소(國家發展研究所), 국립사범대학교의 역사연구소(歷史研究所) 등을 들 수 있다. 본문에서는 지면상의 한계와 내용의 밀도를 고려하여 민족학과 민족연구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이에 버금가는 기타 연구기관을 추가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현재 민족학과는 대만국립정치대학의 사회과학원 소속이다. 초창기 학습목표는 변정(邊政)인재 배양에 편중되었다. 당시(1957) 필수 교과과정으로 개설된 과목은 〈변정통론〉, 〈어문〉, 〈종교〉, 〈역사〉, 〈지리〉, 〈변강건설〉 등이었다. 오늘날의 민족학과가 있기까지 세 차례의 개명 시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2 1989년 5월 6일, 대만정치대학교 변정연구소가 주최한 “中國邊疆研究理論與方法” 학술토론회에서 말했다.

3 林恩顯, 1989, 「近三十年來中國大陸學者的西藏研究分析」, 『西藏研究論文集』第二輯, 台北: 國立政治大學校, 305~313쪽.

1955년(民國 44) 변정학과(邊政學系)로 출발한 본과는 1969년(民國 58) 민족사회학과로 개명됐다. 그리고 1981년(民國 70) 사회학과로 바뀌었다. 1993년(民國 82) 결국 몇 차례의 학과 명칭을 변경한 후, 현재의 민족학과(民族學系, Department of Ethnology)로 변경되었다.

학과의 변천사를 볼 때, 1969년 변정연구소(邊政研究所)의 설립은 주목할 만하다. 이 연구소는 몽고 학자 자치스킨[扎奇斯欽]의 주도로 설립되었는데, 변정학과와 상위 학술기관으로 중국 변경민족에 관한 연구를 주도하였다. 초창기 교학의 중점은 중국 변경의 역사와 언어에 두었다. 당시 주근전(周昆田), 이원죽(李元簇), 유의당(劉義棠), 임은현(林恩顯), 당홀(唐屹) 등이 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면서 변정연구소는 중국 변경의 역사, 언어, 민족, 사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에 매진할 수 있었다.

2. 몽장위원회(蒙藏委員會)⁴

몽장위원회는 대만 행정원 산하로 1984년 창립되었으며 격월로 『몽장현황(蒙藏現況)』을 발간해오고 있다. 몽장위원회의 시초는 1912년 중화민국 정부에서 설립한 몽장공작처(蒙藏工作處)로 볼 수 있다. 몽장공작처는 그해 7월에 중화민국 행정원이 관할하는 몽장국(蒙藏局)으로 개편되었다. 그러다가 1914년에는 중화민국 총통부가 관할하는 몽장원(蒙藏院)으로 다시 개편되었다.

중국국민당이 국공 내전에서 패하자 중화민국 정부를 난징에서 타이베이로 이주하였고, 중국공산당은 베이징을 수도로 중화인민공화국을 건국하여 분단되었다.

현재 『몽장현황』과 같은 몽고와 티베트에 관한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 외에도 관련분야의 전문적인 연구자를 섭외하여 연구를 위탁하거나 저서 출간을 유도하고 있다.(다음의 표 참조)

4 <http://www.mtac.gov.tw/index.php> 참조.

몽장위원회 위탁 연구항목

연도 (민국)	저자	저서/논문제목	티베트 史
87. 6	薄音湖	明代蒙古史論 八五期	
87. 4	廖淑馨	民主改革後的蒙古國家大呼拉爾－「民主團體聯盟」의國會	
87. 2	王章陵	西藏地區中共의文化事業－從一九五〇年到一九九六年	0
87. 1	黃麗生	論《阿勒坦汗傳》의撰史意識	
86. 9	胡其德	蒙古騰格里觀念의演變	
86. 7	林冠群	中國大陸藏族地區民族研究發展評估	0
86. 6	札木蘇 烏爾杰	草原文化論稿	
86. 5	孫子和	十輩班禪額爾德尼確吉堅贊	0
86. 4	林恩顯	蒙元與夏金高昌의聯姻研究	
86. 2	劉學銚	從法律政治層面看外蒙古問題	
86. 1	王維芳 楊嘉銘	近十年來台灣地區의蒙藏研究	0
86. 1	劉學銚 陳又新	蒙古盟旗制度, 西藏政教制度略述稿	0
85. 7	王章陵	西藏의巨變－從一九四九年到一九九五年	0
85. 7	劉學銚	蒙藏委員會簡史續篇－附歷任委員長簡歷	
85. 6	樊明方	唐努烏梁海	
85. 5	孫子和	十輩班禪圓寂轉世與十一輩班禪坐床之經過	0
85. 5	王章陵	中共西藏教育	0
85. 2	陳慶英	五世達賴喇嘛與第巴桑結嘉措關係探討	0
84. 12	金紹緒	簡述外蒙古經濟變革過程	
84. 11	廖淑馨	西藏現代高等教育之發展	0
84. 7	趙雲田	中外史籍中的理藩院資料選介	0
84. 6	孫子和	中央辦理十四輩達賴喇嘛班禪額爾德尼轉世座床之經過及其意義	0
84. 5	楊嘉銘	對中共「西藏白皮書」引用史實之辯正	0

75. 8	李毓澍	民初中俄呼倫貝爾交涉的探討	
75. 7	趙國材	帕米爾未定界問題考誤	
75. 6	李毓澍	中俄共對立下環繞外蒙的三角關係	
75. 5	王美霞	西姆拉會議後康藏界務研究	0
75. 4	劉學鈺 等	民國四十八年西藏反共抗暴後達賴喇嘛言行之研析	0
75. 3	呂秋文	清末民初西藏地方與中央關係惡化原因之研究	0
75. 2	孫子和	西藏攝政熱振呼圖克圖與中央之關係	0
75. 1	王章陵	論西藏「政教合一制」形成的原因	0
74. 12	王吉林	十三世達賴一生所遭遇之變局	0
74. 11	張劍華	談蒙古戰略地位	
74. 10	葉伯棠	對共產主義的民族理論之批判	
74. 8	黃澎孝	對中共所謂「開拓青海省」之研究	
74. 8	許明銀	西藏佛教的特色—特別就其儀式, 教義與寺廟教學來說	0
74. 7	趙國材	現階段中共統治西藏之政策	0
74. 5	李毓澍	從蒙共六十年來演變對外蒙現況的探討	
74. 4	劉學鈺	如何輔導喀爾瑪克蒙胞從事更高層面政治活動	
74. 3	孫子和	民國十三年以來之中國國民黨與西藏	0
74. 1	王美霞	中共政權下班禪政治角色之研究	0
73. 12	呂秋文	中共與印度之邊界糾紛	0
73. 11	王吉林	達賴與班禪在藏胞中政治地位之研究	0
73. 10	蕭金松	宗教對西藏社會的影響	0
73. 9	黃澎孝	中共治藏政策之研究	0
73. 8	葉伯棠	共匪對流亡海外的達賴喇嘛統戰的分析	0

살펴보면 대부분이 티베트와 몽고, 중국 기타소수민족, 변강에 관한 저서들인데 이 중 티베트에 관한 논문 혹은 저술은 전체 편수의 3분의 2에 해당되는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몽장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월1회) 발간하는 『몽장 현황월보(蒙藏現況雙月報)』⁵를 보면 몽고와 티베트에 관한 서평과 사진을 수록

하고 있는데 대중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학술지로 판단된다.⁶

III. 주요 연구기관과 성과 분석

1. 변정연구소와 민족연구소

초창기 정치대학교에 개설된 커리큘럼(티베트 포함)과 담당교수⁷는 <표 1>과 같이 집계된다.

<표 1> 변정연구소 주요 과목과 담당교수

학과와 연구소	커리큘럼과 담당교수	개설된 커리큘럼 수	교수 수
정치대학교 변정연구소(1969)	① 변경정책연구(劉又棠) ② 동북사와 문화연구(李學智) ③ 만주사회 연구(陳捷先) ④ 만주어와 문법(李學智) ⑤ 동북국토연구(蔣君章) ⑥ 몽고사 연구(唐屹) ⑦ 몽고 어법연구(哈勘楚倫) ⑧ 몽고사회연구(唐屹) ⑨ 몽고정경제도(李疏澍) ⑩ 몽/소 외교관계연구(李疏澍) ⑪ 몽고영토연구(蔣君章) ⑫ 신강역사와 현황연구(林恩顯) ⑬ 신강지리와 국토연구(蔣君章) ⑭ 돌궐사회와 문화(唐屹) ⑮ 위구르어문(劉又棠) ⑯ 티베트사 연구(歐陽無畏) ⑰ 티베트어문(蕭金松)	21	12

5 <http://www.mtac.gov.tw/mtacbook/>.

6 확인해보면 2001년 1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총 42회 출판했다.

7 林恩顯, 1989, 『邊政通論』, 台北: 華泰出版社, 20쪽.

	⑱ 티베트사회와 문화(蕭金松) ⑲ 티베트지리(蔣君章) ⑳ 중공소수민족정책연구(趙洪茲) ㉑ 중국변경현황연구(林恩顯) ㉒ 변경과 국방연구(葛敦華)		
정치대학교 사회학과(1981)	① 변정통론(林恩顯) ② 변강민족과 사회(劉义棠) ③ 변경지리연구(蔣君章) ④ 변경문화연구(胡良珍) ⑤ 몽고어와 문법(哈勤楚倫) ⑥ 티베트문법(蕭金松)	6	6
합계		27	18

변정연구소 커리큘럼⁸

(1) 필수과목

과목명칭	학점	비고
中共邊疆政策之研究	4	*
邊疆史研究	4	(蒙古, 西藏, 新疆, 東北, 西南)
邊疆社會	2	(蒙古, 西藏, 突闕維吾爾, 滿洲, 西南)
邊疆語與文法	8-10	(蒙古, 西藏, 突闕維吾爾, 滿洲, 西南)
① 中國邊疆通論 ② 中國民族志 ③ 中國邊疆民族史	2	학부 필수과목
人類學導論	2	필수과목

8 林恩显, 1993, 「民族研究教學的回顧與展望」, 『民族學報』 제20기, 台北: 台北出版社, 182~185쪽.

(2) 선택과목

과목명칭	학점	비고
研究方法	4	*
邊疆政策研究	2	蒙古, 西藏, 突厥維吾爾, 滿洲
邊疆地理探索	2	蒙古, 西藏, 新疆, 東北
邊疆宗教探索	2-4	(1)불교연구 (2)이슬람교연구
邊疆政經探索	2	*
邊疆教育研究	2	*
邊疆與國防	2	*
大陸少數民族政策之研究	2-4	*
中國邊疆涉外關係研究	2-4	*
族群關係	2	*
民俗學探究	2	*
邊疆專題	2	*
蒙古專題	2	*
西藏專題	2	*
新疆地區專題研究	2	*
東北地區專題	2	*
西南地區專題	2	*

당시 변정연구소는 『변정연구소연보(邊政研究所年報)』를 매년 출간했다. 이 학술지는 1970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1988년까지 모두 19호를 발행했다. 19호까지 수록된 논문은 모두 174편인데 항목별로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변정연구소연보(1-19기)』 연구항목과 집계⁹

지역 종류	동북	몽고	신장	티베트	서남	대만산지	기타	총계
정치	9	7	2	3				21
사회	4	4			1	4	1	14
경제						2		2
언어	4	3	3	5			1	16
외교	3	6	2	3	2		14	30
법(法)		3						3
역사	10	13	9	2	1		5	40
사료연구 개황과 평가	4	1	1	1	1		1	9
종교		4		8		1		13
기타	2	2	3	3	1	1	14	26
합계	36	43	20	25	6	8	36	174

변정연구소가 1992년 7월(1990년 이후 변정연구소는 민족연구소로 개명함)까지 학계에 제출하고 공유한 논문은 총 118편인데 정리하면 〈표 3〉과 같다(民國 60~81년).¹⁰

〈표 3〉

항목	동북	몽고	신장	티베트	서남	대만 원주민	기타	총계
정치	2	13	11	8		2		36

9 林恩顯, 1984, 「國際中國邊疆學術會議紀要」, 『邊政研究所』 제15기, 台北: 國立政治大學校, 189쪽.

10 林恩顯, 1993, 앞의 논문, 190쪽.

사회	1	9	6	3		4	1	24
경제		4	1	1				6
문자		2				1		3
외교	5	6	7	7		1	5	31
군사	1	3	3	1				8
종교				1			1	2
문헌								1
기타						2	5	7
합계	9	37	28	21	0	10	12	117

초기 변정연구소에 이어 1990년도에 설립된 민족연구소는 티베트 관련 커리큘럼과 담당교수를 확장하고 다양화하였다(〈표 4〉 참조).

〈표 4〉 민족연구소 티베트 관련 개설과목 상황(민국 81)

개설과목	교수	필수	선택	학점 상/하
장족역사	王吉林	v		2/2
티베트문법	蕭金松	v		3/3
티베트불교	蕭金松		v	2/2
중국민족지	蕭金松	v		2/2
티베트현황연구	張駿逸		v	2/2
티베트 사회	蕭金松	v		2/2

당시 민간단체가 주도하여 설립된 서장협회(西藏協會)도 있다.¹¹ 이 단체는 2002년 12월 15일 타이베이 복화반점(福華飯店)에서 창립대회를 개최

11 『編輯小組』, 「西藏研究會訊」 제13기, 1992, 31쪽.

하였다.¹²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날 대만의 티베트 연구는 정치대학 민족연구소가 매년 2회(4월, 10월)에 걸쳐 『민족학계(民族學界)』라는 전문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으로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대학의 동아연구소(東亞研究所)와 국가발전연구소(國家發展研究所), 정치대학 산하 부설연구기관인 국제관계연구센터[國際關係研究中心]의 간행물인 『중국대륙연구(中國大陸研究)』와 『문제와 연구[問題與研究]』를 통해서도 티베트의 정치나 경제 현황 등을 읽어 볼 수 있다.

2. 연구자와 성과들

대만에서 소위 티베트[西藏]라는 학술적 탐색은 초창기 몇몇 학자들이 저술한 책 속에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예를 들면 주곤전(周昆田)의 『중국변강민족간사(中國邊疆民族簡史)』(1961)와 이부동(李符桐)의 『변강역사(邊疆歷史)』(1962) 등이다. 이 책들은 대만에서 처음으로 중국 변강의 역사와 민족들을 통론식으로 정리한 것인데 유의당(劉義堂)은 7년 뒤 이 책들을 참고삼아 더욱 체계적이고 균형 잡힌 『중국변강민족사(中國邊疆民族史)』(1969)¹³를 출간했다. 이때부터 티베트의 역사는 대만에서 본격적으로 소개되기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

대만에서 초창기 변강 연구와 티베트 연구를 시도한 학자들로는 고장주(高長柱), 능순성(凌純聲), 예일부(芮逸夫), 구양무외(歐陽無畏) 등을 들 수 있다. 예일부는 대만문화대학교의 ‘민족과 화교연구소’에 재직하면서 티베트 역사에 관한 연구와 교학을 주도하였다. 그의 저서 『당대남조와 토번[唐代南詔與吐蕃]』¹⁴은 그의 관심영역을 대변해주는 대표작이다. 대만에서 티베트 역사 전문

12 당시 대만입법원 원장 梁蕭茂, 몽장위원회 위원장 吳化鵬 그리고 葛維新(당시 海工會의 부주임)과 몽장위원회 티베트 사무처장 劉學妣 등이 참석했다.

13 劉義堂, 1969, 『中國邊疆民族史』, 台北: 台灣中華書局.

가로 손꼽히는 왕길림(王吉林)도 그의 제자다. 왕길림은 박사학위 논문 「당대남조와 이당관계의 연구(唐代南詔与李唐关系之研究)」¹⁵를 예일부의 지도하에 완성한 후, 문화대학교 민족과 화교연구소에서 티베트사를 가르쳤다.

구양무외는 대만에서 티베트 연구, 특히 불교(밀교) 연구의 한 획을 그은 전설적 학자로 분류된다. 그는 중국 강소흥국(江西興國) 출생이지만 일찍부터 티베트자치구 라싸에 소재하는 드레퐁(Drepung, 哲帮寺) 사원으로 출가하여 티베트 밀교에 정진한 이력이 있다. 사원에서 ‘게시[格西]’ 학위를 수여받은 후, 1954년에 대만으로 들어왔다. 그의 삶에서 인생의 전반기가 불교적 수행이라면, 후반기는 대만에서 학문적 열정으로 티베트 교학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1959년 그는 대만정치대학교의 변정학과에서 티베트어[藏語]와 티베트 불교 강의를 시작으로 그의 후학 양성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¹⁶ 그는 그동안 대만에서 전혀 다루지 않았던 티베트 불교 과목을 새롭게 개설하고 제자 양성에 힘을 기울였다. 신설된 과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티베트 고전문법으로 불리는 〈松居巴〉, 〈大今居巴〉, 〈司徒讲义〉 등을 비롯하여, 티베트 희극에 관한 내용으로 〈蓮花林的故事〉, 〈色日仙女傳〉과 5대 달라이 라마의 저서인 〈西藏王臣记〉, 〈西藏政治史〉, 〈西藏佛教史〉, 〈世界广说〉 등이다.¹⁷ 그의 열정과 교학에 힘입어 대만의 티베트 연구는 새로운 발전단계로 접어든다. 당시 그가 가르친 제자들은 소금송(萧金松), 서신등(徐新登), 장준일(张骏逸), 진우신(陈又新), 호진삼(胡进衫), 임관군(林冠群), 여추문(吕秋文) 등이라 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대만에서 티베트 연구의 다양한 업적을 내놓는다. 2세대 연구자들이라

14 芮逸夫, 1960, 「唐代南詔与吐蕃」, 文刊『西藏研究』, 台北: 中国边疆历史语文学会, 46~79쪽.

15 王吉林, 1976, 『唐代南詔与李唐关系之研究』, 台北: 中国学术著作獎委员会.

16 張駿逸 主編, 2000, 『欧阳无畏教授逝世八週年紀念論文集』, 台北: 蒙藏委員會, 2~12쪽.

17 萧金松, 1986, 「欧阳无畏教授近年所授西藏学课程」, 文刊『西藏研究会迅』 제 1기, 14쪽.

할 수 있는 이들의 특징은 스승의 티베트 스타일의 교학방식과 태도에 절대적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구양무외 덕분에 당대 대만의 티베트사와 불교 연구는 한 단계 올라서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티베트 현지에서 교학의 경험을 가진 구양무외의 열정 덕분이라 할 수 있다. 대만의 티베트 연구는 이들을 통해서 1990년 후반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성과를 낼 수 있었고 국제교류도 가능해졌다.

3. 티베트사 연구

1990년대 후반기부터 대만의 티베트 연구는 활성화되기 시작했는데 이는 1세대 연구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은 2세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면에서 학술성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표 5) 참조).

〈표 5〉 분야별 주요 학자와 저작물

세부 영역	학자	주요 논문과 저작물
역사	扎奇斯钦	『邊疆教育』, 『北亞游牧民族與中原農業民族之間的和平戰爭與貿易之關係』, 『蒙古与西藏历史关系之研究』
	胡耐安	『邊政通論』, 『中國民族志』, 『邊疆宗教』
	王吉林 ¹⁸	『唐代南詔與李唐關係的研究』, 『唐初与吐蕃关系之发展』, ¹⁹ 『吐蕃信史时代的开始—松赞干布时代的吐蕃及其与唐的关系』, ²⁰ 『从大非洲之役到太宗时代与吐蕃的关系』, ²¹ 『唐玄宗时代唐与吐蕃的战争』, ²² 『唐與吐蕃關係中的祿東贊家族』, ²³ 『藏族原流研究』 ²⁴
	林冠群	『吐蕃贊普松德贊研究』, 『吐蕃贊普墀松德贊研究』, ²⁵ 『藏族族源之商榷』, ²⁶ 『唐代吐蕃史料研究』, ²⁷ 『唐代吐蕃政局的剖析』, ²⁸ 『唐代吐蕃政治制度研究』, ²⁹ 『論唐代吐蕃史及其史料』, 『唐代吐蕃的社會構造』, 『苦命的文成公主』, 『唐代吐蕃的僧侶體制』, 『唐代吐蕃的相制』
	呂秋文 ³⁰	『中印邊境問題之一‘麥克馬洪線’』, 『西藏政教合一制度下權力構造之分析』, 『清季民初西藏地方與中央關係惡化原因之研究』, 『中英西藏外涉始末』, 『中俄外蒙古交涉始末』, 『清季英俄在西藏之分析』, 『近年來達賴喇嘛海外活動之分析』

역사	李方柱 ³¹	『鉢禦道考』, ³² 『馬重英考』, ³³ 『吐蕃大相祿東贊考』, ³⁴ 『古代西藏碑文研究』 ³⁵
역사	莊吉發	『滿語, 滿族史專題研究』
역사	汪幼絨 ³⁶	『藏族傳說所呈現的文成公主』, ³⁷ 『文成公主與唐蕃古道』, 『唐朝文化輸入吐蕃之考察』,『松贊干布時代佛教初傳西藏的其个疑點』
역사	張駿逸 ³⁸	『民國以來西藏與中央的關係』,『美國在西藏問題上的角色分析』,『達賴喇嘛訪俄背景之分析』
역사	楊嘉銘 ³⁹	『政教合一制度下西藏當權者之研究(1750-1911년)』, ⁴⁰ 『滿清治藏之軍事措施』,『清代西藏對中央進貢制度的探索』,『清代西藏官錢概述』,『清代駐藏大臣族裔考』,『清代西藏的軍事制度』,『康藏分界問題探索』
역사	馮明珠 ⁴¹	『近代中英西藏之交涉(1876-1924)』, ⁴² 『中英西姆拉會議』,『張蔭棠與西藏5·4運動與西藏』,『近代中英西藏交涉與川藏邊境』
역사	孫子和 ⁴³	『民國13年以來之中國國民黨與西藏』, ⁴⁴ 『抗戰前中央與西藏關係術略』,『清季自強運動期間之藏事』,『英印侵略康藏邊境術要』,『中國與印度邊界衝突之研究』
역사	楊和普 ⁴⁵	『青海記』,『爲‘西藏行程’加注』,『再版, 18世紀初期的中國與西藏』
역사	胡進彬	『清朝漢文奏撤專輯』,『清朝平定羅卜藏丹津叛亂的研究』
종교	蕭金松	『西藏文法典‘松居巴’及‘大金局巴’研究』,『清代初設駐藏大臣經過考』,『清代初置駐藏大臣原因之探索』,『清代駐藏大臣的職權』
	陈又新 ⁴⁶	『元朝时期萨迦派略述稿—以萨班八思巴叔侄为主』, ⁴⁷ 『第十三世達賴喇嘛新政之研究』,『漢藏譯文對照六十頌如理論』,『月稱著六十頌如理』,『論釋藏文漢譯』,『西藏政治史』
	林崇安	『佛教因明理論的探討』,『前弘時期印度與漢地佛教之傳入西藏與影響』,『西藏佛教後弘時期之源流與思想』,『漢藏因明的傳譯研究』
언어와 문자	幸勉	『古代藏語和中古漢語語音系統的比較研究』,『簡介古藏語輔音群對現代拉薩語聲調的影響』,『藏語的語音的特性』,『藏漢語詞的比較』
	孫天心	『談安多藏語若爾蓋話的一種特殊語音現象』,『中印邊界‘麥克馬洪’地區的民族及語言』
	龔煌城 ⁴⁸	『藏緬語的格助詞』,『從漢藏語的比較看上古漢語若干聲母的擬測』,『從漢藏語的比較看漢語上古音流音韻尾的構擬』
예술과 현황	林恩顯	『突厥研究』,『清朝在新疆的漢回隔離政策』,『政大邊政,民族學研究教學的回顧與展望』,『邊政通論』,『中國邊疆研究理論與方法』
	廖淑馨	『對中共制頒西藏地方性法規的研析』,『文革前中共治藏政策的研究』,『西藏現況綜合分析』

- 18 중국문화대학 사학과 박사, 중국문화대학 사학과 교수이다. 그는 대만에서 唐代吐蕃 연구의 시작을 주도한 학자로 손꼽힌다. 그는 원래 중국 고대 북방민족에 관심이 있었으나 芮逸夫, 欧阳无畏의 영향으로 唐代邊疆史 연구로 그 연구방향을 전환했다. 그는 특히나 南詔와 吐蕃에 관심이 많았다. 그는 주로 당과 토번의 역사적 관계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했는데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唐代南詔與李唐關係的研究」, 「唐初与吐蕃关系之发展」, 「吐蕃信史时代的开始-松赞干布时代的吐蕃及其与唐的关系」. 왕길림은 清대의 藏族史 연구에도 적지 않은 성과를 내었다.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의 두 가지를 들 수 있는데 「達賴與班禪喇嘛在藏胞中政治地位之研究」와 「十三世達賴一生所遭遇的變局」이다. 그는 청대의 티베트사와 관련하여 두 편의 석사학위논문을 지도하기도 했다. 「十三世達賴喇嘛與中央關係之研究」(陳素主, 정치대학변정연구소 석사학위논문, 1990)와 「第9代班禪喇嘛與中央關係之研究」(吳雪嬌, 정치대학변정연구소 석사학위논문, 1995). 이 두 논문의 특징은 대만고궁박물관에 소장된 티베트 원본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왕길림 외에도 대만에서 티베트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戴慶齡의 「吐蕃音義考」, 蘇瑩棹의 「論當時敦煌陷蕃的年代」, 宋龍泉의 「唐朝對吐蕃文化的影響」, 馮藝超의 「唐代與吐蕃和親之研究」, 郭瑋瑋의 「西藏主權的演變: 以吐蕃王朝時期爲主」 등이다.
- 19 王吉林, 1988, 『中華民國蒙藏學術會議論文集』, 台北: 蒙藏學術研究中心, 209~224쪽.
- 20 王吉林, 1988, 『西藏研究論文集』 제1집, 台北: 西藏研究委員會, 1~18쪽.
- 21 王吉林, 1989, 『西藏研究論文集』 제2집, 台北: 西藏研究委員會, 19~38쪽.
- 22 王吉林, 1993, 『西藏與中原關係國際學術研討會論文集』, 台北: 西藏研究委員會, 38~67쪽.
- 23 「漢學研究」 제4권 제2기, 497~507쪽. 중앙도서관, 『漢學研究中心』, 1986, 臺北.
- 24 王吉林, 1990, 『西藏研究論文集』 제3집, 台北: 西藏研究委員會, 31~48쪽.
- 25 林冠群, 1987, 「中國文化大學史學研究所博士論文」, 臺灣: 中國文化大學.
- 26 林冠群, 1982, 『中國邊政』, 제80기, 台北.
- 27 林冠群, 1985, 『大陸雜誌』, 제70권 제4기, 台北.
- 28 林冠群, 1988, 『中華民國蒙藏學術會議論文集』.
- 29 林冠群, 1990, 『蒙藏專題研究叢書』(47), 台北: 蒙藏委員會.
- 30 그는 원래 外蒙古 문제의 전문가이다. 그러다 1971년 이후 티베트 문제에 관심을 보여왔다. 본문 <표 5> 속의 그의 주요 논문을 보면 그는 주로 外交學을 주요 키워드로 설정하여 저술하고 있는데 특히 청 말의 漢藏관계, 티베트의 내부구조, 티베트의 대외관계, 중국과 인도의 변계 문제 등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 31 대만에서 제일 먼저 唐代的 吐蕃史를 연구한 학자이다. 그는 1951년과 1960년에

당대 토번의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을 고증하는 논문을 작성했다. 바로 「鉢禦逋考」와 「馬重英考」에 관한 논문이다. 이 두 편의 논문은 비록 장편은 아니지만 돈황문헌의 토번사 사료와 토번비각의 자료를 중요한 근거 자료로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서로 다른 사료를 비교 분석하고 藏文을 그 토대로 사용하고 있다. 그는 당대의 토번 인물에 대한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했다는 평을 받았다. 또한 대만에서 돈황문헌과 토번비각을 독해하고 검증할 수 있는 최초의 학자로 인정되었다. 하지만 당시 李方桂가 미국으로 가자 대만에서 대만의 토번사 연구를 진행할 수 있는 학자는 芮逸夫밖에 없어서 이 분야의 연구는 정체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가 1971년 후부터 이 연구 분야는 계속 진행될 수 있었는데 바로 任育才 때문이다. 그는 대만에서 최초로 『吐蕃與唐代關係的研究』라는 토번과 당대의 관계를 다룬 전문적인 저서를 출간했다. 이 책은 한문사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해서 「晚唐 시기, 당조와 回紇 그리고 南詔와 토번의 대외관계와 정책」 등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 32 대만중앙연구원, 1951, 『史語所集刊』 제23본, 臺北.
- 33 國立臺灣大學, 1960, 『문사철학보』 제7기, 臺北.
- 34 이 논문은 1981년 대만중앙연구원이 주최한 國際漢學會議에서 발표된 것인데 그 기록된 방법이 전작 「鉢禦逋考」, 「馬重英考」와 동일해서 중국 학자들도 매우 중시했다. 중국에서 발간되는 티베트 학술지 『西藏研究』 1985년, 제2기, 73~79쪽에 등재되기도 했다.
- 35 이 연구는 중국의 저명한 티베트 사학자 王堯가 당시 토번비문연구에서 최고라고 극찬할 만큼 학문적으로 인정받았다. 이에 관한 기록은 王堯의 「藏學研究臺灣」(125쪽)에서 확인할 수 있다.
- 36 당대 토번연구의 대표적인 여성 학자이다. 그의 석사논문은 「藏族傳說所呈現的文成公主」인데 인류학적인 방법으로 그 신화적인 요소를 설명하고 있다. 역사적 인물인 문성공주가 티베트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지위와 그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 37 국립정치대학 민족연구소 석사학위논문, 1991.
- 38 대만에서 장준일 외에도 원대의 티베트사 연구는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朱寶唐, 「元明時期西藏政教之研究」; 陳杭升, 「元世祖與吐蕃佛教之關係」; 胡進杉, 「西藏政教合一制形成原因之研究」; 楊嘉銘, 「元代宣政院割據的地方建置」; 張哲誠, 「13世紀蒙古人經略西藏之經營」.
- 39 그는 대만에서 티베트를 전 분야에 걸쳐 공부한 엘리트 학자 중의 하나이며 티베트 정치사를 전공으로 했다. 그는 티베트에 대한 광범위한 지식으로 행정, 군사, 경제, 인물 등 다방면에 걸쳐 주제의식을 도출했다.
- 40 중국문화대학, 「民族與華僑研究所」, 석사학위논문, 1983, 臺北.
- 41 그녀는 대만에서 근현대 티베트 외교사 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 42 대만대학 역사연구소 석사학위논문, 1978, 臺北.

대표적인 학자들의 연구배경과 주요 연구영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다만 1세대 변강이론 연구자로 분류되는 임은현은 1987년 타이베이 화태서관(華泰書管)에서 『변정통론(邊政通論)』을 냈다. 이 책은 27년 전 그의 스승인 호내안(胡耐安)의 『변정통론(邊政通論)』(1960)을 이론적으로 보완한 것이다. 그러나 티베트에 관한 서술은 호내안보다 구체적이지 못하다. 호내안의 저서에서는 7장과 10장에서 티베트 역사와 문화를 비교적 자세히 논하고 있지만 임은현은 5장에서만 소개하고 있는 정도다. 그는 초창기 변정연구소를 주도하면서 신강 쪽에 논문을 썼지만 훗날 대만 학계에서 티베트 연구의 발전을 주로 논한다.

소금송과 진우신은 대만에서 티베트 불교사 방법의 권위자로 손꼽힌다. 특히 소금송은 인도에 망명 중인 14대 달라이 라마가 대만을 방문했을 때 통역을 담당할 정도로 티베트어와 불교경전에 능통하다. 그는 주곤진 교수의 지도 아래 『청대 주장대신의 연구(清代駐藏大臣之研究)』(1972)로 석사를 마치고 인도와 네팔로 유학을 다녀왔다. 이는 수행과 체험을 중시하는 스승의 교학방식을 따른 것이다. 유학을 다녀온 후 변정연구소의 소장을 역임한 소금송은 티베트 불교 연구의 활성을 주도했다. 정치대학에서 티베트 언어와 티베트 불교 과목을 담당 한 그는 1998년 ‘불광대학불교문화연구소(佛光大學佛教文化研究所)’로 이직했다.

임관균은 대만에서 토번사(吐蕃史) 연구의 권위자로 꼽힌다. 그의 석사학위 논문은 「李唐, 回紇, 吐蕃三邊關係探索: 以蕭, 代, 德宗時期爲中心」⁴⁹이고,

43 孫子和는 10년간 티베트 관련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대다수가 清末民初의 漢藏관계다. 그 외는 소수의 티베트의 정치와 中印邊務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44 『蒙藏專題研究叢書』(7), 1985.

45 초창기 정치대학 변정학과 티베트어 담당 교수이고 羅桑益西의 제자이다.

46 정치대학교 민족연구소 석사. 현재 몽장위원회 과장으로 재직 중이며 中華佛學研究所에서 티베트어[藏文]를 강의하고 있다.

47 陳又新, 1989, 『西藏研究論文集』 제2기, 台北: 國立政治大學校, 28~42쪽.

48 독일 언어학박사. 현임 중앙연구원 역사언어연구소 언어학영역의 소장이다.

49 국립정치대학교 변정연구소 석사학위논문, 1982, 臺北.

박사학위 논문은 「吐蕃贊普墀松德贊研究」⁵⁰인데 모두 왕길림(王吉林) 교수에게서 지도받았다. 그의 연구영역은 당대토번의 사료(史料), 인물, 제도, 계층, 국내의 관계 등 전방위에 걸쳐서 포괄하고 있는데 주목할 만한 점은 그의 연구방법이다. 그는 티베트어 원전과 둔황(敦煌)문헌, 토번비명(吐蕃碑銘), 교법사료(教法史料), 매장본고적(埋藏本古籍) 등의 일차자료와 필사본을 이용하여 정확한 고증을 추구한다는 점이다. 2007년에는 그동안 그의 당대 토번사 연구성과를 집대성하여 중국 북경에서 『당대 토번역사와 문화논집(唐代吐蕃歷史與文化論集)』으로 출간⁵¹되었는데, 대만 학자로서는 이례적으로 중국 장학계(藏學界)에서 초빙한 토번 연구자로 평가받았다.

장준일은 1977년(民國 66), 정치대학 변정연구소 주곤전 교수의 지도하에 「乾隆末年廓爾喀與西藏軍事衝突之始末及其影響」⁵²으로 석사학위를 받고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元朝與西藏薩迦派關係之研究」로 티베트학[藏學]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는 미국에서 돌아와 정치대학 민족학과에서 <서장전제(西藏專題)>를 개설하여 근대이후 제국주의와 티베트의 관계사를 가르쳤다. 그는 미국에서 귀국한 후 몽장위원회의 원장을 역임하면서 티베트와 몽고의 행정 업무를 맡다가 정치대학 민족연구소의 요청으로 이직해 본격적인 학문과 후학 양성의 길로 들어섰다.

IV. 흐름과 변화

1989년 14대 달라이 라마의 노벨평화상 수상, 중국의 대외개방정책, 양안(兩岸)의 학술교류 증진과 이로 인한 중국 출판물의 대만 유입, 대만 학자의 중국

50 중국문화대학 사학연구소 박사학위논문, 1987, 臺北.

51 중국장학연구센터의 추진 작업 중의 하나인 『西藏通史』 총서 시리즈.

52 정치대학 변정연구소 석사학위논문, 1977, 臺北.

현지답사 허용 등의 국내외적 학술환경의 변화는 대만의 대륙연구, 그중에서도 티베트 연구에 대한 활성화를 촉진시키는 동력이 되었다. 아울러 이 시기 대만의 티베트 연구의 흐름에도 변화가 발생했다. 첫 번째는 ‘명칭’의 변화이다. 대만은 처음 학과의 커리큘럼이나 저서의 출간에서 서장사(西藏史)를 사용했고 장족사(藏族史)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 그런데 1990년대에 들어와 명칭이 ‘서장사’에서 ‘장족사’로 전환되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몰라도 당시 정치대학의 ‘변정연구소’도 ‘민족연구소’로 이름이 바뀌었다. 연구소 내에 개설됐던 〈서장사 연구〉라는 과목 또한 〈장족사 연구〉로 바뀌었다. 두 번째, 초창기에 비해 대만 연구자들의 수준이 높아져 티베트 원전(사료)의 활용능력으로 대만의 티베트 연구는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가령 임관군으로 주도되는 당태토번사(唐代吐蕃史) 연구는 기존의 오류를 수정하고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중국 학자와 대등한 수준이 되었다. 세 번째, 양안(중국-대만)의 학자 교류가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1세대 학자들이 중국대륙과의 학술적 교류가 힘들었던 시대와 달리 2세대 학자들이 활동하던 시기, 즉 1990년대 후반부터 양안 간에 학자와 학술교류는 매우 왕성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중국의 저명한 티베트 역사학자 진경영(陳慶英)과 왕요(王堯)의 대만 방문과 교류는 민족적 관점과 역사관이 판이하게 달랐지만 학문의 교류와 협업이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와 대만 정권의 교체와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사회적 흐름 속에서 뜻밖에도 티베트 역사연구는 정체될 맞게 된다. 당시의 상황을 살펴보면 문화대학 ‘화교와 민족연구소’는 연구소 자체에서 주관하는 모든 학술 활동이 보류 또는 연장되었으며 대륙민족 연구를 하겠다고 신청하는 학생 수도 감소했다. 여기에는 민족연구소도 비슷한 실정이었다. 2000년대 이후 정치대학교 민족연구소가 모집한 ‘티베트 연구조’의 연구생은 매년 1~2명만이 지원했으며, 그 숫자는 오늘날까지 정체되어 있다. 민족연구소의 논문동향(1971~1992년과 2007~2014년도까지)을 살펴보면⁵³ 그 이전의 시기와는 확연한 차이점

53 현재 민족연구소의 논문 범위와 방향은 주로 4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예를

을 보인다. 1986~2007년 사이의 석사학위 논문은 총 105편 정도가 되는데, 그 중 티베트 관련 연구는 총 14편이고 그중에서도 티베트사 논문은 7편이나 되었다. 그러나 2007~2014년 7년 동안 민족연구소에서 티베트 관련 학위논문은 4편에 지나지 않는데 이 중 역사 관련 논문은 한 편도 없다. 하지만 이 기간 동안 대만 원주민 연구에 관한 논문은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연구소와 학과에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하여 필자는 두 가지 대내외 학술환경의 변화를 주요한 요인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우선, 정치대학 민족연구소 내부의 변화다. 2000년대 중반부터 민족연구소의 학술방향은 ‘대륙의 소수민족’ 연구에서 ‘대만 토착민’ 연구로 무게 중심이 옮겨졌다.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민족연구소의 중진학자들이 대만의 정권교체와 더불어 일어난 사회변화를 실감하면서 자신들의 학술적 지향점을 새롭게 전환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동안 학과의 커리큘럼을 주도했던 선배와 스승들의 은퇴와 더불어 공백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 자리를 물려받은 2세대 학자들은 새로운 연구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자신들이 살고 있는 대만의 토착민을 먼저 알고 연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만 토착민들의 삶과 역사, 문화와 전통을 모르고서 대륙의 소수민족을 연구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1세대 교수진들이 앞서 설명한 찰기사흠(扎奇斯欽), 주곤진, 유의당, 임은현, 당홀이었다면 2세대 교수진들은 임수철(林修澈), 장중복(張中復), 소금송, 장준일(張駿逸), 남미화(藍美華),⁵⁴ 장혜서(張慧瑞), 황계평(黃季平), 왕아평(王雅萍) 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 이들 중 임수철, 장중복, 장혜서,⁵⁵ 황계평, 왕아평 등은 대만 원주민 연구를 중시하고 추진하는 중심 학자로 볼 수 있다. 이들 중 임수철은 정치대학에서 몽고로 석사논문을 완성하고 프랑스 파리로 유학해

들면 ① 中國少數民族, ② 台灣原住民, ③ 台灣客家人, ④ 外國(일본·한국·말레이시아 등) 등이다. 최근에는 대만 客家에 연구도 학위논문으로 진행되고 있다.

54 미국 하버드대학 몽고학 박사.

55 호주 인류학 박사. 현재 민족연구소 부교수이다.

역시 몽고사(史)로 박사학위를 받고 온 대만인이다. 그는 모교로 돌아온 후 학과의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본격적으로 대만 토착민의 역사 알리기에 주력한다. 몽고 역사가 전공인 그는 몽고 역사보다는 민족지, 민족답사, 민족이론, 대만 객가족(客家族) 연구 등에 몰두한다. 물론 후학양성과 논문지도 분야도 대부분 대만 원주민 연구로 전환했다. 정치대학 민족연구소는 그의 주도로 대만 원주민 연구의 중심지로 부각된다.

살펴보면 대만의 정치상황과 사회적 변화는 대만 원주민 연구의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즉 당시 대만의 아들로 인정받던 진수변(陳水滙)이 장기집권하던 여당을 물리치고 대만의 새로운 수장이 된 것이다. 총통이 된 진수변의 대만 찾기 운동은 대륙과의 분리를 의미했는데 당시 정치대학 민족연구소의 소장을 맡고 있던 임수철이 주장하던 학문의 로컬리티와 그 맥을 같이하였다. 정부의 지지와 지원을 받은 민족연구소는 대폭적인 커리큘럼의 변화와 강사의 변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정치대학교 내에서 대만원주민연구센터[台灣原住民研究中心, Center for Aboriginal Studies, NCCU, Taiwan]⁵⁶라는 독립된 연구기관을 창립한다. 이 연구기관은 대만에서 처음으로 창립된 대만 원주민 연구의 연구기관으로 초대 소장은 임수철 교수가 초빙되었다. 2007년에 정치대학의 일급연구센터로 승격되었다. 연구센터의 주요업무는 대만 토착민들의 언어, 교육, 문화, 정체성 살리기에 치중하고 있는데 관련하여 『원주민문화영대(原住民文化營隊)』, 『완성원주민족언어능력인증(完成原住民族語言能力認證)』, 『민족언어교재(民族語言教材)』 등의 학술작업을 마쳤다. 2001년에는 대만 최초로 제1차 원주민원어능력시험인증고사(原住民族語言能力認證考試)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년일관원주민족어과본(九年一貫原住民族語課本)』이라는 원주민 교재를 만들기도 했다. 지금은 후속작업으로 『자모편(字母篇)』과 『생활회화편(生活會話篇)』을 진행 중이다. 또한 연구센터는 『원교계(原教界)』라는 월간지를 간행하고 있는데 2005년에 창간되어 지금까지 총 52기(期)를 발행해오고 있다.

56 <http://www.alcd.nccu.edu.tw/index.php?routing=Index&action=index>, 참조.

V. 맺음말

최근 10년간 대만의 티베트 연구, 그중에서도 역사연구는 다른 영역보다 상대적으로 발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주요이유는 사회변화에 따른 학문의 정체성과 현실적으로 취업에 한계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중국에 비해 학계나 행정인력시장이 좁다는 대만 사회의 구조적 모순도 포함된다. 또 하나 본문에서 언급했던 정치대학교 민족연구소의 학술동향과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대만의 대륙연구, 특히나 티베트 역사연구는 정치대학 민족연구소가 그나마 출판과 학술교류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정권교체와 사회변동 그리고 관련 연구자들의 학술경향과 맞물려 변화가 일어났다. 예를 들면 민족연구소의 임수철 교수를 중심으로 하는 대만 원주민 연구와 관련 연구자들의 활동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불어은 대만 원주민 연구는 민족학과와 연구소에서 일정 부분 차지했던 티베트 연구에도 영향을 미쳤다. 1970~2000년대까지 민족연구소에는 티베트 관련 전임교수가 두 명 있었다. 티베트 불교사를 담당하는 소금송과 티베트의 역사와 예술을 담당하던 장준일이다. 하지만 이들은 2007년 이후로 학교에 재직하지 않는다. 소금송은 불광대학(佛光大學)으로 이직했다가 은퇴했고 장준일 역시 학교에서 퇴임했다. 따라서 현재 민족연구소에는 티베트 관련 커리큘럼은 있으나, 재직하고 있는 전임 연구자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티베트 역사 관련 학위논문이나 학술교류는 거의 정지된 수준이다. 이들이 학과에서 물러난 가장 큰 이유는 원주민 관련 교수인력 배치와 커리큘럼의 재편성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정치대학 민족연구소의 원주민 중심의 학문적 전환은 대만 로컬리티(locality) 인문학의 발전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로컬리티 인문학은 로컬(지방)이 처한 현실문제에 관한 실천학과 로컬의 독자적 역동성의 근원인 로컬리티를 인문학적으로 파악하여 로컬의 현장성, 구체성에 주목하여 인간의 정체성을 묻고, 로컬의 가치를 발견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로컬리티 인문학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공간, 토착성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장소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냈던 역사와 전통의 재구성을 의미한다. 대만에서 대륙의 민족연구를 해오던 2세대 학자들은 이러한 로컬리티 가치를 받아들이고 학문적으로 대만 원주민의 삶과 공간, 역사와 문화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것이다. 이는 대만 토착민들의 현실과 위치에 대한 문제의식을 학문적으로 촉발시키는 결과로 발전했다. 이러한 학문적 흐름은 향후 티베트 역사연구의 정체와 더불어 글로벌화, 전 지구적 자본주의화 등에 대비되는 개념으로서 대만 원주민의 로컬리티 연구가 새로운 학문의 영역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1. 연구서

- 王吉林, 1976, 『唐代南詔与李唐关系之研究』, 台北: 中国学术著作獎委员会.
- 王吉林, 1988, 『中华民国蒙藏学术会议论文集』, 台北: 蒙藏学术研究中心.
- 王吉林, 1988, 『西藏研究论文集』 제1집, 台北: 西藏研究委员会.
- 王吉林, 1989, 『西藏研究论文集』 제2집, 台北: 西藏研究委员会.
- 王吉林, 1990, 『西藏研究论文集』 제3집, 台北: 西藏研究委员会.
- 王吉林, 1993, 『西藏与中原关系国际学术研讨会论文集』, 台北: 西藏研究委员会.
- 劉義堂, 1969, 『中國邊疆民族史』, 台北: 台灣中華書局.
- 林冠群, 1982, 『中国边政』 제80기.
- 林冠群, 1987, 『中国文化大学史学研究所博士论文』, 臺灣: 中國文化大學.
- 林冠群, 1990, 『蒙藏专题研究丛书』(47), 台北: 蒙藏委员会.
- 林恩顯, 1989, 『邊政通論』, 台北: 華泰出版社.
- 张骏逸, 1988, 『西藏研究会迅』 제5기, 臺北: 國立政治大學校.
- 張駿逸 主編, 2000, 『欧阳无畏教授逝世八週年紀念論文集』, 台北: 蒙藏委員會.
- 陈又新, 1989, 『西藏研究論文集』 제2기, 台北: 國立政治大學校.

2. 논문

- 蕭金松, 1986, 「欧阳无畏教授近年所授西藏学课程」, 文刊 『西藏研究会迅』 제1기.
- 芮逸夫, 1960, 「唐代南詔与吐藩」, 『西藏研究』, 台北: 中国边疆历史语文学会.
- 王尧, 1989, 「藏學研究台灣」, 『西藏研究』 제2기, 總第31기, 台北: 國立政治大學校.
- 林恩顯, 1984, 「國際中國邊疆學術會議紀要」, 『邊政研究所』 제15기, 台北: 國立政治大學校.
- 林恩顯, 1989, 「近三十年來中國大陸學者的西藏研究分析」, 『西藏研究論文集』 第二輯, 台北: 國立政治大學校.
- 林恩显, 1993, 「民族研究教學的回顧與展望」, 『民族學報』 제20기, 台北: 台北出版社.

Chang Jiunn Yih, 1984,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ongol Yuan Dynasty and the Tibet Sa-akya Sect,"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of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Chang Jiunn Yih,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Yuan and the Sa-skya Sect after Kub-ilai Khan," 『政治大学边政研究所年报』 제16기.

대만의 티베트사(史) 연구 동향과 쟁점

심혁주

본 연구의 논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이후 전반적인 대만의 티베트 연구상황과 변천동향을 검토하고 그 속에서 대만의 티베트사 연구의 발전과 흐름을 파악하고자 했다. 두 번째, 위의 내용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대만의 주요 티베트 연구기관과 학자들, 그리고 그 연구경향을 분석하여 그 동향과 궤적을 추적하였다. 세 번째, 대만의 티베트 연구동향은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대만 학자들의 연구방법과 경향 그리고 변천의 흐름을 분석하는 데 유효한 지표가 될 수도 있다. 특징과 변천의 흐름이 있다면 본문을 통하여 그 이유를 탐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네 번째, 본 연구가 가지는 의미 중의 하나는 중앙 대 지방, 한족 대 소수민족, 소유와 배분의 학술적 사유를 가지는 구조 속에서 로컬리티(locality)에 관한 이해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같은 티베트 연구를 진행해도 중국은 기득권자의 입장인 반면, 대만은 이와 같은 시선과 태도에서 벗어난 수평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대만은 국가나 중앙의 입장에서 티베트를 바라보는 수직적 구조가 아니라는 점인데, 이런 학술적 풍토가 우리에게 어떤 학문적 방향의 시사점을 줄 수 있다면 국내 학계의 중국 소수민족 문제를 좀 더 구체적인 학문연구의 독립적 대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방향점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주제어: 대만, 티베트, 민족학과, 변천연구, 동향, 쟁점, 국립정치대학교, 로컬리티

ABSTRACT

Trends and Issues of Tibetan History in Taiwan

Sim Hyukjoo

The issu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 will examine the overall situation and transition trends of Tibetan research in Taiwan since the modern period, and examine the development and trends of Tibetan history research in Taiwan. Secondly, in order to satisfy the above, we will analyze trends of Taiwan's major Tibetan research institutes and scholars, and trace their trends and their trajectories. Third, the trend of Tibetan research in Taiwan may be a useful indicator for us to analyze research methods and trends of Taiwanese scholars. If there is a flow of features and transitions, the text will explore the reason. Fourth, one of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trigger an understanding of locality in the structure of the central region, the Han Chinese minority, and the possession and distribution of academic reasoning. In other words,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though the same Tibetan research is conducted, China is in the position of the vested right to distribute

the central or ownership, while Taiwan has historical and territorial characteristics that deviate from such a gaze and attitude. Taiwan may be sensitive to the vertical concept understood as a chang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the center, or whether it is applicable to Tibetan research. If there is such an academic climate, I would like to consider suggestions for us. This may provide a direction to view the academic issues of a few scholars, or even the domestic academic world as an independent object of more specific academic research.

Keywords: Taiwan, Tibet, Department of Ethnology, Institute of China Border Areas Studies, Trends, Issues, National Chengchi University, local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유럽과 미국의 티베트학(Tibetology), 성과와 과제

김성수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인문사회대학 교수

- I. 머리말
- II. 근대 학문으로서 티베트학의 성립
- III. 20세기 중엽 티베트학의 국제적 연구기반 조성
- IV. 연구자 집단의 조직화와 국제 티베트학회(IATS)
- V. 티베트학 교육기관의 구축과 미국 티베트학의 성장
- VI. 맺음말: 국제 티베트학 연구 역량의 세계적 확산과 티베트의 미래



I. 머리말

최근 티베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과거 티베트에서 진행된 불교의 토착화는 후기 인도 불교의 아류 내지는 변형으로 이해되어왔다. 이러한 관점 아래 티베트 불교는 자연스레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전승된 대승불교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별개의 것이라 여겨지곤 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과는 달리 실상 티베트는 후기 인도 불교가 직접 전래된 대승불교의 주요 전파지역이며, 티베트 불교계는 후기 인도 불교를 계승한 적장자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면서 12세기 이래 중앙아시아를 향한 불교 전파에서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30여 년간 서구의 티베트학계가 중심이 되어 티베트 불교계에 대한 역사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연구자를 배출하는가 하면, 학회 활동을 통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불교사 전체에서 티베트 불교의 의의를 명쾌하게 규명한 데이비드슨(R. M. Davidson)의 연구는 지난 한 세기 동안 무르익은 서구학계의 인도와 티베트 불교사 연구에 대한 깊이를 느끼게 한다.¹

서구의 티베트학 연구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밝혀둘 것은 이번 작업이 티베트 자생의 학문 기반에 대한 논의 없이 외부의 티베트 연구를 중심으로 티베트학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대한 부담감이다. 티베트학의 발전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티베트 내부의 학문 전통과 연구 방향에 대한 고찰이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함은 당연하다. 이를 바탕으로 티베트 지역 외부의 여러 연구자 집단,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의 티베트학계로 관찰의 폭을 확대해가는 것

* 투고: 2018년 2월 10일, 심사 완료: 2018년 5월 8일, 게재 확정: 2018년 5월 25일

* 이 연구는 동북아역사재단 기획연구과제(NAHF-2014-PS-04)로 수행되었음.

1 Ronald M. Davidson, 2005, *Tibetan Renaissance: Tantric Buddhism in the Rebirth of Tibetan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이 현대 티베트학의 수준을 이해하는 순서이어야 한다.

이러한 당위성에도 독립을 상실한 티베트의 정치 상황으로 인해 티베트 내부의 학문 전통은 단절되었고, 1959년 이후의 연구성과는 중국학의 일부로 흡수되었다. 다시 말해 1959년 이래 현재에 이르는 중국령 티베트의 연구성과는 중국을 구성하고 그 구성 원리를 충실히 따른다는 전제 아래 존재 가능한 것이 되어버렸다. 반면 런던대학 SOAS, 시애틀 워싱턴주립대학, 독일 본(Bonn)대학 등 서구의 주요 연구기관은 20세기 중엽 티베트 망명 학자들을 적극 영입하여 티베트학 전문가 집단을 양성하고 연구에 매진하도록 함으로써 서구 티베트학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는 자국의 연구기반을 상실한 티베트의 입장에서 볼 때 전통 티베트학의 새로운 출로가 아닐 수 없었다.

이렇듯 적잖은 티베트 출신의 연구자들이 인도나 기타 유럽, 미국 등지로 이산되었고 이들의 연구성과는 유럽과 미국의 여러 국가가 주도하고 있는 국제 티베트학의 연구성과 속에 녹아들었다. 티베트를 기반으로 한 티베트인에 의한 티베트학의 독자 영역을 형성하는 데는 실패한 셈이다. 불행히도 결국 오늘날 티베트학의 발전은 과거 티베트학 생산자 주체의 전통 속에서 자생적으로 계승 발전되어 왔다기보다는 외부 티베트학계의 활동에 힘입은 것이다. 그럼에도 동시에 현대 티베트학을 이끌고 있는 구미학계의 티베트학 발전은 이러한 망명 티베트인의 활동에 힘입은 것임을 기억할 필요도 있다.

이에 필자는 이 글을 통해 서구 티베트학의 학문 전통을 추적해봄으로써 최근 진행되고 있는 티베트학의 국제적 관심과 확산의 근원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동시에 그러한 유럽과 미국의 티베트학 전통 속에 살며시 녹아든 티베트 본래의 학문 전통에 대해서도 추적해볼 기회를 엿보고자 한다. 17세기 선교사들이 티베트학의 문을 열었다면 현재 서구 티베트학계의 성숙은 망명 티베트 학자들에 힘입은 것이기 때문이다.

II. 근대 학문으로서 티베트학의 성립

서구 티베트학의 기원은 예수이트(Jesuit), 즉 예수회 선교사의 활동에서 비롯되었다.² 예수이트 교단의 선교사 안토니오 데 안드라데(Antonio de Andrade, 1580~1634)가 1626년 자파랑(Tsaparang)에 교회를 건립하고 선교를 시작했다. 자파랑은 현재 서장장족자치구 아리지구(阿里地區) 잡다쥬(rtsa mda' rdzong, 札達縣)에 속한다. 이곳은 원래 자파랑쥬과 다와쥬이 있던 곳인데, 1956년 10월 둘을 합병하여 잡다쥬으로 부르게 되었으며, 유서 깊은 티베트 서부의 왕국 구게(Gu ge)의 근거지였다. 안드라데는 예수이트의 선교사로 1600년부터 인도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하여 유럽인으로서의 처음 히말라야를 넘어 티베트에 이른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나 그의 활동은 구게와 라다크 사이의 전쟁으로 1631년 끝을 맺게 되었다.

그 후 약 50여 년 후에 같은 예수이트 교단의 신부 이폴리토 데시데리(Ippolito Desideri, 1684~1733)가 티베트를 다시 방문했고, 이번에는 라사에 머물 수 있도록 허가를 받았다. 이에 그는 1716~1721년 사이 약 5년간 티베트의 사원에 거주하면서 티베트 승려들에게서 언어를 배움은 물론 종교와 티베트 문화에 대해 배우는 기회를 얻었다. 그는 기독교 교리와 관련된 책을 티베트어로 출판하였으며, 고향 이탈리아로 돌아온 다음에는 티베트 역사를 소개한 *Opere Tibetane*를 저술하기도 했다.³ 그런 이유로 대개 서구의 티베트학계에서는 데시데리를 최초의 티베트학 연구자로 이해하고 있다.⁴

2 예수이트 선교사들의 활동에 대해 Wessels, C., 1924, *Early Jesuit travellers in Central Asia, 1603-1721*, The Hague, Nijhoff; Luciano Petech ed., 1952, *I missionari italiani nel Tibet e nel Nepal*, Rome: Libreria dello Stato; Donald S. Lopez Jr., Thupten Jinpa, 2017, *Dispelling the Darkness: A Jesuit's Quest for the Soul of Tibet*, Harvard University Press를 참조.

3 Ippolito Desideri, 1981~1989, *Opere Tibetane*, I~IV, ISIAO: Rome.

4 Ippolito Desideri, 2004, *An Account of Tibet: The Travels of Ippolito Desideri of Pistoia, S.J.1712-1727*, Routledge; Ippolito Desideri, 2010,

그러나 선교사의 입장에서 티베트 사회를 관찰했던 데시데리의 티베트 이해는 한계가 있었고 이런 유럽 사회의 티베트에 대한 관심을 학술적 수준으로 끌어 올린 것은 헝가리 언어학자 쿠티스(Kőrösi Csoma Sándor, 1784~1842)였다. 무엇보다 그는 티베트-영어 사전과 문법서를 출간함으로써 유럽 티베트학의 기틀을 마련하였다.⁵ 1976년 유럽의 티베트학이 본격화할 무렵 초마 데 쿠티스 기념 학술회의(Csoma de Kőrös Memorial Symposium)가 헝가리에서 개최된 것은 이러한 쿠티스의 학술사적 지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비슷한 시기 프랑스 티베트학을 이끈 것은 푸코(Philippe Édouard Foucaux, 1811~1894)였다. 그는 티베트어 문법책을 프랑스어로 출간하였고 1842년 프랑스 국립동양언어문화연구소(École spéciale des Langues orientales, 1795년 설립)에서 처음 티베트어를 가르치기도 했다.⁶ 또한 *Erdeni-yin tobči*(『蒙古源流』)와 게세르칸의 서사시를 번역한 것으로 유명한 몽골학 연구자 슈미트(Isaac Jacob Schmidt, 1779~1847)도 티베트어 문법에 대한 여러 편의 글을 독일어와 러시아어로 발표하여 유럽 티베트학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공헌했다.⁷

Mission to Tibet: The Extraordinary Eighteenth-century Account of Father Ippolito Desideri, S.J., Wisdom Publishings.

- 5 Csoma de Kőrös, Sang rgyas phung tshogs, 1834, *Dictionary, Tibetan and English*, Calcutta: The Baptist Mission Press; Csoma de Kőrös, 1834, *A Grammar of the Tibetan Language in English. Prepared under the patronage of the Government and the auspices of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 Calcutta: Baptist Mission Press; Csoma de Kőrös, 1984, *Grammar of the Tibetan Language*, Budapest: Akadémiai Kiadó; Csoma de Kőrös, 1984, *Sanskrit-Tibetan-English Vocabulary: being an edition and translation of the Mahāvvyutpatti*, Budapest: Akadémiai Kiadó; Csoma de Kőrös, 1984, *Collected works of Alexander Csoma de Kőrös*, Budapest: Akadémiai Kiadó.
- 6 Philippe Édouard Foucaux, 1858, *Grammaire de la langue tibétaine*, Paris: L'imprimerie impériale; Philippe Édouard Foucaux, 1858, *Le trésor des belles paroles, choix de sentences composées en tibétain; suivies d'une élégie tirée du Kanjour*, Paris: B. Duprat.
- 7 Isaac Jacob Schmidt, 1839, *Grammatik der Tibetischen Sprache*, St.

이후 티베트 연구는 불교철학과 불교사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유럽 여러 나라의 학자들에게 주목받았다. 정치적으로 소위 ‘Great Game’에 몰두했던 영국은 인도를 거점으로 히말라야와 그 너머 티베트에 관심을 보였으며, 그 뒤를 이은 미국도 이에 적극 동참하였다. 학문적 관심은 물론 티베트의 지정학적 위치에서 비롯된 이유에서 티베트는 서구 사회의 관심을 한 몸에 받기 시작했다.

영국 외교관 벨(Charles Alfred Bell, 1870~1945)은 13세 달라이라마를 알현하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에 개입해 있었다. 그는 20세기 초 부탄, 시킴, 티베트 등지에서 외교관으로 활동하며 1913년 심라(Simla) 회의를 주도했고, 13세 달라이라마와 친분을 쌓아 그의 전기를 출간하기도 했다. 1919년 외교관 신분에서 벗어난 벨은 티베트와 인도를 오가며 연구 활동에 매진하였다.⁸ 그러나 어디까지나 티베트를 둘러싼 내륙 아시아적 외교 질서에 관심을 두고 있었을 뿐 티베트 자체의 언어와 역사, 문화 등이 관심의 중심은 아니었다.

같은 시기 활동했던 미국 국적의 외교관으로 13세 달라이라마와 접촉했던 록힐(William Woodville Rockhill, 1854~1914)이 있다.⁹ 그는 시어도어 루스벨트(Theodore Roosevelt, 재임 1901~1909) 대통령 시기 중국 대사(1905~1909)를 역임했고, 1908년 중국 산서성 오대산에서 13세 달라이라마를 만나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열강의 각축 속에서 티베트의 외교 지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기도 했다. 그는 외교관으로서의 경력 외에도 티베트어를 습득했고, 티베트 역사에 대한 개인적인 연구도 진행하여 여러 권의 저작을 남기기도 했다.¹⁰ 달라

Petersburg.

- 8 Charles Alfred Bell, 1924, *Tibet: Past and Present*, Oxford: Clarendon Press; Charles Alfred Bell, 1931, *The Religion of Tibet*, Oxford: Clarendon Press.
- 9 Susan Meinheit, 2013, “Brief Encounters: Rockhill and The 13th Dalai Lama at Wutaishan,” *The Centennial of the Tibeto-Mongol Treaty: 1913-2013: Lungta*, Vol. 17, Dharamshala: Amnye Machen Institute.
- 10 William Woodville Rockhill, 1891, *The land of the lamas: notes of a journey through China, Mongolia and Tibet*, Century Co., reprinted from

이라마리는 활불 계통에 대한 역사적 이해는 물론, 불교 자체에도 관심을 가져 불경의 일부를 번역하기도 했으며, 중국 대사로서 주변국인 한국과 중국의 외교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여러 편의 글을 남겼다.

서구 티베트학이 학문적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부족하나마 이러한 외교

New Delhi: Asian Publication Services, 1975; William Woodville Rockhill, 1891, "A Geographical, Ethnographical, and Historical Sketch, Derived from Chinese Sources,"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William Woodville Rockhill, 1894, *Diary of a journey through Mongolia and Tibet in 1891 and 1892*, Smithsonian Institution; William Woodville Rockhill, 1895, *Notes on the ethnology of Tibet, Based on the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Detached from Annual report, 1893, U.S. National Museum, Washington, 1895, published in New York; William Woodville Rockhill, 1895, *Pilgrimage to the great Buddhist sanctuary of north China*, published in Boston: s.n., "Reprinted from the Atlantic Monthly for June, 1895"; William Woodville Rockhill, 1897, "Miscellaneous papers including articles on Tibet and Mongolia," *Tibetan Buddhist birth-stories*, Offprint from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 xviii; William Woodville Rockhill, 2007, *The life of Buddha: derived from Tibetan works in the Bkah-hgyur and Bstan-hgyur*, Kegan Paul; William Woodville Rockhill, 1977, *Notes on Tibet*, New Delhi: Asian Publication Services; William Woodville Rockhill, 1910, *The Dalai lamas of Lhasa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Manchu emperors of China, 1644-1908*, In *T'oung Pao ou Archives concernant l'histoire, etc, de l'Asie orientale*, [ser. II], 11, pp. 1~104; William Woodville Rockhill, 1884, *Prâtimoksha sutra; ou, Le traité d'émancipation selon la version tibétaine, avec notes et extraits du Dulva (Vinaya)*, Paris: E. Leroux; William Woodville Rockhill, 1982, *Udânavarga: a collection of verses from the Buddhist canon: being the northern Buddhist version of Dhammapada*, Delhi: Rare Reprints in New Delhi distributed by D.K. Publishers' Distributors; William Woodville Rockhill, 1966, *Chau Ju-kua: his work on the Chinese and Arab trade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entitled Chu-fan-chi*, Amsterdam: Oriental Press 등 다수의 저작, 논문을 남겼으며, 辛丑條約, 루스벨트 대통령 관련 문서에 그의 보고서가 다수 남아 있다. Theodore Roosevelt Collection: manuscripts-Theodore Roosevelt papers, 1858-1919; 天津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編, 1984, 『1901年美國對華外交檔案: 有關義和團運動暨辛丑條約談判的文件』, 濟南: 齊魯書社 등을 참조.

관들의 활동은 티베트학 형성의 초기 단계로서 의미가 있음은 물론, 티베트학의 필요성을 정계나 학계로 전파시키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는 곧 정책적 후원으로 연결되어 티베트학이 여러 교육기관에서 수용되고 하나의 정식 학문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역할을 하였다.

이상에서 언급한 초기 학자들의 작업을 기반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하는 티베트학 연구자들은 점차 연구 그룹을 형성하게 되고 티베트학은 대학에서 분명한 연구분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투렐(Wylie Turrell, 1927~1984)의 티베트어 라틴 전사법은 이러한 학자군의 형성과 논문 작성을 위한 수단으로 정리되어 오늘에까지 이르고 있다.¹¹

III. 20세기 중엽 티베트학의 국제적 연구기반 조성

티베트와 주변의 라다크, 네팔, 부탄, 시킴 등은 티베트 문화권의 주요 구성원으로 인식되었고, 인도를 거점으로 활동했던 영국은 티베트의 정치적 중요성을 인식한 만큼 티베트와 티베트 문화권 전체에 대한 정보 수집과 연구를 수행해왔다. 유럽 각국의 중앙아시아 탐험대는 물론 아일랜드와 대영제국 왕립 아시아 학회(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의 캘커타 분소가 중심이 되어 인도는 물론 티베트 문헌의 수집을 진행했다.

독립 후 인도에서는 라구 비라(Raghu Vira, 1902~1963), 로케쉬 찬드라(Lokesh Chandra, 1927~) 부자가 중심이 되어 사타-피타카 시리즈(Satapitaka Series)를 출판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여기에는 산스크리트, 티베트, 몽골 등 티베트 불교, 인도, 중앙아시아 연구를 위한 다양한 문헌과 해설, 번역, 연구서가 포함되어 있는데 수집 과정에서 중인(中印)관계 개선을 위해 주은래

11 Turrell V. Wylie, 1959, "A Standard System of Tibetan Transcriptio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22.

(周恩來) 총리가 도움을 준 사실은 유명하다.

1920년대 후반부터 히말라야와 티베트 지역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탈리아의 불교학자 투찌(Giuseppe Tucci, 1894~1984) 또한 다량의 문헌을 수집하고 이를 기반으로 이탈리아의 불교와 티베트학 발전에 공헌하였다.¹² 그의 학적 전통은 제자였던 페텍(Luciano Petech, 1914~2010)의 티베트사 연구로 이어졌다.¹³

이 시기 유럽 티베트학은 국제적인 돈황학의 발전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 돈황의 석굴과 신강, 감숙 등지에서 진행된 간독(簡牘)의 발견은 토번사(吐蕃史) 연구는 물론 티베트학 전반에 걸친 연구의 심화 발전으로 이어졌는데 이는 불교 철학이나 불교사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진행되었던 티베트 연구에 새로운 장을 열어주었다.¹⁴ 영국의 토머스(F. W. Thomas, 1867~1956), 프랑스의 바코

12 Giuseppe Tucci, 1949, *Tibetan Painted Scrolls*, La Libreria Dello Stato, Rome: reprinted by SDI Publications, 1999; Giuseppe Tucci, 1932, *Indo-Tibetica I*, Roma: Reale Accademia d'Italia; Giuseppe Tucci, 1933, *Indo-Tibetica II*, Roma: Reale Accademia d'Italia; Giuseppe Tucci, 1935-36, *Indo-Tibetica III*, Roma: Reale Accademia d'Italia; Giuseppe Tucci, 1941, *Indo-Tibetica IV*, Roma: Reale Accademia d'Italia. 이외에도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IsMEO)와 Museo Nazionale d'Arte Orientale의 설립과 운영에 중추적 역할을 하였다.

13 Luciano Petech, 1990,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Rome: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Istituto Universitario Orientale.

14 이러한 새로운 발견과 함께 1980년대 이후 앞서 발굴된 자료의 번역과 연구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는 금석문, 간독 등 다양한 형태의 자료가 있으며 이들은 모두 토번 시대 역사 연구에 기본이 되는 것으로서 토번 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들이 점차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중국 학계에서는 왕요를 중심으로 토번 시대 연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 王堯 編著, 1982, 『土蕃金石錄』, 北京: 文物出版社; 王堯·陳踐 編著, 1985, 『土蕃簡牘綜錄』, 文物出版社; 王堯, 1988, 『敦煌土蕃文書論文集』, 四川民族出版社; 王堯, 1994, 『西藏文史考信集』, 中國藏學出版社; 王堯, 2000, 『水晶寶鬘-藏學文史論集』; 王堯, 2005, 『西藏文史探微集』, 中國藏學出版社; 楊銘, 1997, 『土蕃統治敦煌研究』,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楊富學·楊銘 主編, 1999, 『中國敦煌百年文庫』(民族卷), 甘肅文化出版社.

(Jacques Bacot, 1877~1965),¹⁵ 펠리오(Paul Pelliot, 1878~1945), 랄루(Marcelle Lalou, 1890~1967), 벨기에의 푸생(Louis De La Vallée Poussin, 1869~1938) 등 20세기 초 중국, 히말라야 일대에서 활동했던 선구적 연구자들은 돈황에서 발견된 다량의 티베트문 간독에 관심을 집중했다.¹⁶

이러한 초기 돈황학 연구자들의 학맥을 계승하여 현대 티베트학으로의 가교 역할을 한 것이 스타인(Rolf A. Stein, 1911~1999)이다. 그는 중앙아시아와 티베트에 대한 프랑스의 학적 전통을 계승하면서 자신의 뛰어난 언어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여 중국학과 티베트학, 몽골학을 넘나드는 티베트학의 새로운 단계를 선보였다. 청해, 감숙, 사천 서부에 대한 지역 연구를 통해 이 지역의 역사를 티베트사의 일부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돈황 문서를 기초로 중국의 도교, 유학 전통과 토번 시대 불교의 관계를 연구하여 지성사의 새로운 영역을 개척했다.¹⁷

돈황학을 중심으로 한 토번사 연구의 발전은 곧 토번 시대 석각비문 연구로 이어졌는데 1980년대 전개된 리(Fang Kuei Li, 李方桂, 1902~1987)와 코블린(W. South Coblin, 1944~), 리처드슨(H. E. Richardson, 1905~2000)의 연구는 장한합벽(藏漢合璧) 비문을 이용한, 두 분야 학자들의 협업을 통해 이론 성과로

15 겐뉘철펠(dge 'dun chos 'phel, 1903~1951)과 Bacot의 학적 교류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Donald S. Lopez Jr., 2006, *The Madman's Middle Way: Reflections on Reality of the Tibetan Monk Gendun Choephe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6 티베트문 簡牘과 金石文에 대한 참조할 만한 대표적인 연구서는 다음과 같다. F.W. Thomas, 1935, *Tibetan Literary texts and documents concerning Chinese Turkestan*, Pt. 1, Literary Texts,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Jacques Bacot, F.W. Thomas, and Ch. Toussaint, 1940, *Documents de Touen-houang relatifs à l'histoire du Tibet*, Librairie Orientaliste Paul Geuthner, Paris; F.W. Thomas, 1951, *Tibetan Literary texts and documents concerning Chinese Turkestan*, Pt. 2, Documents, London: Luzac; Louis De La Vallée Poussin, 1962, *Catalogue of the Tibetan Manuscripts from Tun-Huang in the India Office Library*, Oxford University Press.

17 Rolf A. Stein, translated and edited by Arthur P. Mckeown, 2010, *Rolf Stein's Tibetica Antiqua with Additional Materials*, Leiden, Boston: Brill.

돈황학의 연장선상에서 티베트학의 발전에 공헌하였다.¹⁸ 돈황 문서의 번역과 분석을 통해 토번 시대사의 확립에 공헌한 닷슨(Brandon Dotson)의 연구도 이러한 학적 전통의 결과인 셈이다.¹⁹ 물론 아직은 토번의 국가 구조를 밝히는 데 다양한 방향의 연구가 더욱 축적되어야 하겠지만, 적어도 토번 시대를 설명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과 정리, 번역과 연구에 이르는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어 티베트 역사의 기초를 이해하고 장래 다른 시기로 연구의 폭을 확대해가는데 토번 시대 연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러한 유럽에서의 티베트 관련 문헌 수집, 정리, 연구의 활기는 그대로 미국으로 전해졌다. 학문 전통이 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박약했던 미국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다양한 방면에서 자료 수집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였다. 특히 국회도서관의 분회를 여러 지역에 설치하여 다양한 언어의 고전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진행하였다.

스미스(Gene Smith, 1936~2010)는 미국회도서관 뉴델리 분소(Library of Congress New Delhi Field Office)에 근무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자로 활동함으로써 티베트 문헌의 수집과 정리에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이를 기초로 1999년 티베트 불교문헌센터(Tibetan Buddhist Resource Center, TBRC로 약칭)를 설립하였고 후에 하버드대학(Harvard University)의 구입((Leonard van der Kuijp, 1952~)과 함께 1만 2천 권이 넘는 티베트 문헌을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하에서는 현재 국제 티베트학계에서 티베

18 토번 시대 석각비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성과가 있다. H. E. Richardson, 1985, *A Corpus of Early Tibetan Inscriptions*, Royal Asiatic Society; Li Fang Kuei, and W. South Coblin, 1987, *A Study of the Old Tibetan Inscriptions*, Institute of Hisotry and Philology, Special Publications No. 91, Taipei: Academia Sinica.

19 Brandon Dotson, 2006, *Administration and Law in the Tibetan Empire: The Section on Law and State and its Old Tibetan Antecedents*, Dissertation of University Oxford; Brandon Dotson, 2009, *The Old Tibetan Annals: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ibet's First History*,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트 문헌 수집과 정리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TBRC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최근 이 기구는 2017년 디지털 불교문헌센터(the Buddhist Digital Resource Center, BDRC로 약칭)로 재편하면서 새로운 도약기를 맞이하고 있다.

1959년 세계 각지로 흩어진 망명 티베트인 사회는 다양한 티베트의 문화 전통을 세계 각지로 확산시켰다. 이 과정에서 많은 티베트 문헌도 세계 각지로 흩어지는 운명을 맞게 되었다. 1999년 미국의 티베트학 연구자 스미스가 이러한 티베트 문헌의 보존을 위해 설립한 것이 TBRC이다.

이 기구는 모든 종류의 티베트 문헌을 디지털화하여 보존하고, 세계 각지에 흩어져 있는 승려, 연구자, 번역가 등 티베트학에 관심 있는 모든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으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스미스는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1960년 미국으로 망명한 사가 교단의 고승 데슁 린보체(Dezhung Rinpoche, 1906~1987)의 가르침을 받아 티베트학에 입문했다.²⁰ 1964년 학위 취득 후에 라이든(Leiden)대학에서 산스크리트, 팔리어 등을 배우고, 록펠러 재단, 포드 재단의 후원으로 인도에서 학술 활동을 이어갔다. 인도에 망명한 여러 티베트 고승들에게 사사했으며, 1968년부터 미국회도서관 델리 분소(the Library of Congress New Delhi Field Office)에서 일하면서 문헌의 정리와 수집, 출판에 힘을 쏟기 시작했다. 인도, 인도네시아, 이집트 등 지에서도 활동했던 그는 1996년 미국회도서관에서 은퇴한 후 트레이스 재단(Trace Foundation)의 고문으로 위촉되어 히말라야와 내륙아시아 자료(the Himalayan and Inner Asian Resources, HIAR) 센터를 뉴욕에 설립하는 일을 맡게 되었다.²¹

20 시애틀을 중심으로 한 데슁 린보체의 활동에 대해서는 David P. Jackson, 2004, *A Saint in Seattle: The life of the Tibetan Mystic Dezhung Rinpoche*, Wisdom Publications.

21 인도에서의 작업을 정리한 것으로 다음의 책이 있다. Ellis Gene Smith, 2001, *Among Tibetan Texts: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Himalayan Plateau*, Wisdom Publications Inc. 또한 트레이스 재단의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그가 건립

1999년에는 하버드대학의 구입 교수와 함께 TBRC를 설립하여 1만 2천 권에 이르는 문헌의 디지털화를 통해 온라인 서비스의 기틀을 마련하였고, 2001년 이후부터는 도날드(Donald), 셸리 루빈(Shelley Rubin)의 도움으로 TBRC를 뉴욕으로 옮겨 운영하게 되었다. 2001년에서 2012년까지 TBRC는 도날드·셸리 루빈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루빈예술박물관(Rubin Art Museum)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운영하였고, 후에 다시 하버드가 자리하고 있는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하버드 스퀘어(Harvard Square)로 옮겨 운영되고 있다. 스미스 사망 후에도 디지털화 작업은 계속되어 현재 약 1만 7천 권의 자료가 디지털화되었으며, 2013년 통계로 하루 5천 명의 사용자가 접속하여 연간 10만 부의 자료가 다운로드되고 있다.

현재 BDRRC의 추산으로는 백만 페이지의 자료가 매년 스캔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티베트 관련 문헌의 약 25%에 해당될 것으로 보고 있다. 문헌에 대한 스캔 작업은 매사추세츠 케임브리지 하버드 스퀘어의 본부와 중국 사천성(四川省) 성도(成都) 서남민족대학(西南民族大學) 장학학원(藏學學院)에서 함께 진행되고 있으며 스캔된 문헌은 2012년까지 약 900만 페이지에 달하고 있다. 스캔 과정에서 현재까지 약 112건의 실수가 확인되어 시정된 정도이니 정확도는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여겨진다. 현재까지 수집된 자료는 장래 약 5년간 스캔 작업을 진행하면 거의 완성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후 새로운 자료에 대한 스캔과 함께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기술적 발전과 내용의 정리가 계속될 계획이다.

한 것이 라쩌 도서관(Latse Library)이다. 라쩌 도서관은 티베트의 문헌 자료를 소장하고 있으며 일반 대중에게 대출 없이 자유롭게 열람 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있다. 라쩌 도서관의 정식 명칭은 Latse Contemporary Tibetan Cultural Library(132 Perry ST, New York, NY10014)이며, 전신은 앞서 소개한 히말라야와 내륙아시아 자료(the Himalayan and Inner Asian Resources, HIAR) 센터로 진 스미스가 그 기틀을 마련하였다. 매달 새로운 주제로 티베트의 문화, 예술, 종교, 문학 등 대중적 소재로 티베트 문화를 소개하고 있으며, 어린이를 위한 프로그램을 격주 토요일 오전에 제공함으로써 티베트 문화의 대중적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한 자료의 축적과 함께 마틴(Dan Martin, 1997), 셰퍼(Kurtis R. Schaeffer), 투틀(Gray Tuttle), 캡슈타인(Matthew T. Kapstein)(2013) 등은 문헌의 해제 작업을 진행하여 출판함으로써 연구자들이 문헌의 특성을 이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²²

IV. 연구자 집단의 조직화와 국제 티베트학회(IATS)

서구학계가 본격적으로 티베트학 연구자를 조직하여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1970년대의 일이다. 헝가리 사회과학원 리게티(L. Ligeti) 등을 주축으로 초마 기념 학술대회(1976: Mátrafüred, Hungary)가 조직되고,²³ 1979년 옥스퍼드에서 국제 티베트학회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IATS)가 발족되면서 본격적인 티베트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 미국에서는 불교사 연구자들을 주축으로 1981년 북미 티베트학회(The North American Tibetological Society)가 조직되고 논문집이 발간되었다.²⁴ 이 시기 연구수준을 역사학의 입

22 Dan Martin, 1997, *Tibetan Histories*, London: Serindia Publications; Kurtis R. Schaeffer, Gray Tuttle, Matthew T. Kapstein, eds., 2013, *Sources of Tibetan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3 Csoma de Kőrös Memorial Symposium 1976 (Mátrafüred, Hungary), 1978, *Proceedings of the Csoma de Kőrös Memorial Symposium: held at Mátrafüred, Hungary, 24-30 September, 1976*, edited by Louis Ligeti, Budapest: Akadémiai Kiadó; Csoma de Kőrös Symposium 1981 (3rd: Velm, Himberg, Schwechat, Austria), 1983, *Proceedings of the Csoma de Kőrös Symposium: held at Velm-Vienna, Austria, 13-19 September 1981*, Wien: Arbeitskreis für Tibetische und Buddhistische Studien, Universität Wien; Csoma de Kőrös Memorial Symposium, 1977-1988, *Bulletin of the Csoma de Kőrös Symposium*, Budapest: Library of the Hungarian Academy of Sciences.

24 Ronald M. Davidson, ed., 1981, *Wind Horse: Proceedings of the North American Tibetological Society*,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장에서 가늠해본다면, 티베트사를 바라보는 ‘구조를 갖춘’ 통사류의 저술에는 이르지도 못한 박약한 수준에 머물렀다. 다만 시대사나 문화사, 불교사의 입장에서 티베트를 독립된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단행본들이 다수 출간되면서 티베트에 대한 학문적 성숙도를 보여준은 물론 대중의 관심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²⁵ 이러한 시점에서 국제 티베트학회의 활동은 티베트학의 발전과 연구 경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1. 국제 티베트학회

‘국제 티베트학회’는 1979년 옥스퍼드대학(Oxford University)의 아리스(Michael Aris, 1946~1999)와 부인 아웅산 수키(Aung San Suu Kyi) 여사의 주도로 열린 티베트학회를 기점으로 성립되었다. 티베트와 관련된 학제 간 연구를 목표로 역사, 종교, 언어, 예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활동하고 있다. 3~4년에 한번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2005년 10월부터 학회지를 발행하고 있다. 『국제 티베트학보(*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JIATS로 약칭, ISSN 1550-6363)』는 히말라야 전자도서관(Himalayan

25 Tsung-lien Shen, 1953, *Tibet and the Tibetans*, Stanford University Press; Rolf Alfred Stein, 1962, *La civilisation tibétaine*, Paris: Dunod; Hugh Edward Richardson, 1962, *A short history of Tibet*, New York: Dutton; David L. Snellgrove, 1968, *A cultural history of Tibet*, New York: F. A. Praeger; Bstan-'dzin-rgya-mtsho, Dalai Lama XIV, 1967, *The history of Tibet*, Varanasi: India; Erik Haarh, 1969, *The Yar-Lung dynasty: a study with particular regard to the contribution by myths and legends to the history of ancient Tibet and the origin and nature of its kings* (Københavns universitet); Luciano Petech, 1972, *China and Tibet in the early 18th century;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protectorate in Tibet*, Leiden: E. J. Brill; 山口瑞鳳, 1989, 『チベット』上下, 東京大學出版部; Alex McKay, 2003, *The history of Tibet*, London, New York: Routledge Curzon; Matthew T. Kapstein, 2006, *The Tibetans*, Blackwell Publishing.

Digital Library, THDL로 약칭)에서 온라인으로 제공되며, 2010년과 2012년을 제외하고 매년 한 차례 발행되어 2013년까지 7호가 발행되었다.²⁶

옥스퍼드 티베트학회 개최에 앞서 IATS 설립에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또 하나의 움직임은 1977년 브라우언(Martin Brauen, 1948~), 크베른(Per Kvaerne, 1945~)이 주축이 되어 개최된 젊은 티베트 학자 세미나(Seminar of Young Tibetologists)였다. 1979년 옥스퍼드 국제 티베트학회는 바로 여기에서 활동했던 젊은 티베트 학자들의 모임에서 비롯된 셈이었다. 이하에서는 간단한 표로 그간의 IATS의 학회 활동을 정리하였다.

개최 횟수	개최장소와 시간	주제와 발표 내용	협력기구
1	Zurich, 스위스 (1977. 6)	Seminar of Young Tibetologists: 빈보의 장례문화, 운남의 티베트 계탕(Gyethang), 유럽 박물관이 소장한 몽골·티베트 유물, 아티샤의 생애와 활동, 족첸(rdzongs chen)의 전승 등 16편 발표문/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PIATS) I 출판	Ethnographic Museum, University of Zurich
2	Oxford, 영국 (1979)	Hugh Richardson 기념 학술대회: <i>Khrom</i> : 7~9세기 티베트 제국의 행정단위, 티베트적 전통에 의한 바트마삼바바 전기문, 인도 망명 티베트인 사회 연구, 명대 라마들의 조공, 라다크 언어 등 49편 발표문/ PIATS II 출판	Oxford University
3	New York, 미국 (1982)	Soundings in Tibetan Civilization: 돈황본 티베트 연대기 속의 史記, 닝마 경전, 서남지역 망언, 초기 티베트 의례 rkyal 'bud, 빈보 사원의 의례행태, 착나도제(1239~1267) 연구 등 35편 발표문/ PIATS III 출판	Columbia University

26 David Germano ed., 2013, "Si tu pan chen: Creation and Cultural Engagement in Eighteenth-Century Tibet,"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Issue 7, Tibetan and Himalayan Library, Charlottesville.

4	Schloss Hohenkammer, 뮌헨, 독일(1985)	Tibetan Studies: 티베트 철기, 도기 등 공예연구, 청대 『五體清文鑑』 속의 티베트 어휘, Nob chung 발굴 목간, 게사르 연구, 59편 발표문/ PIATS IV 출판	
5	Narita, 일본 (1989. 8)	Buddhist Philosophy and Literature: 32편 발표문 Language, History and Culture: Tibetan Studies: 51편 발표문/ PIATS V 출판	
6	Fagernes, Oslo 노르웨이(1992. 8)	1차 金川 전투(1747~49) 연구, 닥룽 교단 계보 연구, 불교 의례와 티베트 독자성, 켄둔철헤 연구, 18세기 티베트 문헌에 보이는 인도와 영국 등 43편 발표문(vol.1) 북경의 마하칼라 숭배, 토번제국의 천호 소속 행정기구 tshan, 아플리케 탕가 연구, 토번제국 시대 씨족과 천호, 그리고 군대 등 41편 발표문(vol. 2)/ PIATS VI 출판	Institute for Comparative Research in Human Culture
7	Graz, 오스트리아 (1995)	Transmission of the Tibetan canon: 6편 발표문 Tibetan Studies I : 48편 발표문 Tibetan Studies II : 52편 발표문 Tibetan Culture in Diaspora: 9편 발표문 Development, Society, Environment in Tibet: 10편 발표문 Tibetan Mountain Deities, Their Cults and Representations: 13편 발표문 Inner Asian International Style 12th - 14th centuries: 8편 발표문/ PIATS VII 출판	Austrian Academy of Science
8	Bloomington, 미국 (1998)	미상	Indiana University
9	Leiden, 네델란드 (2000)	Tibet, past and present: 26편 발표문 The Many Canons of Tibetan Buddhism: 16편 발표문 Amdo Tibetans in Transition: Society and Culture in the Post - Mao Era: 14편 발표문 Medieval Tibeto - Burman Languages: 13편 발표문 Buddhist Art and Tibetan Patronage, 9th - 14th centuries: 9편 발표문 Impressions of Bhutan and Tibetan Art: 12편 발표문 Khams pa Histories: 8편 발표문 Religion and Secular Culture in Tibet: 26편 발표문 Territory and Identity in Tibet and the Himalayas: 20편 발표문/ PIATS IX 출판 Tibet, Self, and the Tibetan Diaspora: 11편 발표문	
10	Oxford, 영국 (2003. 9)	Bhutan traditions and changes: 11편 발표문 Text, Image and Song in Transdisciplinary Dialogue: Classifications: 12편 발표문	Oxford University

		<p>Medieval Tibeto-Burman Languages II: 9편 발표문 Soundings in Tibetan Medicine: 21편 발표문 Tibetan Modernities: 16편 발표문 Tibetan Borderlands: 13편 발표문 Power, Politics, and the Reinvention of Tradition: 13편 발표문 Tibetan Buddhist Literature and Praxis: 12편 발표문 Contemporary Tibetan Literary Studies: 9편 발표문 Discoveries in Western Tibet and the Western Himalayas: 12편 발표문 The Mongolia-Tibet Interface: 18편 발표문/ PIATS X 출판</p>	
11	Königswinter, Bonn, 독일 (2006)	<p>Mapping the Modern in Tibet: Mdo mkhar ba Tshe ring dbang rgyal(1697~1763) 전기 문 연구, 티베트의 근대성, 중앙 티베트 지배권의 역사적 접근, 티베트의 명칭과 문화적 정체성 등 13편 발표문/ PIATS XI 출판</p>	
12	Vancouver, 캐나다 (2010)	미상	
13	Ulaanbaatar, 몽골 (2013. 7)	<p>암도와 몽골인들, 건축과 보존, 부탄-시킵, 부탄 불교와 문화, 티베트고원의 기후 변화, 몽골의 불교사, 초기 족첸(Dzokchen, 大圓滿法), 티베트의 표상으로서 지도학과 민족지학, 민간문학, 계세르, 大티베트(경계, 민족경계, 문화권역), 탄트라 연구, 티베트에서 왕권과 종교, 17~20세기 초 티베트·몽골·중국을 관통하는 의학과 천문학, 고티베트어 연구, 몽골과 티베트 불교의 전환: 跨国가적 관계망과 지역 사회 등 45개 패널과 티베트 역사, 언어, 티베트의 과국적 정체성, 문헌, 문화와 고고학 등 17개 세션</p>	<p>The Mongolian Academy of Sciences, The National University of Mongolia</p>
14	Bergen, 스웨덴 (2016. 6)	<p>내륙아시아 환경과 보존, 바드마삼바바 연구, 히말라야의 건축과 보존, 부탄의 불교와 문화, 사원 경계, 암도 목축의 쇠퇴와 혁신, 히말라야와 티베트의 도시화, 티베트 언어학, 티베트사에서의 종족과 사회조직, 닝마 탄트라 연구, 티베트 약학, 청제국사에서 티베트 등 53개 패널, 28개 세션</p>	University of Bergen
15	Paris, 프랑스 (2019. 7)	예정	

2. 세계 젊은 티베트 학자 세미나(International Seminar of Young Tibetologists, ISYT)

앞서 1977년 브라우언과 크베른이 주축이 되어 취리히에서 젊은 티베트학 연구자들의 세미나가 개최되었음을 밝혔다. 이때 약 60여 명의 학자가 초청되었으며, 그중 30여 명이 세미나에 참석하여 국제 티베트학 연구자들의 모임이 창설되었다. 이후 이 모임은 국제 티베트학회와 연결되어 운영되다가 2006년 독일에서 제11회 국제 티베트학회가 개최되었을 때 IATS와 유대관계를 가지면서도 독립된 학회로, 좀 더 젊은 학자들이 작은 토론 그룹을 구성하여 충분한 토론을 할 수 있는 학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뜻을 모아 IATS와 별도의 독립적인 세미나를 구성하게 되었다.

여기에서 젊다는 것에 대해 학회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는데, 대개 마지막 학위 취득 후 6년 미만, 또는 연구소나 학과에서 처음 연구나 교육에 종사한 지 6년 미만의 젊은 학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연구대상은 티베트 문화권역 전체에 대한 모든 종류의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히말라야 지역의 문화인류학적 접근에 대해서도 문호를 개방하고 있다. 2007년 런던 회의는 미야트(Tim Myatt)와 닷슨(Brandon Dotson)이 중심이 되어 개최되었고, 현재는 2012년 선출된 켈상 노르부 구룽(Kalsang Norbu Gurung, Bonn University)이 회장을 맡고 있으며, 쿠마가이(Seiji Kumagai, Kyoto University)가 사무장을 맡고 있다.

개최 횟수	개최장소와 시간	발표문(출간)	개최 기관
1	London, 영국 (2007, 8)	<i>Contemporary Visions in Tibetan Studies</i> , Serindia Publications, 2009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Oriental Institute of Oxford University
2	Paris, 프랑스 (2009, 9)	Kelsang Norbu Gurung, Tim Myatt, Nicola Schneider, and Alice Travers (eds.), <i>Revisiting Tibetan Culture and History</i> .	musée du quai Branly, École Normale Supérieure Paris, La Bibliothèque Sainte-Barbe est ouverte, École Pratique des

		<p><i>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Seminar of Young Tibetologists</i>, Paris 2009, Part 1, Dharamshala: Amnye Machen Institute, 2012.</p> <p>Marc-Henri Deroche, Joshua Schapiro, Seiji Kumagai, and Kelsang Norbu Gurung (eds.), <i>Revisiting Tibetan Religion and Philosophy. Proceedings of the Second International Seminar of Young Tibetologists</i>, Paris 2009, Part 2, Dharamshala: Amnye Machen Institute, 2012.</p>	<p>Hautes Études, Institut National des Langues et Civilisations Orientales, Milieux, Cultures et Sociétés du Passé et du Présent, Trace Foundation, Centre national de la recherche scientifique, Centre d'histoire sociale et culturelle de l'occident (CHISCO)</p>
3	Kobe, 일본 (2012. 9)	<p>Tsuguhito Takeuchi, Kazushi Iwao, Ai Nishida, Seiji Kumagai and Meishi Yamamoto (eds.), <i>Current Issues and Progress in Tibetan Studies: Proceedings of the Third International Seminar of Young Tibetologists</i>, Kobe 2012 (Journal of Research Institute, Vol. 51), Kobe: Kobe City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2013[2014], vi+581pp, ISSN 0454-1073.</p>	<p>Kobe City University for Foreign Studies, 日本西蔵學會, 東方學會</p>
4	Leipzig, 독일 (2015. 9)	<p>Erhard, Franz Xaver, Jeannine Bischoff, Lewis Doney, Jörg Heimbels, and Emilia Roza Sulek (eds.), <i>Ancient Currents, New Traditions: Papers Presented at the Fourth International Seminar of Young Tibetologists</i>, edition tethys: wissenschaft 1, Potsdam: edition tethys, 2017, ISBN 978-3-942527-05-7.</p>	<p>the University of Leipzig</p>
5	St. Petersburg, 러시아 (2018)	<p>예정</p>	<p>Saint Petersburg State University</p>

3. 루빈 예술박물관(Rubin Art Museum, New York)

루빈 예술박물관은 2004년 개관한 뉴욕 소재 사설 박물관으로 티베트와 히말라야 지역의 역사, 문화, 예술을 전시 소개하는 곳이다. 이곳에서는 유물의 전시는 물론 교육과 연구를 위한 다양한 학술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티베트학과 관련된 전문 연구자들의 학회도 여러 차례 개최되었다. 그중 주목되는 학술회의는 오대산과 청대 문화(Wutai shan and Qing Culture) 학술회의와 쓰투판첸 학술회의(Situ Panchen: Creation and Cultural Engagement in Eighteenth-century Tibet Conference)였다.

전자는 2007년 5월 버거(Patricia Berger) 등 7명의 학자들이 오대산과 관련된 주요한 역사적 사건, 주변 몽골에 미친 종교적 영향, 청조와 오대산 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²⁷ 후자는 2009년 2월 루빈 박물관 개관 5주년 기념 행사로 개최된 학회로, 18세기 티베트의 주요 종교(카르마카구 교단) 지도자이며 예술가였던 최기중네(Chokyi Jungne, 1700~1774)에 대해 재조명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타쉬 쩌링(Tashi Tsering, Amnye Machen Institute), 잭슨(David Jackson, Rubin Museum of Art), 스펠링(Elliot Sperling, Indiana University, 1951~2017) 등이 대회를 조직하였고, 샤이(Remi Chaix) 등 6명의 학자가 쓰투판첸과 그 시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²⁸

27 Patricia Berger, “The Jiaqing Emperor’s magnificent record of the western tour”; Isabelle Charleux, “Mongol pilgrimages to Wutaishan in the late Qing Dynasty”; Wen-shing Chou, “The tinted landscape of Wutaishan”; Kurtis R. Schaeffer, “Tibetan poetry on Wutaishan”; Elliot Sperling, “The 13th Dalai Lama at Wutai Shan: Exile and Diplomacy”; Gray Tuttle, “Tibetan Buddhism at Wutai shan in the Qing: The Chinese Language Register”; Johan Elverskog, “Wutai Shan, Qing Cosmopolitanism and the Mongols”. 이상의 발표문은 *JIAQS*의 특집호로 발간되었다. Gray Tuttle, Johan Elverskog, ed., 2011, “Wutai Shan and Qing Cul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Issue 6.

28 Remi Chaix (CNRS, Paris), “Situ Panchen and the House of Derge: A

4. 국제 라다크학회(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Ladakh Studies, IALS)

이상에서 소개한 학회나 연구소 이외에도 여러 활동 기구들이 티베트 또는 주변 히말라야 지역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환경문제와 관련한 연구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는데, 2011년 8월 에버딘대학(the University of Aberdeen, Scotland)에서 개최된 라다크 관련 학회가 바로 그러한 예 중의 하나이다. 2011년 15차 대회를 개최하게 된 라다크학회는 2011년 주제를 “Responding to Climate, Biodiversity and Resource Changes in Ladakh and elsewhere in the Western Himalaya”로 설정하고 학회를 개최하였다. 2013년 독일 하이델베르크에서 열린 16차 대회에서도 이러한 기조는 계속 이어져서 “Society and Environment in Ladakh: Historical Perspectives and Recent Dynamics”라는 주제로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2013년 4월 독일 하이델베르크대학 남아시아 연구소(the South Asia Institute, SAI), 남아시아 연구소 산하 지리학과, 하이델베르크 환경센터(the Heidelberg Center for Environment, HCE) 등이 주축이 되어 대회를 개최했다. 역사, 문화, 정치 등은 물론 현대 라다크 사회의 변동과 문화 정체성, 건축, 불교학 등은 물론 환경, 기후변화, 물 관리 등 총체적 환경문제도 논의되었다. 여기에는 유럽, 미국 등 서방의 학자들은 물론 라다크 지역의 NGO 단체, 라

Demanding but Beneficial Relationship”; Nancy Lin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Situ Panchen and the Reenactment of Buddhist Origins”; Karl Debreczeny (Rubin Museum of Art), “Situ Panchen’s Artistic Legacy in Yunnan”; Jann Ronis (University of Virginia), “Situ Panchen and Sectarian Relations in Eighteenth-century Derge: Precursor to the Ecumenical Movement (ris med)”; Frances Garrett (University of Toronto), “Medical Literature in the Situ Panchen Tradition”; Kurtis Schaeffer (University of Virginia), “Situ the Scholar”. 이상의 발표문은 *JlATS*의 특집호로 발간되었다. David Germano, ed., 2013, “Si tu pan chen: Creation and Cultural Engagement in Eighteenth Century Tibet,”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Issue 7.

다크 자치기구 the Ladakh Autonomous Hill Council (LAHDC) of Leh, the Sonam Norbu Memorial(SNM) Hospital 등 라다크의 연구자, 사회활동가들은 물론 인도 뉴델리 the Jawaharlal Nehru University(JNU), Jammu University 등의 인도 학자들도 참석했다.²⁹

이 학회 자체의 결성은 1987년으로, 오스마스틴(Henry Osmaston, 1922~2006)을 주축으로 시작되었다. 당시 독일 드레스덴 인근 헤른후트(Herrnhut)에서 열린 제3회 Ladakh Studies Colloquium을 계기로 학회가 결성되었다. 당시 학회가 열린 헤른후트는 보헤미아 복음주의 모라비안 교회(the Moravian church)의 중심 도시 중 하나로 이들은 19세기 말부터 라다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것이 1970년대 후반 집중되기 시작하는 히말라야 지역에 대한 학술적 관심과 함께 라다크학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학회는 격년으로 열리며, 앞서 소개한 티베트학회와 달리 산림보호, 환경, 생물종보호 등에 더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첫 번째 학회(The first international colloquium)는 Konstanz(독일)에서 1981년 개최되었고, 그 후로 1985년 Pau(프랑스), 1987년 Herrnhut(독일), 1989년 Bristol(영국), 1992년 런던(영국), 1993년 Leh(라다크), 1995년 Bonn(독일), 1997년 Århus(덴마크), 1999년 Leh(라다크), 2001년 Oxford(영국), 2003년 Leh(라다크), 2005년 Kargil(라다크), 2007년 로마(이탈리아), 2009년 Leh(라다크), 2011년 Aberdeen(스코틀랜드), 2013년 Heidelberg(독일), 2015년 Kargil(라다크), 2017년 Bedlewo(폴란드) 회의까지 18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29 2013년 Heidelberg 회의의 결과물은 다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John Bray, Petra Maurer and Andrea Butcher, eds., 2015, *Tibet Journal*, Vol. 40, No. 2, *Special Issue on Ladakh: Historical Perspectives and Social Change*, the Library of Tibetan Works and Archives in Dharamsala and Tibet House in Lodhi Road, New Delhi. 또한 앞선 2007, 2009, 2011년 회의의 발표 문은 다음의 책으로 출간되었다. Erberto Lo Bue, John Bray, eds., 2014, *Art and Architecture in Ladakh. Cross-cultural Transmissions in the Himalayas and Karakoram*, Leiden: Brill.

V. 티베트학 교육기관의 구축과 미국 티베트학의 성장

미국의 티베트학은 두 차례에 걸쳐 유럽과 티베트 본토에서 유입된 학자들의 도움으로 발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유럽의 중앙아시아 역사와 언어를 연구하던 일부 학자들이 미국으로 이주하면서 비롯되었다. 이때는 티베트학뿐만 아니라 티베트학을 포함하는 광범한 중앙아시아와 다양한 지역의 아시아 관련 연구자들이 미국 학계로 유입되면서 미국의 아시아학이 성숙해지는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1959년 달라이라마의 인도 망명과 다람 살라 망명정부의 수립, 티베트 사회가 이산되는 아픔을 겪으면서 티베트의 주요 학자들이 미국 학계로 유입되었다. 이는 미국의 티베트학이 오늘날 세계 티베트 학계를 이끌게 되는 근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하에서는 몇 개의 주요 티베트학 교육기관을 통해 미국 티베트학계의 형성과 발전 배경을 이해해보고자 한다.

1. 유럽 티베트학의 이식: University of Washington(Seattle)을 중심으로

워싱턴 주립대학 산하 Ellison Center for Russian, East European and Central Asian Studies가 주도하고 있는 워싱턴의 중앙아시아학은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연구소를 거친 많은 중앙아시아 연구자 중 우리는 언어학의 대가 포페(Nicolas Poppe, 1897~1991)를 기억할 만하다. 청말 현재 중국의 산둥성 엔타이시에서 태어난 포페는 1930년대 초까지 러시아 사회과학원에서 활동했으며, 1949년부터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몽골계 중앙아시아 지역의 언어와 문화에 대한 연구를 이끌었다.³⁰ 중앙아시아학, 또는 몽골

30 포페의 연구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을 참조. Cirtautas, Arista Maria, 1977, "Nicholas Poppe: A bibliography of publications from 1924-1977," *Parerga* 4, Seattle: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Foreign Area Studies,

학은 티베트학과는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16세기 말부터 전개되는 티베트 불교의 중앙아시아 전파, 특히 몽골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던 티베트 불교권의 확대는 결국 티베트 문화의 전파지역을 확대시킨 결과를 낳았다. 따라서 티베트 민족이 주도한 것은 아닐지언정 티베트 문화의 한 지파로서 현대 티베트학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몽골 등 중앙아시아 지역 연구는 티베트학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포페가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활동하던 무렵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이 포페에게서 수학하고자 시에틀로 몰려들었다. 일본의 청대 및 몽골학 연구자 오카다 [岡田英弘, 1931~2017]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후 미국의 중앙아시아 또는 티베트학을 이끌 인재들이 이곳에서 배출되었는데 투렐(Wylie Turrell, 1927~1984)도 그중 하나였다.

투렐은 워싱턴 주립대학의 아시아 언어·문학학과(the Department of Asian Languages and Literature)의 교수로 재직하면서 티베트학 프로그램(the Tibetan Studies Program)을 설립하였는데 이는 미국에서 처음 개설된 티베트학 프로그램이었다. 투렐의 학문세계는 중국학으로 시작했지만, 로마에서 투짜로부터 티베트학에 입문한 뒤, 1958년 “The Geography of Tibet according to the ‘Dzam-gling-rgyas-bshad”로 박사학위를 받으면서 본격적인 티베트학 연구자로 국제 티베트학계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³¹

University of Washington.

- 31 Wylie Turrell, 1957, “A Place Name Index to George N. Roerich’s translation of the Blue Annals,” *Serie Orientale Roma XV*, Rome: Istitut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Wylie Turrell, 1975, *Tibet’s role in Inner Asia*,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Asi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Wylie Turrell, 1959, “A Standard System of Tibetan Transcriptio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22; Wylie Turrell, 1959, “Dating the Tibetan Geography ‘Dzam-gling-rgyas-bshad through its description of the western hemisphere,” *Central Asiatic Journal*, Vol. IV-4; Wylie Turrell, 1965, “The Tibetan Tradition of Geography,” *Bulletin*

투렐과 같은 학자가 배출된 데는 아시아 언어·문학학과의 산스크리트와 불교학 연구 전통과 관계가 깊다. 산스크리트, 한중일 동아시아 언어 문화는 물론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의 언어(팔리, 우르두, 힌디, 인도네시아, 타이, 베트남 언어) 문화를 연구 테마로 하고 있는 까닭에 문헌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한 광범한 아시아 불교문화 연구가 자연스럽게 주요한 연구 주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분위기가 이 대학이 아시아 불교문화, 더 나아가 티베트 불교문화 전통의 연구 기지로 각광받게 되는 기반이 되었다.

여기에 1960년 사카 교단의 고승 데슁 린보체(Dezhung Rinpoche, 1906~1987)가 미국에 망명하면서 이 대학에서 후학을 양성하게 되었다. 투렐은 이미

of Tibetology II; Wylie Turrell, 1959, "Nature in Tibetan Poetry," *Wen-hsüeh-tsa-chih*, 6,5; Wylie Turrell, 1962, "The Geography of Tibet According to the 'Dzam-gling-rgyas-bshad," *Serie Orientale Roma*, XXV, Rome; Wylie Turrell, 1963, "O-lde-spu-rgyal and the Introduction of Bon to Tibet," *Central Asiatic Journal*, VIII(2); Wylie Turrell, 1968, "Tibetan Passport: Their Function and Significance," *Central Asiatic Journal*, XII(2); Wylie Turrell, 1970, "A Tibetan Religious Geography of Nepal," *Serie Orientale Roma*, XLII, Rome; Wylie Turrell, 1975, *Tibet's Role in Inner Asia*, Asi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Indiana State University; Wylie Turrell, 1977, "Etymology of Tibetan: bla-ma," *Central Asiatic Journal*, 21; Wylie Turrell, 1977, "The First Mongol Conquest of Tibet Reinterpreted,"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37; Wylie Turrell, 1978, "Reincarnation: A Political Innovation in Tibetan Buddhism," *Proceedings of the Csoma de Kőrös Memorial Symposium*, Budapest; Wylie Turrell, 1979, "Lama tribute in the Ming Dynasty," *Tibetan Studies in Honour of Hugh Richardson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Seminar on Tibetan Studies*, Oxford; Wylie Turrell, 1980, "Some Political Factors in the Early History of Tibetan Buddhism," *Studies in History of Buddhism*, Delhi; Wylie Turrell, 1980, "Monastic Patronage in 15th century Tibet," *Acta Orient*, Hungary, tomus XXXIV, Fasc. 1-3; Wylie Turrell, 1981, "Influence of the Boddhisattva Doctrine on Tibetan Political History," *The Boddhisattva Doctrine in Buddhism*, Edited by Leslie S. Kawamura, Ontario: Wini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Wylie Turrell, 1982, "Dating the Death of Nāropa," *Indological and Buddhist Studies*, edited by L.A. Hercus, Canberra.

이탈리아 학계의 영향 아래 티베트학에 입문한 형편이었지만, 진 스미스 등이 이곳에서 수학하면서 워싱턴 주립대학은 20세기 후반 미국의 중앙아시아, 티베트 등 아시아 각지의 언어, 문화 연구의 중요한 연구 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하였다. 현재 BDRC를 이끌고 있는 쿠파도 1995년 하버드대학으로 자리를 옮기기 전 1993~1995년 무렵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활동했다.

2. 중앙아시아 지역학으로서 티베트학의 성장: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를 중심으로

인디애나대학은 미국에서 중앙유라시아 전문학과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대학 중 한 곳이다. 중앙유라시아학과(Department of Central Eurasian Studies)는 인류 문화의 중요한 발상지로서 유라시아 내륙지역의 문화, 역사 전통을 언어, 역사, 문헌 등의 기초연구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다.

이 학과는 원래 1943년 중앙유라시아에서 활동하는 미군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설치하면서 기초를 이루게 되었다. 당시 Uralic and Altaic Studies (1956~1965)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1965년에 정식 학과로 개편되었다가 1993년에 현재의 학과명 중앙유라시아학과로 개칭되었다. Yuri Bregel(1925~2016), György Kara(1935~), Christopher Beckwith(1945~), Devin DeWeese(1956~), Elliot Sperling(1951~2017) 등이 몽골과 티베트 중앙아시아의 역사, 문화를 연구하고 있다. 특히 이 학과는 이란, 투르크 등 광범한 중앙아시아 여러 지역의 역사, 문화를 서로 연결시켜 거시적 시야에서 중앙아시아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누리고 있다.

티베트학 분야에서도 Christopher Beckwith,³² Elliot Sperling³³이 미국

32 중앙아시아적 시각에서 토번 제국의 역할을 밝힌 초기 저작으로 Christopher Beckwith, 1993,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A History of the Struggle for Great Power among Tibetans, Turks, Arabs, and Chinese during the Early Middle Ag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가 대

학계를 이끄는 주요 연구자로 손꼽힌다. 그간 학계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했으며, 미국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4년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ibetan and Buddhist studies를 개최하기도 했고, Tibetan Mongolian Buddhist Cultural Center를 설립하여 연구의 영역을 확대해가고 있다. 이 센터는 인디애나의 명예교수 Thubten J. Norbu(1922~2008)가 1979년 티베트학의 발전을 위해 설립하였으며 내부에 사원과 티베트 불교예술을 살필 수 있는 상설 전시도 마련하고 있다.

3. 불교 지성사로서 티베트학의 발전: Harvard University(Cambridge) 등을 중심으로

하버드대학은 종교학, 동아시아 언어 문화학과, 산스크리트 전공 등 인문과학의 여러 방면에서 불교학 연구의 기초를 마련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해왔는데, 여기에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1995년 구입이 영입되면서 티베트학 분야가 크게 활기를 띠고 있다. 현재 그는 앞서 언급한 BDRC의 운영에서 중추적 역할을 맡

표적이며, 언어, 역사, 불교학 등 다양한 저서를 출간하였다. Christopher Beckwith, 2008, *Medieval Tibeto-Burman Languages III*, Leiden: Brill; Christopher Beckwith, 2006, *Medieval Tibeto-Burman Languages II*, Leiden: Brill; Christopher Beckwith, 2002, *Medieval Tibeto-Burman Languages*, Leiden: Brill; Christopher Beckwith, 2015, *Greek Buddha: Pyrrho's Encounter with Early Buddhism in Central A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ristopher Beckwith, 2012, *Warriors of the Cloisters: The Central Asian Origins of Science in the Medieval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Christopher Beckwith, 2009,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3 근현대 티베트사, 중국-티베트 관계 등 방면에서 업적을 남겼으며, 인권운동가로서도 명성이 높다. Elliot Sperling, 2000, *Tibet since 1950: Silence, Prison or Exile*, Aperture Foundation; Elliot Sperling, 2004, *The Tibet-China Conflict: History and Polemics*, East-West Center Washington 등.

고 있으며, Tibetan and Himalayan Studies와 Inner Asian and Altaic Studies(East Asian Language and Civilizations) 운영의 책임자로서 인도-티베트 불교 지성사, 티베트 문헌과 역사 등 다양한 분야의 강좌를 통해 후학 양성에 힘을 쏟고 있다.³⁴ 인도와 티베트 불교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이를 바탕으로 한 토번, 사카, 팍모두 시대에 걸친 티베트 역사, 문화 연구에서 티베트학계를 선도하고 있다. 그 외 종교학과의 가초(Janet Gyatso)의 활동도 주목할 만하다.³⁵

34 van der Kuijp, Leonard W.J., 1978, "Phya pa Chos kyi seng ge's Impact on Tibetan Epistemological Theory,"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5; van der Kuijp, Leonard W.J., 1983,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ibetan Buddhist Epistemology: From the Eleventh to the Thirteenth Century*, Wiesbaden: Franz Steiner; van der Kuijp, Leonard W.J., 1985, "Studies in the Life and Thought of Mkhas grub rje I: Mkhas grub rje's Epistemological Oeuvre and His Philosophical Remarks on Dignaga's Pramanasamuccaya," *Berliner Indologische Studien* 1; van der Kuijp, Leonard W.J., 1986, "On the Sources for Sa skya Paṇḍita's Notes on the Bsam yas Debate,"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9.2; van der Kuijp, Leonard W.J., 1987, "The Abbatial Succession of Gsang phu ne'u thog Monastery from ca.1073 to 1250," *Berliner Indologische Studien* 3; van der Kuijp, Leonard W.J., 1994, Review Article, "On The Lives of Śākyaśrībhadrā (?-1225)," *Journal of American Oriental Society* 114.4; van der Kuijp, Leonard W.J., 2013, "Some Remarks on the Textual Transmission and Text of Bu ston Rin chen grub's Chos 'byung, a Chronicle of Buddhism in India and Tibet," *Revue d'Etudes Tibétaines* 25; van der Kuijp, Leonard W.J., Kurtis R. Schaeffer, 2008, *An Early Tibetan Survey of Buddhist Literature* (Vol. 64, Harvard Oriental Series); van der Kuijp, Leonard W.J., 2009, *In Search of Dharma: Indian and Ceylonese Travelers in Fifteenth Century Tibet*, Wisdom,

35 Janet Gyatso는 Harvard Divinity School에서 티베트 문화와 불교를 연구하고 있다. 종교로서 티베트 불교, 여성사, 사회사적 관점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Janet Gyatso, 2016, *Being Human in a Buddhist World: An Intellectual History of Medicine in Early Modern Tibet*, Columbia University Press; Janet Gyatso, 2006, *Women of Tibet*, Columbia University Press; Janet Gyatso, 1999, *Apparitions of the Self:*

쿠입이 배출한 연구자로서 Kurtis R. Schaeffer(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Gray Tuttle(Columbia University, New York), Nathan W. Hill(SOAS, London)이 불교 지성사와 종교학, 중국-티베트 관계사, 티베트 역사 언어학 방면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³⁶

버지니아 주립대학(University of Virginia)의 종교학과(the Department of Religious Studies)에서 활동하고 있는 세퍼(Kurtis R. Schaeffer)는 워싱턴 주립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교육받았으며 역사, 종교 문헌에 대한 해박한 지식과 지성사적 기초 위에서 17~18세기 티베트 역사의 전개에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있다.³⁷

The Secret Autobiographies of a Tibetan Visiona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36 Nathan W. Hill은 티베트 역사 언어학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그의 대표적인 성과는 다음과 같다. Nathan W. Hill, 2009, "The Hphags-pa letter h and laryngeal phenomena in Mongolian and Chinese," *Central Asiatic Journal*, 53-2, pp. 183~205; Nathan W. Hill, 2010, "The converb -las in Old Tibetan,"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73-2, pp. 245~260; Nathan W. Hill, 2013, "Three notes on Laufer's law," *Linguistics of the Tibeto-Burman Area*, 36-1, pp. 57~72; Nathan W. Hill, 2017, "Come as lord of the black-headed - an Old Tibetan mythic formula," *Zentralasiatische Studien* 45, pp. 203~216.
- 37 Kurtis R. Schaeffer, Gray Tuttle, Matthew T. Kapstein, eds., 2013, *Sources of Tibetan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urtis R. Schaeffer and Gray Tuttle, eds., 2013, *A volume in the Sources of Asian Civilization series; The Tibetan History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urtis R. Schaeffer, 2009, *The Culture of the Book in Tibe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Kurtis R. Schaeffer and Leonard W. J. van der Kuijp, 2009, *An Early Tibetan Catalogue of Buddhist Literature: The Bstan pa rgyas pa nyi ma'i 'od zer of Bcom Idan ral gri*, Cambridge, MA, Harvard Oriental Series, HOS64; Kurtis R. Schaeffer, 2012, "Tibetan Poetry on Wutai Sha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6: www.jiats.org; Kurtis R. Schaeffer, 2011, "New Tibetan Scholarship, 1650-1700," Sheldon Pollock, Editor, *Forms of Knowledge in Early Modern Asia*, Raleigh, Duke University Press; Kurtis R. Schaeffer, 2003, "Ritual, Festival, and

그가 몸담고 있는 버지니아 주립대학은 티베트 불교 지성사는 물론 문헌학, 종교, 명상학 등으로 유명하다. 이곳에는 1992년부터 제르마노(David Germano)가 티베트 센터(The Tibet Center, www.uvatibetcenter.org)의 주임으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티베트학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자료 수집에도 관심을 기울여 티베트·히말라야 도서관(the Tibetan and Himalayan Library, 약칭 THL, www.thlib.org)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제르마노의 연구분야는 8~15세기 닝마, 빈 등 티베트 종교 전통을 규명함은 물론 현대 중국과 티베트 종교의 관계, 민간의 요가 수행 집단에 대한 연구 등 종교학적 관점에서 티베트 불교와 민간 종교에 접근하고 있기도 하다.³⁸ 이

Authority under the Fifth Dalai Lama,” *Power, Politics and the Reinvention of Tradition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Tibe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Xth Seminar, Oxford University; Kurtis R. Schaeffer, 1999, “Printing the Words of the Master: Tibetan Editorial Practice in the Collected Works of ‘Jam dbyangs bzhad pa’i rdo rje I (1648-1721),” *Acta Orientalia* 60 등.

- 38 David F. Germano, 2004, “Relics of the Living Buddha in Tibet,” *Embodying the Dharma: Buddhist Relic Veneration in Asia*, editors David Germano and Kevin Trainor, SUNY; David F. Germano, 2002, “The Tibetan and Himalayan Digital Library,” *D-Lib Magazine* (www.d-lib.org), Republished in ACCESS (www.igroupnet.com); David F. Germano, 2002, *The Many Canons of Tibetan Buddhism*, Brill Press; David F. Germano, 2002, “The Seven Descents and the Nature of sNga’ gyur: The “history” of rNying ma tantras”, In *The Many Canons of Tibetan Buddhism*, Brill Press; David F. Germano with Nathaniel Garson, 2001, “The Rise of “Thematic Research Collections” in the study, teaching and transmission of Buddhist scriptures.” *Journal of Electronic Buddhist Texts*, Volume 3, Seoul, Korea: Electronic Buddhist Text Institute; David F. Germano, 2001, “Encountering Tibet: The Ethics, Soteriology and Creativity of Cross-cultural Interpretation,” I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s*; David F. Germano with Janet Gyatso, 2000, “Longchenpa and the Possessions of Dakinis,” *Tantra in Practice*, edited by David Whi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David F. Germano, 1998, “Re-membering the dismembered body of Tibet: The contemporary Ter movement in the PRC,” *Buddhism in Contemporary Tibet: Religious*

리한 활동의 일환으로 2012년부터 명상과학연구센터(the Contemplative Sciences Center, www.uvacontemplation.org)를 운영하고 있다.

쿠입의 또 다른 제자인 투틀(Gray Tuttle)은 컬럼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Robert Barnett, Paul Hackett, Lauran R. Hartley, Annabella Pitkin, Sonam Tsering 등과 함께 활동하며 컬럼비아대학을 미국 티베트학의 주요 거점으로 성장시켰다. 티베트학에서 컬럼비아대학의 성장은 루빈 예술박물관의 예에서 보이듯이 국제도시로서 다양한 세계문화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뉴욕 문화 학술계의 관심에 힘입은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 대학의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Department of East Asian Languages and Cultures, EALAC)’는 다시 5개의 전공으로 구분되는데 거기에는 한중일 동아시아 삼국과 함께 동남아시아와 티베트 전공을 두어 티베트학을 비롯한 다양한 아시아학 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투틀은 전통 아시아 문명에서 티베트의 지위를 설명하고 동시에 티베트의 근대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연구방향의 큰 흐름 속에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근현대 중국과 티베트 관계를 역사적으로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중국의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인종에 근거한 민족주의 노선이 티베트 정책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논증했는가 하면, 최근에는 16~19세기 압도 티베트 지역의 역사적 역할에 천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³⁹

Revival and Cultural Identity (editors Melvyn Goldstein and Matthew Kapstei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David F. Germano, 1997, “Food, clothes, dreams and karmic propensities,” *Religions of Tibet in Practice*(editor Donald Lopez),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David F. Germano, 1997, “Preliminary practices: craziness, the elements and the letter Hum,” *Religions of Tibet in Practice* (editor Donald Lopez),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등.

- 39 Gray Tuttle, 2005, *Tibetan Buddhists in the Making of Moder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Ben Hillman, Gray Tuttle, 2016, *Ethnic Conflict and Protest in Tibet and Xinjiang: Unrest in China’s West*, Studies of the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VI. 맺음말: 국제 티베트학 연구 역량의 세계적 확산과 티베트의 미래

이상에서 필자는 유럽과 미국에서 티베트학이 성립하고 발전해가는 과정을 정리해보았다. 17세기 선교사의 활동에서 점차 확대되어 외교관, 탐험가, 학자, 인권활동가 등 약 4세기에 걸쳐 다양한 방면의 티베트학 종사자들이 관련 연구에 투신하였다. 중앙아시아를 향한 식민지 쟁탈과정에서, 또는 인도 불교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중국학, 돈황학에서 출발한 서구학계는 점점 티베트의 방대한 문화 전통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학이 그러했듯이, 더욱이 그중 일부에 불과한 티베트학은 현재 까지도 소수 학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이라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정치, 문화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티베트적 전통을 계승하고 대승불교의 적통임을 자임했으며, 한때 중앙아시아의 몽골계 민족과 청조(淸朝) 지배층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티베트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구 사회의 티베트학을 한국학계에 소개하는 이번 작업 또한 이러한 국제 티베트학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유럽과 미국학계의 양상을 가능한 빠짐없이 소개하려는 계획에도 불구하고 실상 이 글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이 적지 않다.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 등 동유럽·북유럽 학계는 물론 1959년 망명 티베트인 사회의 국제적 이산 이후 전개된 티베트학의 이식 과정은 거의 다루지 못했다. 추후 기회를 마련하여 정리되어야 할 부분이다. 또한 이번 작업에서 계획되지는 않았지만 티베트 내부의 학술 전통에 대한 계통적 정리도 작업이 필요한 중요한 부분이다.

장래 다람살라 망명정부와 서구 연구기관의 후원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

Karl Debreczeny, Gray Tuttle, 2016, *The Tenth Karmapa and Tibet's Turbulent Seventeenth Century*, Serindia Publications.

내 티베트계 사원과 연구소에 대한 관심을 확대함으로써 티베트의 학적 전통을 이해함과 동시에 서구 티베트학 발전의 원천인 불교와 티베트 문헌에 대한 연구를 확대해간다면 국내 티베트학의 발전에 큰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한다.

최근 20여 년간 외국 학계와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는 다람살라 소재 암네마첸 연구소(Amnye Machen Institute, AMI)가 그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⁴⁰ 암네마첸은 티베트 동북부(현재 青海省 果洛藏族自治州 瑪沁縣 雪山鄉)에 위치한 성산(聖山)의 이름이다. 쿤룬산맥 동부에 위치한 산으로 운남의 나시[納西]에서 라다크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광범한 티베트 문화권 내에서 ‘할아버지 마첸(Machen) 신(神)’으로 숭배되는 성스러운 산이다. 비록 티베트 대부분의 지역은 현재 중국의 여러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었지만, 그 문화 전통만은 망명 티베트인을 통해 세계 곳곳으로 소개되어 오늘날 세계 티베트학, 티베트 문화 열풍의 원천이 되고 있다. 장래 단절된 티베트 내부의 학문 전통을 회복하고 티베트학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암네마첸 연구소의 활동을 기대해본다.

40 1992년 설립 초기 이 연구소는 티베트학의 다양한 분야, 즉 역사, 문화, 종교, 철학 등 인문학적 영역은 물론 중국학, 정치외교, 사회정책, 현대정치 등 티베트 정부의 정책 연구기구의 역할도 동시에 수행하였으나, 1994년과 1996년에 티베트 의회와 정책연구소(the Tibetan Parliamentary and Policy Research Center), 티베트 인권과 민주주의연구소(the Tibetan Center for Human Rights and Democracy) 등이 설립되면서 이 분야의 연구는 암네마첸 연구소의 주요 과제에서 분리되었다. 최근에는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환경학 분야를 연구소의 주요 과제로 편입시켰고, 여기에 더해 여성학, 지도 제작과 출판, 디자인 관련 분야도 합류한 상태이다. 1999년 8월에는 미국 티베트학의 주요 연구기관인 인디애나대학(Indiana University)과 교류협정을 맺고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참고문헌

- Bacot, Jacques and Thomas, F.W. & Ch. Toussaint, 1940, *Documents de Touen-houang relatifs à l'histoire du Tibet*, Paris: Librairie Orientaliste Paul Geuthner.
- Beckwith, Christopher, 1993, *The Tibetan Empire in Central Asia: A History of the Struggle for Great Power among Tibetans, Turks, Arabs, and Chinese during the Early Middle Ag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ckwith, Christopher, 2002, *Medieval Tibeto-Burman Languages*, Leiden: Brill.
- Beckwith, Christopher, 2006, *Medieval Tibeto-Burman Languages II*, Leiden: Brill.
- Beckwith, Christopher, 2008, *Medieval Tibeto-Burman Languages III*, Leiden: Brill.
- Beckwith, Christopher, 2009, *Empires of the Silk Road: A History of Central Eurasia from the Bronze Age to the Present*,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ckwith, Christopher, 2012, *Warriors of the Cloisters: The Central Asian Origins of Science in the Medieval World*,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ckwith, Christopher, 2015, *Greek Buddha: Pyrrho's Encounter with Early Buddhism in Central Asia*,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ell, Charles Alfred, 1924, *Tibet: Past and Present*, Oxford: Clarendon Press.
- Bell, Charles Alfred, 1931, *The Religion of Tibet*, Oxford: Clarendon Press.
- Bray, John and Erberto Lo Bue eds., 2014, *Art and Architecture in Ladakh, Cross-cultural Transmissions in the Himalayas and Karakoram*, Leiden: Brill.
- Bray, John and Maurer, Petra & Butcher, Andrea, eds., 2015, *Tibet Journal*, Vol.

- 40, No. 2, *Special Issue on Ladakh: Historical Perspectives and Social Change*, the Library of Tibetan Works and Archives in Dharamsala and Tibet House in Lodhi Road, New Delhi.
- Cirtautas, Arista Maria, 1977, "Nicholas Poppe: A bibliography of publications from 1924–1977," *Parerga* 4, Seattle: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Foreign Area Studies, University of Washington.
- Csoma de Kőrös and Sang rgyas phung tshogs, 1834, *Dictionary, Tibetan and English*, Calcutta: The Baptist Mission Press.
- Csoma de Kőrös, 1834, *A Grammar of the Tibetan Language in English, Prepared under the patronage of the Government and the auspices of the Asiatic Society of Bengal*, Calcutta: Baptist Mission Press.
- Csoma de Kőrös, 1984, *Grammar of the Tibetan Language*, Budapest: Akadémiai Kiadó.
- Csoma de Kőrös, 1984, *Sanskrit–Tibetan–English Vocabulary: being an edition and translation of the Mahāvvyutpatti*, Budapest: Akadémiai Kiadó.
- Csoma de Kőrös, 1984, *Collected works of Alexander Csoma de Kőrös*, Budapest: Akadémiai Kiadó.
- Davidson, Ronald M., ed., 1981, *Wind Horse: Proceedings of the North American Tibetological Society*, Berkeley: Asian Humanities Press.
- Davidson, Ronald M., 2005, *Tibetan Renaissance: Tantric Buddhism in the Rebirth of Tibetan Cultur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Debreczeny, Karl and Tuttle, Gray, 2016, *The Tenth Karmapa and Tibet's Turbulent Seventeenth Century*, Serindia Publications.
- Desideri, Ippolito, 2004, *An Account of Tibet: The Travels of Ippolito Desideri of Pistoia, S.J. 1712–1727*, Routledge.
- Desideri, Ippolito, 2010, *Mission to Tibet: The Extraordinary Eighteenth-century Account of Father Ippolito Desideri, S.J.*, Wisdom Publishings.
- Dotson, Brandon, 2006, *Administration and Law in the Tibetan Empire: The Section on Law and State and its Old Tibetan Antecedents*, Dissertation of University Oxford.

- Dotson, Brandon, 2009, *The Old Tibetan Annals: An Annotated Translation of Tibet's First History*, Austrian Academy of Sciences Press.
- Foucaux, Philippe Édouard, 1858, *Grammaire de la langue tibétaine*, Paris: L'imprimerie impériale.
- Foucaux, Philippe Édouard, 1858, *Le trésor des belles paroles, choix de sentences composées en tibétain; suivies d'une élégie tirée du Kanjour*, Paris: B. Duprat.
- Germano, David F., 2002, *The Many Canons of Tibetan Buddhism*, Brill Press.
- Germano, David F., 1997, "Food, clothes, dreams and karmic propensities," *Religions of Tibet in Practice*(editor Donald Lopez),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rmano, David F., 1997, "Preliminary practices: craziness, the elements and the letter Hum," *Religions of Tibet in Practice* (editor Donald Lopez), Princeton,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rmano, David F., 1998, "Re—membering the dismembered body of Tibet: The contemporary Ter movement in the PRC," *Buddhism in Contemporary Tibet: Religious Revival and Cultural Identity* (editors Melvyn Goldstein and Matthew Kapstein), Berkeley, Californi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Germano, David F. with Janet Gyatso, 2000, "Longchenpa and the Possessions of Dakin 1 s," *Tantra in Practice*, edited by David White,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ermano, David F., 2001, "Encountering Tibet: The Ethics, Soteriology and Creativity of Cross—cultural Interpretation," In t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Religions*.
- Germano, David F. with Nathaniel Garson, 2001, "The Rise of 'Thematic Research Collections' in the study, teaching and transmission of Buddhist scriptures," *Journal of Electronic Buddhist Texts*, Volume 3, Seoul, Korea: Electronic Buddhist Text Institute.
- Germano, David F., 2004, "Relics of the Living Buddha in Tibet," *Embodying the Dharma: Buddhist Relic Veneration in Asia*, editors David Germano and

- Kevin Trainor, SUNY.
- Germano, David, ed., 2013, "Si tu pan chen: Creation and Cultural Engagement in Eighteenth Century Tibet,"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Issue 7.
- Gyatso, Janet, 1999, *Apparitions of the Self: The Secret Autobiographies of a Tibetan Visionar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Gyatso, Janet, 2006, *Women of Tibet*, Columbia University Press.
- Gyatso, Janet, 2016, *Being Human in a Buddhist World: An Intellectual History of Medicine in Early Modern Tibet*, Columbia University Press.
- Haarh, Erik, 1969, *The Yar-Lung dynasty: a study with particular regard to the contribution by myths and legends to the history of ancient Tibet and the origin and nature of its kings*, Københavns universitet.
- Hill, Nathan W., 2009, "The Hphags-pa letter ḥ and laryngeal phenomena in Mongolian and Chinese," *Central Asiatic Journal*, 53-2.
- Hill, Nathan W., 2010, "The converb -las in Old Tibetan,"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73-2.
- Hill, Nathan W., 2013, "Three notes on Laufer's law," *Linguistics of the Tibeto-Burman Area*, 36-1.
- Hill, Nathan W., 2017, "Come as lord of the black-headed- an Old Tibetan mythic formula," *Zentralasiatische Studien*, 45.
- Hillman, Ben and Tuttle, Gray, 2016, *Ethnic Conflict and Protest in Tibet and Xinjiang: Unrest in China's West*, Studies of the Weatherhead East Asian Institute, Columbia University.
- Jackson, David P., 2004, *A Saint in Seattle: The life of the Tibetan Mystic Dezhung Rinpoche*, Wisdom Publications.
- Kapstein, Matthew T., 2006, *The Tibetans*, Blackwell Publishing.
- van der Kuijp, Leonard W.J., 1983, *Contributions to the Development of Tibetan Buddhist Epistemology: From the Eleventh to the Thirteenth Century*, Wiesbaden: Franz Steiner.
- van der Kuijp, Leonard W.J., Kurtis R. Schaeffer, 2008, *An Early Tibetan*

- Survey of Buddhist Literature*, Vol. 64, Harvard Oriental Series,
- van der Kuijp, Leonard W.J., 2009, *In Search of Dharma: Indian and Ceylonese Travelers in Fifteenth Century Tibet*, Wisdom,
- van der Kuijp, Leonard W.J., 1978, "Phya pa Chos kyi seng ge's Impact on Tibetan Epistemological Theory," *Journal of Indian Philosophy*, 5,
- van der Kuijp, Leonard W.J., 1985, "Studies in the Life and Thought of Mkhas grub rje I: Mkhas grub rje's Epistemological Oeuvre and His Philosophical Remarks on Dignaga's Pramanasamuccaya," *Berliner Indologische Studien*, 1,
- van der Kuijp, Leonard W.J., 1986, "On the Sources for Sa skya Pañḍita's Notes on the Bsam yas Debate," *Th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Buddhist Studies*, 9,2,
- van der Kuijp, Leonard W.J., 1987, "The Abbatial Succession of Gsang phu ne'u thog Monastery from ca.1073 to 1250," *Berliner Indologische Studien*, 3,
- van der Kuijp, Leonard W.J., 1994, Review Article, "On The Lives of Śākyaśrībhadra (?–1225)," *Journal of American Oriental Society*, 114,4,
- van der Kuijp, Leonard W.J., 2013, "Some Remarks on the Textual Transmission and Text of Bu ston Rin chen grub's Chos 'byung, a Chronicle of Buddhism in India and Tibet," *Revue d'Etudes Tibétaines*, 25,
- Li Fang Kuei, and W. South Coblin, 1987, *A Study of the Old Tibetan Inscriptions*, Institute of Hisotry and Philology, Special Publications No.91, Taipei: Academia Sinica,
- Ligeti, Louis, ed., 1978, *Proceedings of the Csoma de Kőrös Memorial Symposium* : held at Mátrafüred, Hungary, 24–30 September, 1976, Budapest: Akadémiai Kiadó,
- Lopez Jr. Donald S., 2006, *The Madman's Middle Way: Reflections on Reality of the Tibetan Monk Gendun Choephel*,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Lopez Jr. Donald S., Thupten Jinpa, 2017, *Dispelling the Darkness: A Jesuit's Quest for the Soul of Tibet*, Harvard University Press,
- Martin, Dan, 1997, *Tibetan Histories*, London: Serindia Publications,

- McKay, Alex, 2003, *The history of Tibet*, London, New York : Routledge Curzon,
- Meinheit, Susan, 2013, “Brief Encounters: Rockhill and The 13th Dalai Lama at Wutaishan,” *The Centennial of the Tibeto–Mongol Treaty: 1913–2013: Lungta*, Vol.17, Dharamshala: Amnye Machen Institute.
- Petech, Luciano ed., 1952, *I missionari italiani nel Tibet e nel Nepal*, Rome: Libreria dello Stato.
- Petech, Luciano, 1972, *China and Tibet in the early 18th century: history of the establishment of Chinese protectorate in Tibet*, Leiden: E. J. Brill.
- Petech, Luciano, 1990, *Central Tibet and the Mongols*, Rome: Istituto Italian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Istituto Universitario Orientale.
- Poussin, Louis De La Vallée, 1962, *Catalogue of the Tibetan Manuscripts from Tun–Huang in the India Office Library*, Oxford University Press.
- Richardson, H. E., 1962, *A short history of Tibet*, New York: Dutton,
- Richardson, H. E., 1985, *A Corpus of Early Tibetan Inscriptions*, Royal Asiatic Society.
- Rockhill, W. W., 1884, *Prâtimoksha sutra; ou, Le traité d’émancipation selon la version tibétaine, avec notes et extraits du Dulva (Vinaya)*, Paris: E. Leroux.
- Rockhill, W. W., 1891, *The land of the lamas: notes of a journey through China, Mongolia and Tibet*, Century Co., reprinted from New Delhi: Asian Publication Services, 1975.
- Rockhill, W. W., 1894, *Diary of a journey through Mongolia and Tibet in 1891 and 1892*, Smithsonian Institution.
- Rockhill, W. W., 1895, *Notes on the ethnology of Tibet, Based on the collections in the United States National museum*, Detached from Annual report, 1893, U.S. National Museum, Washington, 1895, published in New York.
- Rockhill, W. W., 1895, *Pilgrimage to the great Buddhist sanctuary of north China*, published in Boston: s.n., “Reprinted from the Atlantic Monthly for June, 1895.”
- Rockhill, W. W., 1910, *The Dalai lamas of Lhasa and their relations with the*

- Manchu emperors of China, 1644–1908*. In *T'oung Pao* ou Archives concernant l'histoire, etc. de l'Asie orientale.
- Rockhill, W. W., 1966, *Chau Ju–kua: his work on the Chinese and Arab trade in the twelfth and thirteenth centuries, entitled Chu–fan–chi*, Amsterdam: Oriental Press.
- Rockhill, W. W., 1977, *Notes on Tibet*, New Delhi: Asian Publication Services.
- Rockhill, W. W., 1982, *Udānavarga : a collection of verses from the Buddhist canon : being the northern Buddhist version of Dhammapada*, Delhi: Rare Reprints in New Delhi distributed by D.K. Publishers' Distributors.
- Rockhill, W. W., 2007, *The life of Buddha : derived from Tibetan works in the Bkah–hgyur and Bstan–hgyur*, Kegan Paul.
- Rockhill, W. W., 1891, “A Geographical, Ethnographical, and Historical Sketch, Derived from Chinese Sources,” *Journal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of Great Britain and Ireland*.
- Rockhill, W. W., 1897, “Miscellaneous papers including articles on Tibet and Mongolia,” *Tibetan Buddhist birth–stories*, Offprint from *Journal of the American oriental society*, v, xviii.
- Schaeffer, Kurtis R., 2009, *The Culture of the Book in Tibet*,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aeffer, Kurtis R. and Leonard W. J. van der Kuijp, 2009, *An Early Tibetan Catalogue of Buddhist Literature: The Bstan pa rgyas pa nyi ma'i 'od zer of Bcom ldan ral gri*, Cambridge, MA, Harvard Oriental Series, HOS64.
- Schaeffer, Kurtis R. and Tuttle, G. eds., 2013, *A volume in the Sources of Asian Civilization series: The Tibetan History Reader*,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aeffer, Kurtis R. and Tuttle, G. & Kapstein, Matthew T., eds., 2013, *Sources of Tibetan Tradition*,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Schaeffer, Kurtis R., 1999, “Printing the Words of the Master: Tibetan Editorial Practice in the Collected Works of ‘Jam dbyangs bzhad pa'i rdo rje I (1648–1721),” *Acta Orientalia* 60.

- Schaeffer, Kurtis R., 2003, "Ritual, Festival, and Authority under the Fifth Dalai Lama," *Power, Politics and the Reinvention of Tradition in Seventeenth and Eighteenth Century Tibet: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Xth Seminar*, Oxford University.
- Schaeffer, Kurtis R., 2011, "New Tibetan Scholarship, 1650–1700," Sheldon Pollock, Editor, *Forms of Knowledge in Early Modern Asia*, Raleigh: Duke University Press.
- Schaeffer, Kurtis R., 2012, "Tibetan Poetry on Wutai Shan,"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6.
- Schmidt, Isaac Jacob, 1839, *Grammatik der Tibetischen Sprache*, St. Petersburg.
- Shen, Tsung-lien, 1953, *Tibet and the Tibetans*, Stanford University Press.
- Smith, Ellis Gene, 2001, *Among Tibetan Texts: History and Literature of the Himalayan Plateau*, Wisdom Publications Inc..
- Snellgrove, David L., 1968, *A cultural history of Tibet*, New York: F. A. Praeger.
- Sperling, Elliot, 2000, *Tibet since 1950: Silence, Prison or Exile*, Aperture Foundation.
- Sperling, Elliot, 2004, *The Tibet–China Conflict: History and Polemics*, East–West Center Washington.
- Stein, Rolf Alfred, 1962, *La civilisation tibétaine*, Paris: Dunod.
- Stein, Rolf A., translated and edited by Arthur P. McKeown, 2010, *Rolf Stein's Tibetica Antiqua with Additional Materials*, Leiden, Boston: Brill.
- Bstan-'dzin-rgya-mtsho, Dalai Lama XIV, 1967, *The history of Tibet*, Varanasi, India.
- Thomas, F.W., 1935, *Tibetan Literary texts and documents concerning Chinese Turkestan*, Pt.1, Literary Texts, London: Royal Asiatic Society.
- Thomas, F.W., 1951, *Tibetan Literary texts and documents concerning Chinese Turkestan*, Pt.2, Documents, London: Luzac.
- Tucci, G., 1932, *Indo – Tibetica* I, Roma: Reale Accademia d'Italia.
- Tucci, G., 1933, *Indo – Tibetica* II, Roma: Reale Accademia d'Italia.
- Tucci, G., 1935–36, *Indo – Tibetica* III, Roma: Reale Accademia d'Italia.

- Tucci, G., 1941, *Indo-Tibetica* IV, Roma: Reale Accademia d'Italia.
- Tucci, G., 1949, *Tibetan Painted Scrolls*, La Libreria Dello Stato, Rome: reprinted by SDI Publications, 1999.
- Turrell, Wylie, 1975, *Tibet's role in Inner Asia*, Bloomington, Ind.: Indiana University, Asian Studies Research Institute.
- Turrell, Wylie, 1957, "A Place Name Index to George N. Roerich's translation of the Blue Annals," *Serie Orientale Roma* XV, Rome: Istituto per il Medio ed Estremo Oriente.
- Turrell, Wylie, 1959, "A Standard System of Tibetan Transcriptio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22.
- Turrell, Wylie, 1959, "A Standard System of Tibetan Transcription," *Harvard Journal of Asiatic Studies*, Vol. 22.
- Turrell, Wylie, 1959, "Dating the Tibetan Geography 'Dzam-gling-rgyas-bshad through its description of the western hemisphere," *Central Asiatic Journal*, Vol. IV-4.
- Turrell, Wylie, 1959, "Nature in Tibetan Poetry," *Wen-hsieh-tsa-chih*, 6.5.
- Turrell, Wylie, 1962, "The Geography of Tibet According to the 'Dzam-gling-rgyas-bshad," *Serie Orientale Roma*, XXV, Rome.
- Turrell, Wylie, 1963, "O-lde-spu-rgyal and the Introduction of Bon to Tibet," *Central Asiatic Journal*, VIII(2).
- Turrell, Wylie, 1965, "The Tibetan Tradition of Geography," *Bulletin of Tibetology* II.
- Turrell, Wylie, 1968, "Tibetan Passport: Their Function and Significance," *Central Asiatic Journal*, XII(2).
- Turrell, Wylie, 1977, "Etymology of Tibetan: bla-ma," *Central Asiatic Journal*, 21.
- Turrell, Wylie, 1978, "Reincarnation: A Political Innovation in Tibetan Buddhism," *Proceedings of the Csoma de Kőrös Memorial Symposium*, Budapest.
- Turrell, Wylie, 1981, "Influence of the Boddhisattva Doctrine on Tibetan Political

- History,” *The Bodhisattva Doctrine in Buddhism*, Edited by Leslie S. Kawamura, Ontario: Winifrid Laurier University Press.
- Tuttle, Gray, 2005, *Tibetan Buddhists in the Making of Modern China*, Columbia University Press.
- Tuttle, Gray and Elverskog, Johan, ed., 2011, “Wutai Shan and Qing Culture,” *Journal of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Tibetan Studies*, Issue 6.
- Wessels, C., 1924, *Early Jesuit travellers in Central Asia, 1603–1721*, The Hague, Nijhoff.
- 楊銘 著, 1997, 『土蕃統治敦煌研究』,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 楊富學·楊銘 主編, 1999, 『中國敦煌百年文庫』(民族卷), 甘肅文化出版社.
- 王堯 著, 1988, 『敦煌土蕃文書論文集』, 四川民族出版社.
- 王堯 著, 1994, 『西藏文史考信集』, 中國藏學出版社.
- 王堯 著, 2000, 『水晶寶鬘－藏學文史論集』.
- 王堯 著, 2005, 『西藏文史探微集』, 中國藏學出版社.
- 王堯 編著, 1982, 『土蕃金石錄』, 北京: 文物出版社.
- 王堯·陳踐 編著, 1985, 『土蕃簡牘綜錄』, 文物出版社.
- 天津社會科學院歷史研究所編, 1984, 『1901年美國對華外交檔案: 有關義和團運動暨辛丑條約談判的文件』, 濟南: 齊魯書社.

유럽과 미국의 티베트학(Tibetology), 성과와 과제

김성수

이 글은 최근 티베트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에 부응하고자 근래 전개된 티베트학의 발전상을 서구학계를 중심으로 정리해본 것이다. 과거 티베트에서 진행된 불교의 토착화는 후기 인도 불교의 아류 내지는 변형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관점 아래 티베트 불교는 자연스레 동아시아 여러 국가에 전승된 대승불교와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별개의 것이라 여겨지곤 했다. 이러한 전통적인 관점과는 달리 실상 티베트는 후기 인도 불교가 직접 전래된 대승불교의 주요 전파 지역이며, 티베트 불교계는 후기 인도 불교를 계승한 적장자로 자임하면서 12세기 이래 중앙아시아를 향한 불교 전파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최근 30여 년간 서구의 티베트학계가 중심이 되어 티베트 불교계에 대한 역사적 지위를 회복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연구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자료를 축적하고 교육기관을 통해 연구자를 배출하는가 하면, 학회 활동을 통해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서구 사회의 티베트학에 대한 학적 전통은 멀리 17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17세기 선교사의 활동에서 점차 확대되어 외교관, 탐험가, 학자, 인권활동

가 등 약 4세기에 걸쳐 다양한 방면의 티베트학 종사자들이 관련 연구에 투신하였다. 중앙아시아를 향한 식민지 쟁탈과정에서, 또는 인도 불교 연구의 연장선상에서, 또는 중국학, 둔황학에서 변연을 넓혀온 서구학계는 점점 티베트의 방대한 문화 전통에 매료되기 시작했다.

중앙아시아학이 그러했듯이, 더욱이 그중 일부에 불과한 티베트학은 현재 까지도 소수 학문에 불과하다. 그러나 인도와 중국이라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정치, 문화 대국의 틈바구니에서 티베트적 전통을 계승하고 대승불교의 적통임을 자임했으며, 한때 중앙아시아의 몽골계 민족과 청조(淸朝) 지배층의 정신세계를 지배했던 티베트에 대한 관심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서구 사회의 티베트학을 한국학계에 소개하는 이번 작업 또한 이러한 국제 티베트학의 발전을 반영하는 것이다.

주제어: 티베트학, 예수회 선교사, 국제 티베트학회(IATS), 젊은 티베트학 연구자 모임(SYT), 불교학 디지털자료 센터(BDRC)

ABSTRACT

Academic History of Tibetology among the European and North American Scholars

Kim Sungsoo

Tibetology has recently been noted more and more among the Korean academic sphere. Around the early 20th century, scholars who studied Indian Buddhism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Tibetan Buddhism as a successor of Indian Buddhism. Especially after the Mongol invasion of the Tibetan plateau, Tibetan Buddhism spread through territories of the Mongol Empire. Thus there was established on the Tibetan Plateau a prominent academic and religious center for Buddhism. This phenomenon continued until the late 19th and the early 20th centuries in the Central Asian world, which included the Qing Empire.

Depending on the Jesuit missionary, such as Antonio de Andrade (1580~1634), who traveled to northern India and the Himalayan area during the 17th century, European academies began contributing to establishing several centers for Tibetan Studies, including Tibetan Languages, History, Buddhism, and other fields. This academic tradition

was followed by Kőrösi Csoma Sándor (1784~1842), Philippe Édouard Foucaux (1811~1894), F.W. Thomas (1867~1956), Jacques Bacot (1877~1965), Paul Pelliot (1878~1945), Marcelle Lalou (1890~1967), Louis De La Vallée Poussin (1869~1938), Giuseppe Tucci (1894~1984), and Rolf A. Stein (1911~1999).

Following the end of World War Two, several prominent scholars in Central Asian Studies, such as Nicolas Poppe (1897~1991), joined to build the American academic base for Central Asian Studies, including Tibetan Studies at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Seattle. And from the 1960s Tibetan political refugees such as Dezhung Rinpoche (1906~1987) became associated with education in the Tibetan language and Buddhism among American academies. This academic tradition of the University of Washington was led by another European scholar, Leonard van der Kuijp, and moved to Harvard University in Cambridge, Massachusetts.

Since the Csoma de Kőrös Memorial Symposium in 1976 had been held by Ligeti, a Hungarian Tibetologist, there have appeared several academic organizations for Tibetan Studies, such a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IATS) and the International Seminar of Young Tibetologists (ISYT). These dynamic activities in western academia led modern Tibetan Studies.

Keywords: Tibetology, Jesuit Missionaries, 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Tibetan Studies (IATS), International Seminar of Young Tibetologists (ISYT), Buddhist Digital Resource Center (BDRC)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평

‘조일수호조규’ 체결과 성격의 재조명

– 한일관계연구소 편(2017),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문다』, 청아출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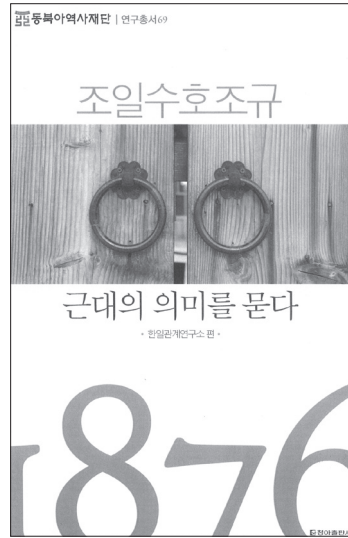
박한민 |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연구교수

- I. ‘조일수호조규’ 연구의 개략적인 흐름
- II. 책의 구성과 내용
- III. 이 책의 장점
- IV. 향후의 연구과제



I. '조일수호조규' 연구의 개략적인 흐름

조선의 근대를 어느 시점부터로 볼 것인가를 두고 학계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존재한다. 1876년 2월 조선이 일본과 체결한 '조일수호조규'를 그 기점으로 삼을지, 아니면 구미 열강과 최초로 조약을 체결하게 된 1882년 5월 '조미수호통상조약'을 기준으로 할지, 그것도 아니면 조선정부가 갑오개혁을 추진하기 시작한 1894년을 근대의 본격적인 출발점으로 삼을지를 두고 다양한 설이 제시되어 있다. 근대의 출발점과 계기를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를 두고 각자 다른 입장에서 기점을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많이 받아왔던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일수호조규' 체결이라 할 수 있다. 조선이 근대 자본주의 체제로 편입되는 데 최초로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게 된 주체가 전통적으로 교린관계를 맺고 있던 일본이었기 때문이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통해서 교린관계를 탈피하고 '만국공법(萬國公法)' 중심의 국제법 체제로 양국 관계를 새롭게 개편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문 곳곳에 담겨 있었기 때문이다. 잘 알려져 있듯이 조선을 '자주지방(自主之邦)'으로 규정한 제1관은 청국이 조선에 대하여 종주권과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의도가 강하게 들어가 있었다. 1940년 다보하시 기요시[田保橋潔]가 조선총독부 중추원을 통해 출간한 『近代日鮮關係の研究』 역시 기본 출발점은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청의 종주권이 조선 내에서 깨어져 가는 역사적 전개 과정

을 청일전쟁 이전까지 살펴보는데 있었다. 이러한 관점은 향후 여러 연구자들의 연구방향을 설정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오랫동안 ‘조일수호조규’ 체결 과정과 조약문의 내용에 대한 평가는 조선 측의 근대 조약에 대한 무지와 각 조문이 내포하고 있는 불평등 요소를 강조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이것은 물론 동아시아 역사상 근대화의 출발이 제일 늦었던 조선에 대하여 개항 100년을 맞이하였던 1960~1970년대의 문제의식과 ‘근대주의적 시각’, 1910년 ‘한국병합’과 함께 식민지로 전락했던 역사적 경험 등이 복잡하게 중첩되어 나타난 연구경향이기도 했다. 하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개항에 대한 조선 측의 대응을 재조명하면서 자주적으로 개항을 맞이할 내부적인 역량은 있었다는 새로운 접근방향(‘자주적 개국론’)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로 여기에 관여했던 박규수, 강위, 신헌, 고종 등의 대응과 인식 등을 상세하게 규명하기 시작했다. 조선 측 자료에 입각하여 살펴본 결과 대응양상이 단순히 ‘무지의 소산’만은 아니었으며, 기존 인식이나 관행의 연속선상에서 조문 내용을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반발 없이 조약을 체결하게 된 것이 밝혀졌다. 한편으로는 ‘조일수호조규’에 대한 평가와 기억이 시기별로 층위를 달리하면서 계속 변화를 거듭해왔다는 사실도 각 시기별로 남아 있는 여러 기록의 폭넓은 검토를 통해서 확인되었다.

최근에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 조선과 일본의 협상 과정과 양국 정부의 인식 등을 상세하게 알 수 있는 자료집으로 『근대한국의외문서 제3권: 조일수호조규』(동북아역사재단, 2012)가 출간되었고, 『심행일기』(신헌 지음, 김종학 옮김, 푸른역사, 2010)와 『국역 을병일기』(김종학 옮김, 국립중앙도서관, 2014) 등의 자료가 한글로 번역되어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고무적인 일이다.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소개, 탈초를 통한 원문 제공을 통해서 조선 측 입장에서 ‘조일수호조규’ 체결 과정을 좀 더 심층적으로 재조명해볼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이다. 일본 측에서 아시아역사자료센터(アジア歴史資料センター)를 통해 국립공문서관과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소장되어 있는 원자료가 온라인상으로 계속 공개되면서 『日本外交文書』 수록 자료의 원문을 확인해볼 수 있게 되어 자료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졌다. 이러한 가운데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묻다』라는 제목으로 단행본이 출간되었다. 한국 측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일수호조규의 실제적 진실을 규명한 후 이를 바탕으로 근대의 의미를 되묻고자” 한다는 기획 취지에서 그간 진행한 공동연구의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II. 책의 구성과 내용

이 책에는 5명의 집필진이 참여하였으며, 전체 6편의 글을 수록하고 있다. 제1장에서 제4장까지는 외교자료에 기초하여 ‘조일수호조규’ 체결 과정과 조일 양국의 대응, 이것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영국의 정세판단과 대응까지 시간 흐름에 따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과 제6장에서는 ‘조일수호조규’ 체결이 갖는 역사적, 정치사회적 의미를 체결 시점부터 해방에 이르는 시기까지를 대상으로 하여 거시적 관점에서 고찰하였다. 책의 전체적인 목차 구성을 먼저 제시한다음, 각 필자가 장별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도록 한다.

제1장 「운요호 사건과 이토 히로부미」(김홍수)

제2장 「공경에서의 탈출: 조일수호조규의 체결 과정」(김중하)

제3장 「조일수호조규 부속 조약의 걸과 속」(김홍수)

제4장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 영국의 대조선정책」(한승훈)

제5장 「쇄국에서 개국으로: 조일수호조규와 조선의 정치사회 변화」(전상숙)

제6장 「혼돈과 새로운 기회 모색: 한국 근대정치사 속에서 조일수호조규의 의의」(김정호)

제1장은 1875년 9월 20일 발생했던 운요호[雲揚號] 사건과 관련하여 당시 함장이었던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가 남긴 보고서의 일자와 내용 조작에 참의(參議)이자 공부경(工部卿)이었던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깊숙이 개입했

을 가능성을 간접적, 정황상 증거와 추론에 기초하여 검토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비서유찬(秘書類纂)』의 원본 자료로 영인 간행된 『이토 히로부미 문서(伊藤博文文書)』에 수록된 문서로, 공부성(工部省) 용지에 필사된 보고서라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노우에 요시카 함장의 9월 29일자 첫 보고서와 10월 8일자 공식 보고서 사이에는 교전 날짜가 3일에서 하루로, 내용상 조작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기존 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공문별록(公文別錄)』, 『이토 히로부미 문서』 등에 수록된 보고서의 문구(‘단정’과 ‘사관’ 용어의 통일)를 비교하고, 문서가 수록된 용지의 양식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9월 29일자 보고서를 1차적으로 이토 히로부미와 부아소나드가 검토한 다음, 보고서 문안을 다듬은 후 해군성(海軍省)에 건네졌고, 약간의 수정을 거친 다음 해군 대보를 통해 태정대신에게 보고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밟았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운요호 사건 발생 직전에 작성된 부아소나드의 각서, 공부성 용지에 작성된 이노우에 요시카 보고서 등을 놓고 보았을 때 이토 히로부미가 사건의 기획에서 사후 처리까지 주도했음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새로 공개된 원자료의 수록 용지와 내용을 치밀하게 비교 검토하여 『비서유찬』과 같은 번각본 자료 활용만으로는 읽어낼 수 없는 일본 정부의 의사결정 구조까지도 세밀하게 읽어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제2장에서는 ‘조일수호조규’ 체결 과정과 그 속에서 나타난 조선과 일본 측의 대응을 『심행일기(沁行日記)』, 『을병일기(乙丙日記)』 등 조선 측 자료를 적극 활용하면서 협상 과정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체결에 앞서 운요호 사건과 관련하여 일본 정부 내의 동향을 먼저 검토하였다. 이 사건은 오쿠보 도시미치[大久保利通]와 이토 히로부미 등의 핵심권력층이 묵인 내지 방조하는 은밀한 방식으로 개입했을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를 통해서 이들은 단기적으로 정적 제거와 권력 구조 공고화라는 정치적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을 위해서 일본 정부는 구로다 기요타카[黒田清隆]를 전권대신으로 하여 사절을 파견하였는데, 그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부여하되 전투 행위의 개시는 불허했다. 그리고 조약문의 최종 협상은 미야모토 오카즈[宮本小一]와 같은

수행원들이 담당하였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볼 때 일본 정부가 조약 체결을 통해서 획득하고자 했던 목표는 당장의 외교적 실리를 얻어내는 것보다 조선과 불평등조약을 체결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제한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국 ‘조일수호조규’ 체결은 오후보 도시미치로 대표되는 일본 정부에서 수년간 이어진 조선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의 정치적 곤경에서 탈출하기 위해 연출한 한 편의 ‘외교극’에 가까웠다고 평가했다. 또한 ‘조일수호조규’ 체결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온 불평등조약의 강요나 자주적 개국 의지에 따른 개항 등의 논의에는 일본 정부의 실력과 침략 의지에 대한 과대평가가 있었다는 점도 아울러서 문제로 지적했다. 이것은 오히려 오후보 정권의 취약성을 덮기 위한 선전과 후대의 역사적 해석이 만들어낸 신화에 가깝다고 저자는 판단했다.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 일본 정부가 처해 있던 상황을 놓고 볼 때 그들의 실제 대응역량에서 결과론적으로 과잉 포장되어 있던 부분을 걷어내고 냉정하게 볼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제기한 것이라 하겠다.

제3장에서는 1876년 7월 미야모토 오카즈 이사관(理事官)의 도한과 조일수호조규 부속조약의 체결 내용을 다루었다. 미야모토는 ‘조일수호조규’ 체결 과정에서 협상 실무를 담당하고 있었던 온건파에 속하는 인물이었다. 그는 부국강병의 원천으로 교역을 강조했으며, 조선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은 정치적 혹은 전략적이라기보다 철저히 상업적 성격을 띠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이사관으로 조선에 건너간 이후 강수관 조인희(趙寅熙)와 교섭을 진행하면서 ‘조일수호조규 부록’과 ‘무역규칙’을 체결하였다. 그 내용 가운데 저자는 두 가지 내용을 다시 보아야 한다고 했다. 하나는 미곡 교역이었고, 다른 하나는 무역상 수년간 무관세에 대한 사안이었다. 저자는 개항장 내 미곡 교역은 당시 대기근이 발생하던 상황에 구속되어 허용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조일 양국의 무역에서 수년간 무관세를 허용한 사안의 경우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출세까지 거두지 않기로 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본 상인들의 조선 무역에 대해서는 일본 정부가, 조선 상인의 일본 무역에 대해서는 조선 정부가 수세를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 동의

했던 것으로 이해하였다. 즉, 조선 정부가 관세에 대해서 무지해서 수년간 무관세를 허용했다기보다는, 무역 이익에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동화폐의 사용을 자발적으로 추가하는 등의 결정을 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다. 조선 정부 차원에서도 향후 무역 증진을 통해 경제적으로 이익을 얻게 될 지점을 고려하면서 관련 조항을 별다른 이익 없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맥락을 재조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조선 측 나름대로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계산에 기초해서 수용한 결정임을 새롭게 짚어내었다는 점에서 향후 이 시기 전후 조선 정부의 대응논리를 재조명하는 연구를 진행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제4장에서는 1854년부터 출발하여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는 1876년까지 동아시아에 주재한 영국 외교관들이 남긴 기록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의 조선 인식과 정책 결정을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영국 외무부가 제작한 기밀문서철을 주요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첫 번째로 검토한 것은 보우링 보고서였다. 보우링은 면화와 모직 제품을 중심으로 영국산 주요 제품의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면서 조선의 존재를 영국 외무부에 각인시켰고, 처음으로 조선 개항을 언급했다고 한다. 다음으로는 1865년 주청 영국공사 웨이드에게 상인 모리스슨이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 내 밀무역의 존재를 밝혔으며, 조선과의 통상조약 체결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웨이드는 영국 단독의 문호 개방을 주장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1866년 8월 울콕이나 상하이 주재 윈체스터 영사의 보고에서는 조선이 독립의 지위에 있음이 거론되고 있었다. 영국에서는 1868년 이전까지 조선이 청의 속방(屬邦)이기는 하나 내치와 외정에서는 완전한 독립을 행사하는 국가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이어서 1875년부터 1876년 사이 파크스와 외무부 사이에 주고받은 기밀 공문 내용을 중심으로 조일 간 교섭 진행 상황과 거문도 점령 건의 등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1875년 7월 시점에서 파크스는 조일 간의 갈등을 배경으로 러시아의 남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거문도 점령을 본국에 제안하였다. 이전 시기 영국 외교관들과 마찬가지로 파크스도 영국 단독보다는 서구 열강이 공동으로 조선의 문호개방을 추진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 확대를 차단하고자 했다. 파크스의 거문도 점령

제안에는 요코하마 주둔 해군 부제독 라이더도 동조했다. 하지만 영국 외무부에서는 실비아호를 조선 근해로 파견하여 해안을 조사하도록 하는데 그쳤으며, 점령 제안을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1876년 2월 ‘조일수호조규’가 체결되고 난 후, 파크스는 조관 내용을 입수하여 분석하였다. 그는 이 조약이 1858년 체결된 ‘영일수호통상조약’과 유사하다고 하면서 불평등한 조약이었음을 밝혔다. 당대 동아시아 내 조약 체결의 흐름을 꿰뚫고 있던 파크스가 ‘조일수호조규’를 어떻게 보고 있었는지, 어느 조약을 기준으로 유사성을 판단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전반적으로 동아시아 주재 영국 외교관들은 조선이 서구 열강과 공동으로 조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어느 한 국가로 쏠림이 일어나는 것을 막고, 동아시아 조약 체제 내에서 이익을 균점하고자 하는데 주안점을 두면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제5장에서는 메이지 일본이 근대국가 체제를 확립한 후 국가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조선을 일본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대륙으로 진출해 나가면서 제국 일본이 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과잉인구와 자원부족이라는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의 성장을 꾀하기 위해서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것은 서구 열강보다 먼저 일본이 조선에서 국가적인 이권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기인한 것이었다고 한다. 이후 육군 중심으로 ‘대륙국가 일본 제국’을 달성해야 할 목표로 설정하면서 한반도는 ‘최소한의 필요충분조건’ 이자 대륙 진출의 교두보가 되어야 했다. 1910년 일본의 ‘한국병합’까지의 과정은 ‘근대적 제국 일본의 성장을 위한 포괄적인 의미의 국방, 국가 안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이후 한국 내에 구축된 조선총독 정치체제에서도 정치보다 군사가 우선할 수밖에 없었으며, 자신들의 우월성을 내세우면서 통치를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정책을 구사하는 방향으로 귀결된 과정을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개항 이후 한일관계가 군사 중심으로 자국의 이익을 중시하는 방향에서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음을 보여준 것이다. 한편으로 저자는 신미양요와 병인양요를 경험하고,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는 과정 속에서 조선이 국제법과 일본 측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평가하였다. 전반적으

로는 메이지 일본의 팽창 과정에 초점을 맞추면서 ‘조선문제’를 어떻게 처리해 나갔는지를 살펴본 글이라 할 수 있다.

제6장에서는 ‘조일수호조규’ 체결이 조선 내부에 미친 정치사회적 영향을 ‘혼돈’과 ‘기회’라는 관점에서 통시적으로 살펴보았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조선 정부의 입장에서 볼 때 ‘조일수호조규’ 체결은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측면이 강했다”고 보았다. 다만 체결 과정에서 국왕 고종이 “‘개국·개화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판단을 유보하였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이 조선 국내적으로 발생시킨 혼돈을 저자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는 재야 유생들의 강력한 반발과 조선 정부의 탄압, 둘째는 일본을 서양과 동일시할지 다르게 볼지에 대한 입장의 불명확함, 셋째는 『만국공법』에 대한 문제로 인지는 하고 있었으나 성격에 대한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혼돈’은 국내적으로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며, 외세 침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로 작용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조선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장이기도 했다. 저자는 조선에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하였던 사례로 유길준, 동학운동, 독립협회, ‘애국계몽운동’, 일제 강점기의 대중계몽운동을 제시하였다. 면면히 이어진 이러한 운동들은 독립성 유지와 국가 발전을 위한 내적 동력과 통합의 논리로 작동하였고, 그것이 1945년 광복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보았다. 통시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의 근대사는 내부적으로 ‘혼돈’을 초래한 측면도 있었지만, 반대로 새로운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계기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양면적 속성을 갖고 있었음을 지적한 것이다.

Ⅲ. 이 책의 장점

그간 근대 한일관계사를 다루었던 단행본의 경우 ‘조일수호조규’만을 단독 제목으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다룬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한 면에

서 볼 때 이 책은 역사학과 정치외교학 연구자들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조일수호조규’ 체결과 그것이 갖는 역사적 의의를 조명한 본격적인 기획 연구의 결과물이다. ‘조일수호조규’를 제목으로 삼아 이를 본격적으로 다룬 단행본이기도 하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2012년에 기간행한 자료집으로 『근대한국외교문서』 3권과 5권을 비롯하여 새로운 자료(영국 FO 문서군, 일본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 관계문서 등)를 폭넓게 구사하여 조선과 일본이 체결한 조규의 성격과 배경을 규명했다는 점이 이 책의 가장 큰 장점이자 장점이다. 조선과 일본 그리고 영국 측 자료 발굴과 소개가 돋보인다. 게다가 필진 가운데 세 명의 경우 『근대한국외교문서』 편찬 작업에 직접 참여했던 연구자들이기도 하다. 자료 수집과 그것을 적극 활용하여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의 역사적 배경과 정치외교적 맥락을 세밀하게 검토하여 공동의 연구성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비단 조일 간 조약 체결과 협상 과정의 정교한 재구성에만 그치지 않고, 그것이 근대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정치사회적으로 미친 영향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까지 폭넓게 다루는 두 편의 글을 후반부에 배치하였다. 그럼으로써 ‘조일수호조규’ 체결이 조선과 일본에게 무엇이었는가를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다각도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책의 미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책에는 ‘조일수호조규’ 체결 전후로 또 하나의 핵심적인 논의 축 가운데 하나였던 청국의 동향과 대응이 빠져 있기는 하다. 이 주제까지 아우를 수 있었더라면 논의 내용이 좀 더 풍부해졌을 것이다.

IV. 향후의 연구과제

마지막으로 ‘조일수호조규’ 연구에서 향후 진행해야 할 연구방향과 소재를 몇 가지 제시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첫째, ‘조일수호조규’를 비롯하여 이후 조선과 일본이 조약체결 교섭을 진행

해 나가는 과정에서 남긴 양측 기록의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정확한 번역을 통해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본문에서도 이미 조선과 일본 양측이 남긴 기록에 다른 내용이 있다는 점은 부분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 문제는 비단 조일 간의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만이 아니라, 1876년 초 청국에서 조선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이던 모리 아리노리[森有禮]와 이홍장(李鴻章) 간의 교섭석상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청일 양측이 각자의 입장에 따라 발언을 달리 기록한 지점이 존재한다는 점을 규명한 선행 연구도 있는 만큼(長谷川精一, 2007, 『森有禮の外交論』, 『森有礼における国民的主体の創出』, 思文閣出版), 향후 조일 간 교섭 연구에서도 참고할 만하지 않을까 싶다. 한문과 일본어 기록 사이에 담겨 있는 기록은 양측이 자국에 유리한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만큼 체계적으로 번역하고 비교해 보아야 양측의 입장 차이와 전략 등을 좀 더 정확하게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조선 측 협상기록인 『심행일기』와 『을병일기』는 전문이 번역되어 있기는 하다. 여기에 대응하는 『日本外交文書』 수록 기사를 외교사료관 소장 원자료와 교감하고 번역을 체계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근래에는 아시아역사자료센터를 통해서 온라인상으로도 자료공개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원사료에 대한 접근성은 좋아졌지만, 어느 한쪽의 기록만 가지고 교섭 과정을 검토할 경우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둘째, ‘조일수호조규’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섭에 참여한 주요 인물들 이외에 그 자리에 와 있던 다른 인물들에 대해서도 조명해볼 필요가 있다. 현재 협상에 참여했던 인물 가운데 강위(최근 나온 단행본으로는 이현주, 2018, 『姜瑋の開化思想 研究』, 선인), 미야모토 오카즈, 오경석 등의 실무진과 교섭책임자 신현과 구로다 기요다카와 이노우에 가오루 등에 대해서는 남아 있는 기록을 토대로 검토가 이루어져 이들이 각각 어떠한 인식과 노선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있었는지를 심층적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협상 자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더라도 배후에서 활동하고 있던 조선과 일본 측 인물들을 추적하면서 이들이 남긴 기록이 없는지도 살펴보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조일수호조규’ 체결 과정부터 향후 ‘한국병합’에 이르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조선

문제에 관여했던 인물들이 있었는지를 정리하는 작업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을미사변에 깊숙이 관여했던 오카모토 류노스케[岡本柳之助]의 경우 일찍이 ‘조일수호조규’ 체결 당시부터 구로다의 수행원으로서 도한 경험이 있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까 한다. 도한 전에 그는 이미 ‘운요호 포격사건’ 당시 이타가키 다이스케[板垣退助]에게 작전 계획을 제안하기도 했다. 조약 체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향후 대조선 정책을 입안하고 실현하는 데 역할을 담당했던 인물들에 대해 체계적으로 추적하여 정리하는 작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운요호 포격사건’ 이후 해군 인사로 이노우에 요시카[井上良馨], 나카무타 구라노스케[中牟田倉之助] 등이 해군성 쪽에 보고한 문서 등이 남아 있는지도 향후 방위연구소 등의 자료공개 여부에 따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노우에 함장의 보고서에서 날짜 조작이 이루어진 것이 밝혀진 것도 자료 발굴을 통해서였기 때문이다. 아직 미공개 상태로 남아 있는 자료도 더 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는 만큼 각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의 공개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조약 체결 과정에서 제출되었던 초안의 각 조관 내용이 어디에서 근거했는지를 추적하는 작업을 심층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본서에서도 파크스 등의 언급을 통해 ‘조일수호조규’ 조관들이 일본이 미국이나 영국과 체결했던 통상조약의 내용과 같다는 점은 거론된 바 있다. 그리고 근래 연구에서는 1관의 논리구조가 1874년 프랑스와 베트남 간에 체결되었던 제2차 사이공 조약의 제2관과 유사하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유바다, 2016, 「1876년 朝日修好條規의 체결과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한국근현대사연구』 78). 조선의 개항에 앞서 동아시아(조청일 삼국만이 아니라 베트남, 태국 등을 시야에 넣고 접근할 필요성) 각국에서 체결되었던 여러 통상조약과의 엄밀한 비교를 통해서 각 조관이 무엇을 참고하여 작성되었는지를 좀 더 정교하게 검토해보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조일수호조규’ 체결 이후 각 조관은 개항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를 지역별, 사례별로 규명해야 한다. 서평자도 학위논문에서 체결 이후 개항장을 중심으로 하여 각 조관과 후속 조약 체결 내용 간의 연결성과 현장

에서 조관 활용을 통한 교섭 과정을 일부 다룬 바 있다. 근래에는 개항장 감리와 조선 주재 일본 영사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 연구도 활발하게 나오고 있어서 주목할 만하다(민회수, 최보영). 개항장에 주재하고 있던 조선과 일본의 조약 운영 주체들을 중심으로 하여 ‘조일수호조규’와 후속 조약들의 조문이 실제로 어떻게 법리적으로 활용되고 있었는지, 이해관계에 따라 조일 양국은 어떻게 공방을 벌이고 있었는지는 새로운 사례의 발굴을 통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은 조약이 체결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조일 관계에 지속적으로 미친 영향을 추적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조일수호조규, 근대의 의미를 묻다』는 역사학, 외교사, 정치학 전공자들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개항 이후 한일 관계와 정치사회적 변동을 폭넓게 다룬 연구서이다. 연구자 한 사람의 단독 저작물이 아니며 각자의 연구 스타일이 다양하게 드러나고 있는 만큼 독자로서는 관심 있는 주제에 따라 선택해서 읽어 보아도 좋을 것이다. ‘조일수호조규’ 체결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을 두고도 연구자에 따라 자료 구사와 읽어낼 지점이 각각 다르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접근 시각과 해석의 다양성을 음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연구의 결과물이 보여주는 장점이라 할 수 있다. 향후에도 이러한 공동연구가 좀 더 활발하게 진행되어 연구의 외연을 넓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동북아역사논총 규정 및 규칙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 편집위원회 규정
-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 논문 심사 내규
-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를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한중관계연구소장, 한일관계연구소장, 독도연구소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는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의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

- 은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

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105호, 2015. 1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내규와의 관계) 이 규칙은 직제규정 부칙(제68호) 제2조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 중, 동북아역사재단의 연구소(한중관계연구소, 한일관계연구소, 독도연구소) 소장 및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동 재단 이사장이 위촉한 연구자로 편집위원을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동북아역사논총 발간사업 담당부서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여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하고, 재단소속 직원 중에서 논총의 편집과 간행 실무를 총괄할 편집간사를 임명할 수 있다.
3. 편집위원의 임기 만료 전 유고 시, [편집위원회 규정] 제1항의 편집위원 위촉 방법에 의해,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편집간사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6. 편집위원은 원칙적으로 논총에 논문을 투고할 수 없으나 논총 기획연구 등 편집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논문 투고가 가능하도록 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3년 8월 30일, 2015년 2월 23일, 2016년 2월 24일, 2017년 5월 19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다섯 가지로 처리한다.
 -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A, A, A)
 - 2) 검토 또는 수정 후 게재 :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B 이상이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A, B, C) (B, B, C)
 - 3) 수정 후 재심사 : 1인이 A 또는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C, C) (B, C, C)
 -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고 C를 포함한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상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판정과 '검토 또는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 등의 심사 결과 내용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통보하며 공개하지 아니한다.
4. 투고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게재불가로 판정받은 논문에 대해서는 수정 후 재투고하더라도 논총 게재대상 논문으로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심사 결과에 대한 논문투고자의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편파 또는 불공정 심사로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심사위원 교체에 의한 재심사를 시행할 수 있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방법 및 원고 작성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을 게재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nahf.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하며 초록도 국문 800자, 영문 400자 내외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본문은 까다로운 고유명사 또는 의미상의 혼동이 예상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로 작성하되, 한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맨 처음만 한글(한자)로 병기하고 이후부터는 한글로만 표기한다.
7. 인용문은 본문의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시 없이 글자크기를 작게 하여 서술하고 괄호 안에 출전을 밝힌다.

8.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9.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雍, 是人也”.

10.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으며, 2015년 2월 23일, 2018년 2월 23일 편집위원회에서 개정되었음.

● 편집위원장

장세윤 동북아역사재단 수석연구위원

● 편집위원

강성호 순천대학교 사학과 교수

김경호 성균관대학교 동아시아학술원 교수

남상구 동북아역사재단 한일관계연구소장

남상호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백종오 한국교통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서현주 동북아역사재단 대외협력처장

윤유숙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근우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이영옥 전남대학교 역사교육학과 교수

이유표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이현혜 한림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전진호 광운대학교 국제학부 교수

정병삼 숙명여자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정재윤 공주대학교 사학과 교수

정혜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교수

홍성근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편집간사

이준호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지원실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60호(2018. 6)

초판 1쇄 인쇄 2018년 6월 23일

초판 1쇄 발행 2018년 6월 30일

펴낸이 김도형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